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



통 일 준 비 위 원 회

본 보고서는 (재)세종연구소가 통일준비위원회 연구용역을 수주 받아 2016. 5.18~11.16 기간 중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통일준비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 출 문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세종연구소

소 장 진 창 수

참 여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이 상 현 (세종연구소)

공 동 연 구 원

양 윤 철 (세종연구소)

백 학 순 (세종연구소)

홍 현 익 (세종연구소)

이 성 현 (세종연구소)

최 은 미 (세종연구소)

이 상 학 (국민대학교)

안 진 수 (전 KINAC)

김 석 향 (이화여대)

한 민 (우송대학교)

박 준 성 (세종연구소)

목 차

I. 서론	1
1. 연구개요	1
2.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3. 연구방법	3
II. 북한 비핵화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5
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5
2. 북핵문제에 대한 발생적 관점의 분석	18
3. 기존 시나리오 기반 연구의 유형과 평가	51
III. 북핵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해결방안 연구	66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검토: 총론	66
2. 공학적 관점: 북한 핵 능력 평가와 비핵화 방안	68
3. 심리학적 관점: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김정은 개인의 성격	100
4. 경제학/게임이론 관점	125
5.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북한 핵개발 현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150
6.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본 북한/핵문제의 진단과 해법	178
7. 북핵문제의 다학제적 분석 결론 및 시사점	199
IV. 비핵화 관철을 위한 구체적 매트릭스(시나리오)	208
1. 북한의 향후 핵문제 전략과 선택지	208
2. 한국과 미국의 선택지	221
3. 시나리오 매트릭스 - 북핵 고착 vs. 협상 재개	226
V. 실현가능한 정책수단	236
1. 긍정적 상황 대비 전략 및 정책수단	236
2. 비관적 상황 대비 전략 및 정책수단	254
VI.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257
1. 비핵화 시나리오의 다학제적 시사점	257
2. 정책제언	261

표 목 차

<표 II-3-1> 1~3차 북핵 위기 비교표	51
<표 II-3-2> 북핵 6자회담 예상 시나리오(외교안보연구원, 2003)	52
<표 II-3-3> 북핵문제 시나리오(홍현익, 2015)	56
<표 II-3-4> 정세전망과 시나리오 기법의 차이	59
<표 III-2-1>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요약	68
<표 III-2-2> 핵보유국의 최초 수폭실험 규모	70
<표 III-2-3> 지진파 강도를 폭발력으로 환산하는데 사용하는 식	74
<표 III-2-4> 우라늄 농축능력과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산표(2016년말 기준)	77
<표 III-2-5> 북한의 보유 가능한 핵무기의 수 추산	78
<표 III-2-6> 핵무기 개발 시도 국가의 개발 포기 사례	81
<표 III-2-7> 핵무기 보유국가의 핵무기 포기 사례	82
<표 III-2-8> 맨하탄 계획(Manhattan Project)에 투입된 비용(단위: 백만 달러)	84
<표 III-2-9> Breakdown of Total Actual and Estimated U.S. Expenditures for Nuclear Weapons, 1940-96 (Billions of 1996 dollars)	84
<표 III-2-10> JCPOA의 주요 내용	87
<표 III-2-11> 농축시설 규모(원심분리기) 변화	88
<표 III-2-12> 농축시설 규모(원심분리기) 변화	88
<표 III-2-13> 2015년 5월 17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우라늄 농축능력 추산	89
<표 III-2-14> 합의 이행으로 인하여 이란이 최초로 25 kg의 고농축우라늄(농축도 90%)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변화	89
<표 III-2-15> 핵 개발과 비핵화 관점에서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	92
<표 III-3-1> 자존심의 속성	107
<표 III-3-2> 자존심 상함에 대한 대처 유형	108
<표 III-4-1> 보수행렬 (payoff matrix)	128
<표 III-4-2> 보수행렬	130
<표 III-4-3> 보수행렬 - 남북한의 보수 행렬	143
<표 III-4-4> 보수행렬 - 북한의 핵개발이후	143
<표 III-4-5> 북한 지배층에 전달할 중요 메시지	149
<표 III-5-1>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김정은 개인의 속성	162

<표 III-5-2>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김정은 측근집단의 속성	164
<표 III-5-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북한주민의 속성	166
<표 IV-2-1>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225
<표 IV-3-1> 북핵문제 시나리오 2차원 매트릭스	229
<표 IV-3-2> 각국 정책별 시나리오 전개 양상 1	230
<표 IV-3-3> 한·미를 중심으로 본 북핵 시나리오 매트릭스	231
<표 V-1-1>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남북관계-동북아 다자안보행렬(Matrix)	253

그림 목 차

[그림 II-3-1] 북핵문제 시나리오(김석진·조영무, 2005)	53
[그림 II-3-2] 북핵문제 시나리오(홍순직, 2005)	53
[그림 II-3-3] 북핵문제 시나리오(하영선, 2006)	54
[그림 II-3-4] 북핵문제 시나리오(조민, 2009)	55
[그림 II-3-5] 스트랫포의 8단계 시나리오 계획 과정	63
[그림 II-3-6] 시나리오-정책 연계 과정 흐름도	64
[그림 III-4-1] 신제품 출시 순차게임	129
[그림 III-4-2] 북한의 예산제약선 (budget line)	137
[그림 III-4-3] 북한정권의 최적화문제	138
[그림 III-4-4] 대북제재의 효과: 제재 → 핵개발의 경우	139
[그림 III-4-5] 대북제재의 효과: 핵개발에 진입한 이후 제재의 효과	140
[그림 III-4-6] 대북제재 하 시장확산의 효과	141
[그림 III-4-7] 북핵관련 순차게임	144
[그림 III-4-8] 핵보유국의 단계	148
[그림 III-5-1]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 분석	161
[그림 IV-2-1] 게임트리로 본 한국, 미국, 북한의 선택지	221
[그림 IV-3-1] 골프에 비유한 비핵화 시나리오 구상 개념	227
[그림 IV-3-2] 북한·미국·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시나리오 입체 매트릭스	229
[그림 IV-3-3] 한미공조와 정책수단에 따른 북핵 시나리오 매트릭스	231
[그림 IV-3-4] 북한비핵화 관철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232
[그림 IV-3-5] 다학제적 분석의 핵심 가정 및 정책대안	234
[그림 IV-3-6]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단계 및 핵심정책대안	235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



I. 서론

1. 연구개요

최근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악화된 북핵 문제는 대북정책, 안보 및 외교 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이지 시급한 정책이슈로 부상했다. 아직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북한은 2016년 1월 첫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술적으로 볼 때 핵무기에는 핵분열탄, 증폭분열탄(boosted-fission weapon), 수소탄(핵융합탄) 등 다양한 수준이 존재하며, 서구 기준으로 볼 때 폭발력으로 보면 수소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수소탄이라고 할 경우 디자인상 결함 있을 것으로 추정(폭발력 미약)된다. 하지만 증폭핵분열 방식의 핵무기일지라도 이는 소형화를 위한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또한 김정은 정권은 최근 핵능력 개발과 더불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같은 전략적 운반수단의 개량에 집중하고 있는 바, 이는 결국 장기적 생존전략으로서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상 김정은 정권은 이미 핵개발과 경제회생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병진노선’을 국가정책으로 시행 중이다. 만일 북한의 핵개발이 중단되지 않으면 2020년경 북한은 KN-08을 비롯한 대륙간탄도탄과 더불어 최소 20기, 최대 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¹⁾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으며,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한 치밀한 전략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효과적인 북한 비핵화 정책의 처방을 위해 문제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므로 본 연구는 북핵문제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 각종 사례연구, 발생적 차원의 접근법, 다학제적 연구, 4·5차 핵실험 이후 주요 변수를 가정한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북핵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이를 통해 창의적인 해결안 도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과학적 현상을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조명하려는 이른바 ‘통섭(統攝)’적 시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의 추세에 부응하여 북핵 문제를 단순히 북한 전문가나 외교안보 전문가를 넘어 심리학, 경제학(게임이론),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핵공학 등의 시각에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통섭은 『사회생물학 : 새로운 종합(Sociobiology : The New Synthesis)』(1975)을 저술해 세계적 명성을 얻은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1) Joel S. Wit and Yun Young Ahn, “North Korea’s Nuclear Future: Technology and Strategy,” US-Korea Institute at SAIS (2015).

윌슨(Edward Wilson)이 사용한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번역한 말로서, 여기에 근거해 통섭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는 의미로, 사회과학 뿐만 아니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 등 복수의 학제를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범학문적 연구를 지칭하는 새로운 풍조이다. 이러한 추세는 20세기가 분할된 전문지식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통합된 거대 지식의 시대로의 변화라는 맥락과도 잘 맞는 연구방식이다. 본 연구는 통섭적, 다학제적 시각에서 북핵 문제를 창의적으로 재진단하고, 다양한 시나리오 매트릭스 구성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북한의 핵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동북아의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다. 북핵의 직접 위협 아래 놓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라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문제해결 전략 도출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북핵문제는 동북아 역내의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정책이슈로 급부상하였으며,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다양한 분석과 처방이 제시된 바 있다. 하지만 90년대 초 핵문제가 처음 불거진 이래, 근 2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북핵 문제는 실질적으로 진전이 없다. 오히려 시간의 흐름 속에 북핵 문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에 이어서 고체연료 로켓엔진의 연소시험, KN-08 대륙간탄도탄 재진입체(reentry-vehicle/nose cone)의 실험 공개,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사출하는 실험 등 일련의 핵·미사일 역량강화 조치를 과시해왔다. 그간 수차례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6월 23일 마침내 무수단(화성 10호)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도 성공을 거뒀다. 그리고 8월 24일 SLBM 발사도 큰 진척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 관영매체에 따르면, 이날 “고각(高角) 발사 체제로 시험 발사가 진행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터무니없는 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지난 6월에도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을 거의 수직에 가까운 80도 내외의 고각으로 발사해서 고도 1,413km, 비행거리 400km를 기록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SLBM 발사도 50~60도 각도로 발사되어 약 600km 고도까지 상승했고 총 500km 정도를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이를 40도 내외의 정상적인 탄도탄 비행궤도로 전환한다면, 총 1,000여km(최대고도 약 300km)를 비행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굳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고각 발사를 시도한 것은 탄도미사일이 일본 등을 넘어가 논란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분석된다.²⁾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회의 창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기존의 연구와 접근은 한계에

2) 『조선일보』, 2016.08.26.

봉착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까지의 획일적인 접근을 넘어선 다학제적 접근을 통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로 정치학적 접근을 통해 찾고자 했던 것을 넘어 사회학, 심리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 공학 등 인문사회학 및 이공학의 다양한 접근을 통해 분석 및 해결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학제적 측면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시도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역내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공동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현가능한 전략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대북제재 효용성 및 비핵화 관철을 위한 정치·경제·외교·군사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수단 제시 및 시사점 도출을 목표로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다학제적 연구를 기본적 접근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첫째, 문헌연구로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집하고, 심층 분석하여 각 학문별로 이루어진 북한의 비핵화 전략에 대한 비판적 분석 및 한계점을 도출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북한 핵개발 및 협상과정을 개관하고, 북한의 핵개발 동기 및 남북한의 협상전략 진화과정을 분석하며, 과거 북핵 실험에 대한 우리 정부 및 국제사회의 대응조치를 분석한다.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단편적 분석이 아닌, 국내정치, 국제정치(중미관계 등), 경제·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분석을 통한 북한 핵개발 동기 및 협상 전략의 진화과정을 면밀히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둘째, 학제 간 연구 활성화이다. 본 연구는 인문학·사회학·공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철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다학제적 연구 및 논의를 활성화하여 논리적 일관성과 분야별 특성을 갖춘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한의 비핵화 추진전략이라는 큰 주제 하에 분야별 세부논의를 발전 및 대주제와의 유기적 연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연구진 전체회의와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하여 상호간 인식을 공유토록 했다.

셋째,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활용이다. 북핵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연구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접근을 시도하며, 외부 전문가(학계 전문가, 활동가 등)를 초청하여 자문회의 등을 개최함으로써 가급적 다층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효과적이고 적실성 있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택했다. 연구과제 수행자 이외 외부 전문가 자문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넷째,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북핵현상에 대한 다학적 해석과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문헌자료 분석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를 보완하기 필요 시, 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련 인사 심층 면담 및 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 개최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이러한 다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비핵화 관철을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와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치, 경제, 외교, 군사적 차원의 정책수단 제시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다층적·다면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II. 북한 비핵화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1. 선행연구의 비판적 검토

북핵문제는 우리 민족 전체의 존망과 한국의 국가안보와 통일문제에 압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안보문제이자 군사·외교문제로서 한국의 국가 외교·안보·통일전략에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많은 정치·군사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분석하고 미래 상황을 예측하며 해결방안을 제시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는 해결은커녕 동결도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을 고도화하는 상황의 악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학자와 전문가들의 분석과 해결방안에 관한 제언들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책에 반영되고 성과를 이루지 못한 것인가를 검토해 본다.

우선 북핵문제에 관한 연구의 추세를 조명해보고 그간의 연구들을 평가하면서 향후 북핵문제를 해결방향으로 재진입시키고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나 제안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한다.

가. 북핵문제에 관한 연구의 추세

우선 1990년대 초창기에는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한 동기를 분석하거나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북한의 행태,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미국의 대응정책과 북·미협상, 제네바 핵 합의의 의미와 이행 상황 등 주로 북한과 미국의 정책이나 상황 전개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이니셔티브가 나오면 이를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보고서나 연구들이 있었다.

2002년 10월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의 의혹 제기와 북한의 반발로 인해 2차 북핵 위기가 발발하고 이후 6자회담이 진행되면서 6자회담의 효용성과 성과를 거두는 방안 등이 주요 연구 주제가 됐다. 물론 2005년 9·19공동성명이 도출되고 미국의 BDA 제재로 북·미관계가 파행 상황에 처한 뒤 결국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요 안보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북미협상이 개최되고 2·13합의를 거쳐 10·3합의까지 도출되는 동시에 북한 핵 시설의 동결과 폐쇄 그리고 불능화까지 진행되면서 남은 과제인 사찰과 검증 문제가 주요 연구주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사찰과 검증 문제로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현재까지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한 반면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어 왔으므로 연구자들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는 추세가 분명해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이에 대한 억지와 방어력 구축, 대북 압박과 제재 등이 주요 연구 주제로 부상했다. 북한의 핵 개발을 차단하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어력 구축 및 대북 제재와 함께 양측이 다 합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외교적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타월한 해법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북한이 기존 원자로 가동을 통한 플루토늄 방식의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하는 동시에 우라늄 농축에도 박차를 가하면서 북한이 보유한 핵 물질이 계속 많아질 뿐 아니라 각종 지대지미사일과 잠수함발사미사일까지 개발에 진전을 보이고 있어 이제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가 임박했거나 이미 보유했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것은 그만큼 더 어려워졌다.

더구나 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 한·미·일간 문제를 바라보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해결을 위한 접근법에도 현격한 견해차가 있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6자회담 재개조건을 거부하면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나 오히려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고, 각국간 입장차도 축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에서 가장 어려움에 처한 한국정부가 이런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북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을 회담장으로 인도해 궁극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지혜로운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인 요구이다.

나. 북핵문제 해법에 관한 기존 주요연구 검토

1)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태세 강조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능력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안보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정확히 진단하는 연구 노력이 수행되어 왔다. 전성훈은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2009. 12) 보고서에서 북한의 WMD 능력과 위협을 평가하고 리비아의 핵 포기 사례를 교훈삼아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우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2013. 9)에서 적극적 억제력 구축을 강조하면서 고난도 외교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정교한 구사를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과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연구로는 박휘락의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2016 봄)과 로릭(Terence Roehrig)의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2016. 6)도 있다. 전봉근은 “북핵 동향 분석과 비핵화 전략의 재검토” (2016. 4)에서 북한의 핵 사용 독트린, 핵 전략, 지휘통제권이

자의적이고 최소한의 책임성과 체계성이 결여되거나 미발달 상태이므로 매우 위험하다고 여겨진다고 경고했다. 서동구는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2014)에서 확장억지의 실패 가능성으로 북한의 오인수준(level of misperception)이 높기 때문에 자신들이 핵무기를 선제사용하더라도 미국이 중국 및 러시아의 대응과 미 국내여론을 감안해 핵 보복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오판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성렬은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2016. 9)에서 핵 전략이나 독트린 면에서 북한은 아직 20기 미만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므로 억지나 확증보복전략 단계에 위치하고 있어 미국의 핵 공격에 맞서거나 필요할 경우 극적인 조건에서만 한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위협할 것으로 예측하지만, 실제로는 북한 정권이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가 50기를 넘어서면 일본에 대한 제한적 핵 사용을 검토할 수 있게되고 100기가 넘으면 확증보복단계를 넘어 핵무기 선제사용가능성을 열어놓는 ‘비대칭확전’ 핵 전략으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권숙도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2015년 가을)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김정은 정권의 병진노선을 연구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되자 핵을 보유한 북한의 전략에 대비한 한국의 대북 억지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박창권은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2014년 여름)에서 북한의 핵무기 운용전략의 목적, 군사전략, 상황, 사용방식 등 다방면에 걸쳐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북한 핵 억제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엽은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2016. 6)에서 북한의 핵 전략은 정권 수뇌부 차원의 전략무기이고, 사용 조건에서 모호성을 유지하며 사용 대상에 한국을 포함시킬 뿐 아니라 전시 실제 사용에 더해 평시 정치적 위협수단으로도 사용한다는 특징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성훈은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2015년)에서 이론적 차원에서 북한 핵을 억지하려면 보복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와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 그리고 안심부여전략(reassurance)을 고루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영태·홍우택·김태우·박휘락 등도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4. 12)에서 보복적 억제와 거부적 억제가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이므로 보다 완벽한 억제를 위해서는 양쪽 모두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박휘락은 이미 2013년에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을 통해 억지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2020년대 중반에야 제 모습을 드러낼 킬체인 구축과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해 방어하는 사드의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을 억지하거나 방어하는데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연구원장을 역임한 김태우는 “북핵 동향 분석과 비핵화 전략의 재검토” (2016. 4)에서 핵발사 징후를 탐지하면 이를 ‘시한성 긴급표적’으로 설정하여 순식간에 탐지-식별-결심-타격의 단계로 선제공격을 가해 위협원을 제거하는 킬체인이 기술적

타당성을 가지려면 사전 징후 포착을 위한 고도의 센서(ISR) 체계, 신속한 타격명령 전달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C4) 체계 그리고 선제타격에 사용될 정밀타격무기(PGM) 체계를 갖추어야 하지만 한국군이 이들을 갖추려면 장구한 세월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로버츠(Brad Roberts)는 “Tailored Options to Deter North Korea and WMD Threats” (2016. 3)에서 미사일방어의 역지력을 옹호했다.

특히 북한이 2015-16년 사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억지·방어책이 제시되었다. 먼저 이경행과 임경한은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증적 위협 분석과 한국 안보에의 함의” (2015년 가을)에서 사드처럼 지상기반 탄도미사일방어체계의 레이더는 고정된 레이더로 전방 좌우 120도 외곽 탐지는 불가능하다. 또한 인간공학적인 영향으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배치될 수밖에 없어 저고도해상 공격에 대해서는 초기 탐지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데이비스, 윌슨과 김(Paul K. Davis, Peter Wilson, Jeongeun Kim)은 “Deterrence and St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2016. 3)에서 NATO 방식으로 공대지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면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 대북 억지태세를 강화하면서 협상력을 강화해 북핵 해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 등 국제적 협력과 함께 자주적인 억지태세를 갖추어 나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력을 발휘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의 연구들도 행해졌다.

홍현익은 “북한의 WMD 개발 대응방안 연구” (2007. 11)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WMD 개발상황을 검토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북·미간 인식차이, 기술적·구조적 난관을 제시한 뒤, 북한의 핵 보유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외교 역량을 발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과 남북정상회담을 능동적으로 개최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훈도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2007. 6)에서 북한 핵의 개발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서는 확산방지안보구상(PSI)에 참여하고 주한미군의 전술핵을 재반입하며 첨단정밀무기체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전성훈은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 (2009. 10) 논문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탑재한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면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이 약화되므로 ‘이중경로 정책’을 채택해 전술핵 재배치와 북한 비핵화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한 전성훈은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2012. 10)에서는 조건부·한시적 전술핵을 재배치를 추진해 대북 억지태세를 강화하고 북핵회담을 진행해 남북한 동시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미국이 전술핵을 계속 감축하고 있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공언해온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공론화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건부·한시적 전술핵 재배치안은 핵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 중 유력한 대안으로 현 상황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김재섭은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2015)에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다양한 요소들의 비중과 방향성을 검토하고 미국의 변화된 핵전략과 첨단재래식 무기의 발전을 고려할 때, 거부적 억제인 미사일방어나 선제타격개념인 킬 체인보다는 사후 보복 위협에 기초를 둔 응징적 억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3) 북한의 핵 개발 동기에서 해법을 찾는 노력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를 추적해 그 원인을 해소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한국 정부도 핵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압박으로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은 정치·외교·군사면에서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가 개발을 추진했던 원인인 국가안보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군 현대화에 대한 지원과 미국의 강력한 안보 공약 재확인 등을 제공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독재정권의 핵 개발 동기를 찾아 해법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행해졌다.

홍현익은 “북핵문제의 본질과 평화적 해결방안”(2003)과 “북한의 WMD 개발 대응방안 연구”(2007. 11)에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 것은 국내적, 국제정치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유지 우려와 부담을 해소해주는 대가로 핵 포기를 달성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미국의 대북 군사적 공격 위협 등을 억지하고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우위를 차지하며, 중국의 간섭이나 압력 등을 견제할 뿐 아니라, 북한 군부를 위무하고, 북한 주민들에게는 김정일 정권의 강건함을 과시하는 동시에 부수적인 효과로 남북 및 북-미관계에서의 긴장 국면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북한 주민의 체제 이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등 ‘다목적용’으로 핵을 개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북한이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므로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제임을 필히 염두에 두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도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투철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에 입각한 해법을 모색해야만 비로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4) 국제정치나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해법 모색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 동기 중 하나는 격동하는 국제정치 속에서 국가와 체제의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북한 역시 주변 강대국들의 압도적인 영향력 하에 처해있기 때문에 국제정치 상황이 급변하더라도 정권을 유지하려면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 역시 주변 강대국들이 단합해서 핵 포기를 강요하든가 아니면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경제 지원을 행하며 정권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할 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국제정치 상황과 주변 강대국들의 국제전략 및 외교정책분석에 집중해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들이 행해졌다.

특히 김상기는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 (2013. 11·12월)에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갖고있는 핵무기를 폐기시키려면 더 큰 비용이 요구된다는 면에서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김근식 역시 “동력 부재의 6자회담과 북핵 협상을 위한 현실적 제언” (2013. 11·12)에서 미국에게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구축이 가장 선차적인 정책목표이고 북한의 핵 개발이 이의 명분이 되므로 굳이 지금 북핵문제 해결을 서두를 이유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홍현익은 New Russo-American Strategic Partnership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2004. 2)와 “Prospect of North Korea-US Relationship: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2005. 4) 그리고 “북·미관계 정상화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2007. 5), “북핵 해법, 주변 4강 속셈은...” (2016. 6), “한·미·일·중 정상회담과 대북제재”(2016. 5) 등의 연구를 통해 국제정치 및 국가관계의 틀 속에서 북핵문제의 해법을 추적했다. 송대성·엄상운·문순보도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2014.9)에서 유사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핵심적인 관건이라는 인식이 더욱 커지면서 중국의 전략과 정책을 이해해 활용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세종연구소가 내놓은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중국의 입장과 인식 고찰』 (2016. 1.)과 정재홍·이성현의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인식 고찰』 (2016. 3)을 예로 들 수 있다.

5) 6자회담의 효용성과 개선방안

현실적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국제적 노력은 6자회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6자회담의 구성, 운영, 진행과정, 성과,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노력들이 행해졌다.

홍현익은 『6자회담: 과정·문제점 및 대응전략』 (2005. 12월),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2008년 봄)에서 6자회담의 효용성과 협상 개선방안을 분석했다. 또한 “북핵문제 최종 해결과정의 쟁점과 해결방안” (2008. 9)에서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쟁점들을 검토하고 그들을 해결함으로써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명섭은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2011)에서 지정학적 관점에서 북핵문제의 동북아적 기원을 아시아·태평양전쟁으로부터 시작해 반추하고 6자회담의 국제정치사적 의미를 검토한 뒤, 아시아·태평양전쟁을 불완전하게 봉인했던 샌프란시스코평화체제를 보완할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서도 6자회담을 지속시키고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렬도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2014. 가을)에서 6자회담을 재평가하고 재개 논의를 검토한 뒤,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동북아시대 위원장을 역임한 이수훈 역시 “제재정책의 딜레마와 6자회담의 앞날”(2016년 봄)에서 제재정책의 딜레마를 논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인해 백지화된 2012년 ‘2·29 합의’를 재생시키는 등 돌파구를 마련해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임을 역설했다. 끝으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이종석도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배경·역사·전망·대응방향』(2016. 3.)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역사를 검토하고 중국의 ‘신제안’에 주목해 신중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대응하여 대북정책 기조를 제재와 대화 병행전략으로 전환하고 평화협정과 한반도 비핵화를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아예 한 번도 재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들은 적용될 수 없었다.

6)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과 병행해 북핵문제 해결

핵을 개발하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한미연합 군사력에 비해 월등히 열세임을 느끼고 있을 것이 확실하므로 비대칭전력으로 핵을 개발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할 때는 반드시 북한의 안전보장 장치를 요구할 것이다. 이제까지 북한의 태도를 볼 때 그것은 바로 한반도 평화체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변국들이 단합해서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에게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없고 전쟁도 해결책이 아니라면, 결국 협상을 통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조성렬은 2005년 9·19공동성명 도출 직후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2005)이라는 논문에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선후 관계를 기준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하면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까지 내다보면서 한국 정부가 주도적인 해법을 마련해 갈 것을 주문했다. 조성렬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배경과 의도”(2015.12)에서도 6자회담과 4자회담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고 북한 인권문제를 압박카드로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김성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2007. 10)에서 평화체제

협상과 비핵화 협상의 4단계 접근을 검토했다. 홍현익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2009)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북핵문제 해결을 연계해 접근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 국가정보위원회(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NIC)가 2008년 11월에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트렌드 2025: 변모한 세계(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에서 남북한이 2025년께 통일이 되거나 일종의 국가연합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지속적인 외교 노력의 결과로 혹은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승인과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방편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한데서 알 수 있듯이,³⁾ 북핵문제는 남북이 통일을 이룰 시기에 가거나 해결될 수 있는 매우 풀기 어려운 문제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전제조건으로 삼을 경우 평화체제 논의 자체가 시작조차 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되 이 문제의 최종적인 해결보다는 지속적인 진전을 평화체제 논의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헤이스(Peter Hayes)는 “Overcoming U.S.-DPRK Hostility: The Missing Link Between a Northeast Asian Comprehensive Security Settlement and Ending the Korean War” (2015 가을)에서 동북아 안보의 틀 속에서 한국전을 종전시키면서 북핵문제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재천은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2016)에서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처럼 2016년 2월 등장한 미국판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이 단기적 미·중 외교장관 회담용, 유엔제재 중국동참 유인용, 북한의 쿠바화를 위한 서막, 해머와 스테이크 중 하나로 나온 것이라면서 그 중 해머와 스테이크론에 주목했다. 이는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 사드, 참수작전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해머로 내리치고, 동시에 비핵화 조건을 완화한 평화협정의 스테이크를 보여주면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오려고 한다는 것이다. 김재천은 정책 제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병행론을 매개로 먼저 한·미·중 대화를 시작하고, 협상국면이 도래할 때 한국이 선비핵화를 조건으로 내세우기 어려우므로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수립해 이에 대비해야 한다.

어쨌든 2009년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IAEA 사찰단을 복귀시키며 핵실험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행하는 등 전제조건을 이행할 때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고,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경우에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을 개시한다고 주장해 왔으므로 현 상황에서 이 해법이 적용되려면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정책 검토 및 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일괄타결(Grand Bargain) 또는 Big Deal

여섯 나라가 참여해 인내심과 지혜를 발휘하여 6자회담에서 큰 성과를 거둔 것이

3)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2025: A Transformed World* (Nov. 2008), p. 62.

바로 2005년 9·19공동성명이었다. 그러나 1년 뒤 북한은 제1차 핵 실험을 감행해 공동성이 무너진 듯했다. 다행히 두달여 뒤인 2007년 1월 북·미간 협상을 거쳐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가 도출되었고 그 해 10월 6자회담에서 10·3 합의도 도출되었다. 그러나 2008년 12월 북한의 핵 폐기 사찰 및 검증문제를 두고 북한과 한·미·일간 정면 대립을 거쳐 6자회담은 공전상태로 들어갔다. 북핵 시설의 폐쇄와 불능화를 거쳐 이제 폐기와 사찰만 남은 상황에서 단계적인 북핵 문제 해결방식으로 접근된 6자회담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명박 정부는 단 한번에 북핵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6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패키지(Comprehensive Package)' 개념을 제시했고, 이를 다시 한 단계 더 구체화해서 같은 해 9월 21일 미 외교협회(CFR) 연설에서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Grand Bargain)'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이 접근법이 주목을 받았다.

이는 북한이 '비가역적 핵폐기' 조치에 나서면 반대급부로 그와 동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대대적인 국제지원도 제공한다는 일종의 '원 샷 빅 딜(One Shot Big Deal)' 제안이었다. 그 이전까지는 북한이 핵협상에서 일정 부분을 이행할 경우 이에 상응해 일정 부분을 보상해주는 방식이었지만, 향후에는 북한이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무기 및 핵물질 폐기와 관련한 근본적인 조치에 나선다면 한 번에 의미 있는 반대급부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동년 11월 통일연구원은 '북핵 일괄타결 방안 추진방향'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고, 12월에는 동 연구원의 조민·전성훈·정영태·허문영이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보고서를 내놓았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승현도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2012. 1)에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 접근법은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효과를 내지 못했다.

먼저 이 접근법은 실효성이 불투명했다. 협상의 시작단계부터 최종 목표에 해당하는 '비가역적 핵폐기'를 주문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기 어려웠다. '핵프로그램의 핵심부분을 폐기할 경우'라고 규정한 대목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물론이고 플루토늄과 농축 우라늄 등 무기화에 필수적인 핵물질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먼저 폐기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지는데 북한이 협상 시작단계에서 이를 수용하기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핵 폐기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상이 북한에게 별로 매력적으로 여겨지지도 않았다. 보상으로서의 안전보장 부분은 이미 9·19 공동성명에 포함된데다 북핵 협상 진전의 실질적인 열쇠를 가진 미국이 직접 언급하지 않은 이상 현실적 의미가 크지 않았다.

더구나 북한이 적극적 핵포기 의지를 보인다면 일괄타결이 가능했지만 북한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이 시작조차 못 하고 장기 경색국면을 초래했다.

8) 대북 제재와 북핵문제 해결

2006년 7월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년 10월 핵실험을 감행한 이후 대형 도발을 지속하자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을 비롯한 국제 제재를 북한에 부과했다.

이런 맥락에서 홍현익은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응전망” (2006. 12)에서 조민·전성훈·정영태·허문영은 2009년 12월 전술서에서 각각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대화과 제재’의 이원적 접근을 제시했다.

김태형은 Tae-Hyung Kim,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Is Nuclear Reversal Too Late?” (2016. 6)에서 대화와 협상을 도외시하고 강압이나 제재 일변도정책을 펴는 것은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고 주장했고, 홍현익은 “대북제재,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능동적 외교를 펼치자” (2016. 4)에서 2016년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도 만약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로이(Denny Roy)는 “Preparing for a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2016. 6-7)에서 중국의 존재로 인해 제재가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기 어렵고 설사 김정은이 교체되더라도 그 이유가 핵 개발 등에 대한 김정은의 정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잔혹한 숙청 등 폭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므로 군부 원로 및 보수세력들이 득세하여 핵 개발 정책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세종연구소 양운철 부소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2016. 3.)에서 국제 경제제재의 효용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대북제재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유도하며 한국형 대북 제재안을 마련하여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면서 ‘죽집게’ 방식의 스마트 제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보람 (Bo Ram Kwon)은 “The Conditions for Sanctions Success: A Comparison of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Cases” (2016. 3)에서 이란의 사례를 연구해 대북 제재의 성공 조건을 제시했다.

이 주제는 현재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에 집중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분석과 연구가 계속 추진되어야 할 분야이다.

9)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핵문제 해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 신뢰외교를 대외전략 기조로 내세우자 신뢰 구축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기 시작했다.

한용섭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 (2013)에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3단계 신뢰프로세스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의 대북정책은 2단계 신뢰 구축단계나 3단계 신뢰 제도화 단계는 고사하고 아직 1단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모색단계에도 제대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전봉근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접근” (2008. 2)에서 협력적위협감축(CTR) 프로그램의 북핵문제 적용가능성을 검토했는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추진될 경우 이 방안의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홍현익은 “9·19 공동성명 10주년과 코리안 포물러” (2015. 10)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노력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끝으로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현인택은 (In-Taek Hyun) “An Enduring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and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2016. 6)에서 박근혜 정부가 처한 딜레마 상황에서의 북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10) 이란 등 사례 연구

조민·전성훈·정영태·허문영(2009.12)은 핵 폐기 성공사례로 우크라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를 연구했고 실패사례로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등을 연구했다. 정성임·강성철 등도 “핵협상 조건과 북핵협상의 재검토”(2016)에서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문제는 북한과 이들 국가들간 차이점이 많아 사례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황지환은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2016년 봄)에서 이란과 북한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한 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북핵문제와 북한문제 해결의 병행 추진을 제안했다.

이란 핵 문제가 현재 진전을 보인 것이 이란의 핵 개발을 완전 봉쇄했다기보다는 10년 이상 지연시키면서 타협했다는 것과 유사하게 북·미간 협상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게 비확산에 대한 다짐을 받고 핵 포기가 아니라 현재 수준의 핵 동결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술한 논문에서 로이(Denny Roy)는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 위협을 주기에는 부족한 핵 능력 보유를 인정받으면서 타협이 도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 복합 해법

전술한 많은 해법들이 제대로 적용되지도 않았거나 적용됐더라도 북핵문제 해결에 성과를 보이는데 한계를 노정했다. 따라서 이제까지의 해법들을 포괄적이고 동시병행적으로 적용하는 복합 해법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홍현익은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대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2012. 6)에서 북핵문제의 경과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한미동맹 및 한국의 국가전략의 종합적 틀 속에서 북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9·19공동성명

10주년과 북핵문제 해결방안』(2015. 9)에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하영선·전재성 등은 “북핵 위기의 새로운 해법” (2016. 2)으로 제재와 협상의 단순 해법을 재검토하고, 효율적 경제 제재 강화, 대북 비핵 신안보체제 구축, 북한 비핵화의 신외교, 북한의 자생적 비핵화 노선 촉진이라는 복합해법을 제시했다.

북한의 5차 핵 실험 직후에 발간된 미 외교협회의 대북특별보고서 Mike Mullen and Sam Nunn (Chairs), Adam Mount (Project Director),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Sept. 2016)는 17명의 대북 전문가들이 초당파적인 협업을 통해 작성된 것으로 차기 미 행정부의 북핵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우리도 주목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인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 동결을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결국 실패했다고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을 보호하고 억지와 방어태세 및 대북제재와 재정적 압박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를 위한 노력도 더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협상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 동결협상을 북한 비핵화의 중간단계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9·19공동성명 원칙 이행을 재확인하고 협상 단계별 진전을 보자는 데 동의하며 핵과 중거리 이상 탄도미사일의 시험 유예를 약속하면, 미국은 영양 지원을 제공하고 한미연합훈련의 내용과 규모를 조정하면서 핵 동결을 목표로 하는 초기 회담에 응한다는 파격적이고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박건영은 “한국의 안보와 사드” (2016)에서 발상의 창조적 전환을 전제로 6자회담 국가간 제재와 보장 및 협상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한반도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및 한·미·일은 대북 안보리 제재를 유지하면서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중국은 한국에게 적극적 안전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한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게 핵무기로 공격하는 국가에게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것이다. 냉전적 사고를 벗어난다면 이로 인해 한미동맹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비핵화와 양국 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북·미 협상을 재개한다. 한국은 개성공단 등 남북간 교류·협력재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 끝으로 한국은 한국전 종료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을 목표로 남북·미·중간 4자회담을 제안한다. 반공주의자 닉슨이 중국과 화해해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면서 소련을 견제했듯이 창의적인 사고의 전환을 전제로 검토해볼만한 제안이다.

조성렬은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2016. 9)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층적 해법으로 ‘3개의 화살론’을 제안했다. 군사적 대책인 별공은 당면한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별교는 외교적으로 관리하는 방책이다. 최상책인 별모(伐謨)는 북한 스스로 점진적인 체제전환을 이루어 개혁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으로써 협상을 통해 핵 포기를 이루려는 정치·사회적인 전략이다. 밑으로부터는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경제의

자유시장화, 북한주민의 친한의식화, 북한엘리트의 개혁세력화를 목표로 하는 삼화(三化)전략을, 위로부터는 1970년대 초반 가동됐던 남북조절위원회와 같은 상층 연합전략을 병행한다. 조성렬은 바람직한 방향은 정치사회적 변화를 통한 점진적 체제전환을 지향하는 별모전략을 기본으로 하면서, 국제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과 6자회담이나 4자회담, 남북대화 등 다양한 외교적 방식을 병행하는 별교전략과 킬체인이나 한국형 방공망, 한미연합억제력과 같은 거부적 억제력 구축을 위한 별병전략을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중층적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2. 북핵문제에 대한 발생적 관점의 분석

북핵문제 해결(한반도 비핵화)을 위한 관련국들의 약속과 비전은 1991년 12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과 2005년 9.19공동성명에 잘 나타나 있으며, 그것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다.⁴⁾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북한의 제1차 핵실험(2006. 10. 9), 제2차 핵실험(2009. 5. 25), 제3차 핵실험(2013. 2. 12), 제4차 핵실험(2016. 1. 6), 제5차 핵실험(2016. 9. 9)으로 깨어졌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규탄성명을 발표해도 북한의 핵관련 도발은 지속되고 있다.

2016년 11월 중순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은 단순한 북핵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북한과 미국 간에 상호 ‘핵무기 사용위협’, ‘선제 핵공격 위협’이 일상화되다시피 하여 북한의 비핵화는 오히려 뒷전에 밀려 있다. 특히, 2013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인 키 리졸브·독수리훈련(Key Resolve & Foal Eagle) 기간에 미국의 ‘공개적’인 대북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과 그에 대한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한 대미 ‘핵공격 위협’으로 한반도에서 ‘핵전쟁 불가’라는 금기사항이 깨어졌다. 그 후, 올 3~4월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과 올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까지 포함하여 시간이 흐를수록 2013년 3~4월 상황이 보다 더 확대되고 악화되어 지금은 단순한 ‘핵공격 위협’이 아닌 ‘핵 선제공격 위협’이 일상화되다시피 하여 한반도 비핵화는 오히려 뒷전에 밀려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하에 첫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동기와 정책적 함의, 둘째, 북한의 핵능력 강화, 셋째, 북미양국 간의 상호 ‘핵공격 위협’, 넷째, 북핵문제 협상전략의 패턴의 변화, 마지막으로, 북핵협상 방법으로서 ‘대화와 협상 vs. 압력과 제재’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동기와 정책적 함의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른바 ‘정권·군사안보용’과 ‘국제협상용’이다. 그리고 양자가 갖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 차례대로 살펴보자.

4)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남한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즉 ‘북핵문제 해결’ 문제로 귀착된다. 참고로, 북한이 자신의 비핵화를 위한 조건 중의 하나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요구할 때는 미국의 전술핵무기의 재도입 금지뿐만 아니라, 한미합동군사훈련 시 핵무기를 탑재하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스텔스폭격기, 공격형 핵잠수함의 진입, 훈련, 배치 등의 금지를 모두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1) 정권·군사안보용 vs. 국제협상용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동기와 배경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 하순~1990년대 초반에 소련이 멸망에 따른 냉전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국제정치의 변화였다. 소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련을 대체한 러시아가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을 이룬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기존의 소련의 보호막이 사라진 것이었다. 더구나 1990년 한·소 수교와 1992년 한·중 수교는 북한의 고립과 북·중·러 삼각동맹의 사실상 해체를 가져왔고, 남한에서는 흡수통일론이 팽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느끼는 체제·군사안보 위협은 심각한 것이었고, 그 방어수단으로서 핵무기 개발에 나섰던 것이다.⁵⁾

북한의 핵개발 역사를 통시적으로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정권·군사안보용’과 ‘국제협상용’이라는 양자의 성격이 동시에 존재하지만, 핵개발 초기, 특히, 제1차 핵실험 이전에 그러했다. 제1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인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와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인 2005년 9.19공동성명은 북한으로서는 정권·군사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협상에 나서 이뤄낸 성과였다. 북한은 미국, 그리고 6자회담 참여국들과 협상에 나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인 주고받기’를 통해 21세기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틀과 기회를 마련코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협상의 합의들이 충실한 이행에 실패하면서 자연히 정권·군사안보용의 성격이 강해지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12월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를 개최한 이후에는 지금까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도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년 2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제재가 강화되어 온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국제협상용’보다는 압도적으로 ‘정권·군사안보용’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2)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과 핵개발

북한의 핵문제는 무엇보다도 좀 더 시야를 넓혀 북한의 ‘21세기 생존과 발전 전략’과

5) 참고로,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는 “1990년대 김일성의 핵개발 동기와 1970년대 박정희의 핵개발 동기가 똑같다”고 북한의 핵개발의 동기를 설명했다(Kwon, 13 May 2011). 장기간의 베트남 전쟁에의 참여로 미국정부의 재정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에서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로부터 대규모의 미군철수를 결정했다. 한반도에서도 미국은 한국정부와 상의 없이 미군 철수를 결정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60년 말~1970년대 초에 걸쳐 북한의 대규모 군사도발로 인해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이 급격히 높아진 상황에서도 미국을 돕기 위해 베트남 전쟁에 우리 군을 파견하고 있었다. 박대통령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았다. 이에 박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안보 능력의 강화를 위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추진했던 것이다. 그레그 대사는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를 하자,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자신의 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김일성의 핵개발 동기와 1970년대 박정희의 핵개발 동기가 똑같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 이행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 6.25전쟁 이래 전대미문의 외교, 안보, 경제적 난관과 체제위기에 직면했고,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체제보존과 자위의 수단으로 삼고자 그 개발에 나섰다. 북한은 소련과 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의 붕괴에 충격을 받아, 자신의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전략’을 모색했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 핵협상을 통해 핵무기가 없더라도 생존과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과 요소들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했던 것이다.

그 결과는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와 2005년 9.19공동성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양 합의는 북한에게는 ‘21세기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 반영된 합의였고, 그것의 충실한 이행은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할 터이었다. 그러나 양 합의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북한으로서는 이행의 실패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할 수 있다(백학순, 2015: 78-80).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의 21세기 생존·발전 전략의 핵심은 결국 ‘전쟁과 평화’의 문제, 즉 6.25 전쟁의 종식, 즉 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민족적 화해와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의 정상화, 핵·미사일 문제 등의 현안을 한·미 양국과 대화·협상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21세기 생존과 발전의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Paik, 2007: 250-277; Paik, 2013: 245-246). 만일 그러한 핵심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시대를 맞아 제대로 된 생존과 발전의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양국과 대화하고 협상해왔고, 비록 지금은 관계악화가 심각해서 대화가 실종되었지만, 앞으로 언제인가는 북한은 한국, 미국, 일본 등과 대화하고 협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화·협상을 통해서 성취해낸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Agreed Framework)나 9.19 공동성명과 같은 기존 북핵 합의들은 협상국들이 각자 자국에게 중요한 현안들을 협상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포괄적으로 상호교환하는 형식으로 일괄 타결함으로써(‘포괄적 일괄타결’) 결국 서로 ‘윈-윈(win-win)’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합의들은, 북한의 관점에서 볼 경우, 자신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면 좋겠지만 핵무기 개발에 동반하는 외교·군사 안보적 비용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핵무기와 연관된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가로 생존과 발전을 가능케 해줄 다른 조건들을 받아냄으로써 ‘21세기 생존과 발전’을 기약하려는 전략적 계산이 반영되어 있는 약속이었다. 예컨대, 9.19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그 반대급부로 한·미·일·중·러 5개국으로부터 외교·안보·경제 분야의 중요 가치와 자원들을 확보하여 생존과 번영을 성취하겠다는 것이었다.

‘포괄적 일괄타결’을 위한 ‘상호 주고받기’에 해당하는 목록은 2007년 2월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5개 실무그룹(working group)의 명칭에도 잘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들은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장치 등이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 등 6자회담 참여국들에게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대 미국 등 6자회담 참여국들이 북한에게 약속한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장치' 간의 교환(1 대 4의 맞바꾸기)을 의미했다.

9.19 공동성명은 또한 '전쟁과 평화' 문제를 다루면서,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했다. 구체적으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는 6.25 전쟁을 종식시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약속한 것이었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의 이행은 압도적으로 '한반도비핵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기 때문에, 비록 "6자는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 방식으로 상기 합의의 이행을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할 것을 합의"했지만, 이 '평화체제' 수립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인 남한, 북한, 미국, 중국의 4개국은 종전과 평화체제에 대해서 따로 포럼을 구성하지도 못함으로써 평화정착의 문제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말았다.

참고로,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문제 관련 '주고 받기'의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비핵무기금지대화)의 요구에도 나타나 있다(북한의 6.16 제의).

이는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는 이미 주어져거나 조성되어 있는 국내외 정치기회구조 하에서 각 관련 당사국들의 상대방에 대한 정책과 그 정책들의 상호작용이 양자간 관계를 결정하는 관계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개선,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 등은 결코 북한 단독으로 해결하거나 성취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미 기본합의나 9.19 공동성명의 경우처럼, 북한도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상호 주고받기의 조건이 성립되면 이행을 위한 각종 신뢰구축조치를 만들면서 적극적으로 핵·미사일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왔고, 또 앞으로도 제대로 된 협상의 기회가 다시 생긴다면, 그렇게 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북한이 냉전시대에 유지했던 소련 vs. 중국을 균형적으로 이용하던 정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어서 중국의 과도한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가장 우려해왔던 것이었다. 대외관계에서의 '주체'를 추구하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대외전략은, 소련이 붕괴한 이후에는, 이제 미국을 끌어들여 중국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균형 전략'으로 나타났고, 앞으로도 이 '전략적 디자인'은 변하기 어려울 것이다 (Paik, 2015).

결국,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북핵문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핵 야망을 포기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의 북핵문제 해결 노력을 단순한 핵무기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보다 더 크고 높은 북한의 '생존과 발전' 차원에서 조망하고 이해할 때, 북핵문제와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며, 향후 보다 더 포괄적이고 전향적이며 문제해결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이다.

3) 정권·군사안보용 vs. 국제협상용: 정책적 합의

‘정권·군사안보용’과 ‘국제협상용’의 주장은 그 정책적 함의가 다르다. 양자의 정책적 함의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생각해 보자.

첫째, ‘정권·군사안보용’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은 정권·군사안보용이기 때문에 북한 지도자가 자신의 정권안보와 군사안보가 외부세계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참고로, 어떤 사람들은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핵무기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결과적으로 옳았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이는 그렇게 된 ‘원인’, ‘경로’를 무시하는 기능주의적(functionalist) 설명으로서 일종의 사후적(ex-post facto) 정당화이다.

일부 사람들은 ‘정권·군사안보용’의 입장에서 한국도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노태우정부 시절에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 ‘전술핵’을 재도입하여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주장은 다음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뜻이고, 둘째, 한반도를 핵무기 경쟁의 장으로 만들고, 만일의 경우 핵전쟁도 불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우리가 서명한 핵비확산조약(NPT)의 위반 시 받아야 할 유엔안보리 제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조치들이 초래할 외교, 안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넷째, 한반도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반대와 ‘확장 억제’정책(남한에게 핵우산 제공을 통한 남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 포함)을 지속하고 있는 남한의 동맹국인 미국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국제협상용’ 주장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제협상용이기 때문에 협상 조건이 맞으면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 동기는 소련 멸망 이후 자신의 체제, 정권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건과 요소들을 미국과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로부터 받아내기 위한 협상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협상이 이뤄졌다면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 동안 제대로 된 협상, 합의, 이행이 이뤄지지 않아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다른 시각에서, 국가가 반드시 핵무기를 보유해야 일류국가가 되고 또 튼튼한 안보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말하자면, 국가에게 있어서 ‘핵무기 보유’ 그 자체가 ‘핵심 국익’(vital national interests)이라기보다는, 핵무기 보유 여부는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이라는 핵심국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구적, 정책수단적’ 성격의 문제라는 것이다. 핵무기 보유가 핵심적인 국익(core national interests)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면 핵무기를 보유하고, 반대로 만약 그렇지 않다면, 즉 핵무기가 없어도 핵심 안보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독일, 캐나다 등은 비핵국가이지만 세계적인 일류국가로 존경을 받고 있고 또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핵무기 보유는 북한의 핵심국익이기 때문에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정적인 주장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본래 국제협상용의 성격이 실패하면 군사안보용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갖고 있다.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양자적 성격과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정책적 함의를 고려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결국 수령제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에서 수령의 지위를 갖고 있는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하고 결정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김정은으로 하여금 정권안보와 군사안보에 대해 외부세계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낮출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김정은의 위협인식을 낮추면서 그것이 어떻게 대화와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어떻게 협상과 선택지의 구조를 마련할 것인가?

지금까지 국제사회가 특히, 북·미 양국이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미국은 한·일 양국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공약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2016년에 들어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소형화, 고도화에 성공하고 있는 데 대해 좌절하는 입장에서, 정치권에서 여당지도부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일부 학자들이 남한의 핵무장론,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론 등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보다는 강경한 대결주의적인 정책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것들의 문제점은 이미 위에서 지적했다.

나. 북한의 핵능력 강화

북한이 1990년대부터 어떻게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능력을 강화했는지 그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 역사는 우리의 북핵문제 해결(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의 노력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제1차 핵실험 이전의 시기, 제1, 2차 핵실험 시기, 제3차 핵실험 이후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결국 핵실험 이전에는 물론이고 제1, 2차 핵실험이 일어났을 때만 해도, 북한이 핵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는 북한과 대화와 협상을 했지만, 북한의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과 바로 이어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에 미국의 공개적인 대북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이 이뤄진 이후에는 대화와 협상은 실종되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들과 그에 대한 더욱 혹독한 대북 제재들이 뒤를 이었다.⁶⁾

1) 제1차 핵실험 이전의 시기 (2006. 10까지)

6) 본 글의 “나. 북한의 핵능력 강화”는 백학순(2016: 73-119)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이고, 어떤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우선 한반도에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정부와 미국의 노력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가서명하고 1992년 1월 20일 정식 서명한 후, 남북한이 각각 국내 비준을 거쳐 2월 19일 발효시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전문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한반도를 비핵화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⁷⁾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한반도비핵화를 달성하려는 미국정부와 노태우정부의 노력과 1980년부터 줄곧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 정책을 주장해온 북한지도자 김일성의 노력이 함께 합해져 이뤄졌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1987년 12월에 개최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전술 핵무기에 해당하는 중거리미사일폐기(INF) 협정에 서명했다. 사정거리 500~5,500킬로미터 사이의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을 모두 폐기하기로 한 미소양국 간의 최초의 합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6월 1일까지 소련의 SS-20와 미국의 Pershing II 등 중거리 미사일 등 모두 2,692기가 폐기됐다.

레이건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조지 H.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냉전의 종식을 이용하여 소련의 핵무력 감축, 탈냉전의 과정에서 핵확산 방지, 미국의 국방비 삭감 압력 증가 등을 수용했다.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은 1991년 7월 30일 남한에게 한반도 비핵지대화선언을 제의했고, 7월 31일 모스크바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 사이에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조인, 9월 27일 미국의 한반도에서 모든 전술핵무기 철수 발표, 9월 28일과 11월 5일,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모든 지상전술핵(단거리 핵미사일) 폐기 선언이 뒤를 이었다. 9월 29일 북한은 남한에서 미군의 핵무기가 철수되면 자신도 사찰을 받을 수 있다는 제의를 했고, 이에 호응하여 노태우대통령은 11월 8일 일방적으로 비핵화선언을 했고, 12월 18일에는 핵무기 부재 선언을 했다.

이처럼 미국의 한반도로부터의 모든 전술핵무기 철수 결정, 북한의 사찰 수용 제의, 남한정부의 비핵화선언과 핵무기 부재 선언 등의 노력에 따라 남북한 간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성사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2년 1월 3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IAEA에 핵시설을 보고했고, IAEA는 그에 따라 핵사찰을 했다.

문제는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한 IAEA가 북한에 대해 특별사찰을 요구했고,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하고 말았다. 이로써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했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실질적으로

7)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은 남북한은 전문과 6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6개항은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의 금지,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보유금지, 비핵화 검증을 위해 상대방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해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 실시,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공동선언의 발효 후 1개월 내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이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1992. 1. 20.)

무효가 됐다. 미국과 북한은 집중적인 협상을 거쳐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를 이뤄냈고, 이로써 제1차 북핵위기는 해결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북한의 핵폐기와 미국의 대북 경수로 제공 등의 포괄적 교환에 합의한 북미기본합의에 따라 양측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 나가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나, 미국에서 1994년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는 사건(“1994년 공화당 혁명”)이 발생함으로써 미국정치에서 민주당이 60년간 압도해온 시절이 가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동등한 양당의 시대가 열렸다. 이는 민주당 출신 빌 클린턴 정부가 북미기본합의를 이행하는 데서 공화당 다수 의회에 발목을 잡혔다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공화당 혁명’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2000년 11월에 공화당 후보인 조지 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이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으로부터 변화 하는 가운데 2001년 9월 ‘9.11 테러’가 발생했다. 이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는 결정적으로 이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2002년 10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의 특사인 제임스 켈리 동아태차관보가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고, 북한이 그것을 인정했다고 2002년 10월 17일 미국이 발표했다. 미국은 북한이 북미기본합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유 제공을 중단했고,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12월 12일 핵동결 해제를 선언했고, 2003년 1월 10일에는 NPT 재탈퇴를 선언했다.

켈리 특사의 방북과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의 붕괴와 관련하여 특별히 두 가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미기본합의의 붕괴는 북한의 핵 관련 ‘통제 메커니즘’이 붕괴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비록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겠지만, 북한은 이제 자신이 서명한 북미기본합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핵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의 북한비핵화 노력의 역사에서 볼 때, 2002년 10월~2003년 1월이 ‘켈리 방북 이전’과 ‘켈리 방북 이후’로 시대를 가름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을 이뤘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그렇다면, 미국은 제네바 북미기본합의가 붕괴하면 북핵관련 통제 메커니즘이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당시 남한정부와 전혀 상의 없이 왜 켈리 특사를 방북시켜 당시에 확실하지도 않았던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문제 삼아 결국 제네바 북미기본합의를 붕괴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을까? 여기에는 바로 전 달인 9월에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북하여 9월 17일 ‘북일 평양선언’에 합의하고 돌아온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9.19 테러까지 당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못마땅했는데 이제 일본까지 나서서 평양과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로 나아가겠다는 결정을 하는 상황에 처하여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을 하는 데 제동을 걸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 위협이 증가하자,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4월 23일 북한과 3자회담을 개최했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 북미양자회담을 주장해온 북한과 다자간 틀 속에서 양자회담을 하기 원했던 미국이 3자회담의 형식 속에서 북미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 3자회담은 결국 그해 8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한 6자회담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협상의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은 채, 북한은 2005년 2월 핵무기보유 공식 선언과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결국 6자회담이 재개되어 드디어 2005년 9월에는 제4차 회의 제2단계 회담을 개최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합의했다. 6자회담 참여국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받은 ‘9.19공동성명’에 성공함으로써 제네바 북미기본합의의 붕괴로 무너진 북한비핵화 ‘통제 메커니즘’을 다시 세웠다. 문제는 이제 9.19공동성명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2) 제1, 2차 핵실험의 시기 (2006. 10~2013. 2)

북한은 2006년 10월에 제1차 핵실험을 했고, 2009년 5월에는 제2차 핵실험을, 그리고 2013년 2월에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여기에서는 제1차 핵실험을 한 직후부터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북한의 핵능력 강화와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노력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제1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

미국은 9.19공동성명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그동안 준비해온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있는 예치되어 있는 북한의 자산에 대해 금융제재를 취했다. 북한은 미국의 속셈을 북한경제의 생명줄을 조이면서 북한붕괴를 시도하는 것으로 비난하면서, 미국이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하지 않은 한 6자회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BDA 금융제재로 9.19공동성명으로 다시 세운 북핵 관련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여러 가지 곡절을 거쳐 2006년 6월 북한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했으나, 미국대표의 평양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은 7월에 대포동 미사일 2호를 발사했고,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695호를 통과시켰다. 9월 들어 중국을 포함한 세계 24개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금융거래를 중단했다. 북한은 그해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은 성공했다.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718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핵능력 강화에 나섰다.

이제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으로 9.19공동성명을 통해 세워진 북핵 관련 통제 메커니즘은 완전히 무너졌고, 지금까지 북한은 자신이 합의한 통제 메커니즘의 통제를 거부한 채, 국제사회의 제재를 견디면서 핵무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 역시 커졌다.

결국 북한의 강력한 핵개발 능력 강화 시도에 직면한 조지 W. 부시는 2006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를 계기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서 북미양국은 2006년 12월부터 양자회담을 시작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어 2007년 들어 9.19공동성명의 제1단계, 제2단계 이행을 위한 2.13합의, 10.3합의를 이뤄냈다.

북한은 2008년 6월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했고, 이는 핵시설을 폐쇄하는 상징적 조치였다. 그러나 “미신고 핵시설, 핵물질, 관련 활동들이 부재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장소를 마음대로 사찰할 수 있게 해달라는(challenge inspection) 미국의 매우 엄격한 검증의정서 요구(Kessler, 26 September 2008)와 이에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했다. 결국 ‘북핵 검증체계’ 문제로 회담이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2008년 12월 수석대표회의를 마지막으로 6자회담은 지금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북핵 관련 통제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나) 제2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 “2.29합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두 번째 핵실험을 했고,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북핵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의 핵능력 강화에 직면한 미국은 중국을 중재자로 북한과 간접대화를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과 대화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북한을 비난했지만, 비공개적으로는 미국은 2009년 후반기에 중국의 중재로 북한과 깊은 대화를 해 나가고 있었다(백학순, 2012: 35-42). 드디어 스티븐 보스워스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1월말~12월초에 평양을 방문했다. 북미양자회담과 6자회담의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으나,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사건이 발생함으로써 모든 대화 노력이 중단됐다.

또 다시 여러 곡절을 거친 후, 북한이 미국의 저명한 핵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를 초청하여 2010년 10월 12일 영변에 새로 건설 중인 중형 경수로와 최신식 농축우라늄 시설을 공개했다. 이에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이 급증했고, 결국 북미양국 간에 대화와 협상이 시작됐다. 그해 2010년 11월 23일 발생한 연평도사건은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얼마나 실질적인지를 증명했다.

결국 2011년 7월에 제1차 북미고위급회담이, 10월에 제2차 북미고위급회담이 개최됐다. 12월 중순에 김정일이 사망했으나,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은 미국과 협상을 지속하여 2012년 2월에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조치들’에 대해 합의했다(“2.29합의”). 합의의 제목이 시사하듯이, 비록 그 정도가 낮은 것이었으나, 북미양측이 성심껏 협의를 준수해 나간다면 결국 6자회담을 재개하고 9.19공동성명의 합의 이행과정을 되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2012년 4월, 북한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를 발사함으로써 ‘2.29합의’가 깨졌고, 북한은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통과된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했다. 4월 16일 유엔안보리는 북한 로켓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29합의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실패’ 문제를 제기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케 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제공했다.

비록 2.29합의의 이행 실패로 북미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됐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운동 기간에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을 통제해야 하는 필요성이 컸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인 4월 7일과 8월 18~20일, 미국 정부의 인사들이 비밀리에 미 군용기를 타고 광에서 평양으로 날아가서 북한 고위인사들과 접촉했다. 북한은 조지 W. 부시정부와 동일한 대북정책을 예고한 공화당 후보보다는 빌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생각되던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되는 것을 선호했다. 북한은 당시 미국의 대선 기간 중 소위 ‘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추가 발사를 자제하고 ‘핵실험 무계획 통지’를 하는 등 오바마정부에 협력했다. 그리고 11월 대선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결국 재선에 성공했다.

3) 제3차 핵실험 이후의 시기 (2013. 2~현재)

제3차 핵실험 이후의 시기는 2013년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부터 2015년 9월 중순 현재까지의 시기로서, 2013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미국의 공개적인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과 북한의 대미 핵공격 위협으로 인한 ‘핵전쟁 불가’의 금지사항의 붕괴,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대북 제재결의, 북한의 지속적인 제4차 핵실험 위협, 2016년 1월의 제4차 핵실험 단행, 이에 대해 유엔안보리의 70년 비군사적 제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 2016년 9월의 제5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논의 등이 이뤄진 시기였다.

예전의 시기와 달리, 이 시기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안보리의 강력한 제재결의,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 유엔안보리의 더 강력한 제재결의, 북한의 또 다른 핵실험...으로 반복되면서 대화와 협상이 실종된 것은 물론 상호 ‘핵 선제공격’의 위협이 점증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기라고 할 것이다.

가) 제3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094호,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과 ‘핵공격’ 위협, ‘맞춤형 억제전략’

북한은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지나가기 전인 2012년 12월 12일에 은하 3호, 2호기를 발사하여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 상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선거 기간에 북한의 협력을 구하면서 자신이 재선되면 관계개선에 나서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던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기대와는 달리 북한에 대해 협력적인 방향으로 나오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2013년 1월 22일 유엔 안보리를 동원하여 대북 제재결의 2087호를 채택했던 것이다(백학순, 2014: 13). 북한은 1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을 통해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 전면 무효화를 선언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1. 25.). 그리고 2월 12일에는 제3차 핵실험을 했다. 3월 7일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70년 유엔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였다.

한편, 미국은 2013년 3~4월 한·미 합동군사훈련 기간에 ‘공개적’으로 대북 ‘핵무기 사용 위협 훈련’을 실시했다. 미태평양사령부는 작전교본에 따라 “공개적”으로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공격형 핵잠수함 샤이엔호를 모두 한반도 영공, 영해에 진입시켜 북한을 과녁으로 하여 군산 앞바다에 있는 직도 사격장에 모의 핵폭탄을 투하하는 등 ‘핵무기 사용 위협’ 훈련을 했다(백학순, 2014: 21-33). 북한은 미국에 대해 ‘핵공격’ 위협을 하면서 핵무기를 탑재하여 괌(Guam)의 공격이 가능한 이동형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 자세를 취하는 등 유례없이 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 위협이 고조됐다. 북미양국 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 불가’라는 금기사항이 공개적으로 깨어졌다. 결국 한미양국의 ‘대화 제의’를 계기로 한반도에서 최근 들어 유례없이 높아졌던 전쟁위협이 잦아들었다.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미국의 공개적인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을 통한 핵공격 위협을 받은 북한은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6월 16일 미국에 고위급회담을 제의했다.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개발했고, 언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며, 어떤 조건 하에서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지를 미국에게 제시했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할 것, 평화협정 체결에 응할 것, 그 외에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등을 요구했다.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선택포기’를 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2013년 봄에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의 괌 공격 위협을 당한 미국은 그 동안 북한의 핵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왔던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심각히 인식했다. 따라서 곧바로 괌에 고(高)고도방위체계(THAAD, 사드)를 바로 설치하고, 일본 북부 지방에 있는 미사와(Misawa) 미 공군기지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를 배치했다. 그리고 나중인 2016년에 남한의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도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미사일에 대항하기 위한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완성하는 데 큰 힘을 쏟았다.

한편, 2013년 10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안보협의회(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양국은 대북 ‘맞춤형 억제전략’에 합의하고, 북한은 이를 자신에 대한 ‘선제 핵타격 전략’이라고 비난하는 가운데,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상의 기회는 실종되고 지속적인 대결로 악화 일로를 걸었다.

나) 제4차 핵실험 ‘위협’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3월 중순부터 북한은 외부의 위협이 더욱 커지면 언제든지

제4차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2014년 3~4월에 3차례, 또 11~12월에 2차례 등 총 5차례에 걸쳐 제4차 핵실험과 핵무력 강화 위협을 했다.

첫 번째는 2014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창 진행 중이던 3월 14일, 19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된 이래 최대 규모의 상륙훈련으로서 포항 앞바다에서 진행될 쌍룡훈련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 북한은 국방위원회 명의 성명을 통해 핵실험 위협을 했다. 동 성명은 “지금처럼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은 계속되며 그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우리의 추가적인 조치들도 련속 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4. 3. 14.).

두 번째는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3월 30일자 북한 외무성 성명을 통한 위협이었다. 북한은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여 미국이 “각종 핵타격 수단들을 총동원하여 핵전쟁연습을 끊임없이 벌여놓고 있는 조건에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훈련에도 보다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들이 다 포함되게 될 것”이라면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던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14. 3. 30a.).

세 번째는 4월 25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실망한 북한이 4월 29일 “미국이 핵전쟁의 구름을 우리에게 몰아오고 있는 이상 우리는 핵억제력 강화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갈 것”이라면서, “지난 3월 30일 성명에서 천명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우리의 선언에는 시효가 없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4. 4. 29.).

네 번째 위협은 11월 18일 제69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사회, 인도주의, 문화 위원회)에서 유엔안보리 차원에서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자, 당시 이 제3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던 북한 대표 최명남을 통해 이뤄졌다. 그는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 ‘인권’소동은 우리로 하여금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 2014. 11. 19.; Donath, 19 November 2014).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된 후인 11월 20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성명을 통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핵실험을 더는 자제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조건에서 미국의 무력간섭, 무력침공책동에 대처한 우리의 전쟁억제력은 무제한하게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 2014. 11. 20.).

다섯 번째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2월 18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북한 외무성은 12월 20일 성명을 통해 “인권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침공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명백해진 조건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 자체가 더는 성립될 수 없게” 되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우리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취해나갈 것”인바, “핵무력을 포함한 나라의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는 배가의 박차가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 2014. 12. 20.).

다) ‘한미합동군사훈련 임시중지, 핵실험 임시중지’ 제안

2015년에 들어서자마자 북한은 1월 9일, 미국정부에 대해 중대조치를 제안했다.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언제든지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다”는 입장도 표명했다(조선중앙통신, 2015. 1. 10.).

김정은은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을 겪은 이래, 매년 강화되어가고 있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제의는 그해 4월 23일 리수용 외무상에 의해 반복됐다.

북한은 5월 20일 국방위 정책국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핵타격 수단의 소형화·다종화, 장거리 미사일 정밀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성과” 등을 주장했다. 5월 24일에는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위적 핵 무장력이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이며, 남측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난했다. 8월 6일에는 북한이 아세안지역포럼(ARF) 계기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는데,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고 추가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9월 15일에는 북한 원자력연구원장이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이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면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언제든지 핵뇌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1일에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제70차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이며, 핵실험은 미국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라) 제4차 핵실험,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

2016년에 들자마자, 북한은 1월 6일, 제4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번 실험은 ‘수소탄 실험’이라고 했다. 북한은 2016년 1월 15일자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공격 능력과 핵보복 능력을 백방으로 갖출 것이지만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핵무기를 그 어디에도 전파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수단과 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내놓은 미국의 합동군사연습중지 대 우리의

핵시험중지 제안과 평화협정체결 제안을 포함한 모든 제안들은 아직 유효”하다고 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016. 1. 15.).

3월 2일,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라 북한 화물 검색 의무화, 육해공 운송 통제, 북한 광물거래 금지 및 차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엔안보리 제재 70년 역사상 비군사적 조치로서는 ‘역대 최강’ 수위의 제재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정은은 2016년 3월 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앞두고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했으며, 3월 9일에는 은색 구형(球形) 핵탄두 모형을 공개하고 “핵탄을 경량화하여 탄도로켓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월 10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참관한 자리에서는 “남조선 작전지대안의 주요 타격대상들과 아시아태평양지역 미제침략군 기지들을 과녁으로 삼은 전략군의 모든 핵타격 수단들을 항시적인 발사대기 상태에 두고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을 명령했다.

마) 상호 ‘선제공격’ 태세 강화, 제5차 핵실험 ‘위협’

한편, 2016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북미양국 간에 ‘선제공격’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더욱 전쟁위협이 악화된 상태로 진행됐다. 3년 전인 2013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 시기에 한반도에서 발생했던 ‘핵공격 위협’이 이번에는 보다 위험한 상호 ‘선제 핵공격 위협’으로 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 선제타격’ 포함된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맞춤형 억제전략’,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 (detect, disrupt, destroy, and defense) 작전 전략, 북한지도자에 대한 ‘참수작전’ 등이 포함된 미태평양사령부의 ‘작전계획 5015호’를 적용하는 훈련으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북한도 ‘선제적 핵공격’을 위협했다.

북한은 5월 초순에 개최될 제7차 조선로동당 대회를 앞두고 제5차 핵실험의 징후가 포착되고 또 북한은 실제 제5차 핵실험을 위협했다. 4월 중순에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차량과 인력, 장비의 활동이 앞선 한 달에 비해 2~3배 늘어났다. 그리고 4월 2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030 지속가능 개발목표(SDG) 고위급회의’에 참석한 리수용 북한 외상은 “한반도에는 지금도 30만 명의 방대한 무력과 미국의 핵전략 자산들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핵전쟁 연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7월에 찍힌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모습은 북쪽 경도 쪽에 광산용 운반 차량이 새롭게 등장하고 관측기기가 새롭게 설치됐음을 보여주었다.

바) 북한의 ‘핵무기 선제 불사용’, ‘핵비확산 의무 이행’,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 강조

북한은 2016년 5월 6일 제7차 조선로당당 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한 사업총화보고를 통해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전략적 로선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자위적인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우리 공화국은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과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김정은, 2016. 5. 6.).

7월 6일에는 북한 정부대변인의 성명 발표를 통해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드팀없는 의지”라는 것을 재천명했다. 대변인 성명은 또한 제7차 당대회에서의 결정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핵공격을 당하기 전에는 핵무기를 선제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비확산 의무의 성실한 이행의 노력을 약속했다(로동신문, 2016. 7. 7.). 제7차 당대회의 결론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런데 7월 6일자 정부대변인 성명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핵위협과 선제공격을 제압하기 위한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춘 것은 “구경은 조선반도에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서 반도전역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북한이 핵억제력을 갖춘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남핵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는 1990년대초 “우리의 주동적인 발기와 진지한 노력”에 의해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됐는데 미국과 한국이 이를 사문화시켰다고 비난하고 있다(로동신문, 2016. 7. 7.).

참고로, 북한은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미국의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을 겪은 뒤 그해 6월 16일 대미 고위급대화 제의를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백히 했다. 즉,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결코 ‘북핵폐기’만을 위한 비핵화가 아니”라 “남조선을 포함한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이며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는 것이다(조선중앙통신, 2013. 6. 16). 북한은 그해 10월 23일, 외무성은 한미양국의 맞춤형 억제전략 및 합동군사훈련 등에 대해 비난하면서, “조선반도 비핵화가 마치 우리의 핵포기인 듯이 여론을 오도”하고 있는데, 북한의 “변함없는 정책적 목표인 조선반도 비핵화는 결코 우리의 일방적인 선택포기가 아니며 그것은 동시행동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데 기초하여 전 조선반도를 핵무기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라면서 “예나 지금이나 행동 대 행동은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이며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움직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10. 23).

다시 말해,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란 ‘한반도 비핵무기지대화’를 뜻하는데, 이것은 남한의 핵개발 시도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전술핵 등) 및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진입·배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 제5차 핵실험

북한은 북한정권수립 기념일인 9월 9일 제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명의의 9월 9일자 성명을 통해, “이번 핵시험에서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부대들이 장비한 전략탄도 로켓들에 장착할 수 있게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했다면서, “시험분석 결과 폭발위력과 핵물질이용결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 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이 확증”됐다고 했다. 또 “핵탄두가 표준화, 규격화된으로써 우리는 여러 가지 분열물질에 대한 생산과 그 리용기술을 확고히 틀어쥐고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 먹은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 2016. 9. 10).

9일 11일자 외무성 대변인 담화는 9월 9일 “핵탄두 폭발시험은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핵전쟁 위협과 제재 소동에 대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서 적들이 우리를 건드린다면 우리도 맞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초강경 의지의 과시”라면서, “우리의 이번 핵탄두 폭발시험도 병진노선 관철의 한 공정일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가증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위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016. 9. 11).

다. 북미양국 간의 상호 ‘핵공격 위협’ (2013. 3~4)

지금은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북미양국이 상호 간에 ‘선제 핵공격 위협’을 상시적 이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리 말해, 북한의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당장 ‘핵전쟁 위협’이 매우 시급하고 위중한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여기에서는 2013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북미양국 간에 상호 ‘핵공격 위협’이 이뤄지면서 전쟁위협, 그것도 ‘핵전쟁 불가’라는 금기사항이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반도 전쟁위기가 유례없이 높아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이유는 2013년 봄을 기점으로 매년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마다 북미양국 간에 ‘핵공격 위협’, 그것도 ‘선제 핵공격 위협’이 더욱 고조됨으로써 지금 우리가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 하에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오바마 1기 행정부 시기인 2012년에 북한과 합의했던 ‘2.29 합의(일명 윤달합의)’가 이행에 실패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고 있던 오바마정부는 이미 2012년에 다음 해인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에 ‘공개적’으로 모의핵폭격 등 ‘힘을 과시’하는 강경책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Galrahn, 4 April 2013, Posted).⁸⁾ 그런데 북한이 2013년 2월에 제3차 핵실험까지 단행했다. 미국은 2013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작전교본에 따라 ‘공개적’으로 대북 ‘핵무기 사용 위협 훈련’을 했다.⁹⁾

미국의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에 직면한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공격’ 위협, 정전협정 백지화 및 남북불가침 관련 합의 무효화, 남북 간·북미 간 모든 통신수단 단절, 북한의 전시상황 진입 선언, 북한의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 채택과 핵보유의 법제화,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 탑재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위협, 북한의 영변핵시설 재정비·재가동 선언,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등을 단행했다(백학순, 2014: 21-46). 유례없이 ‘핵전쟁’ 위협이 고조됐다. 북미양국 간에 한반도에서 ‘핵전쟁 불가’라는 금기사항이 공개적으로 깨어졌다.

특히, 북한이 사거리가 4,000km에 이르는 이동식 발사대 탑재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로 미국의 해군, 공군기지가 있는 괌(Guam)을 공격하려는 위협을 하자, 미국은 MD능력을 가진 한미양국의 근해에 있던 자국의 이지스함들은 물론 일본과 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이지스함들을 모두 동원해도 무수단 미사일 공격에 대한 ‘충분한’ 방어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미국과 한국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작전교본의 시행을 중단하고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함으로써 상황을 수습했다.¹⁰⁾

8) 참고로, 레온 파네타 전 미국방장관은 2014년 10월 7일에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 A Memoir of Leadership in War and Peace*)에서 2011년 10월 26~28일 제4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방한했을 때, 김관진 국방장관 등 한국 고위당국자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논의했고,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방어한다는 약속을 포함해 우리의 오랜 방위협정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가 2010년 미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신분으로 방한했을 때도 월터 샤프(Walter L. “Skip” Sharp)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 침략에 따른 비상계획을 보고하면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의 전쟁계획은 미군사령관이 한국과 미국의 모든 병력에 대한 명령권을 갖고 한국을 방어하도록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핵무기 사용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Paneta & Newton, 2014).

9) 참고로, 미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왔다. 제1차 북핵위기를 나름대로 해결했던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에서 미국은 명시적으로 ‘대북 핵무기 사용과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코자 했던 2005년 9.19공동성명은 명시적으로 그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한반도의 비핵화(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제와 정신은 그와 동일한 것이었다.

10) 본 글의 “다. 북미양국 간의 상호 ‘핵공격 위협’ (2013. 3~4)”은 백학순(2014: 21-59)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이고, 어떤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 1) 2013년도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시작, 핵선제타격 위협,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 대표부 활동 중지, 판문점 북미 간 군용전화 차단, 김정은의 장재도·무도·월내도 방어대 방문

한미양국은 3월 1일~4월 30일에 2013년도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독수리훈련’을 실시했다. 북한은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을 발표했다. 올해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이 “지난해와 달리 100여발의 핵탄을 적재한 미제침략군의 핵동력 초대형 항공모함타격집단과 전략폭격기 ‘B-52H’를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핵타격 수단들이 대량 투입”된 “우리를 겨냥한 가장 위험한 핵전쟁 소동”이라고 비난하고, 다음과 같은 “중대조치”를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5.).

첫째,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련속 취하게 될 것”인바, 미국이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덤벼들고 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다중화된 우리 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고, 둘째, “이번 전쟁연습이 (‘키 리졸브’가 시작되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되어 오던 조선정전협정의 모든 효력을 전면 백지화해 버릴 것”이며, 셋째,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의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면서, “판문점 조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하여 내리게” 된다는 것이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5.).

3월 7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성명을 통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은 철두철미 우리에게 대한 선제타격을 노린 북침핵전쟁 연습”이라면서, 세 가지를 선언했다. 첫째, “미국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피려고 하는 이상”, 북한군은 “침략자들의 본거지들에 대한 핵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이고, 둘째,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은 북한이 “이미 선포한 보다 강력한 2차, 3차 대응조치들을 더욱 앞당기게 만들 것”이며, 셋째, 유엔안보리는 “지체 없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연습을 문제시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수행의 도구인 ‘유엔군사령부’를 즉각 해체하며 조선전쟁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7a.).

같은 3월 7일, 김정은은 서해의 장재도방어대와 무도방어대를 또 다시 시찰하고,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면 지체 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 올리라”고 말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7b.). 3월 11일에는 김정은은 또 백령도 건너편에 위치한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했다.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최전방에 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언제나 병사들과 함께 계신다’는 이것이 온 나라를 커다란 걱정과 흥분에 휩싸이게 했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12.).

2)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2094호

이러한 상황에서 3월 8일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한 처벌조치로서 대북제재결의 2094호를 채택했다. 동 결의가 통과된 당일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확장억지’(extended deterrence, 핵우산 제공)의 일환으로 B-52 전략폭격기 편대를 괌(Guam) 앤더슨 공군기지(Andersen Air Force Base)로부터 출격시켜 한국 상공에 전개하였다. 미국은 이어 3월 18일 이러한 모든 조치들을 특별히 ‘공개’했다(Gertz, 19 March 2013; Rowland, 19 March 2013).

3월 9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를 전면적으로 배격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8년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미국의 사측 하에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다섯 차례나 조작해냈지만 저들이 바라던 것과는 정 상반되게 우리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확대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이제 세계는 미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조작해낸 대가로 우리의 핵보유국 지위와 위성발사국 지위가 어떻게 영구화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9.).

3) 조평통 성명: 남북 불가침합의 무효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백지화, 판문점 연락통로 및 남북직통전화 폐쇄

3월 8일 조평통은 성명을 통해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한이 “반공화국 침략행위의 돌격대로 나서고 있는 것”이라면서 “위임에 따라” 세 가지를 천명했다. 첫째,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를 전면 폐기”를 선언한다. 즉, “(3월 11일로 예정된 ‘키 리졸브’ 강행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이미 3월 5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서 천명한) 조선정전협정이 완전히 백지화되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도 전면 무효화될 것”을 공식 선언한다. 둘째,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완전 백지화’를 다시 한 번 명백히 천명하는 바이니, 이제 그 누구도 우리에게 대해 ‘핵포기’니, ‘핵불용’이니 하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 “북남사이의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하고, 그것의 폐쇄 선포에 따라 북남 직통전화를 즉시 단절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8.).

3월 11일, 한미 독수리연습(Foal Eagle)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3년도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3월 11~21일)이 실시됐다. 북한의 조평통은 ‘키 리졸브’가 시작된 당일 바로 대변인성명을 발표했다. ‘키 리졸브’ 강행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라면서,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들은 전면 폐기 되게 되었으며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조선반도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되었다”고 했다. 성명은 또한 지금 “우리의 모든 타격수단은 이미 격동(擊動)상태에 있으며 발사되면 불바다가

되게 되어 있다”면서, 북측이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에 있음을 강조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11.). 북한은 3월 17일,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는 “불벼락이 쏟아질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멀리 뛰는 것”이라면서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지구에 사는 주민은 피난 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위협했다(동아일보, 2013. 3. 16.).

4) 미국의 ‘공개적’인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 B-52 전략폭격기, 공격형 핵잠수함 샤이엔호, B-2 스텔스폭격기 투입

미국정부는 2012년에 이미 승인된 작전교본에 따라 2013년 3~4월에 계획된 한미합동군사훈련 시 핵무기 탑재 및 운용이 가능한 B-52 전략폭격기를 비롯해, 최신훈련에 최첨단 스텔스기인 B-2 폭격기와 F-22 랩터 전투기 등을 출격시켜 북한에 ‘힘을 과시’했다.

3월 18일에는 서울을 방문한 애쉬턴 카터(Ashton Carter) 미 국방부 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핵능력을 가진 하늘을 나는 요새인 B-52 전략폭격기가 다음 날인 19일 한반도 지역에 들어와 훈련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의도적’으로 ‘공개’했다(Pellerin, 18 March 2013; 전현석, 2013. 3. 19.). 이와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조지 리틀(George Little) 미 국방부대변인이 “지난 8일에 B-52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들어가 훈련했다”고 밝혔다(Garamone, 18 March 2013; 한면택·홍장기, 2013. 3. 19.). 실제 3월 19일, B-52 전략폭격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다시 출격해 강원도 영월 소재 필승사격장의 가상 목표물에 대해 모의 핵공격 훈련을 한 다음 바로 괌으로 복귀했다. 3월 20일에는 ‘키 리졸브’ 훈련 참여를 위해서 미 공격용 핵잠수함인 샤이엔호(USS Cheyenne)가 부산에 입항했다. B-52 폭격기는 3월 25일에도 다시 한반도에 와서 훈련에 참가했다.

3월 28일에는 사상 최초로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2대가 독수리연습의 일환으로 미 본토 미주리 주의 화이트먼 공군기지(Whiteman Air Force Base)로부터 한반도까지 무려 6,500마일(1만여 km)을 비행해 군산 앞바다 소재 직도사격장에서 가상 북한 목표물을 겨냥한 불활성 폭탄(inert ammunition) 투하 훈련을 하고 바로 되돌아갔다. 미국은 이러한 스텔스 폭격기의 훈련을 또 다시 이례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미국 전략자산의 장거리 투사 능력과 대북 억지력 사용 의지를 북한에게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여주었다(Change, 28 March 2013). 또 3월 31일 스텔스 기능을 가진 미 공군 F-22 랩터(F-22 Raptor) 전투기 2기가 독수리연습에 참여하기 위해 오키나와 카네다 공군기지에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비교적 가까운 괌에서 B-52 전략폭격기가 날아와 훈련에 참여하는 것과는 달리,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로부터 한반도로 전개되어 한미 훈련에 참여한 사실의 이면에는 매우 특별한 메시지가 내포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 본토-한반도 구간의 전개 및 복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정교한 구성요소들을 총체적으로 동원·조합해야만 가능한, 한마디로 매우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맹국을 위해 투입한다는 것은 ‘미국이 동맹국들을 돕기로 선택하면, 그처럼 멀리 떨어진 미 본토로부터라도 B-2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여 돕는다’는 확실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었다.

5) 북한의 대응: 1호전투 근무태세 진입, 경제·핵 병진노선, 핵보유 법제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개성공단 폐쇄

그렇다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이 이번에 ‘핵무기 사용 위협’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¹¹⁾ 북한은 다섯 가지 범주에서 유례없이 강력한 대응을 하고 나왔다.

첫째,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천안함 침몰사건 3주기인 3월 26일 미국 본토와 하와이, 괌 등 주요 미군기지들과 남한과 그 주변지역의 적 대상물들을 타격할 전략로켓군과 장거리 포병부대 등 야전포병군을 “1호전투 근무태세에 진입”시켰다.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이 실행단계에 들어가 ‘실동(實動) 핵타격 훈련’으로 이뤄지면서 이제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표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의미’를 띠게 되는 등 미국에 의해 이 땅에는 ‘핵대결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1호전투 근무태세에 진입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수호하는 반미 전면대결전의 최후단계에 진입한다”는 것이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21; 조선중앙통신, 2013. 3. 26.)

이런 상황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3월 28일 사상 최초로 미 공군 B-2 스텔스 폭격기 2대의 한반도 전개 및 북한을 겨냥한 불활성 폭탄 투하 훈련이 있었다. 김정은은 바로 다음날인 3월 29일 0시 30분 ‘전략로켓군 화력타격 임무수행 관련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화력 타격계획을 최종 비준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로켓이 태평양상의 미군기지를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MacAskill, 29 March 2013)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미국의 해·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사정거리에 넣고 있는 ‘무수단’ 이동식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준비를 의미했다. 연이어 3월 30일, 북한은 ‘정부·정당·단체’ 명의로 ‘특별성명’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첫째, “이 시각부터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30a.).

둘째, 북한은 북미 간, 남북 간에 모든 통신을 단절하는 등 전쟁위협 수준을

11) 1994년 북미기본합의, 2005년 9.19공동성명 등은 모두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과 ‘핵무기 사용 위협’을 금지하고 있다.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위협’을 했으니, 북미간의 군사적 대결의 성격이 상호 ‘핵공격’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고(실제 핵공격이 이뤄져 핵전쟁이 발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북한 스스로 핵포기 결정을 하여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는 난망한 상황이 되어, 북핵문제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더구나 미국의 한일양국에 대한 핵우산(확장억제) 제공 약속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와 핵무기 사용 위협 및 핵무기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높여갔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키 리졸브’가 시작된 3월 11일부터는 판문점 북미 군사전화,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가 끊겼고, 3월 27일에는 남북 군통신도 완전히 끊음으로써, 이제 ‘북미, 남북 간에는 아무런 대화통로나 통신수단도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 되고만 것이었다. 만일 남북 간에 군사적 우발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군사 핫라인을 통해 남북군 사이에 즉각 통보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것이다. 이는 실로 엄중한 상황이었다(조선중앙통신, 2013. 3. 27.).

셋째, 북한은 3월 31일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소집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채택했다. 이제 핵포기와는 정반대로, 핵보유를 본격화하고 법제화한 것이다. 이제는 핵무력 보유를 통해 안보를 확실히 달성했으므로 한정된 자원을 경제건설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자면 결국 ‘억지력으로서의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했다(로동신문, 2013. 4. 2a; 로동신문, 2013. 4. 2b.). 당에서 전략노선을 채택한 바로 다음 날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과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의 창설을 결정했다. 이른바 핵보유와 인공위성 로켓발사 권리를 법제화한 한 것이다. 북한은 즉각 ‘병진로선’에 따라 핵무력 강화에 들어간 것이었다(조선중앙통신, 2013. 4. 2.).

넷째, 미국 해·공군기지가 있는 괌을 사정거리에 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사정거리 3,000~4,000km)의 발사 준비를 함으로써 사실상 물리적으로도 미국에 대해서 ‘핵전쟁’ 위협을 했다. 북한은 4월 5일 무수단 미사일 2기를 열차편으로 동해안에 이동시킨 다음, 발사대가 장착된 차량(TEL: Transporter Erector Launcher)에 실어 원산 부근에 은폐했다(연합뉴스, 2013. 4. 5.). 이러한 행동은 한·미·일 등으로 하여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소와 시간을 파악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미사일 추적이나 방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한 뒤 은폐시키자, 한미 양국은 어떻게 미사일방어를 할 것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한반도와 주변 수역에 배치된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의 능력으로써는 무수단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 있는 방어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보다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 능력이 필요해진 것이었다.

다섯째,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개성공단의 폐쇄 수순을 밟음으로써 한반도의 전쟁위기 국면을 더욱 고조시켰다.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을 한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나름의 ‘처벌’을 하기 위한 계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우리의 존엄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차단·폐쇄 해버리게 될 것”이라는 위협을 시작으로(조선중앙통신, 2013. 3. 30b.). 4월 8일, 김양건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하여 현지상황을 파악한 뒤, 「개성공업지구 사태와 관련한 중대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담화를 발표하고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4. 8.). 이로써 개성공단이 ‘잠정적’으로 폐쇄됐던 것이다.

6) 오판 위험성 증가, MD능력의 한계, 작전교본의 중단, 대북 ‘대화 제의’

이처럼 상황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을 너무 지나치게 자극한 결과, 북한이 더 강도 높은 도발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무엇보다도, 김정일보다도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새 지도자를 가진 북한이 미국의 의도보다 더 위협을 느끼면서 일이 잘못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다시 말해, 만일 미국이 현재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의도를 오해(misperceptions)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면, 북한은 실제로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오해’ 가능성을 낮추고, 한반도 전쟁위기의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Entous & Barnes, 3 April 2013).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심지어 네오콘의 대표적 인물 중의 하나였던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대사같은 인사까지도 “북한의 언술과 위협이 그들 자신의 정상적인 작전계획을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는 피아간에 오판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우려를 표시했다(Washington Free Beacon Staff, 4 April 2013). 또 미국은 4월 7일(현지시간 4월 6일), 4월 9일로 예정돼 있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 3’ (Minuteman III)의 발사실험을 5월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발사실험이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나 오산(misperception or miscalculation)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결국 작전을 중단함과 동시에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미사일방어’ 능력이 있는 이지스(Aegis)함과 레이더함을 추가로 한반도 수역에 배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괌에 고(高)고도방위체계(THAAD)를 수주일 내에 배치하기로 했고, 일본 미사와(Misawa) 미 공군기지에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Global Hawk)를 2003년 6월과 9월 사이에 배치하기로 했다(Department of Defense..., 3 April 2013). 그러나 만약 북한이 곧장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당시 시간적으로 볼 때 괌의 사드 포대나 일본 미사와 기지의 글로벌 호크는 별로 도움이 될 수 없는 조치들이었다.

따라서 당장 미사일방어가 가능한 함정들의 투입이 필요했고, 한국은 이지스함인 서해류성룡함을 동해에, 울곡이이함을 서해에 배치했고, 미국도 급히 이지스 구축함 2척과 레이더함(SBX-1)을 일본 동쪽 서태평양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만일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이 공격에 사용될 경우, 이미 한국 전역(戰域)과 일본에 있는 기존의 이지스함들과 레이더 기지로서는 부족했기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춘 함정들과 레이더함의 추가 배치가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인 3월 30일, 개성공단의 폐쇄 수순을 밟아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4월 8일, 김양건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가 개성공단을 방문해 현지상황을 파악한 뒤,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기습 발표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4. 8.).

원래 미국은 북한이 대규모 보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미사일을 실제 발사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북한이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물론 괌 미군기지까지 핵공격 대상으로 천명하고 충분한 사정거리를 가진 ‘무수단’ 미사일을 이동차량에 탑재해서 은폐시킴으로써 상황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또 미국으로서는 당시 완벽한 미사일방어도 어려웠기 때문에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진 것이었다. 더구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제한된 외화수입원인 개성공단마저도 폐쇄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전쟁위협이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작전교본에 있던 대로 무작정 ‘힘의 과시’ 독트린을 밀고 나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됐고, 더구나 한국 정부는 북한이 4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을 앞두고 그 이전인 4월 10일 전후에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다(오마이뉴스, 2013. 4. 10.). 이제 미국에게 남은 선택지는 북한에게 ‘대화 제의’를 해서라도 한반도의 긴장을 낮추고 전쟁 위협을 회피하는 것이었다.

3월 29일, 조지 리틀 미 국방부대변인은 “북한은 한반도의 ‘온도(긴장)’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고, 4월 3일 척 헤이글 미국방장관은 당시 워싱턴을 방문 중인 윤병세 외무장관을 직접 만나서 미 국방부는 안보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외교적인 노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의 길을 추구하도록 고무하는 데 근본적”이라고 말했다(Hagel hosts..., 3 April 2013). 또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4월 3일 미 국방대학교(National Defense University)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이 그들의 호전적이고 위험한 수사를 계속하여 높여왔다”면서, “지난 몇 주일 동안 북한이 취한 행위들은 우리의 한국과 일본 등 우리의 동맹국들의 이익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협과 위협’(a real and clear danger and threat)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복잡하고, 불길이 솟을 수 있는 상황”(Complicated and combustible situation)이 더 나쁜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미국, 미국의 동맹국의 이익이며, 또 중국도 결코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Garamone, 3 April 2013; Starr, 4 April 2013; Hagel: North Korea presents..., 3 April 2013). 이처럼 한반도에서의 북한과의 무력 대결이 예상을 넘어 더욱 첨예해지자, 미국과 한국은 동시에 대북 ‘대화 제의’에 나섰다. 당시 한미 양국이 인식하는 북한 위협 수준은 처음 합동군사훈련을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해졌다.

4월 11일, 한국도 ‘대화’를 제의했다. 한국 정부는 ‘통일부장관 성명’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 북한이 제기하기를 원하는 사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북한 당국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를 바란다”고 했다(통일부, 2013. 4. 11). 같은 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과 가진 만찬 때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나오면 우리는 대화할 의지가 있다”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권은경, 2013. 4. 11).

미국 정부도 대북대화를 제의했다. 4월 11일, 오바마 미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가진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북한문제에 대해, “지금은 북한이 그 동안 취해왔던

호전적인 접근을 끝내고 온도를 낮춰야 할 때”라면서, “그 누구도 한반도에서 분쟁의 발생을 보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이 유엔제재결의들을 포함한 기본 규칙들과 규범들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은 이 문제들에 대한 외교적인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Remarks by President Obama..., 11 April 2013). 4월 12~13일 방한 중이던 케리 미 국무장관은 12일 한미외교장관 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선호는 대화를 하는 것”이고, 이는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궁극적으로 통일을 통해 평화롭고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데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Kerry, 12 April 2013).

7) 북한의 반응: ‘대화 제의’ 수용

그렇다면 한미 양국의 ‘대화 제의’에 대해 북한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4월 16일, 북한 외무성은 대변인담화를 통해, “이번에 우리는 미국의 실제적인 핵공격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극심하게 겪으면서 우리의 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확대 강화해야 할 절박성을 뼈에 새기었다”고 고백하고,¹²⁾ “우리는 대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핵몽둥이를 휘둘러대는 상대와의 굴욕적인 협상탁에는 마주 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핵위협공갈을 포기하지 않는 한 진정한 대화는 오직 우리가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막을 수 있는 핵억제력을 충분히 갖춘 단계에 가서야 있을 수 있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3. 4. 16.).

4월 18일, 북한 국방위 정책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4월 11일 발언, 즉 북한문제에 대해 “미국은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란 요지의 발언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발표했다. 북한은 “첫째,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반대하여 벌려온 모든 도발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전면 사죄하여야 하고, 둘째, 다시는 북한을 위협하거나 공갈하는 핵전쟁연습에 매달리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정식으로 담보해야 하며, 셋째, 지금 남한과 그 주변지역에 끌어들이는 핵전쟁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수하고 재투입 시도를 단념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Choe, 18 April 2013).

4월 20일, 북한은 동해안에 스커드 미사일을 추가 배치하긴 했지만, 이미 4월초에 동해안으로 이동·은폐시킨 바 있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의 발사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격정보(telemetry)와 지상기지의 통신관제 레이더 전파 등을 ‘미사일과 지상관제센터 간에 중단’함으로써 한미 양국과 괌 미군기지에 대해 무수단 미사일로 공격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상황을 정리했다.

12) 나중인 2014년 2월 10~14일, 도널드 그레그(Donald Gregg) 전 주한미대사 일행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B-52 공습의 기억이 (북한인들의) DNA 속에 박혀있다”면서, “특히, 핵무장 능력이 있는 B-52가 북한 영공에 출현한 것은 정말로, 정말로 끔찍한 위협”이라고 했다. 그래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미국시민 케네스 배(Kenneth Bae)를 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려고 한 로버트 킹(Robert King)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두 번이나 취소했다고 했다. 리용호의 말에는 북한이 미국의 B-52의 출격에 대해 어떤 우려와 반감을 갖고 있었는지 잘 드러나 있다(Yiu, 14 February 2014).

이에 따라, 미국은 4월 26일 탄도미사일 감시를 주 임무로 동해에 배치했던 미 해군 미사일 추적함(Observation Island호)을 일본 사세보(佐世保)항으로 철수시켰다. ‘독수리연습’이 끝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양측간 긴장고조도 막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3월 26일 전략로켓군과 장거리 포병부대에 발령했던 ‘1호전투 근무태세’를 4월 30일 경에 해제했다. 그리고 4월말에 독수리연습이 종료됐다. 북한은 5월 6일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을 원산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내려 다시 격납고에 넣었다.

결국, 2013년부터는 한반도에서 ‘핵전쟁 불가’라는 금기사항이 공개적으로 깨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상호간에 더욱 강화된 핵공격 위협, 그것도 ‘선제 핵공격 위협’을 하는 상황이 전개됐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당장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 문제가 아니라 ‘선제 핵공격 위협’의 수준을 낮춰 핵전쟁 위협을 막는 것이 더 직접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형편이다.

라. 북핵문제 협상전략: 패턴의 변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전략은 어떤 패턴을 보여 왔는가? 구체적으로, 핵실험 이전의 시기, 제1차 핵실험이 일어나서부터 제3차 핵실험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시기, 마지막으로, 제3차 핵실험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한다.

- 1) 제1차 핵실험 이전의 시기 (2006. 10까지): ‘위기’ → ‘처벌’ → ‘협상’ → ‘합의’ → ‘이행 실패’ → ‘위기’ → ‘처벌’... (반복)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한국정부의 노력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가서명하고 1992년 1월 20일 정식 서명한 후, 남북한이 각각 비준을 거쳐 2월 19일 발효시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으로 나타났다. 이후 여러 곡절을 거쳐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NPT를 탈퇴했고, 이로써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함으로써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 실질적으로 무효가 됐다. 북한의 NPT 탈퇴이후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미 위에서 자세히 살펴본 것이지만, 여기에서 북핵문제 협상전략의 패턴과 그 변화를 살펴보는 맥락에서 간단히 짚어보기로 한다.

제1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자, 북미양국은 양자협상을 통해 결국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북미기본합의(Agreed Framework)를 이룩해 냄으로써 제1차 북핵위기를 해결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정부는 시기였던 2002년 10월에 미국이 북한의 비밀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문제 삼음으로써 북미기본합의가 붕괴되고 북한이 2003년 1월에 NPT를 재탈퇴함으로써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증가하자, 미국과 중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2003년 4월 23일 북한과 3자회담을 개최했고, 이 3자회담은 2003년 8월에 베이징에서 개최된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참여한 6자회담으로 발전했다. 2005년 2월 북한의 핵무기보유 공식선언과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연기 발표 등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05년 9월 6자회담 제4차 회의 제2단계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그러나 9.19공동성명과 거의 동시에 미국이 BDA 대북 금융제재를 취했다. 북한은 미국에게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면서 6자회담에 불참을 선언했다. 2006년 6월에 북한은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했으나, 미국대표의 평양방문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7월에는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 2호를 발사했다. 이에 유엔안보리는 대북 제재결의 1695호를 통과시켰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여 그해 10월 9일 제1차 핵실험을 했고, 핵실험은 성공했다.

위에서 살펴보았다시피, ‘제1차 핵실험 이전’의 북핵문제의 협상은 ‘위기’(제1차 북핵위기) → ‘처벌’ → ‘협상’ → ‘합의’(제네바 북미기본합의) → ‘이행 실패’ → ‘위기’(제2차 북핵위기) → ‘처벌’ → ‘협상’ → ‘합의’(9.19공동성명) → ‘이행 실패’(제1차 핵실험)로 반복되는 패턴을 보였다.

2) 제1, 2차 핵실험의 시기 (2006. 10~2013. 2): ‘위기’ → ‘처벌’ → ‘협상’ → ‘합의’ → ‘이행 실패’ → ‘위기’... (반복)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이후’에도 위의 패턴은 반복됐다. 즉, ‘위기’(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 → ‘처벌’(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 → ‘협상’(2006년 12월 북미회담, 6자회담 재개) → ‘합의’(2.13합의, 10.3합의) → ‘이행 실패’(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에 대한 검증의정서 채택 실패) → ‘위기’(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 ‘처벌’(유엔안보리 제재결의 1874호) → ‘협상’(중국의 중재로 2009년 여름과 겨울 북미 간 간접대화 진행, 12월 미대통령 특사 보스워스의 평양 방문) → ‘합의’(2.29합의) → ‘이행 실패’(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 ‘위기’(제3차 핵실험)로 반복되어 이어진 것이다.

위의 패턴이 생겨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 미국이 처음에는 대화를 끊고 강력한 처벌정책을 취했으나 이는 북한의 반발을 일으켜 북한의 핵능력 증대로 이어졌기 때문에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결국 미국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협상전략의 패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의 반복은 큰 문제를 낳았다. 즉, 어떤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는 경험을 통해 북핵문제는 더욱 더 악화되어 갔고, 문제 해결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불신도 깊어만 커져갔다.

3) 제3차 핵실험 이후의 시기 (2013. 2~현재): ‘위기’ → ‘처벌’ → ‘위기’ → ‘처벌’... (반복)

2013년 2월에 있었던 제3차 핵실험(소형화, 경량화) 이후에는 그러한 패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고, ‘위기’(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 → ‘처벌’(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094호) → ‘위기’(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 → ‘처벌’(유엔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 → ‘위기’(2016년 9월, 제5차 핵실험)의 패턴으로 전환했다.¹³⁾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는 당시까지의 대북제재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결의 2094호를 통과시켰고, 북미양국 간에 불신이 너무 깊어져서 협상 자체가 실종되고, 대결이 강화됐다. 이유야 어찌됐든 제3차 핵실험 이후에는 제대로 된 협상조차 해보고 못하고 대결을 지속·강화하고 있다. 그만큼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더 요원해진 셈이다. 지금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고 북미상호간에 ‘선제 핵공격 위협’이 압도적인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선제 핵공격’이 더 이상 금기사항이 아닌 작전 개념으로 사용되는 엄중한 상황에 있다(Report launch of CFR-sponsored..., 16 September 2016).

그렇다면, 왜 이처럼 대화와 협상을 해보지 못하고 처벌만 강화되는 식으로 상황이 악화되었는가? 이는 물론 북미양국이 상대방에 대해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신과 불만은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 이후 우여곡절을 거친 후 2011년 7월과 10월 두 차례, 2012년 2월에 한 차례의 북미고위급회담을 통해 ‘2.29합의’를 이룩하였는데, 북한이 그해 4월 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2.29합의를 붕괴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신뢰를 상실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이후 미국은 자신은 항상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지 전에는 결코 협상장에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북미회담이 개최되지 못했다.

한편, 미국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불만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서 나오는 데, 그 하나는 미국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책이 달라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북한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이 자신의 강대국 지위를 이용하여 유엔안보리 등 국제사회를 동원하여 북한에 대해 불공평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더구나 위에서 이미 살펴보았다시피 2013년 봄 한미합동군사훈련 시에 미국이 ‘공개적’인 대북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을 한 다음부터는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하겠다. 결국, 전자는 선거제도가 있는 민주정치체제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후자는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관련된 것이라고 하겠다.

13) 참고로, 제3차 핵실험부터는 조지 W. H. 부시정부와 빌 클린턴정부가 북핵문제를 다루면서 겪은 ‘거부-분노-협상-좌절-수용(denial-anger-bargaining-depression-acceptance)의 5단계’ 전략 및 행위 패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Sigal, 23 June 2001)

마. 북핵문제 협상의 방법

그 동안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사용된 협상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압력과 제재’ vs.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었다. ‘압력과 제재’와 ‘대화와 협상’의 전략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상이한 결과를 가져왔다. 물론 이들 양자를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정치에서는 국내적 요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다양하고 충돌적인 요구들을 담는 방식으로 조합하는 방법을 선호했다. 그러나 양자의 조합이 대화와 협상보다는 압력과 제재가 더 두드러지는 조합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⁴⁾

1) 압력과 제재

우선, 미국,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 ‘압력과 제재’의 방법을 선호해왔다. 그 이유는 북한은 적국이고, 국민들의 적국에 대한 감정과 정서에 거슬리는 것보다는 그 정서에 무임승차하여 적국인 북한을 처벌하는 정책을 취하면, 정치가로서는 국내적으로 추가적인 정치적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적대 감정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 거의 본능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들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처벌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정치가로서는 가장 손쉽고 비용이 들지 않은 정책이라는 뜻이다. 반대로, 어떤 정치가가 새로운 방향으로 북한과의 사이에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하는 이성적인 접근을 취한다면, 일단 그 정치가는 국민들의 대북 적대감정을 거스르는 시도를 하는 셈이어서 최소한 초기 비용을 치를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압력과 제재와 같은 처벌정책은 현실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초래한다. 첫째는 정치가 대북 처벌정책을 취하는 경우, 국내적으로, 또 동맹국이 북한에 대해 처벌정책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추가적인 정치적 비용이 들지 않겠지만, 북핵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는 데에 중점이 놓여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결국 북핵문제와 같은 주요문제의 해결을 차기정부나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셈이어서 국가와 사회 전체적으로는 볼 때는, 그만큼 더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에 대해 압력과 제재의 방법을 적용할 경우, 북한이 압력과 제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핵·미사일 능력의 강화를 통한 ‘자위력’ 강화에 나섬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북한을 ‘악의 축’ 중의 한 국가로 규정하고 북한을 붕괴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던 조지 W. 부시 정부 시기의 8년 동안에 북한은 무기급 플루토늄 양을 4배로 늘렸다. 이는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와

14) 본 글의 “마. 북핵문제 협상의 방법”은 백학순(2016: 101-103), Paik(10 December 2013)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이고, 어떤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개별국가들의 압력과 제재가 의도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편, 대북 압력과 제재는 지금까지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즉,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정책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여 의도와는 정반대로 북한의 핵능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북한 핵·미사일 관련 대북 압력과 제재는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유엔안보리와 개별국가들의 제재는 핵·미사일 관련 물질, 기술, 노하우 등의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북한이 내부에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라늄광, 핵과 미사일 물질, 기술, 노하우에는 전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유엔안보리 제재와 개별국가 제재를 취한다 해도 북한은 자체의 자원과 기술을 이용하여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안보리 제재에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식량, 생필품 등의 제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압력과 제재를 가하는 데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들과 그 결의들의 이행에 충실히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이 미국, 한국, 일본 등과 ‘한 목소리’를 내고, 중국이 대북 압력과 제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만 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이 결코 어렵지 않으며,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 한국, 일본은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와 부문에 대해서도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 한국, 일본과 북한에 대한 지정학적, 지전략적 이익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반도의 비핵화 외에도 한반도의 안정, 북한의 안정과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해결을 원하는 중국으로서는 북한의 체제전환을 시도하는 조지 W. 부시정부의 ‘악의 축’ 정책이나, 박근혜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지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요새는 미중경쟁과 한·미·일 3각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지정학적, 지전략적으로 중요한 북한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한미양국이 사드 포대를 남한 땅 성주에 설치하는 결정을 한 이후에는 중국은 북한, 러시아와 함께 자신들의 군사안보이익을 침해하는 사드 설치에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서 3국 공조를 과시하고 있다.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는 결정은 냉전시대의 이념과는 관계없이 군사안보적 이익을 중심으로 한·미·일 남방 3각 동맹 vs. 북·중·러 북방 3각동맹의 대결을 부활시키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하원은 2016년 1월 대북제재 강화법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들어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과의 식량, 생필품의 교역에 대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를 가하고 않고 있고, 북한은 지금 김정은 시대에 들어 농업, 경공업, 서비스 부문에서 나름대로 구조적인 개혁이

이뤄져서 생산이 증가되고 있다. 그리고 평양은 물론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설 붐은 북한붕괴의 징조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결국 제재는 미국, 한국, 일본이 외교적·경제적 처벌수단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실재의 증거는 아직 발견하기 어렵다.

2) 대화와 협상

그렇다면, ‘대화과 협상’은 어떠한가? 대화와 협상은 많은 경우 ‘합의’를 만들어 냈다.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10.3합의, 2012년 2.29합의가 바로 그것이다. 북한도 서명한 이러한 합의들은 일차적으로 북한의 핵관련 정책과 행위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합의들이 이행에 성공하면, 바로 해당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오히려 문제 해결이 늦춰지거나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 ‘압력과 제재’와는 정반대의 성과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합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합의 당사국들의 ‘정치체제의 성격’과 그로부터 기인하는 ‘정책운용’과 관련되어 있다.

먼저, 북한의 경우, 북한의 정치체제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령이 유일영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이다. 수령제 하에서는 지도자가 자기중심의 사고방식과 결정에 익숙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외교적 합의와 그것의 이행에 대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속감을 갖는 특성이 있다. 다시 말해,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국제사회에서 대외적으로 ‘주체’(독립성)를 강조하면서 자신의 가치와 이익, 필요, 위상 등에 대해 과도하게 주관적인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 더구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고, 대외관계에서의 약속 이행과 그에 관련된 규범과 규칙, 그것들의 위반이 초래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상대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면이 있다.

그렇다면, 미국, 한국,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가? 미국과 한국, 일본은 민주정치체제이다. 민주정치체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라는 4대 가치를 증진시키는 데서는 뛰어나지만, 대내외적으로 국가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결함이 있는 체제이다. 선거를 통해 지도자와 정부가 바뀌면, 동일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대내외 정책이 바뀌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국가와 정부, 정치에 대한 심각한 ‘신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컨대, 북핵문제 관련 합의의 이행을 보면, 미국에서 조지 W. 부시정부는 빌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정책을 추진했으며,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1기 내각은 고이즈미 내각의 대북정책(‘평양선언’)을 180도로 뒤집었다. 한국에서도

이명박·박근혜정부는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강경 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이 북한으로 하여금 시간을 벌게 도와주고 결국 북한의 핵무장을 도와준 것이라는 주장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대화와 협상의 방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화와 협상은 ‘합의’를 만들어 내지만,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체제 속성’으로 인해 그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기 때문에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이다.

3)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볼 때,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대화과 협상’이 ‘압력과 제재’보다 문제해결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반복하자면, 무엇보다도 대화와 협상은, 북핵문제를 악화시켜온 압력과 제재와 달리, 최소한 북한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인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지, 합의의 충실한 이행문제가 있는데,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대화과 협상’이라는 접근방법 자체가 안고 있는 흠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했듯이, 합의 당사국들의 ‘정치체제의 성격’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정책운용’의 문제점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실 정치와 협상에서는, 북한이 아무리 ‘제재와 대화는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실효성의 경중에 따라 양자를 동시에 혹은 선후로 적용할 수도 있고, 양자의 내용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현실정치에서 국내의 다양한 요구들과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의 여러 다양하고 충돌적인 요구들을 담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자의 조합이 대화과 협상보다는 압력과 제재가 더 두드러지는 조합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어 실제로 어떤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허다했다. 이는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압력과 제재의 방법과 대화과 협상의 방법을 조합하되,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합해야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의 협력을 획득할 수가 있고, 이것이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의 창을 열어준다는 것이 그 동안의 경험적 진실이다.

3. 기존 시나리오 기반 연구의 유형과 평가

가. 기존 시나리오 검토

시나리오 분석은 북핵문제의 전개과정 및 그 과정 속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선택지들을 가늠해볼 수 있고, 또 선택지들에 의해 파생되는 결과를 추정해보는데 유용하다는 점에서 각종 논문과 보고서에서 광범위하게 시도된 연구방법이었다.

여기서는 북핵문제에 관한 많은 연구자들의 축적된 고민의 맥을 다시 짚어보고, 향후 해결방안 연구에 있어 보다 창의적인 해석과 아이디어 접목을 위해서 기존 시나리오들을 시기·유형별로 분류해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3-1> 1~3차 북핵 위기 비교표

	1차 북핵위기	2차 북핵위기	3차 북핵위기
위기 발단	IAEA, 특별사찰 요구 (93.2) 북한, NPT 탈퇴선언 (93.3)	미국, “북, 핵개발 계획 시인” 발표 (2002. 10)	장거리로켓(인공위성) 발사 (2009. 4) 2차 핵실험(2009. 5) 천안함·연평도 (2010.3.11) 김정일 사망(2011.12)
핵개발 양태	플루토늄 추출 위한 핵연료봉 재처리	고농축우라늄(HEU) 의혹 제기	2차 지하 핵실험
회담 형식	북미 양자회담	6자회담	6자회담 및 북미 양자회담 병행
위기 해법	핵개발 동결 (경수로 2기와 중유 제공)	북핵폐기 및 관계정상화, 경제협력(에너지 지원), 평화체제 등 상응조치 합의	남북→미북→6자 순 3단계 프로세스 추진 미·북 6자회담 재개 사전조치 합의
종결	제네바합의 (1994. 10)	9.19 공동성명 (2005. 9) 2.13 합의 (2007. 2)	‘윤달합의’ (2012. 2)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로 합의 무산

1) 제2차 북핵위기 이후 주요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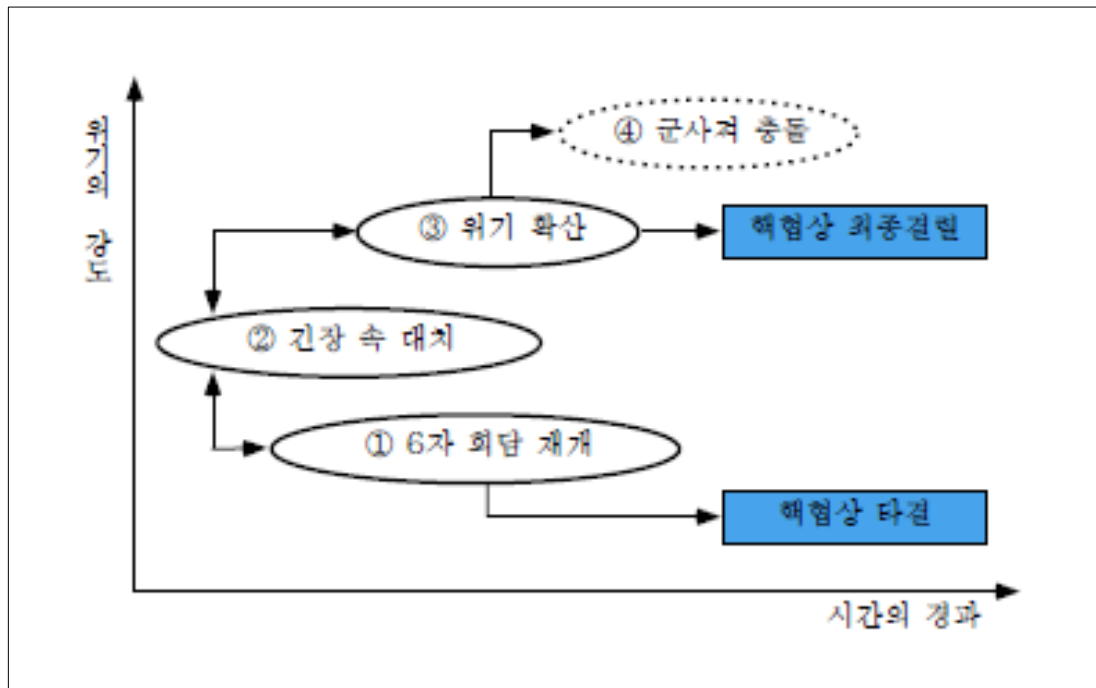
외교통상부 산하 외교안보연구원은 2003년 여름 「북핵 6자회담 예상 시나리오」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표 II-3-2> 북핵 6자회담 예상 시나리오(외교안보연구원, 2003)

<p>- 시나리오 ① - 6자회담 순항 시나리오 북한의 핵동결·핵사찰 수용과 국제사회의 과감한 접근으로 6자회담이 순항하고 북핵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시나리오</p>
<p>- 시나리오 ② - 6자회담 조기 좌초 시나리오 북한의 핵동결·핵포기 거부 및 무리한 대가 요구에 따라 대화 모멘텀이 끊기며, 6자회담은 1~2회의 단발성 회담으로 끝나는 시나리오</p>
<p>- 시나리오 ③ - 북한의 'muddling through' 시나리오 북한이 핵동결에는 응하지만 2004년 미 대선까지 'muddling through' 전략을 지속하는 시나리오</p>
<p>- 시나리오 ④ - 북한의 'muddling through' 실패 시나리오 북한이 핵동결에 응한 이후 'muddling through' 전략을 추구하나 미국은 시한(time limit)을 설정, 강도 높은 대북 압박에 나서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여 기습적인 도발 조치를 취하는 시나리오</p>
<p>- 시나리오 ⑤ - 북한의 '극적타결 모색' 시나리오 북한이 'muddling through' 전략을 추구하다가 미국의 강도 높은 압박에 직면하여 국면전환을 위해 위기를 고조시킨 후 극적 타결을 시도하는 시나리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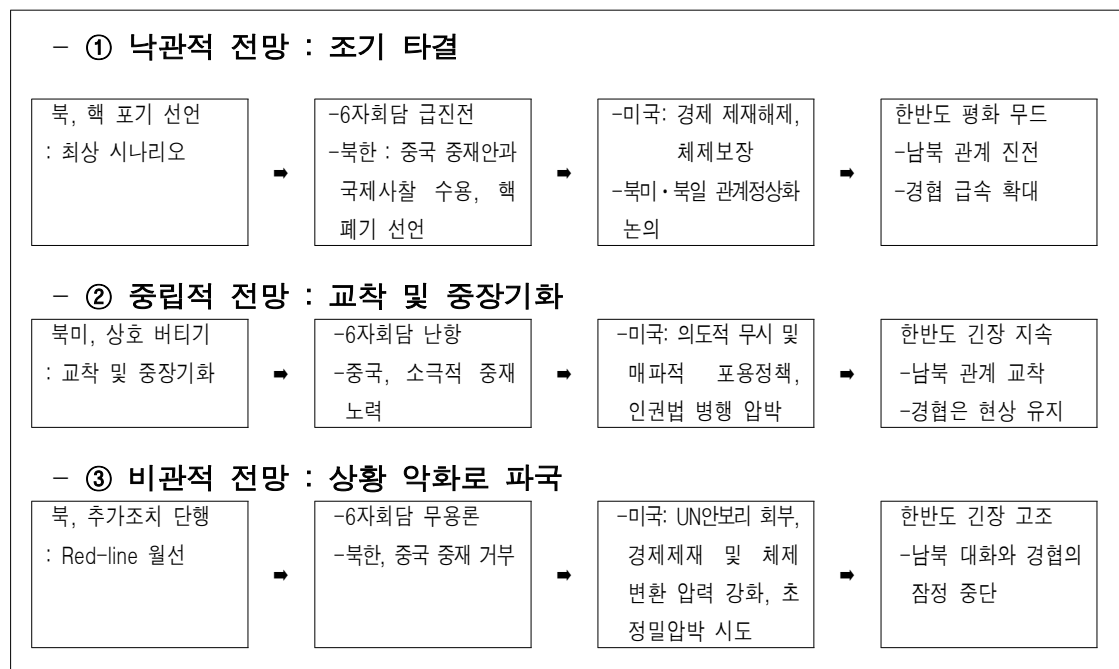
김성환은 2004년 신아연 추계세미나에서 「부시 2기 미 행정부의 북핵문제 전망」이란 발표자료를 통해 북핵문제 시나리오를 ① 평화적 해결, ② 6자회담 좌초, ③ 교착 장기화 등 세 가지 경우의 수로 압축하여 제시한 바 있다.

김석진·조영무는 2005년 「북핵 시나리오와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이란 제하 LG주간경제 보고서를 통해 북핵문제 시나리오를 △시간의 경과, △위기의 강도라는 두 변인의 조합에 의해 ①6자 회담 재개, ②긴장 속 대치, ③위기 확산, ④군사적 충돌 등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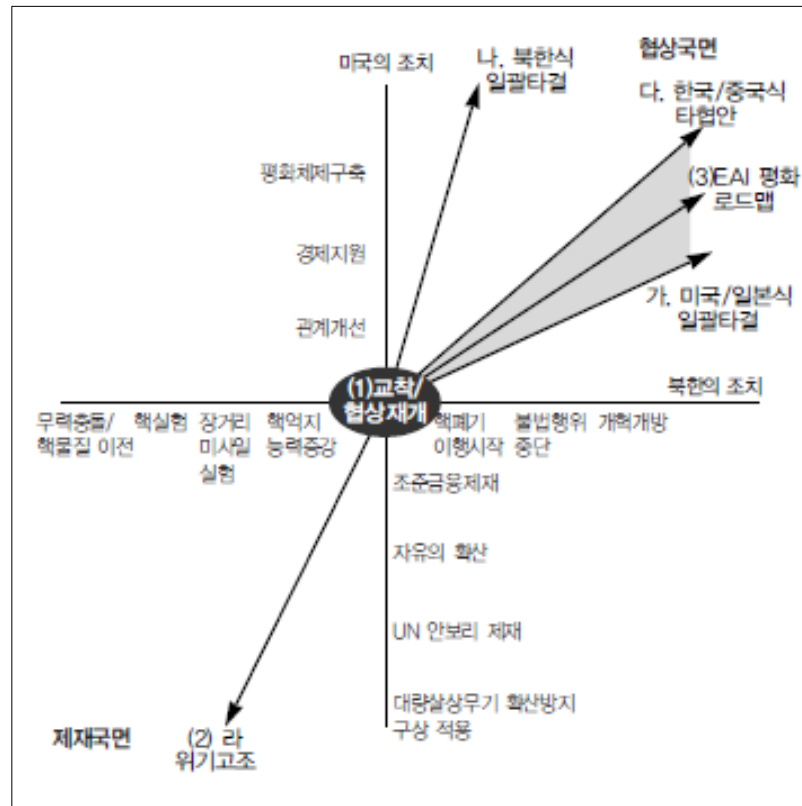
[그림 II-3-1] 북핵문제 시나리오(김석진·조영무, 2005)

홍순직은 2005년 「확산 일로의 북핵 위기, 어디로 가나」라는 제하 현대경제연구원 주요경제현안 보고서에서 북핵문제 시나리오를 △낙관적, △중립적, △비관적 전망 등 세 가지 경우로 단순화하였다.



[그림 II-3-2] 북핵문제 시나리오(홍순직, 2005)

하영선은 2006년 동아시아연구원(EAI) 단행본 보고서에서 「북핵위기와 한반도 평화 : 진단과 처방」이란 제하 논문을 통해 △북한의 조치와 △미국의 조치를 각각 x, y축에 놓고, 조치의 성격·강도에 따라 △협상국면과 △제재국면으로 대립적으로 배치한 다음, 각 조치의 교점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입체적으로 배열하는 아래 그림과 같은 시나리오 개념도를 구상하였다.



[그림 II-3-3] 북핵문제 시나리오(하영선, 2006)

전성훈은 2007년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이란 제하 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과 △정치적 배경에 착안하여 북핵문제 시나리오를 ① 북한의 핵보유 상태 지속, ② 先 북·미관계 진전, 後 핵폐기 모색, ③ 무력사용 및 강압적 핵폐기, ④ 신속하고 평화적인 핵폐기 등 네 가지로 상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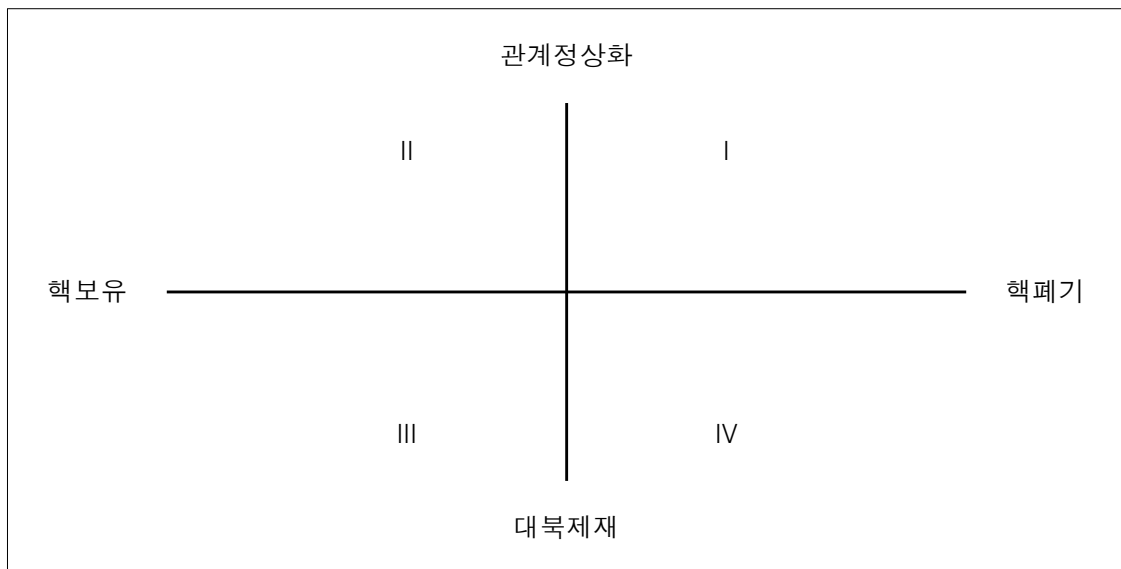
김근식은 2008년 제3차 민화협 정책토론회에서 「북핵문제 진전과 향후 남북관계 추진 전략」이란 제하 발제문을 통해 △북·미 협상 또는 대결, △한국의 대북 강경 또는 포용정책 여부에 따라 나뉘는 다음 네 가지 북핵문제 시나리오를 예측하였다.

- ① 북미 협상 속 대북 강경 기조 : 제2의 YS
- ② 북미 대결 속 대북 강경 기조 : 제2의 핵실험
- ③ 북미 협상 속 대북 포용 기조 : 제3차 남북정상회담
- ④ 북미 대결 속 대북 포용 기조 : 제2의 6.17

2) 제3차 북핵위기 이후 주요 시나리오

조민은 2009년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 핵문제: 대타협이나, 대파국이나」이란 제하 통일연구원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보유/핵폐기 여부 및 △대북제재/ 관계정상화 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4면 매트릭스로 된 북핵문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 I : 북한 핵폐기 - 북·미관계정상화
- II : 북한 핵보유 - 북·미관계 진전
- III : 북한 핵보유 - 북·미관계 파국
- IV : 북한 핵폐기 - 북·미관계 파국



[그림 II-3-4] 북핵문제 시나리오(조민, 2009)

홍현익은 2015년 「9.19 공동성명 10주년과 북핵문제 해결방안」이란 제하 세종연구소 정책브리핑을 통해 △미·중관계와 △북·미관계를 △남북관계에 대입하여 이를 다시 △악화/개선 여부로 나눴으로써 총 8가지 경우의 수로 구성되는 교차비교 매트릭스로 된 한반도 정세/북핵문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표 II-3-3> 북핵문제 시나리오(홍현익, 2015)

- 한반도 정세 전망 시나리오			
		미·중관계	
		악화	개선
남북 관계	악화	북한의 핵 보유 냉전 상황 재연 최악의 경우 남북 전면전	1970년 데탕트시대 재연 한반도에 대한 미·중 담합 가능성
	개선	북·중관계 강화 남북경협 일부 지속 북핵 묵인과 남북 공존 가능 한·미동맹 이완 및 한·중 부분 협력	북핵문제 해결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 확대 평화통일 기반 구축

- 북핵 문제 전망 시나리오			
		북·미관계	
		악화	개선
남북 관계	악화	*북한 핵 능력 보유 본격화 *남한이 대북 공격의 첨병 역할(1) *Worst but Possible *Worse than Iraq *MB-Obama	*북핵 문제 해결 일부 진전 *남북 관계 교착 지속 통미봉남(2) *Plausible *파키스탄, 인도 *YS-Clinton
	개선	*북핵 문제 교착 *남북 대화 재개 *남북 경협의 일부 지속(3) *DJ, MH-Bush	*북핵 문제 해결 진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 경협 확대(4) *Best; Ukraine, Libya

차두현은 2016년 세종연구소 세종정책포럼 비공개 발제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결과별 시나리오와 향후 북한의 대응 전망을 다음과 같이 예측하였다.

- 4차 핵실험 결과별 시나리오	
① 시나리오 (미완성 핵능력 + 사실상 실패) -- 최선	
② 시나리오 (미완성이나 점진적으로 진보되는 핵능력 + 절반의 성공)	
③ 시나리오 (완성된 핵능력 + 완전한 성공) -- 최악	
- 향후 북한의 대응 전망	
① 북한, 단기 반발 불구 대화·타협 복귀, 추가 핵실험 못함 -- 최선	
② 북한, 강경대응·타협시도 여지 공존, 제재 부담시 모라토리엄	
③ 추가 핵실험 등 핵능력 과시 통한 정면돌파(강성대응) -- 최악	

나. 시나리오를 통한 북한의 핵 협상 행태 평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북한과의 핵협상 형태와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일은 북한의 핵 개발 동기와 의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출발점이다.

기존 북한의 협상행태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된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북한은 각종 도발로써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키는 특유의 ‘벼랑끝전술’을 감행하고, 핵문제의 최종 해결(또는 동결)을 전제로 대가를 챙긴 뒤 합의를 위반하며, 해결(동결)을 위해 요구하는 대가는 지속적으로 높이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으며, 특히 핵개발 관련 핵심의혹에 대한 국제적 검증·규명은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핵 개발 동기 평가는 실익이 크지 않다. 북한이 빠른 시일 내에 상당한 핵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의도가 협상용이냐 아니냐 여부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은 ‘핵모호성’을 계속 유지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이를 ‘협상카드’로 인식시키는데 성공을 거뒀기 때문이다.

셋째, 어떤 시나리오를 상정하더라도 결정적인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을 극복·통과하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국제적 핵협상 합의들은 양자·다자를 막론하고 최종 단계에서 북한 핵모호성의 실체적 진실을 검증·확인하는 수순을 거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최종 단계가 임박할 때마다 어김없이 또 다른 벼랑끝전술을 감행함으로써 위기국면을 재연시켜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가 재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북한은 아직까지 의미 있는 수준의 제재·불이익을 당하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압박조치를 강화했으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럭저럭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했다. 제4차 북핵실험 이후에서야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포함된 강화된 대북경제제재가 시행되었을 따름이며, 이전의 경제제재는 전면적·포괄적 수준에 결코 미치지 못했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완성을 더 늦기 전에 막을 수 있을지 여부는 현 제재 기조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현재 핵개발을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살 것인지를 기로에 서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제 북한 스스로 핵개발에 따른 손익계산을 냉정히 해볼 수 있도록, 제재로 인한 비용(cost) 측면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한편, 핵포기시의 반대급부 측면도 보여주는 일련의 시나리오 개발이 필요하다.

다. 북핵 시나리오 분석방법 검토사항

기존의 북핵문제 시나리오 분석방법은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나리오들은 변수 구성이 너무 단순했고, 대체로 전개가 ‘직선형(linear)’으로 이루어져, 시나리오 자체의 설명·이해력은 높았던 반면에 현실과는 상당한 괴리를 보이는 편이었으며, 발생확률에 관한 객관적인 측정이나 평가 없이 나열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정책적 선호(policy preference)’가 개입됨으로써 ‘환원주의(reductionist)’ 오류에 빠지기 쉬운 문제점이 두드러졌다.

보다 의미 있는 시나리오 분석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변수 설정이 필요하며, 이 변수들은 단일 인과관계가 아니라 복합적인 인과관계 체계로 결합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변수에서 출발하더라도 향후 전개되는 미래 결과는 복수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과거 20여년에 걸쳐 누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변수와 인과관계의 발생확률을 측정해 ‘보다 가능성 높은(more likely)’ 순서대로 배열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 수가 있다면, 북핵문제의 ‘전개과정(process)’을 이해·예측하는데 유리하며, 특히 과정마다 어떤 정책적 선택지(policy option)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engage)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파악해보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시나리오 분석을 위해 과거 북핵협상 데이터가 물론 필요하지만, 창의적인 접근법을 도출하려면 여기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핵문제에 내포된 각종 하위 문제들 간의 ‘이슈연계(issue linkage)’를 찾아보면 유의미한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뜻 특별한 연계고리를 찾기 어렵고, 이슈들이 시간적으로도 이격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너무 ‘경로의존적(path dependent)’ 분석접근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나리오의 단계별 구성에 있어서 각 단계별로 채택·추진가능한 선택지 목록을 제시하고, 해당 선택에 따른 전개양상과 예상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게 역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설계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핵의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식별·분류한 다음, 기존 가정들에 대해 도전적으로 재검증해보는 작업을 거쳐야 하며,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동북아, 세계적 전략환경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본작업에 기초해서 각 시나리오를 최대한 현실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성해본 다음,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시나리오의 가능성(확률)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최종적으로 가능성 높은 복수의 시나리오들을 채택·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들 간의 경쟁구도를 설정함으로써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적절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검증은 결국 예측의 성패 여부로 판가름될 것이다. 그러나 예측이 맞는지 아니면 틀린지 여부 그 자체보다는 정책적 선택 이후 예측된 범위 내의 경로에 얼마나 합치되었는지 여부가 후속상황에 관한 예측과 추가적인 정책선택에 더욱 유용한 참고점이 될 것이다.

라. 정세전망과 시나리오 기법의 차이

사실 많은 선행연구가 ‘시나리오 기법’을 내세운 바 있지만, 비판적으로 평가하면 ‘정세전망’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정세전망과 시나리오 방식은 어떻게 다른지 짚고 먼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세전망과 시나리오 기법의 차이는 아래 표와 같이 목표, 변수, 시점, 전개 등 크게 네 가지 요소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 II-3-4> 정세전망과 시나리오 기법의 차이

	정세 전망	시나리오
목표	결과 예측	과정 예측
변수	소수·단편적	다중·복합적
시점	단기적	중·장기적
전개	선형적	비선형적

우선 목표부터 구분되는데, 정세전망의 경우는 대체로 어떠한 ‘결과(outcome, result)’가 생길지를 예측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시나리오 기법에서는 앞으로 어떤 ‘과정(journey, process)’을 거치게 될 것인가에 무게를 둔다.

둘째, 변수의 숫자나 복잡성 여부가 다르다. 정세전망은 특정 국가 내지 소수의 국가들과 몇몇 단편적 변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시나리오 기법은 복수의 국가 관계 속에서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변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셋째, 일반적으로 시점(time-frame) 차이가 분명하다. 먼저 정세전망은 특별히 중장기 전망이 아닌 한 보통 1년 이내의 짧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집중한다. 물론 시나리오 기법도 단기적인 전망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복수 행위자와 다중·복합 변수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호흡의 분석을 통한 장기적인 예측이 요구되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전개 방식에서 특히 차이가 두드러진다. 정세전망과 시나리오 기법 모두 ‘흐름(flow)’과 ‘추세(trend)’에 주목한다는 점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정세전망은

‘선형적(linear)’으로 나타나는 반면, 시나리오 분석은 ‘비선형적(non-linear)’ 패턴으로 나타나게 된다. 즉, 어떻게 ‘그려내고(draw), 보여주고(show), 설명하는가(explain)’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요컨대, 정세전망은 소수·단편적 변수를 대상으로 단기에 걸친 결과 예측에 치중하며, 그 결과는 선형적인 구성으로 표현된다. 시나리오 기법은 다중·복합적 행위자와 변수를 고려하면서 중·장기적 기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며, 결과는 비선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간결하고(parsimony) 이해가 쉬운 장점을 갖는 대신 그만큼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고, 불확실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받게 마련이다. 후자의 장·단점은 사실상 이와 정반대인데, 복잡(complex)하고 이해하기 어려운(difficult to understand) 단점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괴리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신축적이고 유연한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적절한 대안을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은 차이에 따라 상황의 변화 속도와 복잡성, 불확실성 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단정적인 정세전망 방식의 객관성·정확성·유효성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불확실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시나리오 기법이 전략적 판단과 정책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시나리오 기법의 분류

연극이나 영화의 시나리오는 일부 옴니버스(omnibus) 형식이나 실험적인 것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개 단일한(singular) 이야기 전개의 스토리라인을 갖는다.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이와 달리 하나 이상 복수의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며, 이를 위해 동원되는 방법도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시나리오를 설명하기에 앞서 시나리오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1) 탐색적(복수) 시나리오

시나리오 기법은 무엇을 보고자 하는가, 또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먼저 ‘탐색적 접근(exploratory approach)’에 의한 시나리오 기법이 있다. 이 기법은 현재 시점에서 출발해서 주로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what to expect)”라는 예측의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현재 시점에서 이미 주어진 조건 및 변수들을 갖고 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슨 상황이 발생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해보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에서 미래로 이행하는 ‘순차적인(sequential)’ 전개방식을 취하게 된다. 이는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란 점에서 탐색적 접근에서 상정하는

시나리오는 하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두 개 이상 복수의 시나리오로 분화되게 된다.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는 연구 목적과 기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나, 간결한 설명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3~6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단, 여러 시나리오 가운데 특정 시나리오에 대해 편중된 선호를 갖는 것은 복수의 시나리오를 상정해보는 의미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¹⁵⁾ 여러 개의 시나리오를 그려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회의 존재를 확인하고 또 이를 활용할 여지를 찾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상황에 대해 지나친 낙관론 또는 비관론에 경도되지 않고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각종 조건·변수의 인과관계 내지 상호작용을 파악해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풍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볼 수 있다. 덧붙여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 분석한 정책적 함의는 정책수단의 판단 및 적용에 귀중한 참고가 되며, 정책결정자가 보다 유연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데도 보탬이 된다.

2) 규범적(단일) 시나리오

또 다른 기법으로는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을 들 수 있다. 이 기법의 특징은 현재 시점이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역순차적(reverse sequential)’으로 전개된다는 데 있다. 미래에서 상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놓고서 그 상황까지 가는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과 변수들을 분석하고 실제 그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역으로 따져보는데 사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최종상태(desirable end state)’의 달성 시점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how to get there)”를 따져볼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규범적 접근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위성’을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보다는 하나의 단일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시나리오 기법’이라고 할 때 흔히 떠올리는 여러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는 방식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일반적인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잘 활용되고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를 먼저 상정해두고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규범적 접근에는 가장 잘 어울린다. 그러므로 어떠한 정책이 적절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된다.¹⁶⁾ 정책의 기본 가정부터 방향성과 주요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추려내는데도 유용하며, 이를 통해서 정책결정자는 통합된 정책 비전을 갖고 보다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두 종류의 시나리오 기법들은 각기 특별한 장·단점이 있다기보다는 연구

15) 그러나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시나리오에 일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까지 완전히 금기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16)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 점 때문에 정책 입장이나 노선이 이미 결정된 경우, 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때도 있다.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두 종류의 기법들을 결합해 연구에 활용하기도 한다.

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한 전략적 예측 과정

앞서 설명한 시나리오 기법의 종류 가운데, 본 연구는 ‘탐색적 접근’을 기본으로 삼아 북핵문제의 여러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즉, 복수의 분석적 시각을 동원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북한 비핵화 전략의 방향을 가늠해보려는 것이다. 여기서는 시나리오와 전략 사이의 연계를 어떻게 도모하는 것이 최선일지 잠시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시나리오들을 내놓는 것만으로는 비핵화 전략과 대북정책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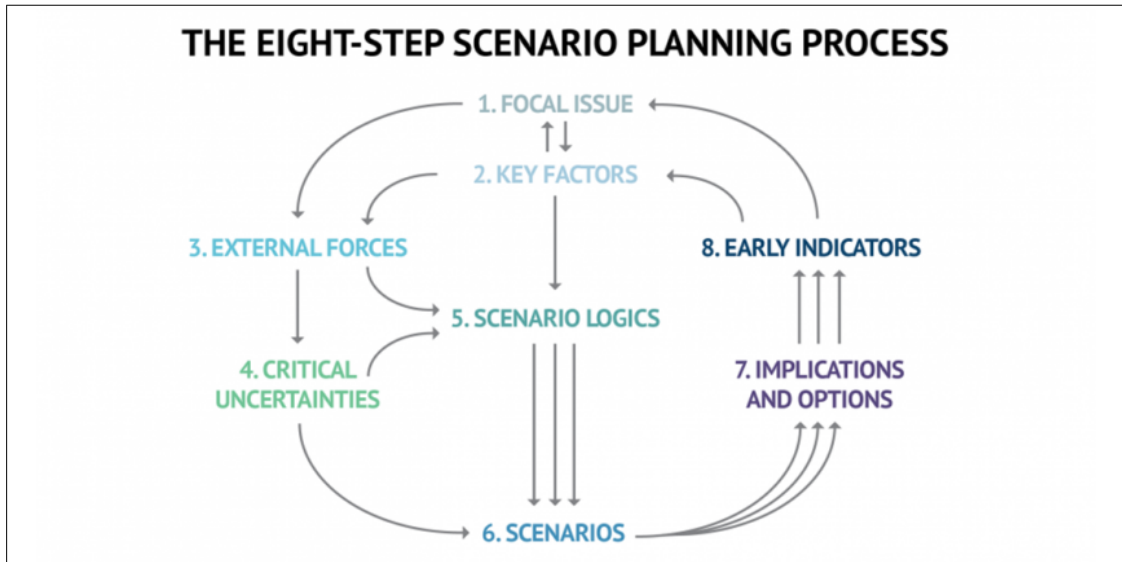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시나리오 기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정책 연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미국의 전략정보 분석·예측 전문사인 스트랫포(STRATFOR)의 「8단계 시나리오 계획 과정」을 참조하였으며, 이를 본 연구의 기본 목적과 우리의 현실적 여건에 맞게 발전적으로 재구성해서 활용기로 하였다. 「8단계 시나리오 계획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⁷⁾

- ① 문제의 초점이 되는 이슈(focal issue)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 ② 이슈에 대한 주요 변수를 나열하고 핵심 변인들(key factors)로 간추린다.
- ③ 외생적 영향요소(external forces)의 존재 여부와 관계, 상호작용 등을 판별한다.
- ④ 결정적인 불확실성(critical uncertainties)을 고려에 포함한다.
- ⑤ 시나리오 논리구조(scenario logics)를 구성하며, 이를 매트릭스(matrix)화 한다. 이때 복수의 시나리오의 열개를 만든다.
- ⑥ 일종의 ‘스토리(story)’로서의 시나리오를 만들되, 시나리오 안에는 ‘구성 요소(plot elements)’를 넣어 후속 논의시 관찰과 숙고의 참고점을 제공한다.
- ⑦ 각 시나리오로부터 유의미한 함의(implications)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해서 선택가능한 대안들(options)을 판단한다.

17) 대부분의 시나리오 기법은 질서 있게 정형화된 순서를 따르고 있으나, 스트랫포(STRATFOR)의 시나리오 계획 과정은 기본적으로 순서는 있지만 순차적이 아니라 복합적인 순환과정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설명의 편리를 위해 기본 순서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⑧ 시나리오가 예측한대로 진행되는지, 다른 시나리오로 전이하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조기지표(early indicators)’를 설정해둔다.

이 같은 8단계 과정은 엄밀히 말해 순서(sequence)가 아니라 순환적인 상호작용(circular interaction)에 놓여진 과정이며,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가동해야 하는지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다.



※ 출처 : 美 Stratfor (www.stratfor.com)

[그림 II-3-5] 스트랫포의 8단계 시나리오 계획 과정

마. 시나리오에서 전략·정책으로의 전환

시나리오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 그 자체로 전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전략을 개발한다는 것은 복수의 시나리오에서 도출된 함의와 대안들을 참고로 해서 다양한 정책적 수단(policy means)을 어떤 방식과 우선순위에 맞춰 구사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데 유리할지 결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치 카드게임에서 각각의 카드 자체보다 어떻게 ‘패’를 조합하고 또 언제 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과 흡사하다. 따라서 시나리오가 어떻게 전략과 정책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시나리오와 전략·정책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논의하면서, 본 연구에 맞도록 새롭게 재구성한 시나리오 활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앞서 살펴보았던 「8단계 시나리오 계획 과정」은 시나리오 ‘계획’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략·정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별 요소 및 과제의 재분류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6단계의 과정을 통해 목표 설정에서부터 정책 반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흐름이 되게끔 하였다. 이 흐름의 구조는 다음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11-3-6] 시나리오-정책 연계 과정 흐름도

① **목표 설정** : 이 단계에서는 우선순위 목표를 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이미 ‘북한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기 때문에 달성가능한 전술적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설정된 목표와 함께 정책적 초점과 달성 시한, 그리고 추진범위까지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탐색적 고찰** : 지금까지 시도된 다양한 정책조치 외에 새롭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한 접근법을 찾는 단계이다. 기존 정책의 배경이 되는 이념적 스펙트럼을 재평가해야 하며, 향후 시도할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불확실성 요인을 구분해서 따져봐야 한다.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는 시나리오와 또 추후 이어질 정책을 위한 적절한 명칭을 검토하는 것이다.¹⁸⁾ 시나리오 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명칭 선정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시나리오 구성** : 본격적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조 및 논리를 정교하게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각 시나리오 간의 연계고리를 식별하는 작업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시나리오 전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설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앞서 2단계에서 선정한 명칭과 함께 시나리오의 ‘스토리텔링’에 적절한 ‘화법(narrative)’도 판단해야 한다.

18) 잘된 ‘작명(作名)’ 하나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시나리오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추진할 정책에 대한 지지·협력을 확보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경 써서 구상해야 한다.

④ **소통전략 구상** : 이 단계는 정책을 구체적 조치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사전시험(pilot test)’ 해보는 기회를 준비하는데 의미를 둔다.¹⁹⁾ 적절한 소통 방식 및 대상, 포함될 핵심적인 메시지와 부가적 콘텐츠 등을 판단해서 소통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⑤ **조치·행동 단계** : 전술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방법론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시행에 돌입하는 단계이다. 앞서 ④단계에서 마련한 소통전략을 활용해서 정책 추진을 시사하는 등 일종의 전술적 시험을 먼저 수행한다. 그리고 시험을 통해 수정·보완되고 정교하게 다듬은 정책대안을 도출하며, 이 중에서 주력으로 삼을만한 대안들을 따로 분류해서 선정한다. 이 단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책적 추동력을 일관성 있게 발휘하는 것이다.

⑥ **정책 반영** : 마지막 단계로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 먼저 ⑤단계까지만의 조치로써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는 경우다. 둘째, 별 반응이나 성과가 없는 상태가 지속되거나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전략적 소통(SC)’ 차원에서 새로 정책적 메시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반응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여 이전 단계의 미진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는데 필요한 ‘피드백(feedback)’을 줄 수 있어야 한다.

19) 일단 한 번 정책이 만들어지고 공식 발표된 다음에는 추후 상황이 불리하게 되거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더라도 정책 자체를 손바닥 뒤집듯 되돌리기 어렵다. 정책 적용 대상의 초기 반응을 떠보거나 미리 파악해볼 수 있다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Ⅲ. 북핵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석과 해결방안 연구

1.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학제적 검토: 총론

북한 핵 문제처럼 오랫동안 국제사회와 한국정부 및 국민을 힘들게 한 사안도 드물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도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북한 비핵화의 전망은 어둡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과 해결방안이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시각, 통일과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로 보는 시각, 또는 소수이지만 같은 민족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 시각 등 다양한 시각이 충돌하고 있다. 반면 국가로서의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대다수 한국 국민은 찬성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하는가의 방법론의 차이이다. 방법론에 대한 인식 차이는 극렬한 이념 논쟁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북한 비핵화 방법은 김정은 정권의 붕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대화와 협상으로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등 각기 다른 의견들이 강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나 학계에서는 북한의 핵문제를 북한의 생존권 확보, 미국과의 협상용,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에 대한 군사력 과시 내지는 위협 등으로 인식해왔다. 국제사회도 이견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미국은 북한을 개방으로 유도하거나 심지어는 붕괴를 기대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와 압박 정책을 병행해 왔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북한체제 및 정권을 유지시키면서 소극적 압박과 함께 가능하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실시하였지만 중국의 소극적 참여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²⁰⁾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비핵화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더욱 어려운 과제로 변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북한 비핵화 논의는 지나치게 군사, 외교, 안보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현실에 대한 인식은 이러한 요인 외에도 다른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20) 2016년 10월 26일 미국의 국가정보국(DNI)의 클래퍼 국장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고 검증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언급했고,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모두가 진정으로 대화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런 주장의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논의는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기보다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단계별 접근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1단계에서는 핵시설을 폐쇄하고(shutdown), 2단계에서는 핵시설 불능화(disablement) 달성, 3단계에서는 핵 폐기(dismantlement) 완료, 마지막 4단계에서 비핵화를 완성(completely)한다는 시나리오이다. 실제로 북한 비핵화는 북한이 2008년 6월 26일 중국에게 핵불능화 신고를 한 후, 27일 영변원자로 냉각탑 폭파를 하여 비핵화 2단계까지 잘 진행되는 듯 했으나 결국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 신고를 하지 않고 IAEA에도 복귀하지 않은 채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하면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만약 북한이 비핵화 2단계를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견이 없을지 모르나 운영 면에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²¹⁾ 예를 들어 2단계에서 북한이 자신들은 불능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은 한국과 여전히 합동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4단계가 완료되면서 북미평화협정을 체결 할 경우, 북한은 이를 주한 미군의 철수 등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좁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 수차례의 6자 회담과 여러 회담이 실패한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²²⁾

이런 현실에서 기존의 분석 틀을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시각에서 북한 핵 문제를 검토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학적 시각에서 북한의 핵기술 발전 정도와 핵무기를 시도하다가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북한 핵물질의 반출제한, 핵무기의 완성 시기를 예상해 보았다. 또한 심리학적 시각에서 북한의 핵 보유 동기나 사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게임이론의 시각에서 핵무기 보유가 북한의 대외 협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핵무기 보유시의 득과 실은 무엇이며 보상으로 핵무기 포기가 가능한지를 전망하였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의 상징적 상호작용론(symbolic interactionism)의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 이유와 그 결정과정의 불확실성 등이 3대 세습의 개인적 특성이나 지도자의 충동적이고 단순한 비이성적인 동기가 아니라 감정과 백두혈통, 주변 인물 나아가 북한주민들과의 다양한 관계의 복잡성의 결과물 일 곳이라는 가설을 통해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이 북한 핵개발을 통해 한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고찰해 보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학제적 분석이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지 못한다든지 현실과 유리된 이론적 접근이라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이론의 약점은 극복되고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여 다시 도약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²³⁾, 다학제적 연구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21) 물론 경험에 바탕을 둔 사고체계가 항상 올바른 선택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경험도 객관적일 수 없고 북한을 보는 프레임(frame)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프레임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최인철,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2판 21세기 북스, 2016년 참조.

22) 북한의 자국의 핵실험은 정당화하면서도 방위 차원의 한미군사합동훈련은 맹비난하고 있다.

23) Thomas Kuhn의 extraordinary science의 개념과 유사하다.

2. 공학적 관점: 북한 핵 능력 평가와 비핵화 방안

가. 북한 핵능력 평가

1) 핵실험으로 본 핵능력 평가

가)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요약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5차례의 핵실험 탐지결과를 요약하면 <표 III-2-1>과 같다.

<표 III-2-1> 북한 핵실험 탐지결과 요약

(폭발규모는 화강암 기준 중간값을 적용한 것임)

	5차	4차	3차	2차	1차	관련기관
실험일자	2016.9.9.	2016.1.6.	2013.2.12.	2009.5.25.	2006.10.9.	
지진탐지	5.0	4.8 mb	4.9 mb	4.5 mb	3.9 mb	기상청/ 지자연
	5.3	5.1 mb	5.1 mb	4.7 mb	4.3 mb	USGS
	5.0	4.9 mb	4.9 mb	4.5 mb	4.1 mb	CTBTO
폭발규모	10 kt	6 kt	6~7 kt	4~5 kt	1 kt미만	
핵종탐지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탐지 (미 공군)	

<표 III-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은 1차 핵실험에서는 핵폭발에는 성공하였으나, 예상한 폭발력(4 kt 예고²⁴⁾)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2차 핵실험에서는 1차 핵실험 전에 예고한 폭발규모가 달성되었으며, 3차 핵실험에서는 이 보다 높은 폭발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원래의 설계를 보완한 것으로 추정된다. 4차 핵실험은 그 폭발 규모가 3차 핵실험과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4차 핵실험은 위력을 높인 것은 아니고, 탄두 경량화 등 규모가 아닌 다른 부분의 개량을 위한 실험으로 추정된다. 5차 핵실험은 4차핵실험 보다 약 2배 규모로 추정된다.

나) 5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

북한은 5차 핵실험 실시 후에 ‘핵무기연구소’ 명의로 5차 핵실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성명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요약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24) 북한은 1차 핵실험 시 사전에 중국측에 폭발규모 4 kt 수준의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중국측 전문가들이 확인해준 사항임.

■ 북한측 주장 요약 및 의미

○ 주장 : 핵실험 목적은 핵탄두의 위력시험

⇒ 의미 : 핵실험의 목적은 폭발력실험(핵탄두 위력시험)과 핵폭발효과 시험이 있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실시한 5차례의 핵실험은 모두 폭발력 실험으로 추정된다. 지하핵실험에서 핵폭발효과를 시험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과 고가의 장비 그리고 긴 직선 터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실시하기 어렵다.

○ 주장 : 전략탄도로켓에 장착 가능한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검토 확인

⇒ 의미 : 장거리 로켓에 탑재 가능한 탄두설계 및 제조기술의 표준화를 이루었다는 주장이나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5회 정도의 실험으로 표준화를 이루기는 어렵다.

※ 5대 핵국의 경우 미국 1,054회, 러시아(구소련) 715회, 영국 45회, 프랑스 210회, 중국 45회에 달하는 핵실험을 실시하였다.²⁵⁾ 그럼에도 이들 국가의 핵 기술자들은 추가적인 핵실험을 원하고 있다.

○ 주장 : 폭발위력과 핵물질이용계수(리용결수) 등 측정값들이 계산값들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

⇒ 의미 : 이론적 계산치와폭발력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는 주장으로 핵탄두 설계기술 과시하고 있다.

○ 주장 : 여러 가지 분열물질 생산과 이용기술 확보

⇒ 의미 : 고농축우라늄(HEU) 생산과 HEU를 사용한 핵실험 암시하고 있으며, 수소 동위원소(중수소, 삼중수소)와 리튬-6의 생산에 성공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나, 수소동위원소와 리튬-6는 분열물질은 아니다.(핵융합 물질)

○ 주장 : 여러 종류(소형화, 경량화, 다중화된)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생산가능

⇒ 의미 : 무기용 핵물질의 양적 제한이 해결되었음(보유량 증대)을 의미하며,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은 크게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이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전히 소형 핵무기 1개만 실험한 것은, 충분한 핵물질(HEU) 확보 주장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상과 같은 의미 외에도 이번 5차핵실험은 4차실험 이후 8개월 만에 핵실험을

25) Nuclear Weapon Testing.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uclear_weapons_testing

실시했으며, 핵실험에 관한 공식 발표의 주체가 ‘핵무기연구소’라는 것은, 앞으로는 핵실험을 정치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하지 않고 정치적 고려 없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최적 주기(6개월 ~ 1년) 마다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다) 4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

북한은 4차 핵실험 실시 후에 이를 성공적인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핵실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진파탐지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수소폭탄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한 4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파의 규모는 3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지진파의 규모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약간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 및 지질자원연구소 지진센터의 측정결과). 그러므로 만일 정말로 수소탄을 실험했다면 실패한 실험일 것이다.

수소탄²⁶⁾은 기폭제로 원자탄²⁷⁾을 사용하여, 원자탄을 폭발할 때 발생하는 높은 압력과 열을 이용하여 2차로 수소와 리튬의 동위원소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도록 하여 원자탄 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폭탄이다. 그런데, 이때 수소 동위원소로 중수소만을 사용하면 핵융합을 일으키기는 매우 어려워, 기폭제로 사용하는 원자탄의 폭발규모가 상당히 커야 한다. 기폭제인 원자탄의 규모가 작아도 핵융합이 일어나게 하려면, 대량의 삼중수소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핵융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실패하게 된다. 그런데 삼중수소를 대량으로 생산하기는 매우 어렵고, 삼중수소 생산용 대형 특수원자로를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5대핵국의 1차 수소탄 실험 규모는 메가톤 규모로 매우 크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핵보유국의 최초 수폭실험 규모

국명	최초 수폭 실험		
	일자	폭발 규모	누적 핵실험 차수
미국	1954. 5. 1.	6 Mt	46차
러시아	1955. 11. 22.	1.6 Mt	24차a
영국	1957. 11. 8.	1.8 Mt	16차
프랑스	1968. 12. 24.	2.6 Mt	37차
중국	1967. 6. 17.	3.3 Mt	6차
인도	1998. 5. 11.	실패b	2차

26) 수소탄(hydrogen bomb)이라는 명칭은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명칭은 “핵융합탄(nuclear fusion bomb)” 또는 “열핵폭탄(thermo-nuclear bomb)”라고 해야 하나, 일반적으로 수소탄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수소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27) 원자탄이라는 명칭 역시 과학적으로는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명칭은 “핵폭탄(nuclear bomb)” 핵분열탄(nuclear fission bomb)”가 올바른 명칭이나, 이 역시 원자탄이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a : 러시아의 경우 10번째 핵실험에서 clock 방식의 핵융합탄을 실시한 적이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수소폭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최초 수폭실험에서 제외했음.
- b : 200 kt 규모로 설계 되었으나 1단계(핵분열 43 kt)만 작동하고 2단계 (핵융합)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수소탄에서 기폭제인 1차계통(원자탄)과 핵융합을 일으키는 2차계통(수소탄) 폭발력의 비는 10 ~ 200 범위가 가능하나, 이 비가 크면 실패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30 ~ 50을 사용하고, 전체 폭발력이 작아지면 5 ~ 10 정도를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북한이 주장한 대로 성공적인 수소탄 실험이었다면, 전체 폭발력은 기폭제인 원자폭탄 폭발력의 5 ~ 50배에 달해야 한다. 그런데 4차 핵실험의 폭발규모는 3차 핵실험 보다 크지 못했고, 크게 보아 주어도 15 kt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핵융합이 성공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

소규모 핵무기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방법²⁸⁾이 없지는 않으나, 이 경우 다량의 삼중수소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북한이 가진 원자로에서는 소량의 삼중수소 생산은 가능하지만, 소규모 수소폭탄에서 핵융합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정도의 삼중수소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성공적인 수소폭탄 실험이 될 수 없다.

일부에서는 증폭핵무기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증폭핵무기의 경우에도, 증폭이 성공했다면 증폭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 ~ 5배의 폭발력을 보여야 하나, 제4차 핵실험 결과는 3차와 비교할 때,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증폭핵무기 실험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3차 핵실험과 같은 종류의 탄두를 좀 더 개량하거나, 핵물질의 종류를 바꾼(플루토늄 ⇒ 고농축우라늄) 탄두를 실험한 것으로 추정되나, 노동당 7차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정은의 업적을 높이기 위하여 성공한 수소탄 실험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라) 1, 2, 3차 핵실험에 대한 평가

북한이 실시한 1 ~ 3차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차 핵실험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오전 10시 35분경,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북한 풍계리(만탄산) 부근에서 실시하였다. 핵실험 결과 발생한 지진파의 강도는 진도

28) 중성자탄의 경우 전체 폭발력은 약 1 kt이고, 이중 약 0.75 k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핵융합으로 얻는다. 그러나 이 경우 다량의 삼중수소를 필요로 한다. 삼중수소는 비교적 저온 저압에서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9 Mb로 측정되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은 그 폭발 규모가 작아서 실험직후 일부에서는 핵실험이 아니고, 화약을 터트린 가짜 핵실험이라는 주장도 있었으나, 방사성 동위원소인 제논이 검출됨으로 인하여 핵실험인 것이 확인되었다.

1차 핵실험은 이처럼 폭발규모가 작고 북한이 사전에 중국에 통보한 규모(4 kt)에 훨씬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한 실험인가?’ 아니면 ‘실패한 실험인가?’에 대한 논란이 한 동안 있었다.

폭발규모로 볼 때 북한의 1차 핵실험은 일반적으로 실패로 보는 시선이 많다. 즉 북한의 기폭기술 부족으로 인해 핵물질이 충분히 분열하지 못하고 부분 폭발하는 Fizzle²⁹⁾ 현상이 일어났다고 추정하며,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가 아직 유용성이 없다고 결론 내었다.

하지만 북한의 최초 핵실험을 완전히 실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중국에게 핵실험을 통보해줄 당시 신고서에서 1차 핵실험에 사용한 플루토늄의 양이 2 kg 정도라고 밝힌 바 있는데³⁰⁾, 단 2 kg의 플루토늄으로 4 kt의 폭발력을 예상했다면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핵무기 설계도를 입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만일 북한이 1차 핵실험부터 높은 수준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고난도의 핵실험을 수행했다고 가정해본다면 북한의 핵무기 기술력은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진보된 수준일 수도 있다.

■ 2차 핵실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 핵실험의 추정 위치는 1차 핵실험과 마찬가지로 함북 길주군 풍계리로 1차 핵실험 장소에서 불과 수 km 떨어진 곳이다. 2차 핵실험의 지진파 측정치로 볼 때 추정 폭발력은 1차 핵실험 보다 강한 4~5 kT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폭발규모는 1차 핵실험 전에 북한이 중국에 통보한 규모(4 kt)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1차 핵실험과 동일한 설계의 폭발장치가 제대로 작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성공한 핵실험으로 평가된다.

2차 핵실험은 1차 핵실험에 비해서 폭발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방사성 핵종이 탐지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실험 장의 봉쇄 상태를 대폭 개선하는 등 1차 핵실험에 비해 훨씬 치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3차 핵실험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11시 57분경 1, 2차 핵실험 때와 같은 장소인 풍계리

29) 핵물질이 충분히 초임계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핵분열이 시작되어 폭발력이 설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핵폭발이 일어나는 현상으로 주로 자발적 핵물질의 핵분열에 의한 중성자로 인하여 일어난다.

30) 신고서 내용은 6자회담 당사국(북한을 제외한 5자) 사이에 대외비로 하기로 하여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이 일본 언론(도쿄신문)의 보도로 1차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플루토늄 2 kg 정도라고 신고된 것이 알려졌다.

핵실험장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3차 핵실험에 의해 발생한 인공지진 강도는 2차 핵실험에 때의 4.5 Mb 보다 강한 4.9 Mb로 관측되어 핵실험의 폭발 규모가 더 커졌음을 보여 주었다. 폭발 규모는 4 ~ 16 kt 정도로 추정되며, 2차 핵실험 보다 약 2배 정도 강한 폭발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폭발력의 규모로 미루어 볼 때, 설계변경 또는 사용한 핵 물질량의 증가 등의 방법을 통해 폭발력을 증대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다종화된 우리 핵억제력이 우수한 성능과 물리적으로 과시됐다”고 공식 발표하며 3차 핵실험 때 사용된 핵물질이 플루토늄(Pu)이 아닌 고농축 우라늄(HEU)임을 우회적으로 시사하였다. 또한 북한은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경량화된 원자탄”이라고 밝혔는데, 탄두의 소형화 측면에서도 진전이 있었음을 과시하고 있다. 당시의 북한 정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고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즉 3차 핵실험에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은 영변 원자로 및 재처리 시설을 활용해 플루토늄을 지속적으로 추출해서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1~2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플루토늄을 사용한 핵실험을 실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 핵폭발 규모 추정 방법

지하핵실험의 폭발 규모는 핵실험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공 지진파의 강도를 통해 추정한다. 기존 핵보유국들은 다양한 핵실험 조건에서 핵실험을 실시했고, 이로부터 도출된 지진규모-폭발력 관련 여러 가지 경험 관계식³¹⁾을 핵폭발 규모 추정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 규모-폭발력 경험관계식은 핵실험 자료 및 연구자에 따라 <표 III-2-3>와 같이 다양한 관계식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질조건이나 실험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계식이 상이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즉 비록 동일한 규모의 폭발력일지라도 핵실험장의 지질 특성, 핵실험장 구조(실험 깊이, 밀폐구조 등), 지진파 전파 매질의 감쇄 특성에 따라 측정되는 지진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측정 기관별로 측정된 지진파를 어떤 경험식에 대입하느냐에 따라 추정되는 폭발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31) 이러한 경험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하핵실험으로 생성된 지하공동을 굴착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에 함유된 핵분열생성물과 사용한 핵물질의 존재비로부터 핵물질을 일으킨 핵물질의 양으로부터 실제 폭발력을 측정하여 지진파의 강도와 비교하여 관계식이 만들어진다. 1 kg의 HEU가 핵분열하면, 19.3 kt, 1kg의 Pu가 핵분열하면 19.5 kt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표 III-2-3> 지진파 강도를 폭발력으로 환산하는데 사용하는 식

암석매질	환산식	수식 제안자	개발 국가/적용지역
혈암	$4.45+0.75 \log Y$	Ringdal	카자흐스탄(구소련)/Shagan강
염암	$4.38+0.83 \log Y$	Murphy	카자흐스탄(구 소련)/ Azgir
응회암/ 유문암	$3.92+0.81 \log Y$	Murphy	미국/네바다
화강암	$3.79+0.91 \log Y$	Murphy	프랑스/Sahara
hard-rocksite	$4.25+\beta \log Y$ $\beta=0.75(Y \geq 1 \text{ kt})$ $\beta=1(Y < 1 \text{ kt})$	Bowers	러시아/Novaya Zemlya
미확인 실험지역	$4+ \log Y$	CTBTO(IMS ?)	미확인(불특정) 실험지역

지하핵실험에서 정확한 폭발규모 측정은 폭발로 생성된 지하 공동을 굴착, 시료를 채취, 방사화학적으로 분석하여 폭발규모를 계산한다. 그러므로 북한이 실험한 핵폭발 장치의 정확한 폭발규모는 현재로서는 북한만이 알 수 있다. 지진파 측정에 의한 폭발 규모는 모두 근사치 추정값이다.

북한의 핵실험 시 각 국가별로 측정된 인공지진 값과 각 경험 관계식을 이용하여 핵폭발 규모를 도출하기 때문에 추정값이 3차 핵실험을 예로 들면, 작게는 4 kt에서 높게는 40 kt에 이르는 다양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반도 지역에서는 핵실험이 있었던 적이 없으므로 지진규모와 폭발력 사이의 관계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해외 타 지역에서 수행된 핵실험에서 도출된 경험식들을 적용하여 추정해볼 수밖에 없으므로, 북한 핵실험 지역의 고유 특성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독일 연방지질자원연구소가 북한의 3차 핵실험 위력이 40 kT에 달한다고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오차 가능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미국 네바다 핵실험장의 경험식인 유문암/응회암에 적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매우 보수적인 결과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지질환경이 밝혀지지 않은 불특정 미확인 실험지역에 대한 폭발 규모 추정은 CTBTO에서 사용하는 MIS 방식의 경험식이 사용되며, 이 식을 적용할 경우, 약 8~12 kT 정도의 폭발력을 보인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폭발력 규모 추정값은 각 사용한 수식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3차 핵실험이 2차 핵실험 때에 비해 약 2배 이상의 규모라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다. 이는 지질 특성 때문에 절대값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이 동일한 지질특성을 가진 인접장소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북한의 무기급 핵물질 보유량 추산

가)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 추산

북한이 5 MWe급 영변원자로를 가동해서 2013년까지 생산·추출한 플루토늄량은 최대 50 kg 정도로 추정되나, 추정의 근거가 되는 원자로 가동률 역시 상당한 오차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감안했을 때 북한이 분리한 플루토늄량은 40 ± 5 kg 정도로 보인다³²⁾. 또한 북한은 2008년 신고서에서 1차 핵실험 당시 사용한 플루토늄의 양이 2 kg을 약간 넘는 양이라고 주장했으나, 외부 전문가들은 적어도 3~4 kg은 사용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2차 핵실험과 3차 핵실험의 경우 1차 핵실험 때보다 폭발력이 증가되었는데, 동일 설계를 갖고 기폭용 고폭약(high-explosive)의 양만 변화시켰다는 주장, 또는 플루토늄 사용량만 늘렸다는 주장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기술과 폭발력으로 미루어 짐작할 때 2, 3차 핵실험의 플루토늄 총 사용량은 6~8 kg 내외가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4차³³⁾에 걸쳐 실시한 핵실험에서 10~15 kg의 플루토늄을 사용했다고 가정할 경우, 북한이 현재 보유한 분리된 플루토늄량은 약 25 kg에서 ± 5 kg 정도의 편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쿄 신문은 2008년 신고서를 근거로,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이 26 kg, 미재처리 플루토늄이 약 7 kg(이후 재처리함)이라고 보도하였다. 이것을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시 보유량은 약 33 kg이 되며, 그 후 3, 4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남은 양은 최소 25 kg 이상이라고 평가된다. 만약 3차 또는 4차 핵실험 중 한번이라도 HEU를 사용했다면 Pu 보유량은 그만큼 더 많은 양이 남아 있을 것이다.

여기에 2016년 상반기에 북한이 또 한 차례 재처리를 실시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플루토늄 보유량은 약 10 kg 정도³⁴⁾ 증가하여 현재의 보유량은 35 ~ 45 kg 정도가 될 것이다.

나) 무기급 고농축우라늄(HEU³⁵⁾) 보유량 추산

북한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추산하는 것은 비밀 농축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32) 안진수·박일진·이정현. **북한핵 프로그램과 검증**[KINAC/TR-008/2011].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P19, 표 1-7

33) 3차와 4차 핵실험에서 Pu를 사용했는지, HEU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으나, Pu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한다.

34) 북한이 2013년 하반기에 5 MWe 원자로를 재가동 하였으나, 가동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2016년 상반기에 재처리를 실시했다면, 회수 가능한 플루토늄 양은 10 kg 정도가 될 것이다. 또한 5 MWe 원자로의 규모로 볼 때 플루토늄 생산량이 10 kg 정도에 도달했을 때 재처리를 하는 것이 높은 품질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다. 생산량을 높이면 플루토늄의 품질이 나빠지게 된다.

35) High Enriched Uranium의 약자로 보통 농축도 90 % 이상의 무기급 농축우라늄을 지칭한다.

때문에 플루토늄의 경우보다도 어렵다. 플루토늄의 경우는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 시설 등 생산 시설이 분명하고, 이들 시설의 능력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는 편이지만, 농축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 자체가 부재하거나 부족해서 대부분 가정과 추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 추정량에 오차가 크다.

기체 원심분리 방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시설의 능력은 보유한 원심분리기의 숫자와 원심분리기 1기당의 농축능력 및 cascade 구성방법에 따라 결정된다.

■ 원심분리기 보유 수량 추산

북한의 원심분리기 보유 수량은 2010년 Heacker 박사에게 공개한 2,000개 이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러나 위성사진으로 밝혀진 영변 농축시설의 확장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원심분리기 보유 수량을 계속 늘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짐작이 가능한 일이다.

중국의 우라늄 농축과 북한 핵문제 전문가인 주수휘³⁶⁾씨에 의하면, 북한은 2007년부터 연간 1,00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³⁷⁾을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북한이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기 이전인, 2008년부터 원심분리기 1,000개 정도를 보유하는 시설의 운영이 가능하고, 농축시설을 공개한 이후에도 추가로 비밀시설의 확장이 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2013년부터 위성사진에 나타난 영변 농축시설의 확장이 2014년 완성되었다면, 현재 북한이 보유한 우라늄 원심분리기 숫자는 8,000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000개 정도의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 우라늄 농축능력과 HEU 보유 가능량

앞에서 추정한 것처럼 북한이 8,000개의 P-2³⁸⁾형 원심분리기를 운영하고 있다면 우라늄농축능력은, 연간 약 32,000kg-SWU, HEU로 환산하여 연간 160 kg 생산능력으로, HEU 누적 보유 가능량은 2016년말 기준으로 약 640 kg에 달한다³⁹⁾.(<표 III-2-4> 참조)

36) Zhu Xuhui : 중국핵공업총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의 연구원/교수, 1962년 칭화대학교를 졸업하고, 1988년까지 중국원자력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2005년까지 중국 과학기술국에서 수석 엔지니어 및 중국핵공업총공사 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 핵연료 주기에서도 특히 우라늄 농축분야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였다. 6자회담에도 오랜 기간 참여한 경향이 있다.

37) 이 시기부터 북한이 원심분리기 제작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기인 Flow Forming Machine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1개의 Flow Forming Machine은 연간 약 1,000개의 원심분리기용 회전자를 제작할 수 있는데 북한이 선전용으로 방영한 영상에 의하면, 북한은 적어도 3개의 Flow Forming Machine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1개 정도는 원심분리기 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8) P-2형 원심분리기는 독일에서 개발한 G-2형 원심분리기를 파키스탄에서 카피한 모델로 농축능력은 4~5 kg-SWU/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델이 이란에 전해져서 만들어진 것을 IR-2형 원심분리기라고 부른다.

39) 운전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농축도 90 %의 HEU 1kg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보통 200 kg-SWU 정도의 농축일량이 필요하다.

<표 III-2-4> 우라늄 농축능력과 고농축우라늄 보유량 추산표(2016년말 기준)

시설	가동 기간	누적 가동 기간	원심분리기 [개]	농축능력 [kg-SWU/년]	누적 농축일량 [kg-SWU]	HEU(90%) 생산 가능량 [kg]
영변 농축 시설	2010.11. ~ 현재	6년	2,000	8,000	48,000	240
	2014. 6. ~ 현재	2.5년	2,000	8,000	20,000	100
비밀 농축 시설	2008. 6. ~ 현재	8.5년	1,000	4,000	34,000	170
	2011. 6. ~ 현재	5.5년	1,000	4,000	22,000	110
	2016. 6. 가동	0.5년	2,000	8,000	4,000	20
계			8,000	32,000	128,000	640

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먼저 원심분리기의 생산과 농축시설 건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실 가동률이 설계치 수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고, 100 MWth 실험용 경수로 가동을 위해 필요한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데 사용된 부분이 있을 것이며⁴⁰⁾,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한 중간단계의 농축 과정에 있는 양도 상당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 북한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양은 <표 III-2-4>의 값(640 kg) 보다는 적을 것이다.

하지만 존재여부나 그 규모가 불확실한 제3의 비밀 농축시설을 제외하고 영변 농축시설의 운영만으로도 300kg 정도의 HEU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상당량의 HEU를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예상하는 대로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면, HEU 확보량을 더 많을 가능성이 크며, 앞으로 HEU 보유량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핵 강대국에서 우라늄 기반 소형 핵탄두 제작에 소요되는 고농축 우라늄의 양은 약 15k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이들 강대국 보다 기폭기술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북한이 소형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핵무기 1개당 20kg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향후 북한이 지속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경우, 영변의 농축시설(증축된) 만을 이용해서도 연간 4개 정도의 소형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을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며, <표 III-2-4>에서 가정한 규모의 비밀 농축시설이 존재한다면, 이 숫자는 2배로 되어 연간 8개의 소형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 증가가 가능할 것이다.

40) 100 MWth 실험용 경수로 연료 초기노심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8,000 kg-SWU(HEU 90 kg 생산일량과 같은 값)의 농축일량이 필요하다.

3) 보유 가능한 핵탄두 수 추산

핵무기 1개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핵물질의 양은 핵무기 설계기술, 제조기술, 목표탄두 중량과 폭발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으로 과연 몇 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가를 추산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내폭형으로 제작되는 핵무기는 동일 기술 수준이더라도 폭발위력 목표치를 동일하게 하였을 때, 핵물질의 사용량을 증가시키면 내폭용 고폭약의 양을 줄일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탄두 크기와 중량이 줄어들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설계/제조 기술수준이 낮다면, 운반수단의 한계(미사일 탄두 무게 500kg, 직경 50cm)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을 고려하여 탄두 숫자를 희생하더라도, 비교적 대량(플루토늄의 경우 6~8 kg/탄두, HEU의 경우 30~40 kg/탄두)의 핵물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핵무기 숫자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폭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량(플루토늄의 경우 2~3 kg/탄두, HEU의 경우 15~20 kg/탄두)의 핵물질만을 사용하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배치 가능한 핵무기 숫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이미 상당량의 HEU를 확보하고 있다면, 폭발규모가 다양한 여러 형태의 핵무기⁴¹⁾를 제조 배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핵물질 보유량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배치한 핵무기 숫자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도쿄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북한이 신고서에 기록한 것처럼, 1차 핵실험에 2kg/탄두의 설계를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설계/제작기술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다. 이러한 고도의 기술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이기 보다는 핵무기 선진국⁴²⁾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무기의 숫자를 일괄적으로 ‘플루토늄의 경우 3 kg/탄두, HEU의 경우 20 kg/탄두’라 가정하고 북한이 보유 가능한 핵무기의 숫자를 계산하면 <표 III-2-5>와 같다.

<표 III-2-5> 북한의 보유 가능한 핵무기의 수 추산

종 류	2016년말	2018년말	2020년말
플루토늄 핵무기(3 kg/탄두 기준)	12 ⁴³⁾	12	15 ⁴⁴⁾
HEU 핵무기(20 kg/탄두 기준)	32	48	64 ⁴⁵⁾
합 계	44	60	79

41) 핵무기용 핵물질 보유량이 증가하면, 폭발규모가 큰(100 kt 이상) 전략 핵무기, 핵지뢰, 핵 어뢰 등의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42) 구 소련 붕괴가 진행되고 있을 때, 소련의 기술 인력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기술일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의 기술은 5대 핵국만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키스탄의 기술은 이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실제로 다수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핵무기를 제조/배치할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소형 핵무기를 기준으로 한 <표 III-2-5>의 숫자 보다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숫자가 늘어갈 것은 분명하다.

4) 실전배치 가능성

핵무기는 핵무기 1개 당 제조에 사용하는 핵물질의 양을 늘린다면, 그 제조 기술이 비교적 낮다고 하더라도, 그리 어렵지 않게 소형화·경량화 할 수 있다.⁴⁶⁾ 확인된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이 최소한 30kg 이상이므로, 북한의 핵무기 설계 및 제조기술이 저급한 수준이라고 해도(실제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이 플루토늄 보유량만 가지고도 4~5개의 핵무기를 실전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⁴⁷⁾ 북한은 우라늄 농축과 관계없이 확보한 플루토늄만으로도 이미 핵무기를 실전배치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수백 kg 이상의 HEU까지 보유하고 있다면,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무기의 숫자는 최소 20개 이상이 된다.⁴⁸⁾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실전배치 하였는가?’ 하는 의문에 답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해소하여야 한다.

① '핵폭발장치(Nuclear Device)'와 '핵무기(Nuclear Weapon)'는 동일한 것인가?

② 핵실험에 성공하면 바로 핵무기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는가?

관점과 상황에 따라 핵폭발장치와 핵무기는 동일한 것일 수도 있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핵무기를 실전배치 하려면, 핵무기의 특수성 때문에 기폭기술과 이외에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미국에서는 SAFF(safing, arming, fuzing, firing) system이라 부른다.

핵무기 SAFF system이란 (1) 불필요한 핵폭발을 방지하고, (2) 정당한 명령에 따라 핵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system이다. 여기에 설명하는 이 system의 특성은, 미국의 핵무기들에 지휘 및 통제 기술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핵무기(특히 북한)들이 이러한 개념에 따라 설계/제작되어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다.

43) 3, 4차핵 실험을 모두 플루토늄을 사용하여 실시했고, 2016년에 재처리를 실시하여 10 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가정한 수치임

44) 5 MWe 흑연로를 계속 가동하여, 2019년쯤 다시 재처리로 추가로 10 kg 정도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가정한 수치임

45) 2016년 이후 추가적인 농축시설 증설은 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한 숫자임

46) 내폭형 핵탄두의 중량에 가장 많은 부분이 고폭용 화약이기 때문에, 핵물질 사용량을 늘리면 화약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쉽게 경량화 할 수 있다.

47) 낮은 핵무기 기술수준에서도 7~8 kg의 플루토늄으로 1개의 핵무기를 제조한다면 소형/경량화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35 kg 정도의 플루토늄으로 소형/경량화된 핵무기 4~5개를 실전배치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48) HEU 폭탄의 경우에도 내폭기술이 높지 않더라도 핵무기 1개당 30~40 kg의 HEU를 사용한다면 쉽게 소형/경량화 할 수 있다.

핵무기는 그 파괴력 때문에 제조나 수명기간 동안 언제나 우발적인 폭발을 방지해야한다. 사고로 인한 핵 폭발은 국가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목표물에 투하될 때 핵무기 폭발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믿을 만한 활성화와 기폭장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전체주의 국가의 지도자는 핵무기가 정부에 대항하여 사용될 것을 항상 우려한다. 민주국가에서도 불법 사용이나 우발적 사용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보유한, 어떠한 핵 세력도 그들의 핵무기에 대한 안전장치와 안전, 활성화, 기폭 그리고 점화에 관한 문제를 중요시 하지 않을 수 없다. SAFF system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Safing** : 의도한 것이 아닌 환경과 위협상태에서 핵폭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력공급원과 폭약 도화선 모두에 다중 방해장치가 되어 있으며, 핵 부품들은 고폭약의 우발적 폭발로 인한 기폭에 TNT환산 4파운드 이상의 핵에너지 방출이 불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계적 장치를 pit 내에 넣어 pit가 임계질량으로 합체하는 것을 방해 하거나, 핵분열 물질의 일부를 고폭약 중에서 제거하는 단순한 것이다⁴⁹⁾. 모든 미국의 핵무기들은 본질적으로 고폭약의 우발적 기폭에 대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 **Arming** : 핵무기를 폭발시키기 전에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 **Fuzing** : 핵무기 기폭을 개시하는 명령 신호에 대비하고, 탄두 기폭에 요구되는 상태로 하는 것이다. Fuzing system은 일반적으로 탄두의 목표에 대한 위치에 따라 점화를 시작하기 위한 신호 처리와 논리시스템과 장치들을 포함한다.

- **Firing** : 핵무기의 기폭을 위하여 정확한 준위의 정확한 시간에 전기적이나 불꽃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system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은 SAFF 기능의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같은 진보된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채택하고 있을 것이다.

즉, 실전배치를 위해서는 안전과 통제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이미 첫 번째 핵실험을 한지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실전배치를 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결론을 말하면 북한은 이미 5~6기 이상의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있을 것이다.

49) 포신행 무기의 기계적 안전화는 상당히 간단하다 ; 단순히 단단한 철이나 텅스텐 봉을 포신행 직경을 가로질러 놓아 사출을 방해하여 달성이 가능하다. 포신행 무기가 세계 어디서나 사용될 가능성이 낮고, 개념적으로 안전이 쉽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내폭시스템에 대한 것만을 논의 한다. 전자적인 안전화와 활성화 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의 무기에 공통적이다.

나. 핵무기 보유(국가)의 장점과 단점

1) 핵무기 개발을 중도에 포기한 국가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자발적으로 포기한 최초의 국가는 스웨덴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스웨덴은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공격에 대비하여 국가를 방어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다. 1945년에서 1972년까지 스웨덴 정부는 국가 국방 연구소(FOA: Swedish National Defence Research Institute)에서 민간인 방어 연구를 가장하여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⁵⁰⁾.

1950년대 말까지 이 프로그램은 지하 핵실험 실행이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었으나, 스웨덴 국회가 핵무기 연구와 개발을 금지하고, 오직 핵 공격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만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공격용 무기들의 개발을 보류시켰다.

무기개발은 1966년에 폐기되었으며, 스웨덴은 1968년에 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에 서명하였고,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단계적 축소를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1972년에 완전히 폐기되었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자발적으로 개발을 포기하였고, 리비아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였으며 이라크는 전쟁(걸프전)에 저서 강제적으로 핵무기 개발이 중지되었다.

이들 국가는 각각 서로 다른 이유로 핵무기 개발을 중도에 포기하였지만 핵무기 개발을 중도에서 포기한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의 핵무기 개발 배경, 방법, 포기 이유들을 요약하면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핵무기 개발 시도 국가의 개발 포기 사례

국가	스웨덴	리비아	이라크	브라질	아르헨티나
핵 개발 배경 및 개발 방법	구 소련의 위협에 대비	이스라엘 견제		상호 견제	
개발포기 시기	1966	2003	1991	1991	
핵물질 취득방법	Pu	HEU (원심분리)	HEU (원심분리 및 EMIS)	HEU (Nozzle법)	Pu(?)
포기 배경	핵무장의 경제성 및	경제제재, 국제압력	걸프전 패전	브라질-아르헨티나 원자력평화협력협정 체결,	

50)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 Redirected from Sweden nuclear program.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wedish_nuclear_weapons_program

	미국의 핵우산 재공			경제난	
포기 방식 및 과정	자발적 포기	자발적 해체	강제적 시설 폐기	포기 선언 상호사찰 IAEA사찰 수용	
검증 주체	없음	IAEA	IAEA	상호사찰 IAEA사찰	
포기 대가	없음	경제제재 해제	-	-	-
기타 사항	원자로 건설 및 농축	재처리로 mg 단위 Pu 취득	Pu 계획도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무산됨	상용 농축시설 보유 추진 중	CAUDU 보유

2) 보유한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포기한 국가들의 사례를 요약하면 <표 III-2-7>과 같다. <표 III-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가 포기한 국가는 4개 국가이나, 이들 중 3개국(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은 스스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구소련이 개발한 것을 물려받은 것이고, 남아공의 경우는 스스로 개발한 것이나, 핵실험이나 실전배치까지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흑인정권에 핵무기를 물려주기 싫어서 자발적으로 해체한 것이다.

핵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아니면 아직 개발도중인가 하는 것의 차이는 비핵화를 할 경우, 검증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구 소련의 핵무기를 물려받은 3개 국가의 경우는, 이들 국가의 신생 정부보다, 러시아가 이들 국가의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하여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핵화 과정에서 검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남아공의 경우에도 정부가 국제사회를 속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검증에서 약간의 불일치가 발견되었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는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여러 차례 실험에 성공했으며,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실전배치 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타결되어 검증을 실시한다면, 검증 대상이 광범위할 뿐 아니라, 검증 도중에 나타나는 사소한 불일치도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표 III-2-7> 핵무기 보유국가의 핵무기 포기 사례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로루시
핵보유 배경 및 개발 방법	앙골라 내전 패전 인종차별로 인한 국제적 고립	구소련 유산		

핵 폐기 시기	1989	1991 ~ 1996		
핵물질	HEU (Nozzle 농축법)	HEU, Pu		
최초보유	1991	1954년 이후		
보유수량	7	5,000	1,640	수 백
포기 배경	경제제재 및 흑인정권으로 정권 이양 대비	국제압력 및 경제적 보상		
포기 방식 및 과정	자발적 해체	해체, 러시아로 이전		
검증 주체	IAEA	러시아, 미국		
포기 대가	-	안전보장 및 경제지원		

※ 우크라이나의 경우 군부의 반발과,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및 경제적 보상조건에 관한 이견 등으로 상당기간 폐기가 지연되기도 함

3) 핵무기 보유 목적에 따른 핵무기 개발/보유 비용의 차이

어느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기로 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한다. 그 요인들은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국제적으로 강대국의 반열에 들 수 있다.
- ②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의한 안보상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
- ③ 핵무기 보유를 통하여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
- ④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개발유지 보다는 소규모 핵무기 제조가 비용이 적게 들면서 더 강력한 방위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5대 핵무기 보유국과 인도의 경우에는 위의 요인들 중 주로 ①항과 ②항의 요인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키스탄과 북한의 경우는 ②+③+④항의 이유 때문에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5대 핵국과 인도처럼 전세계를 상대로 강대국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하여 핵무기를 개발/보유할 경우에는 핵무기 보유수량도 많아야 할 뿐 아니라, 가상적국의 선제 핵공격에서 생존하여 보복을 가할 수 있는 핵전력을 보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비용 보다 핵무기를 투발하기 위한 수단의 확보와 유지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표 III-2-8> 맨하탄 계획(Manhattan Project)에 투입된 비용(단위: 백만 달러)

부지/사업	시행당시 Dollars	1996년기준가격 Dollars
○ Oak Ridge(합계)부지	1,188.35	13,565.66
• K-25 기체확산농축공장	512.17	5,846.64
• Y-12 전자기법농축공장	477.63	5,452.41
• 엔지니어링, 본부관리비, 유틸리티등	155.95	1,780.26
• 실험실비용	26.93	307.44
• S-50 열확산농축공장	15.67	178.90
○ Hanford(Pu생산)부지	390.12	4,453.47
○ 특수물질생산비	103.37	1,180.01
○ Los AlamosProject	74.06	845.38
○ 연구개발비	69.68	795.45
○ 정부관리비	37.26	425.29
○ 중수공장	26.77	305.57
합 계	1,889.61	21,570.83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 초기 핵무기 개발비용(Manhattan Project비용)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4년간 약 216억 달러(1996년 물가 기준으로 환산한 비용, 개발 당시 지출비용은 약 19억 달러(<표 III-2-8⁵¹⁾> 참조)가 사용되었으나, 핵무기 고도화와 운반체제 개발과 유지비용의 합계는 1996년까지 총 약 5.5조 달러가 투입된(<표 III-2-9⁵²⁾> 참조)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세계를 상대로 핵무기 투사전략을 시행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초기 개발비 보다 핵무기 고도화, 운반수단 개발, 배치, 유지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후자가 전자보다 수 백배 큰 비용이 들었다.(<표 III-2-9> 참조)

<표 III-2-9> Breakdown of Total Actual and Estimated U.S. Expenditures for Nuclear Weapons, 1940-96 (Billions of 1996 dollars)

Activity	Cost
Building the bomb	409.4
Deploying the bomb	3,241.0
Targeting and controlling the bomb	831.1
Defending against the bomb	937.2

51) The Costs of the Manhattan Project. Retrieved from

<http://www.brookings.edu/about/projects/archive/nucweapons/manhattan>

52) Atomic Audit: Introduction." The U.S. Nuclear Weapons Cost Study Project was completed in August 1998 and resulted in the book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edited by Stephen I. Schwartz. These project pages should be considered historical. Retrieved from

<http://www.brookings.edu/about/projects/archive/nucweapons/introduction>

Dismantling the bomb	11.1
Nuclear wast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remediation	45.2
Victims of the bomb	2.1
Costs and consequences of nuclear energy	3.1
Congressional oversight of the bomb	0.9
Total	5,481.1

이처럼 많은 비용이 필요한 이유는 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 전략미사일 등의 개발과 배치 비용 및 방호체제 구축에 필요한 비용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핵보유국이 핵무기 고도화, 운반수단 개발, 배치, 유지에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다. 5대 핵 국에 속하지만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국토가 협소하기 때문에 핵전력을 주로 전략 핵잠수함에만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략핵잠수함체제를 유지하는데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여 이들 나라의 예산 편성에 주름을 지게하고 있다고 한다. 전략핵잠수함의 경우 보수/유지와 승무원의 휴식 등을 고려하여 최소 4척이 필요하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2010년 추산으로 새로운 전략핵잠수함 1척을 건조하는 비용으로 약 82억 달러⁵³⁾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비용에는 무장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이러한 잠수함이 최소 4척이 필요하므로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5대핵국처럼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핵무기체제를 갖추기 보다는 지역적인 군사력 우세 또는 제한된 가상적국을 대상으로 핵무기체제를 갖추려 할 것이기 때문에 핵무기 고도화, 운반수단 개발, 배치, 유지비용이 5대핵국의 경우보다는 훨씬 줄어들게 될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 대상이 아니고, 우리나라, 일본 또는 오키나와나 괌의 미군기지 등 비교적 가까운 거리를 목표로 중거리용 SLBM을 발사하기 위한 재래식 잠수함을 건조하여 배치하려 한다면, 미국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도 SLBM을 배치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5대 핵국의 전략잠수함과 같은 역할을 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일정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하는 것이 재래식 전력을 증강하는 것 보다 적은 비용으로 방위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 보유비용은 목표하는 핵전략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북한이 핵보유를 계속한다면, 궁극적으로는 5대 핵보유국과 같은 핵전력을 보유하고자 하겠지만, 이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 및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목표에 도달이 불가능하고, 중거리 탄도 미사일과 소수의 SLBM을 실전배치하는 제한된 수준의 핵전력을 보유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53) New Navy Sub May Cost \$ 1 Billion more, CBO Says. Retrieved from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0-05-25/nuclear-submarine-may-cost-1-billion-more-than-navy-s-estimate-cbo-says>

4) 북한의 입장에서 본 핵보유의 딜레마(dilemma)

북한의 경우 외부의 위협에 대한 방호목적만이 아니라 체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하나로도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다고 보인다. 북한은 핵개발을 국내 선전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북한 정권은 핵개발을 인민으로 하여금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여 정권의 정당성 확보수단의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차 핵실험을 성공적인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그런 시도의 하나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핵 보유는 북한정권으로서도 계류와 같은 존재일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지불해야 하는 반대급부도 크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NPT상의 핵무기보유 국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인도 또는 파키스탄과 같은 지위를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북한은 인도처럼 막강한 경제력과 인구를 가진 거대한 국가가 아니며, 파키스탄처럼 종교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경제적 후원을 하는 국가도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가 규모가 작고 자원이 부족하여, 인도처럼 수십년에 걸친 국제적인 경제제재를 극복하고 자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자력으로 개발하여 배치하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강대국을 대상으로 핵무기 전력을 배치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정권도 이제는 핵무기 보유에 대하여 피로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입장에서 처음 핵실험에 성공 했을 때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을 것이다. 실제로 1차 핵실험 후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때까지 걸돌던 6자회담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면서 북한을 회담장으로 불러내어 경제지원과 제재해제를 약속하면서 2.13합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핵실험 성공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북한 내부에서 체제를 공고화 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핵실험이 2, 3, 4차로 계속되자 이러한 장점이 사라지게 되었다. 추가 핵실험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커녕 제재만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렇다고 아무 조건 없이 핵무기를 포기하면, 정권 자체가 위태롭게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북한 정권은 핵무기를 계속 보유하여 인도와 같은 NPT 밖의 핵보유 강국으로 갈 수도 없고, 포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을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을 것이다.

다. 이란의 핵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1) 이란 핵 문제 개요

이란은 파키스탄 칸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통해 1980년대 중후반부터 비밀리에

원심분리법을 기반으로 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2002년 이란의 반정부 단체의 폭로로 인해 이란이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이란 핵개발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때부터 이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우라늄 농축은 자국의 원자로용 핵연료를 보급하기 위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이란 측과, ‘IAEA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핵무기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는 미국 등 서방측과의 견해차로 인하여 협상은 잘 진행되지 못했다.

협상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은 후, 2015년 4월 2일에서야, 포괄적인 공동행동계획(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합의하게 되었다.

2) JCPOA 주요 내용

JCPOA의 내용은 이란의 핵개발은 완전히 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란이 합의를 파기하여 다시 핵개발을 시작할 경우, 최초 핵무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시간을 1년 정도로 지연시켜, 적시에 탐지·대응 (평화적 협상,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포함)이 가능하도록, 이란의 핵능력, 특히 농축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장기간 통제(향후 15년간 기존 농축시설 동결, 향후 25년간 추가적인 농축시설 구축 금지 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면 <표II-2-10>과 같다.

3) 이란 비핵화 수준의 한계(JCPOA에 대한 분석)

가) 합의 사항 이행에 따른 이란 농축능력의 변화

이란 핵협상의 합의 사항 이행에 따라 변하게 되는, 이란이 보유하는 우라늄 농축시설의 규모와 보유중인 농축우라늄 양의 변화를 요약하여 <표 III-2-11>과 <표 III-2-12>에 수록하였다(화학적 형태의 변화는 고려하지 않았음).

<표 III-2-10> JCPOA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원심분리기	- 약 19,000기의 원심분리기 6,104기(IR-1)로 축소(10년 동안 5,060기만 가동 가능)
우라늄 농축	- 10,000kg의 LEU를 300kg(3.67%)으로 감축 - 우라늄 농축 활동은 Natanz 시설에서만 3.67%이하로 가능

연구	- Fordow 시설을 전환하여, 평화적 목적(원자력, 물리, 기술, 연구센터)으로만 활용
최초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간	- 현재 2~3개월을 1년 이상으로 확대
중수로	- Arak 중수로 설계 변경
제재 조치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및 미국의 관련 제재는 주요 합의사항 이행 확인 후 종료 - UN 제재는 조치 완료 후 해제, 미 이행시 원상복구 가능 - 다만, 핵심 조항(민감 기술 이전 및 활동에 대한 제재)들은 완전한 합의 이행 촉구를 위해 재수립될 것이며, 재래식 무기와 탄도 미사일에 대한 중요 규제와 관련 화물 조사 및 자산 동결 조항이 포함 될 것 - 테러, 인권, 탄도 미사일에 관한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유지될 것임.

이란이 설치 운영 중인 IR-1 원심분리기의 농축능력⁵⁴⁾을 최소 1.0 kg-SWU/년, 최대 2.0 kg-SWU/년이라고 가정하고, IR-2형 원심분리기의 농축능력⁵⁵⁾을 4.0 kg-SWU/년이라 가정하면, 이들 설치가 완료된 cascade의 농축능력을 추산하면, <표 III-2-13>과 같다.

<표 III-2-11> 농축시설 규모(원심분리기) 변화

	원심 분리기 수	원심 분리기 type
합의 이행 전	19,000	IR-1, IR-2m, IR-4, IR-5, IR-6, IR-6s 및 IR-8 포함
합의 이행 후	6,104	IR-1 만 허용하고 이중 5,060기만 나탄즈에 설치

<표 III-2-12> 농축시설 규모(원심분리기) 변화

우라늄 농축도	합의 이행 전후의 보유량 변화 [kg]			비 고
	이행 전	이행 후	감소량	
2 %	7,730	-	7,730	15년간에 걸쳐 저농축 우라늄을 농축도 3.67% 이하, 재고량을 300 kg로 감소시키기로 함
5 %	10,000	-	10,000	
3.67 %	-	300	△ 300	
20 %	447.8	-	447.8	이중 115.6 kg은 이미 감소하였음

54) 독일에서 개발한 G-1의 파생형인 P-1을 이란에서 다시 복제한 IR-1 원심분리기의 농축능력은 2010년 0.87 kg-SWU/년에 도달 했으며, 그 이후 경험의 축적으로 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 기기의 본질적인 문제(설계상의 문제)로 최대 2.0 kg-SWU/년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55) G-2 (P-2의 원형)의 파생형으로 그 농축 능력은 4~5 kg-SWU/년으로 추정되며, 이 형의 원심분리기는 비교적 쉽게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표 III-2-13> 2015년 5월 17일 기준 설치가 완료된 우라늄 농축능력 추산

원심분리기	설치 수량	1기당 성능 [kg-SWU/년]	농축능력 [kg-SWU/년]	비 고
IR-1	14,760	1.0 기준	14,760	8,856기는 운전 중
		2.0 기준	29,520	
IR-2	820	4.0 기준	3,280	
계	15,580		18,040 ~ 32,800	

■ 농축능력의 변화로 인한 최초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25 kg) 확보에 필요한 시간의 변화

이란의 농축시설 규모와 농축 우라늄 보유량의 변화가, 이란이 최초의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이라고 알려진 25 kg의 HEU(농축도 90%)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지연시키는지 하는 것을 분석하여 <표 III-2-14>에 수록하였다.

합의 이행 전과 이행 후에 최초의 핵무기 제조와 95 kg의 고농축우라늄을 얻는데 필요한 시간이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농축도 20 % 농축 우라늄의 존재 때문이다. 이는 천연 우라늄으로부터 농축도 90 % 고농축우라늄을 얻는데 필요한 농축 소요량의 대부분(약 95%)이 천연 우라늄에서 20 %까지 농축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 III-2-14> 합의 이행으로 인하여 이란이 최초로 25 kg의 고농축우라늄(농축도 90%)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변화

Case				소요시간 [day]
	IR-1의 농축능력	원심분리기 가동 수	농축능력 [kg-SWU/년]	
합의 이행 전	1 kg-SWU/년	8,856 (IR-1)	8,856	10
		14,760 (IR-1)	14,760	6
		15,580 (IR-1 + IR-2)	18,040	5
	2 kg-SWU/년	8,856 (IR-1)	17,712	5
		14,760 (IR-1)	29,520	3
		15,580 (IR-1 + IR-2)	32,800	3
	IR-2만 이용	820	3,280	27
이행 후	1 kg-SWU/년	5,060 (IR-1)	5,060	344
	2 kg-SWU/년	5,060 (IR-1)	10,120	173

합의 이행 후에는 이란에 농축도 20 %의 우라늄이 모두 없어지고, 농축도 3.67 %의 우라늄만이 존재하는데,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고농축우라늄의 양은 최대 10 kg 정도(이론상 최소 48일 소요)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천연우라늄으로 부터 농축을 시작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므로, 이번 합의는 이란이 최초의 핵무기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150일 이상 지연 시키고, 4~5개의 핵무기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을 1년 정도 지연시켰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란의 비핵화는 핵무기 개발능력을 완전히 제거한 것이 아니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경우, 이란이 최초의 핵무기를 보유하기 약 1년전에 적발이 가능한 감시시스템을 확립한 것이라고 평가된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협상에서 CVID⁵⁶⁾를 적용하지 못하고, 이런 정도의 불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면서 협상을 마무리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NPT가 가진 내재적인 모순도 한 가지 이유가 된다. NPT가 가진 모순이란 조약 제4조(Article IV)⁵⁷⁾에 명시된 것으로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권의 보장이다.

NPT 4조에 명시된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권에 따르면, 이란이 주장하는 평화적 이용(상용발전 및 연구로 운영)에 필요한 만큼의 농축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3) 이란 모델의 북한 적용 가능성 검토

가) 이란과 북한의 유사점과 다른점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를 유사한 것으로 보는 관점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란과 북한의 핵문제는 여러 가지로 많은 차이가 있다.

■ 유사점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이 표면상으로는 에너지 공급이지만 실제 개발목적이 핵무기 개발에 두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면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유사점이 별로 없다.

56) 완전하고(Complete), 검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파괴(Dismantlement)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것으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의미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표를 천명할 때 사용한 표현으로 제시했으나, 북한은 전쟁 패전국에나 사용할 만한 용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57) NPT 제 4 조, 1. 본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차별없이 또한 본 조약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의 연구생산 및 사용을 개발시킬 수 있는 모든 조약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2. 모든 조약당사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장비 물질 및 과학기술적 정보의 가능한 한 최대한의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로 약속하고, 또한 동 교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상기의 위치에 처해 있는 조약당사국은, 개발도상지역의 필요성을 적절히 고려하여, 특히 핵무기 비보유 조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원자력 응용을 더욱 개발하는데 단독으로 또는 다른 국가 및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기여하도록 협력한다.

굳이 유사점을 찾는다면 북한과 이란 양측이 모두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법에 의한 우라늄 농축기술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 다른점

이란은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고, 보유 가능성이 있을 뿐이나,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란이 비록 서구적인 관점에서 민주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폐쇄된 사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검증활동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이란이 협정을 어기고, 새로운 비밀시설에서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IAEA나 서방세계는 이를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검증활동 자체가 체제에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약속을 어기고 비밀 농축시설에서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반대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신고를 신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북한 각지에 있는 의혹시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게 될 것이나, 북한은 UNMOVIC⁵⁸⁾에 의한 이라크사찰의 전례 및 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하여 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사항이 북한의 핵활동을 검증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란의 핵개발은 에너지 정책과 무관하게 진행되었으며 국내 석유자원이 풍부하므로 대체에너지 공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이미 러시아에서 상업용 경수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제재가 풀리면 풍부하게 매장된 원유를 수출하여 필요한 외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은 국내 에너지 자원이 부족하고, 에너지 공급 방안의 하나로 핵개발을 진행했으며 국내 에너지 때문에 대체에너지 공급을 요구할 뿐 아니라, 경수로 공급을 요구한다.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 경제가 회생되면 에너지 부족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예상되므로 경수로 건설의 재개 등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개발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수로 공급은 그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경수로를 공급받아 운영하게 되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원자력 관련 산업의 인프라가 확대/유지되기 때문에 서방(특히 미국)은 이를 꺼려한다. 북한의 경우는 이미 어느 정도 자체적인 핵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경수로 등 운영을 통하여 원자력 산업에 대한 지식이 더욱 축적되고 관련 인력양성도 계속된다면, 언젠고 상황이 변해 북한이 생각을 바꾸어 군사적인 목적의 핵개발 다시 시도할 가능하다고 미국은

58) UNMOVIC : United Nations Monitoring, Verification and Inspection Commission의 약자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284호에 의하여 이라크의 대량파괴무기 개발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라크에서 수년간 활동하였으나, 대량파괴무기 개발흔적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UNMOVIC의 보고서를 무시하고 대량파괴무기 개발을 이유로 제2차 걸프전을 일으켜 후세인 정권을 무너트렸다. 문제는 제2차 걸프전 개전 초기에 UNMOVIC이 입수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이라크 군사시설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하여 무력화 시켰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의혹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려 한다는 점이다.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은 경수로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비핵화의 조건으로 체제보장(현 지배체제의 유지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체제보장 문제는, 현실적으로 북한체제의 유지를 보장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북한과 같은 비 도덕적인 독재 정권의 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이란과 북한의 핵개발과 비핵화 관점에서의 차이점을 요약해서 비교하면 <표 III-2-15>와 같다.

또한, 기술적인 차이는 아니지만 검증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이란은 서구적 관점의 민주적인 사회는 아니지만 북한처럼 폐쇄되고 획일적으로 통제된 사회는 아니다. 미국과 IAEA 등의 국제기구가 여러 정보채널을 통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할 때 이를 피하여 상당한 규모의 핵시설을 건설하고 성공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하여 북한은 자국민도 여행의 자유가 없는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비밀리에 추진하는 핵개발을 포착하기 쉽지 않다.

<표 III-2-15> 핵 개발과 비핵화 관점에서 이란과 북한의 차이점

	항 목	북 한	이란
1	개발착수 시기	1950년대 중반	1950년대 후반 회교혁명으로 중단 후 1980년대 중반 다시 시작
2	핵무기 개발단계	4차례 핵실험 실시로 실전 배치 단계이며, 상당수 핵무기 보유가 확실시 됨	우라늄 농축 능력 확보 단계로 핵무기 없음
3	주력개발 분야	재처리 ⇒ 농축 병행	농축 ⇒ 증수로 건설 병행
4	주요 보유시설	우라늄생산시설, 연구로, 흑연로, 핵연료제조시설, 재처리시설, 농축시설(미확인)	우라늄전환시설, 연구로, 농축시설
5	핵활동 감시	어렵다	쉽다
6	비핵화에 대한 보상	경제제재 해제	경제제재 해제 및 직접적인 경제적 보상(경수로 공급, 중유공급 등) 요구
7	검증(사찰)에 대한 수용자세	추가의정서에 따르는 IAEA의 활동 보장	IAEA의 검증 활동 제한 및 시료채취 반대
8	체제보장 요구	없음	체제의 안전보장을 요구하고 있음

4) 이란의 경험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

이란과 북한은 앞에 기술한 것처럼 많은 점에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경험이 북한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란 핵협상 결과가 내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점이다.

이란 핵협상의 결과는 대부분의 협상이 그리 하듯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고, 양측이 서로 적절한 수준의 명분을 살리며 타협한 결과’이다.

북한 핵문제도 협상이 성공하려면, 적당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기본적인 입장을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많은 점에서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타협점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란 경험을 북한에 적용하는데 대한 한계이다.

라. 미국 대북전략의 변화

지난 몇 년간 미국의 대북전략이 변화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에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소위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장기간 북한 핵문제에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동안 동북아의 정세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북핵정책이 변화했는가? 하는 문제는 이 보고서의 다른 저자들이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난 7년(2009년 1월 20일 오바마 정권 출범 이후)간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기술적 분야의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미국의 전략적 입장 변화의 가능성만을 기술한다.

■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2. 13합의의 파기와 북한의 제2차 핵실험(2009. 5. 25.)은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첫해에 일어났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한 태도로 협상할 것을 밝혀왔으나, 취임 초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처리로 아직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도 전에 2. 13 합의 폐기와 제2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북한을 보고, 북한 핵문제를 거의 방치하는 소극적 자세(전략적 인내)로 돌아섰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지극히 수동적이며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 북한 핵능력의 변화로 인한 미국의 태도변화 가능성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7년간 북한은 3차의 추가 핵실험(2, 3, 4회)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재처리(2009년, 2016년 ?)를 실시하여 플루토늄 보유량을 늘리고, 우라늄 농축을 공개하여 핵무기 보유 숫자가 대폭 증가하였음을 과시하여, 단순히 핵실험에 성공한 것에서, 어느 정도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가능함을 과시하고 있다.

또한 인공위성의 지구궤도 진입에 성공하고, 여러 차례의 실패 끝에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으며, 계속적으로 SLBM 발사실험에도 성공하여 상당한 기술적 진보가 있음을 보여주고, 핵무기 운반체계에 대한 능력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능력 변화는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하던 CVID 원칙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이 현재 개발하여 배치중인 미사일 방어시스템(사드, 패트리엇 등)은 핵공격을 방어할 완벽한 수단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북한과 같은 불안정한 정권이 핵공격 능력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것은 미국의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해야할 필요성을 미국도 점차 인식하고 있을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북한의 핵공격 능력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지만, 북한의 행동 양식이 일반적인 판단의 기준에서 벗어나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억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MD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이 필요한데,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북한 핵위협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되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방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을 내렸을 수 있다. 미국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CVID 원칙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협상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협상에 의한 북한 비핵화에 달성에 필요한 내용과 현실적인 문제점

1) 합의 지연 또는 파기를 일으킨 주요 쟁점

평화적인 수단으로 북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협상은 지금까지 여러차례 합의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합의가 파기되는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합의가 파기된 원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검증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2009년 2.13합의의 파기도 검증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협상에 의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의 협상 타결⁵⁹⁾과 파기가 되풀이 되었다.

59)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 9. 19 공동성명, 2. 13합의

북핵협상의 타결과 파기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협상 타결의 성공을 위하여 급조된 모호한 합의 내용과 이로 인한 제재의 타당성 결여
- 북한 측의 검증 기피

2)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의 조건

가) 검증이란?

검증이란 과거와 현재의 핵활동에 대한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검증(檢證, verification)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가설이나 사실, 이론 등을 검사하여 참인지 거짓인지 증명함[Additional proof that something that was believed (some fact or hypothesis or theory) is correct]

② [법률] 법관이나 수사관이 증거가 될 물건이나 장소를 직접 검사하여 조사함(An affidavit attached to a statement confirming the truth of that statement)

그러나, 국제 핵비확산체제의 사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IAEA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검증** : 신고 내용과 실제로 이루어진 핵활동의 일치성·완전성·정확성을 확인하고, 정보 분석, 환경시료 분석 등 미신고 핵활동 탐지 수단을 이용하여 미신고 핵활동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일련의 조치

- **신고** : 핵 활동이 이루어진 대상시설 목록, 설계정보, 운영기록, 핵 물질수지 등을 주어진 양식에 따라 제출하는 행위이며 추가의정서(INFCIRC/540)를 적용할 경우에는 핵연료주기 관련 연구는 실제 핵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된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핵비확산 활동에서 검증이란(IAEA가 실시하는 검증) 신고가 선행되고, 신고한 내용이 실제와 부합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만일 검증에서 신고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다면, 좀 더 엄격한 추가 검증을 요구하게 된다. 지금까지 북한 핵에 대한 검증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북한이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나)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omplet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전히 제거하고 이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핵무기 관련 핵시설(원자로, 우라늄 농축시설, 재처리시설)을 제거하고, 이러한 시설을 다시 건설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체제를 완성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란 현재는 물론 가까운 장래에도 핵개발을 할

수 없도록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다) CVID의 현실적인 문제점

CVID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모든 시설(원자로, 농축시설, 재처리시설 등)을 제거(용도 전환 및 영구 불능화 또는 해체) 하고, 관련 인력을 전환배치 하고, 이들 시설과 인력이 핵무기 개발 용도로 재전환 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 비밀리에 이러한 시설을 건설할 수 없도록 감시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이미 4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하였고, 상당량의 분리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및 핵무기용 핵물질의 생산/보유량과 과거 이력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달성하려면 앞서 기술한 것처럼 핵무기 관련 핵시설을 제거하고, 이러한 시설을 다시 건설할 수 없도록 감시하는 체제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이 이미 신고한 시설 외에 비밀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시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와 감시체제 구축 및 북한 내 거의 모든 지점에 대한 접근 보장은 북한의 지배체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이라크 사찰의 교훈⁶⁰⁾ 때문에 군시설 등 중요시설에 대한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완전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북한의 핵물질 생산 이력과 생산량, 사용량 그리고 현재 보유량을 완전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검증해야 할 핵물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이다.

플루토늄의 검증은 북한이 협조한다면, 상당한 시간, 인력 및 비용을 필요로 하지만 비교적 정확하게(오차 3% 이내)⁶¹⁾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검증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농축 우라늄의 경우는 농축시설 운전 초기부터 감시장비를 설치하여 계속적으로 모니터하지 않은 이상 사후에 고농축 우라늄 생산량을 검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북한이 제출한 운영일지 등 자료에 의존하여 생산량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북한 측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 문제와 연관되어 정확한 검증이 불가능하여 검증시 마찰을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폐기한 후 IAEA 전문가들이 고농축우라늄 생산량을 검증하였을 때에도 문제가 발견되었으나, 그 당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의도적으로 거짓 신고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이 북한 농축시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면, 이는

60) 부시행정부는 제2차 걸프전 개전 초기에 UNMOVIC이 입수한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이라크 군사 시설을 토마호크 미사일로 공격하여 무력화 시켰다는 의혹이 있다.

61) 흑연감속원자로(5MWe원자로)의 경우 원자로 감속재인 흑연에 GIRM(Graphite Isotope Ratio Method)을 적용하면 오차한계 3 % 이내로 플루토늄 생산량을 추정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다.

북한은 CVID란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CVID 적용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위에 기술한 문제점들을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하여 북한 비핵화에 CVID를 적용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국도 인식하기 있기 때문에 CVID를 고수하기 보다는 북한의 핵전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일정 수준 이하로 동결하는 방향으로 미국의 정책이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

라) CVID를 대체할 대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 비핵화에 CVID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은 분명하나, 현실적으로 북한 정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오지 않는 이상 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이 CVID를 받아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북한 정권과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의 하나가 바로 검증시기와 방법의 문제이다. 북한이 검증에 대하여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신고하지 않은 핵활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의 4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우라늄 농축으로 CVID의 달성은 어려워졌지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공개로 인하여 협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검증에 대한 합의가 오히려 쉽게 풀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된 측면도 있다.

■ 우라늄 농축활동의 공개가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2번의 합의가 파기된 원인은 우라늄 농축과 관련이 있다.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가 깨어진 직접적인 원인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2. 13합의가 파기된 직접적인 원인은 시료채취에 대한 의견차이 때문이지만, 그 당시 북한이 시료채취를 극단적으로 싫어했던 이유는 시료분석 결과 우라늄 농축활동이 드러날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⁶²⁾

그러나 북한이 2009년 우라늄 농축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고, 2010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였기 때문에 북한은 더 이상 과거처럼 시료채취에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환경시료 채취/분석은 우라늄 농축활동의 유무를 탐지하는 것에는 크게 유용한 수단이지만, 농축시설의 숫자, 장소, 농축활동 시기⁶³⁾, 누적 농축량 등의 정보를 알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2009년 이전처럼 시료채취를 적극 반대할 필요가 없어졌다. 만약 비핵화 협상이 다시 시작된다면

62)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미세입자를 분석하면 직접 농축시설에서 채취한 시료가 아니어도, 농축시설 출입자가 출입한 장소 또는 취급한 물품 등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우라늄 농축활동의 증거물이 검출될 수 있다.

63) 재처리 활동의 경우 입자시료 분석으로 재처리시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북한은 과거처럼 영변지역에서의 검증을 위한 시료채취에 대하여 과거처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영변 이외의 의심지역에 대한 사찰은 여전히 강하게 반대하거나, 제한된 지역(영변 등)에 대해서만 검증을 허용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핵무기의 군사, 정치적 특성

핵무기는 1945년 처음 만들어진 이후 한때 5대 핵무기 보유국이 보유한 핵탄두의 숫자가 10만개에 달할 정도로 많이 만들어 졌으나, 1945년 8월 2개가 사용된 이후 71년이 지난 지금까지 더 이상 사용된 적이 없다. 그 이유는 너무도 강한 파괴력과 상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사용할 경우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이 역설적으로 냉전의 시기에 오히려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 지도층도 핵무기를 보유한다 해도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는 순간 자신들도 파멸의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가상 적국의 군사적 공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또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처럼 현대에 와서는 핵무기란 실제 사용하기 보다는 보유하기 있다는 자체가 상징성을 지닌 정치적인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만일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지 않기로 했음을 선언 한다면, 이 선언을 어기고 비밀리에 몇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비밀리에 보유한 핵무기는 정치적 의미에서는 보유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가 된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선언 이후에 남북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서 남한보다 약하므로, 이 감추어 두었던 핵무기를 공개하고, 휴전을 제의해 온다면, 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방어적 무기의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보유중인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무기용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하고, 추가적인 핵무기 제조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감시체제가 마련된다면, 북한 전역에 대한 검증과 CVID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목표는 대부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필연적으로 북한의 체제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체제변화 이후에는 북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 실현 가능한 협상에 의한 북한 비핵화

현재의 북한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협상에 의한 북한 비핵화는 CVID를 고수하기 보다는, 완벽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의 폐기와 확인 가능한 핵무기용 핵물질⁶⁴⁾의 반출,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감시체제⁶⁵⁾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64) 북한이 생산한 우라늄의 생산과 사용량 및 플루토늄 생산 및 사용량의 검증(5 MWe원자로의 감속 재인 흑연에 Graphite Isotope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플루토늄 생산량을 검증)과 알려진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의 검증

65) 추가의정서 수준, 또는 이란에 대한 감시체제 수준의 감시체제

3. 심리학적 관점: 북한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김정은 개인의 성격

가. 연구개요

북핵문제를 비롯한 북한의 제반 행위들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접근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들 중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위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예를 찾을 수 없는 권력의 3대 세습이나,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에도 주체를 내세우며 체제를 공고화하는 측면, 심각한 경제난에도 막대한 자금이 드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등의 북한의 행위들을 이성적, 합리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이해가 정체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의 행위들을 설명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인 동시에,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세계역사상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이성적, 합리적 이유만으로는 일어났다고는 보기 어렵고, 외부자의 시선에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의 산물인 경우도 많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은 특정 집단의 문화나 구성원들 간의 특수한 사회적 역동이나, 집단의 구성원 혹은 개인의 개인적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다.

본 분석에서는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행위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심리학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집단의 문화적 행위양식이나 집단 내의 역동과 관련하여 핵을 보유하려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의 사회 및 문화심리적 배경을 살펴보고, 둘째, 개인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핵 관련 사안을 결정하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의 개인 심리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나. 북한의 사회문화적 특수성

1) 유교, 가부장문화

북한은 유교를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이자 낡은 시대의 봉건적 산물로 보고 사회주의 혁명에 방해가 된다고 금기시해 왔다. 그럼에도 북한 사회 전 분야에는 유교적 사고와 행위규범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많다(남인숙, 1992; 손병선, 2012; 이현근, 1995, 정현수, 1995). 대표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서문을 보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중략)...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만위천(以民爲天)을 좌우명으로

삼으시여 … (중략)… 숭고한 인덕정치(仁德政治)로 인민들을 보살피시고… (중략)…
온 사회를 일심단결된 하나의 대가정으로 전변시키시었다.

와 같은 구절이 있는데, 창건자나 시조와 같은 왕조국가의 용어로부터, 이민위천, 인덕정치 등 전형적인 유교적 정치이념이 드러나 있고, 북한 사회를 궁극적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보고 김일성을 그 가정의 가부장으로 보는 등 유교적 가치관이 강하게 나타난다. 최고권력자의 아들이 후계자로 지목되고 또 그 아들에게 권력이 승계되었다는 점은 사회주의 이념과 어긋나며, 지도자 한 사람의 교시에 의해 사회의 모든 규범과 질서가 규정되는 것은 계급을 타파하고자 한 마르크스주의와도 상반되는 현상으로, 북한사회가 유교적 영향을 유지하는 왕조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형중(2004)은 북한을 ‘왕권적 전체주의’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1. 공과 사가 혼합되고 권력의 족벌화 경향, 2. 최고 권력의 친족승계 경향, 3. 국가 공직복무와 통치자에 대한 개인적 봉사 간의 구별이 부재, 4. 합리적이고 비인물적인 이데올로기의 부재, 5. 사회정치적 성공이 통치자와의 인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 6. 통치자가 상위의 일반 목적에 구애됨 없이 자의적으로 제한받지 않고 행동 등으로 정리한 바 있다.

북한체제의 특징은 혈연중심의 개별가족 가부장성에서 수령을 중심으로 한 대가정으로 변화한 ‘국가가부장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북한사회의 가부장성은 수령관에 잘 드러나는데 가족의 가장인 아버지가 가족 내의 대소사를 결정하고 가족 구성원의 일상을 통제하고 외부세계에 가족을 대표하듯이 북한에서는 수령이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해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북한의 건국 초기부터 나타난 것이 아니라 1970년대 후반부터 조짐을 보였는데 이는 첫째로는 가정에 대한 정책변화, 둘째로는 김정일로의 후계체제 구축과 관계있어 보인다(강진웅, 2001). 60년대 중반까지 북한은 가족주의를 봉건적 사고방식, 사회주의 혁명에 방해가 되는 사상으로 보고 혁파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가정과 사회의 불안을 초래하였다.

1960년대 중반, 김일성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부터는 북한주민들의 유교적 정서를 이용해 자신에 대한 개인숭배를 고착화시키는 한편 사회적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가정의 혁명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전 시기의 정책이 혁명투사, 생산노동의 일꾼 등 여성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면, 가정의 혁명화는 여성들의 가정에서의 역할을 동시에 요구하게 되었고 가정에서의 유교문화가 되살아났다.

80년대 들어 심각한 경제난으로 공장들의 가동이 저조해지자 많은 여성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였고 이들은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즉 양육, 내조 등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북한사회의 혈연 및 가족주의, 가부장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와 김정일에 대한 세습을 정당화하는 데 주민들의 유교적 성향을 이용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졌다(이현경, 2001).

조선시대로부터 이어진 유교문화는 조선왕조 이후 새로운 정치제도를 경험해 본 적 없는 북한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작동했을 것이다. 500년 유교문화의 바탕에서 북한주민들에게는 이씨의 조선왕조가 김씨의 북조선왕조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졌을 수 있다. 북한의 유교문화는 우상화, 신격화 과정을 거쳐 김일성 일가의 세습 고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한편, 김씨일가의 세습을 정당화하는 배경이 되었던 북한의 유교적 가부장 문화는 최근 들어 김정은 비판의 근거로도 작용하는 듯하다. 장유유서에 따른 연장자들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북한주민들은 나이 어린 김정은이 연로한 국가원로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으며, 외모나 통치스타일에 있어 김일성을 따라하는 것이나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가 명품을 구매하거나 고가의 육아용품 등을 사용하는 것도 사치스럽다고 비난하고 있다(조갑제닷컴, 2016.2.14.).

2) 무속신앙의 영향

한편, 북한 체제의 특징 중 두드러지는 것은 절대권력자에 대한 우상화, 신격화이다. 이는 과거의 공산권 국가들을 비롯한 현대의 어떤 나라에서도 찾기 힘든 예로, 고대 제정일치 사회의 특성에 가깝다. 주준희(1996)는 북한 정치체제의 종교성의 기원으로 한국의 전통신앙 무속에 주목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 수립 이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게 철저히 종교를 탄압해 왔으나 전통사회의 신앙형태가 주민들의 의식과 무의식적 차원에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정권이 이러한 주민들의 종교성을 신격화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고대로부터 북방 샤머니즘 계통의 무속이 성행하였는데, 불교, 유교 등의 외래종교와 결합하여 전통적 무속신앙을 형성해왔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표면적으로 신앙되었으나 무속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했으며 현세주의와 기복신앙 같은 무속의 본질적인 부분은 기성 종교에 습합(習合)되어 한국 종교의 특수한 측면이 되기도 하였다(유동식, 1975). 특히 북한지역은 무당이 신격화되는 강신무(降神巫)의 전통이 강한 곳으로 이러한 문화적 배경이 김씨일가에 대한 신격화와 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가) 무속신의 위계적 특성과 김씨일가

무속신은 다른 종교들의 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일단 그 수가 많고, 완전무결한 모습으로 인간 위에서 군림하는 존재가 아닌, 인간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졌을지언정 인간처럼 희로애락을 느끼며 무당을 매개체로 인간의 요청이나 부탁을 들어주는 존재이다. 이러한 신과 인간 경계의 모호성은 인간의 신격화를 용이하게 하며 실제로 무속에는 상당수의 인간 계열 신들이 존재한다.

김태곤(1981)은 총 273종의 무속신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을 계통별로 구분해서 자연신 63.6%, 인간신 33.3%, 기타 3.1% 등으로 나누었다. 비율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연신 계통은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자연물인 땅, 물, 산, 하늘의 순이었고, 인간신 계통의 경우는 장군신, 왕신, 불교신, 도교신, 무조신의 순으로 인간세상의 영웅이 종교적 인물보다 더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속신은 종류와 수도 많고 학자에 따라 분류 방식도 각자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신들은 인간세상과 관련 있는 인간신 계통이다. 특히 지역 수호신인 ‘골매이신’이나 ‘조상신’은 마을이나 가문의 시조에 해당되는 인물이 섬겨지고 있으며, 재복(災福)을 관장하는 ‘장군신’이나 ‘대감신’은 역사적으로 일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졌던 장군이나 관리의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영향력 있는 신들은 장군신이다. 이용범이 분석한 서울지역 ‘재수굿’의 절차를 살펴보면, 무속에서 가장 중히 섬겨지는 신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재수굿의 전체과정은 1)주당물림, 2)부정거리, 3)천궁맞이, 4)도당거리, 5)조상거리, 6)상산거리, 7)별상거리, 8)신장거리, 9)대감거리, 10)성주거리, 11)창부거리, 12)뒷전으로 이루어진다. ‘부정거리’는 굿판을 정화하기 위한 의식이며, ‘천궁맞이’/‘도당거리’/‘조상거리’는 자연과 지역, 조상신에게 굿이 벌어짐을 알리는 성격을 갖고 있다. ‘자연신’은 그 힘의 영향력은 넓지만 구체성이 부족하며, ‘지역신’ 역시 인간사의 세세한 부분에 밀접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조상신’은 해당 가정에서만 섬김을 받고 영향을 주는 존재이다. 후반부의 ‘창부거리’와 ‘뒷전’은 잡귀·잡신을 거두어 먹이는 굿의 ‘뒤풀이격’인 절차이고, 그 거리에 등장하는 신들은 인간들의 문제나 소원을 해결해 주는 신이 아니라, 해를 끼치지 않도록 참여시키는 존재에 불과하다.

즉, ‘굿’의 중심이 되며, 여러 가지 재액을 막아주고 재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지닌 신은 주로 ‘상산거리’·‘별상거리’·‘신장거리’에 등장하는 ‘장군신’, ‘영웅신’ 및 ‘대감신’이다. 이는 제사의 중심이 되는 상이 장군신, 별상, 신장에게 돌아가는 상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신령의 위계상 이들은 분명히 위계상으로는 ‘천신’ 계열의 신들의 아래에 있으나, 보다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인 것이다.

북한 지역은 최영 장군 등 장군신에 대한 신앙이 일반화된 지역으로 김일성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항일무장투쟁 경력 등을 이유로 ‘장군’ 호칭을 사용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비공식 호칭 역시 장군이었던 것은 의도적이었던 그렇지 않았든 북한 주민들의 무의식을 자극하여 신앙에 가까운 충성심을 유도하였을 것이다. 김정은 역시 공식 직책은 국무위원장이지만 우상화에 사용된 찬양가 등에는 할아버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장군’으로 불리고 있다.

그 외에도 김씨일가에 대한 우상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양’, ‘별’ 등의 메타포 역시 무속의 자연신 개념에서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김일성의 어머니 강반석이나 김정일의 어머니 김정숙의 신격화는 무속의 성모신(聖母神) 숭배의 전통과 관계있다

(주준희, 1996). 한편,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의 경우에는 출신성분의 문제로 이와 같은 신격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고용희 묘역 단장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미루어 고용희에 대한 우상화도 진행 중이라 생각된다.

또한 무속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내세중심적인 종교도 아니고, 불교와 같은 탈세속적인 종교도 아닌, 현세 중심적(現世中心的)인 종교이다(황필호, 2002). 무속에서 사제에 해당하는 무당은 신령의 힘을 빌어 단골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이며 복(福)이란 결국 내세가 아닌 현세에서의 복을 의미한다. 물론 무속에서도 내세관이 존재한다. 무속의 세계관은 이승(현실)과 저승(내세)으로 나뉘며, 죽은 이를 위한 곳의 종류도 다양하게 많다. 단, 죽은 이를 위한 곳이란 결국엔 현실에 살고 있는 자들을 위한 것으로 죽은 이들이 현실에 미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막고 새롭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무속의 본질은 현세에서의 풍요와 안녕을 회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속적 배경에서 현세에서의 복을 상징하는 ‘이밥에 고깃국’이 김일성의 주요 캐치프레이즈였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정일이 집권한 이후,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게 된다. 90년대 초반 소련과 동독의 붕괴로 사회주의 진영이 무너지면서 타격을 입은데다가 북한을 강타한 가뭄으로 아사자가 수백만에 달했다는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신격으로서의 권력자가 갖는 신통력이 의심받는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경제가 바닥을 치고 남한과의 격차가 날로 벌어지는 가운데 재래식 무기로 군비경쟁을 하는 것도 승산이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개발은 남한에 군사적 우위를 얻고 주변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외교적 이점과 제한된 북한경제에서 투자 대비 최대한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인다.

핵개발이 갖는 또 하나의 이점은 신격화된 지도자의 권능(신통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 정권은 공산권이 모두 붕괴한 와중에 북한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김일성과 김정일의 능력 때문인 것으로 선전하였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이를 사실로 믿고 있다. 더군다나 핵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남한뿐만 아니라 초강대국인 미국과 일본 등을 위협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의 권능을 부각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다.

3) 북한 권력층의 집단 역동

폐쇄적인 북한사회의 특성상, 그리고 당과 김정은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 때문에 북한 권력층의 의사결정은 일반적인 의사결정과 다른 관점에서 고려해야 한다. 핵개발과 관련된 북한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 권력층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심리학적 행동원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동조

Asch(1955)의 고전적인 실험으로 잘 알려진 동조는 주위 사람의 견해나 행위를 따르게 되는 것을 뜻한다.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사람들은 명백한 사실일지라도 주위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다. 동조행위가 나타나는 이유는 첫째 판단의 근거가 부족한 경우이며, 둘째 집단의 동조압력이 있는 경우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의 일치하는 행위나 개인의 일관성 있는 행위는 정보력을 지녀 동조행위를 유발한다. 소수의 권력에게 정보가 독점된 북한사회에서 핵개발에 대한 정보는 제한된 것일 수밖에 없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당이 선전하는 대로 판단하고 당의 방침에 동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고도의 통제사회로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김정은과 당의 방침에 일치하지 않는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나) 권위에의 복종

동조는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매우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권위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경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Milgram(1963)의 연구결과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 일지라도 강한 권위의 압력에는 복종하기 쉬우며, 그 복종행위가 개인의 신념과 어긋나거나 잔혹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하는 경우, 그리고 권위자의 권위나 전문성이 의심받는 경우에 복종률은 감소하는데, 북한사회는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절대적 권위자가 존재하며 그에 대한 불복종이나 의심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이다. 권위에의 복종은 북한에서 핵개발뿐 아니라 숙청이나 인권유린 등 불합리한 의사결정이 지속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다) 집단사고

동조압력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현상(Janis, 1982)을 집단사고라 한다. 집단사고는 응집력이 강하고 지시적인 지도자가 있으며, 대안을 검토하는 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집단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극대화된다. 이러한 집단에서 구성원들은 지도자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꺼리는데 이는 지도자의 눈 밖에 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회의시간에 안경을 닦거나 졸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당할 만큼 개인의 안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지도자의 방침에 어긋나는 의견을 드러낼 만한 이들은 없을 것이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기 전에 자기검열을 하며, 다른 대안을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에 도달하게 된다.

집단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합의추구 요인과 집단정체감 요인이 있다.

합의추구 요인은 자기검열을 포함하여 이탈자에 대한 동조압력을 주는 작용이며, 집단정체감 요인은 집단에 대한 믿음이다. 집단정체감이 강할수록 집단사고의 결과는 부정적이 될 수 있다.

라) 집단극화

집단적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집단의 결정이 더욱 선명해지는 경향을 집단극화라 한다. 집단의 의사가 극화되는 방향은 집단의 구성원들이 원래 갖고 있는 의견과 집단의 의견 일치도에 좌우된다. 즉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은 어떤 사안에 대해 집단이 원래 갖고 있는 의견을 강화하며, 집단의 의견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특정 목적을 갖고 구성된 집단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Smith & Bond, 1998).

집단극화는 집단토의를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정보에 영향을 받는다. 집단토의를 통해 구성원들은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자신들이 원래 지니고 있던 의견을 지지해주는 쪽으로 받아들여진다(확증적 가설검증). 따라서 불확실했던 태도나 의견이 집단토의를 거치면서 얻은 정보의 효과로 확실해지면서 극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Burnstein & Vinokur, 1977). 이 과정에서 집단 응집력과 동조압력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외부를 차단시키는 과정을 통해 점차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취하게 된다(McCauley & Segal, 1987). 북한사회는 60년 이상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자신들만의 체제를 구축하였고 구성원들에게 강한 동조압력을 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의사결정은 집단극화현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단사고는 집단극화에 의해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는 극단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지만, 북한 권력층에서 나타나는 집단사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관습화된 행위양식일 가능성도 크다.

4) 문화적 행위양식

가)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

한국문화(북한 포함)에서 자존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존엄성’과도 같은 것이다(한민 등, 2013).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할 때, 한국인들은 가장 강하게, 때로는 비합리적인 행동까지 하도록 동기화된다. 자존심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와 행위양식을 통해 북한이 핵을 이슈화하는 동기와 전략을 이해할 수 있다.

자존심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통해 자존심의 문화적 의미를 살펴본 결과 자존심의 속성은 크게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는 <표 III-3-1>과 같다. 자존심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으로 인간이라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산 사람의 필요조건이다(집단이나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임).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며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매사에 당당하며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갖는다.

자존심은 자신을 자신답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자아통합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한다. 또한 자존심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관계없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다.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비굴해지고 다른 이들에게 나약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된다(무시당한다). 자존심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서 그들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따라서 누구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이들의 자존심을 꺾어선 안 된다.

그러나 자존심이 너무 세거나 지나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해야만 하기도 한다. 때로는 그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이거나 무리스럽게 보일 수도 있다(객기, 똥고집). 자존심을 너무 내세우는 것은 본인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고, 남들에게 허세 또는 자만이나 교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러한 자존심은 진정한 자존심이 아니며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표 III-3-1> 자존심의 속성

긍정적 속성	부정적 속성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필요조건)	버려야 하는 것 (버릴 수 있는 것)
꺾어선 안 되는 것	무언가를 놓치게 하는 것
금지, 절개, 의기, 염치	무언가를 고수하도록 하는 것
자신의 입장, 견해, 정체성	무리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살 맛 나게 하는 것	손해가 되기도 함
자아통합의 노력을 하게 하는 것	객기, 똥고집의 원인이 됨
존엄을 지켜 자신을 자신에게끔 하는 것	지나치면 허세가 됨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자만, 허영, 교만이 되어서는 안됨
없으면 수치, 흠결이 되는 것	저급한 자존심이 되어서는 안됨
최후의 무기(수단)	-

한편, 자존심 상한 경험에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적대적 해결형, 회피형, 타협적 해결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적대적 해결형은 강한 자기가치 회복 동기에 따라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유형이며, 회피형은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감정표현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자존심 상한 감정을 속으로 삭이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하는 유형이다. 타협적 해결형은 상황 및 상대방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자존심도 적극적으로 회복하려는 유형을 말하는데 이 유형에서는 상황을 통제하고 상대방과의 상호작용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개인적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자존심 관련한 문화적 동기와 행위양식으로 보자면, 핵은 북한(혹은 김정은)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은 핵을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의 현실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카드로 인식하고 실제로 이를 외교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한 반면, 김정은은 핵개발을 협상 수단으로 쓸 가능성을 스스로 봉쇄하면서까지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상근(2016)의 보고서에 따르면, 김정일이라면 대미 협상의 여지를 막아버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 김정일과의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김정은에게 핵개발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도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표 III-3-2> 자존심 상함에 대한 대처 유형

	적대적 회복형	회피형	타협적 회복형
인과조건	자기가치의 손상	자기가치의 손상	자기가치의 손상
맥락조건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과의 관계
현상	자존심 상함	자존심 상함	자존심 상함
중재조건	자기가치 회복 동기	상황 및 관계 고려	상황 및 관계 고려 자기가치 회복 동기
작용/상호작용 전략	감정의 표현(공격적)	간접적 표현(대치) 삭임, 사회적 표현	감정의 표현(타협적)
결과	자존심의 회복 관계단절 혹은 유지 복합적 감정	자존심 미회복 명목상의 관계유지 개인적 노력 미해결된 감정	자존심의 회복 관계를 유지함 개인적 노력 자기향상적 감정
특징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보다 자존심 회복동기가 더 강함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때문에 자존심회복이 불가능	상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자존심 회복

비핵화 협상 혹은 경제 제재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낄 경우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대처하리라 예상되는데, 지금까지 관찰된 북한의 특성상 외부로 대응하지 않고 손상된 자존심을 방치하는 회피형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협상에 응하느냐 아니면 자존심 회복을 우선하여 예측불가능한 파국적 선택을 할 것이냐는 결국, 북한이 비핵화의 당사자들(미국, 한국 등)과의 관계 유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들과의 관계유지가 정권의 유지에 필요하다면 파국적 결정은 피할 것이고, 관계유지가 관건이 아니라면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다. 김정은 개인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

1) 성격심리학적 접근

성격(personality)이란 어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이다. Allport(1937)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성격이 발달한다고 보았으며, 이렇게 구성된 성격은 그 사람의 감정과 사고, 행동의 일관된 패턴을 설명한다(Pervin & John, 1997). 따라서 어떤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때까지 북한에 관련한 주제에 있어 개인의 성격과 같은 미시적인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일가가 권력을 독점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권력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과 발사체(미사일) 발사 등의 사안은 절대권력자 김정은의 의사와 결정에 크게 의존하므로 김정은의 성격은 북한 핵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일 가능성이 크다. 본 (분석)에서는 김정은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그의 성격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가) 김정은의 출생

김정은의 생모는 재일교포 출신의 고용희(1953 ~ 2004)이다. 일본 오사카에 살던 고용희는 1962년에 북송되어 만수대예술단원으로 활동하다가 김정일의 눈에 들어 김정철(1981), 김정은(1984), 김여정(1987)을 낳았다. 그런데 북한에서 재일동포는 ‘재포(재일동포를 낮춰 부르는 말)’라 불리며 매우 적대시되는 계층이다.

북한은 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을 조국으로 다시 부른다는 명목으로 북한 지역이 고향인 재일동포 등을 대상으로 북송을 단행했으나, 자본주의 나라 일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살아온 북송 재일동포들은 북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재일동포들을 나쁘게 보는 시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고용희가 이런 재일동포 출신이었기 때문에 김일성은 끝까지 고용희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았다. 더욱이 김씨일가는 백두혈통이라는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면서 절대권력을 정당화해왔는데 김정은의 어머니가 재일동포 출신이라는 것은 이러한 정통성에 큰 결격사유가 된다. 따라서 김정은의 권력장악과 우상화 단계에서 고용희의 흔적은 찾기 힘들다.

이러한 출생의 배경 때문에 김정은은 북한체제 내에서 인정욕구를 강하게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을 비롯한 국가원로들에 대한 가혹한 숙청에는 나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 외에도 정통성 부족에서 기인한 심리적 배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권력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인정받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과도한, 무리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핵개발 및 발사체 개발도 인정욕구의 충족이라는 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나) 성장과정

김일성이나 김정일과는 달리 태어났을 때부터 왕자로 살았다(이상근, 2016). 김정은은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들과는 철저히 격리된 채 김정일과 고용희, 고용숙의 가족과 이들을 시중드는 인력들과 함께 살았다. 김정일이 1년에 60일을 제외하고는 북한 각지에 흩어져 있는 초대소들을 옮겨다니며 살았는데 김정은도 초대소들에서 주로 자랐을 것이다.

초대소에는 사격장, 영화관, 공연장, 유흥대, 당구대, 승마장, 수영장 등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전용 요리사가 세계의 진미를 조리했다. 초대소와 초대소는 호화로운 전용 열차로 이동하였다. 김정은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서 자란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 김정일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하기 전까지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였던 것과는 달리 김정은은 부모를 포함한 주변 사람 모두의 사랑을 받으며 부족함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이상근, 2016).

이모 고용숙의 증언에 따르면 어린 시절의 김정은은 성미가 급하고 성질이 불같았다고 한다. 어머니(고용희)에게 꾸지람을 받으면 말대꾸 대신 단식으로 반항하였다고 한다(국민일보, 2016. 5. 28). 김정은은 (김정철과 함께) 8살 때부터 후계자 대우를 받았는데, 장군계급장 달린 옷을 입고 장성들의 충성맹세를 받기도 했다. 주위 사람들이 정철을 ‘큰 대장’, 정은을 ‘작은 대장’으로 부르자 왜 자신을 작은 대장으로 부르냐고 따졌고, 이후 김정은을 ‘대장 동지’로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서울경제, 2016. 5. 28).

중등교육 마칠 때까지 권력욕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어린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다. 1998년경 한 초대소에서 60세가 넘는 김일성의 부관을 발로 차면서 키도 작은 그를 왜 부관으로 삼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할아버지의 신임을 얻었던 원로에게 함부로 할 정도로 자신의 위치가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정은의 어린 시절에 대한 주변인들의 증언에서 일차적으로 자기중심적, 권력욕, 급한 성격 등을 알 수 있다.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심리학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김정은이 인간관계나 물질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성장했다는 점이다. 정신역동이론에 따르면 성격은 욕구 충족의 체계이다.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만의 행위양식을 개발하는데 이것이 성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부족함 없이 욕구를 충족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경험이 자기중심적이고 충동적인 성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그가 경험한 심각한 결핍이 없다는 사실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Adler에 따르면 모든 인간에게는 남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자신이 우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열등감을 해소하고 타인에 대한 우월함을 느끼려는 방향으로 동기화된다. 그러나 성장과정으로 미루어 김정은은 개인적으로 결핍과 열등감을 심각하게 느껴본 일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는 김정은의 욕구충족 방식 혹은 문제 해결방식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요약하자면, 자신이 원하면 즉각적으로 욕구가 충족되는 경험이 오늘의 김정은의 성격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바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우 충동적이고 조급한 방식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결핍이 클수록 그 결핍을 보상하려는 동기가 크게 나타난다는 정신역동이론의 관점에서, 북한의 절대자로서 김정은이 경험하는 결핍 혹은 열등감은 본인이 직접 느낀 것이 아닌 추상적인 것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북한의 지도자로서 서구와 남한 등에 체제의 열등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서구의 장점을 모두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실질적인 행위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정은의 개혁/개방 정책은 평양거리 꾸미기나 오락시설 건설 등 김정은의 개인적 선호에 따르고 있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 스위스 유학시절

김정은은 1996년 여름부터 2001년 1월까지 스위스 베른의 국제학교에서 유학했다. 그러나 학업에는 별 뜻이 없고 스포츠와 취미생활을 즐기며 자유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도 아들의 학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일이 있을 때마다 아들들을 북한으로 불렀기 때문에 스위스 유학 기간 중 북한에서 지낸 날이 더 많다고 한다(이상근, 2016)

유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언어(독일어) 능력이 부족했고 공부와도 거리가 있었다. 중등교육검정시험 자격증도 따지 못할 정도였으며, 15세 때 공립학교인 ‘리베펠트’로 옮겼지만 여전히 열등생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짝이었던 포르투갈 외교관의 아들인 조앙 미카엘루는 “김과 내가 반에서 가장 둔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나 2군에 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이 독일어에 능숙하지 않아 질문하면 당황하며 대답을 잘하지 못해 교사들이 아예 내버려두었다”고 덧붙였다.

별명은 Kim 대신 ‘둔하다’는 뜻의 Dim을 쓴 ‘딤정은’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언어적인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이 꾸중하거나 동급생들이 놀리면 바로 싸울 정도로 소심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은 아니었다. 이웃과는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았으나, 농구에는 엄청난 열의를 보였다. 좀처럼 북한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향수병 타인지 오직 북한 노래만 들었다. 한 친구는 김정은과 함께 북한

찬양가를 1,000번이나 들었다고 전할 정도였다(한국일보, 2011. 12. 24).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CNN인터뷰(2013. 12. 14) 김정은의 스위스 학교 동급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김정은이 “매우 위험하고, 예측불가능하며, 과대망상증이 있고, 아주 폭력지향적”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자신이 원해서 간 유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농구에 대해서는 대단한 집착을 보이는데 유학생들의 불만과 북한에 대한 향수,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감을 농구로 치유했다고 보일 정도이다. 방안에는 NBA스타들의 사진이 걸려있었고 수집한 농구화 등 농구용품이 가득했다고 한다. 또한 성룡의 무술영화와 007시리즈 등의 영화를 즐겼다고 한다.

1998년에 김정은을 돌보던 이모 부부(리강, 고용숙)가 미국으로 망명하는데, 김정은은 이때 충격을 받고 북한체제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것 같다. 수업 중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에서 한 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학우의 증언, 유학 후 일본의 경제재건, 중국의 경제성장 등을 언급하며, 인민들의 생활에 관심을 보였다는 일화가 있다(이상근, 2016).

*농구사랑

김정은의 농구사랑은 유명한데, 유학시절 NBA 선수들과 찍은 사진을 방에 붙여놓거나 농구용품을 모은 일부터, 집권 후에도 NBA스타 데니스 로드맨을 수차례 북한으로 초청하기까지 했다. 어머니 고용희가 농구하면 키 크다고 말한 뒤로 농구에 빠져들었다고 전해진다. 이모 고용숙의 증언에 따르면 스위스 유학시절에는 농구공을 안고 잘 정도였다고 한다(이데일리, 2016. 7. 27).

이로 미루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작은 키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유학기간 중에는 고향에 대한 향수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잊기 위해 농구에 몰두했던 것 같다. 처음 농구를 권한 것이 고용희였고 어머니와 떨어져 외교관 아들로 위장하여 유학을 갔던 만큼 농구에 대한 애착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일 수도 있다. 더구나 백두혈통의 후계자인 김정은에게 재일동포출신인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 현실에서, 정권 장악 과정에서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배제해야 했던 김정은에게 농구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매개체가 아닐까 한다.

연예인이나 스포츠스타에 열광하는 여느 청소년처럼 김정은은 청소년기에 NBA 농구스타들을 동경하고 동일시했던 모습이 관찰되었는데, Erikson의 심리사회적 성격발달이론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변화하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탐구하는 시기다. 청소년기의 이러한 기억을 바탕으로 김정은에게는 미국 혹은 서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분명 내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대로 미국을 적대시해온 북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적대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드러내지만 내면적으로까지 그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 유학 후, 후계자 결정과정

스위스에서 돌아온 후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고 김정일의 현지지도에 동행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현실과 국정에 대한 식견을 얻었을 것이라 추정되며 특히 군부대 지도에 중점을 두었다. 2004년 고용희 사망이후에는 현지지도에 동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정일이 처음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점찍은 것은 아니었다. 초반에는 후계자로서의 김정철의 능력과 업무성과를 시험해 보려고 한 듯하다. 김정철은 조선노동당 조직지도부에 배치되어 김영주(부장)의 지도하에 당과 내각의 업무 전반을 익히고 있었다.

2007년부터 김정은이 다시 등장하는데 김정일이 쓰러졌다 복귀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김정은이 동행한다. 따라서 2008년 하반기부터는 김정은이 후계자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의 장남 김정남은 생모 성혜림의 이혼경력(이혼 후 김정남 출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었고, 일본에 밀입국하다가 발각되어(2001년)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의 체면을 상하게 하거나 방탕한 생활 등으로 김정일의 신임을 얻는데 실패하여 후계구도에서 탈락하였다.

김정은의 형인 김정철은 개인적 소양이나, 경험, 외국어능력 등이 김정은에 뒤지지 않아 실제로 김정일이 먼저 후계자 수업을 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성격이 여리고 계집아이같다고 김정일이 불만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후지모토 겐지, 2010).

김정은은 만능 스포츠맨에, 통솔력 있고 호쾌한 성격이며, 김 위원장과 외모와 체형, 성격까지도 빼닮았다고 한다. 미성년자인데도 술·담배를 하는 등 파격과 위반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 거침없는 성격이며 승부욕 또한 남달랐다. 김정은과 형 김정철의 성격 차이를 알 수 있는 일화가 있다. 김정은이 누군가와 오셀로를 하고 있었는데 형 김정철이 옆에서 훈수를 두었다. 결국 게임에서 지자 김정은은 김정철의 얼굴에 돌을 던졌다고 한다. 또 김정은은 농구 경기를 할 때면 승부근성이 대단해서 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는데, 자기 팀이 지면 진 이유에 대해 오랫동안 분석하고 팀원들을 질책한 반면, 김정철은 저도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

결국 김정철은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으로 후계구도에서 탈락한 듯하다. 지병으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 김정일이 강한 승부욕, 거침없는 성격, 통솔력 등을 갖춘 차남 김정은이 북한을 이어받기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후계자 결정이 이루어지던 시기 김정은과 김정철의 권력투쟁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이 역시 김정철의 소극적인 성격 때문이라 생각된다.

마) 집권 후 행동

마-1) 포상과 숙청

김정은 집권 5년을 요약하는 단어는 공포정치다. 2013년 고모부 장성택을 숙청한 이후, 간부 100여명을 숙청하였다(연합뉴스 2015. 11. 23). 최근에는 김정일의 이모부이자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 전쟁 영웅 류경수의 후손(채널A 2016. 8. 24)과 내각의 핵심 장관인 교육상과 농업상까지 숙청(중앙일보, 2016.8.30.)하였다. 숙청의 이유는 매우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보인다. 최근 숙청된 교육상과 농업상의 경우, 교육상은 김정은 주재 회의에서 졸았다는 이유로 농업상은 농업정책에 대한 부진을 이유로 '반혁명'죄를 쓰고 처형됐다고 한다.

반면에 포상 역시 남발하고 있다. 김정은은 어린 학생들부터 장년층에 이르기까지 김일성 훈장 등 각종 훈장과 명예 칭호를 무더기로 수여했다. 4월 13일자 노동신문이 보도한 훈장 수상자만도 백 명이 넘는다. 북한은 최근 7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쟁 당시의 노동자들처럼 목숨 바쳐 일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군자리노동계급쟁취운동', '군자리정신' 등으로 군수공업 노동자는 물론 일반 노동자들까지 독려해 왔으며, 훈장까지 수여한 것이다(뉴시스 2016. 4. 13).

집권 이후로 대규모의 포상과 숙청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대상의 폭과 기준의 모호성에서 김정은의 충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김씨일가에 권력이 집중된 북한사회에서 포상과 숙청은 권력집단을 견제하는 일종의 통치기술로 보여진다. 특히 지지기반이 불안한 김정은의 경우 이러한 통치술은 더욱 유용할 수 있다.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에 비하여 후계수업을 받은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체제 내적으로 정당성 확보가 어렵고 경제제재와 핵문제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김주수, 문은석, 윤희철, 2014). 따라서 집권초기 나타나고 있는 숙청과 포상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마-2) 주민들과의 스킨십

피의 숙청, 공포정치 등 간부들에게는 엄격한 모습이지만 대중에게는 따뜻하고 소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현지도도 시 주민들과 이야기하거나 함께 웃는 모습을 많이 보도하고 있으며 이발소를 방문하여 여성 이발사들에게 나도 여기서 이발을 해도 괜찮겠느냐고 묻는 등, 김정은의 소탈함을 강조하는 류의 기사가 많다(뉴시스 2016. 1. 18).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강조(채널A, 2016.1.22.; 아주경제, 2015. 6.1; 서울신문, 2013. 4.11)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주민들과의 소통에 제한적이었던 김정일과 구분되고 할아버지 김일성의 방식과 유사한 스타일이다.

김일성 따라하기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로 후계자 수업을 받을 시간이 모자랐던 데다가 어린 나이로 인해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으로 읽힌다. 특히 김정은은 외모부터 소통방식까지 조부 김일성을 연상케 하는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부족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전략은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마-3) 오락, 유흥시설 건설

평양 능라도 유원지의 4D 영화관을 비롯,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남포 해수 수영장, 류경원 등, 전국적으로 놀이공원과 유원지 등을 건설하고 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이에 반대하는 이들을 숙청해 가면서까지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장성택의 숙청도 집권 후 오락시설을 건설하려는 김정은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시작된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남편의 죽음에 김경희가 분노하자 김정은은 고모 김경희에 대한 독살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전해진다(채널 A 2015. 5. 12).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013년 평양 능라도유원지의 입체올동(4D) 영화관을 방문한 이후 전국에 걸쳐 12개의 입체올동영화관이 건설됐다"고 말했다. 그는 "해주, 평성, 남포, 원산, 사리원, 혜산, 강계 등 각 도의 행정중심지마다 영화관이 들어섰는데, 김정은 정권이 문화·오락시설의 확충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연합뉴스 2016. 6. 17).

유흥시설 건설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경제재건과 달리 결과가 금방 나오고 곧바로 업적선전에 활용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이 선택한 사업으로 보인다(테일리 NK 2013. 10.22). 하지만 심층심리학적 관점으로 유흥시설에 대한 김정은의 집착에는 다른 동기가 숨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피터팬 증후군(Kiley, 1983), 즉 성인이 되었어도 어린 시절에 머물러 있으려는 심리다.

김정은은 10대 중, 후반의 청소년기를 스위스에서 보냈다. 김정은은 이 시기에 서구의 문물을 보고 누리면서 자랐기 때문에 북한의 개혁, 개방에 힘을 쏟으리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김정은의 개혁, 개방은 평양의 거리 단장이라든가 유흥시설 건설 등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지기반이 불안한 김정은이 성과위주의 사업에 치중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심층심리학적으로는 청소년기에 고착된 욕구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은의 유학시절은 자유로운 일탈의 시기이자 풍요로운 서구의 문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시기였다. 지금도 북한에서도 절대권력자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긴 하지만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10대의 기억이 특히 정책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 예를 들면, 북한 주민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온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어린 시절의 자신처럼 즐겁게 놀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바) 기타 단서를 통한 성격분석

바-1) 글씨체 분석

외부에 알려진 김정은의 필체는 용지의 양식은 무시한 채 오른쪽 위쪽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식으로 쓰는 것이 특징이다. 필체 전문가 구분진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장(현 변호사)은 김정은의 필체에서 도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읽어내었다. 글씨 쓰는 속도도 매우 빠른 편이어서 성격이 급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 변호사는 다만 “모서리 각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보면 모난 성격은 아닌 듯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김정은 글씨는 기가 그리 세지 못하고 짧은 나이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완숙하지 못하다. 김일성 서명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강함이나 유려함에서 많이 못 미친다”며 “끝 부분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고 세로선도 짧아서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편이다. ‘ㅎ’의 꼭지가 발달한 것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구가 큰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세계일보 2016. 1. 7).

한편 필체 분석은 김정은의 필체가 아버지 김정일의 필체를 따라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북한 월간지 ‘조선예술’은 2014년 7월호 ‘만경대 가문의 혁명사상과 명필체’라는 글을 통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글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장군님(김정일)의 필체인 백두산 서체를 따라 배우기 위해 많은 품을 들였다고, 장군님께서도 내가 쓴 글을 보시고 자신의 필체와 신통히 같다고 하셨다고 말씀하였다”고 전했다.

바-2) 리더십 분석

김정일과 김정은의 리더십을 비교한 이상근 이화여대 통일학 연구원에 따르면, 김정은의 리더십은 무인적 리더십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상근, 2016). 김정은 대소사를 자신이 직접 챙긴 김정일에 비해 실무자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편이며, 김정일이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은데 비해 대중과의 스킨십을 강조한다. 간부들에 대한 숙청이나 자신이 원하는 사업을 밀고 나가는데 있어서는 폭력적이고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나 이러한 행동들은 철저히 실리를 위한 계산적인 행동이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김정은의 리더십은 실리추구, 추진력, 과감함, 폭력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무인적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여러 증언과 자료들을 토대로 김정은의 성격이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이며 충동적인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말한 것처럼 ‘예측불가능’하거나 ‘폭력지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정은은 절대권력의

아들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자랐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결핍이 없는 이러한 환경은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인 성격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성격적 특성이 핵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가 안 풀리거나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할 때 ‘욱해서’ 미사일을 쏜다고 하였다. 흔히 ‘욱하는 성격’이란 예측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김정은의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 성격을 고려했을 때, ‘욱 하는’ 시점과 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것이다.

2) 임상심리학적 접근

출생과 성장과정에 대한 주변인들의 진술, 그리고 집권 후의 여러 행동들을 종합해 보면 김정은은 자기애성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일 가능성이 있다. 자기애성 성격은 외현적 자기애와 내현적 자기애로 나눌 수 있는데(Wink, 1991), 외현적 자기애는 타인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정도로 자기애적 속성이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이며, 내현적 자기애는 겉으로는 잘난 척이나 거만한 행동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내면적으로 자기애적 성격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이다. 행동단서들로 분석한 김정은의 성격은 외현적 자기애에 해당한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원인 및 임상적 특징은 오수성 등 (2013)의 저서 ‘정신병리학’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징

가-1) 자가지각

자신을 우월하고 매우 특별하며 비범한 권리와 특권을 가진 인물이라 지각한다. 자신이 법이나 규칙, 도덕, 관습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이에 도전하는 사람은 누구나 경멸과 멸시를 당한다. 극단적인 경우 자신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모든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과대망상의 수준에 이른다.

가-2) 대인관계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공감적이지 못하며 타인의 권리나 감정, 요구에 관심이 없거나 받아들이지 못한다. 배려 혹은 거래적 관계를 맺기 힘들고 극단적인 경우, 타인의 권리나 복지를 무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3) 인지양식

자신이 우월하다는 환상에 사로잡힌다.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변형시키며 자신의 가치를 확대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정당화하며, 자신의 자아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절하한다. 극단적인 경우, 정교화된 환상이나 망상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가-4) 감정표현

전반적으로 무관심하고 침착한 분위기로 확산된 안녕감을 경험하는데, 흔히 감성적이지 않고 쾌활한 낙천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심감이 흔들리면 화, 수치감, 공허감, 우울 등을 경험하나, 곧 합리화하여 이런 기간이 오래 가지는 않는다.

가-5) 방어기제

자기애적 성격의 기본적 방어기제는 합리화(rationalization)이다. 합리화를 통해 패배를 승리로, 두려움에 찬 치욕적 행동을 당당한 노력으로 바꾼다.

나) 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원인

나-1) 정신역동이론

Freud는 자기애적 성격을 유아의 일차적 자기애가 고착된 경우로 보았다. 신생아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무조건적 지지와 보살핌을 받으며 자신이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느낀다(일차적 자기애). 하지만 자신과 외부세계를 분명하게 구분하게 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애정을 교환하는 대상애(object-love)를 경험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가치와 소중함을 느낀다(이차적 자기애). 이는 타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타인으로부터 전달된 애정과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가치감을 느끼는 성숙한 형태의 자기애다.

어린 시절부터 타인을 배려하기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자란 가정은 성숙한 이차적 자기애보다는 일차적 자기애의 단계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2) 자기심리학

Kohut(1968)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이 두드러진 자기(self)의 중요성, 자기애의 몰입, 무한한 성공에 대한 환상을 투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애적 성격장애자들의 내면에 취약한 자존감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남으로부터

끊임없이 존경을 받으려고 자기가치감을 키운다는 것이다. 또한 Kohut은 부모의 정서적 냉정함과 성취에 대한 강조가 자녀의 자기에성 성격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다.

김정은의 경우, 어머니의 출신성분에서 기인한 취약한 정통성과 경험부족, 어린 나이 등으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에 대한 보상으로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나타내기 쉽다.

나-3) 대상관계론

대상관계론은 어린 시절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성인 이후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다. Kernberg(1975)는 자기에성 성격이란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한 이상적 자기상과 어머니상이 혼합된 ‘웅대한 자기상’을 통해 자신에 대한 과장된 생각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희는 김정일이 가장 총애했던 여인이다. 따라서 그 영향력도 상당했을 것이라 추측되는데, 고용희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지만 김정일의 부인이 된 이후 만수대 예술단 시절 자신을 구박했던 예술감독을 탄광으로 보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이다. 한 나라의 절대권력인 아버지와 그의 총애를 받으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을 어머니, 김정은의 자기상은 대단히 웅대한 모습을 갖고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나-4) 인지적 과정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우월감, 특권의식 등의 독특한 신념과 사고과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신념체계는 성장과정 중 부모나 형제, 중요한 타인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해 형성되고, 이러한 신념체계가 구성되면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긍정적 자기상을 강화시키고, 신념에 반대되는 정보는 왜곡하여 받아들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기애적 신념은 더욱 강화되고 성격장애의 형태로 발전한다. 김정은의 성격발달과정을 추적해보면 그의 자기애적 신념을 강화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존재하며 실제로 자기애적인 행동양식들이 많이 관찰된다.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굳건히 유지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둘째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대인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한다(Morf & Rhodewalt, 2001). 다시 말해,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다. 김정은이 결정하는 북한의 핵 관련 행위들은 김정은의 우월감 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와의 차이점

김정은의 성격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의 성격을 ‘장애’로 보기는 힘들다. 심리장애는 특히 본인 자신과 주변인들의 삶에 심각한 부적응을 초래하는 경우인데, 김정은의 경우 그의 특권의식과 오만한 행동은 북한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김정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부적응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정은은 자기애적 성격의 소유자일 수는 있지만 그를 자기애적 성격장애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 하나, 김정은의 성격은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수동성’과는 거리가 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수동적-독립적 성격유형으로 자신감 있는 성격의 병리적 모습이다. 수동적-독립적 성격이란 목표지향적 행동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강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로 특권의식을 지니고, 타인에게 착취적이거나 오만한 행동을 나타내어 사회적인 부적응을 초래하는 성격을 말한다.

이와 반해 김정은은 절대권력자의 아들이자 어렸을 때부터 얼마든지 외부로부터의 강화를 추구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고, 지금도 북한의 유일무이한 권력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이들이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려는 가시적인 모험보다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로부터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데 반해, 김정은은 국가 단위에서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상으로 북핵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사회문화심리적 배경과 김정은 개인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북핵문제는 국가로서의 북한이 경제, 국내정치, 외교 등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심리학의 접근은 북핵문제를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사회적 역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인 독재로 김정은 개인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체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북한의 구성원들의 심리적 배경 및 집단 역동과 북한의 전권을 가진 김정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라. 비핵화 시나리오

1) 비핵화 시나리오 1

가) 상황 전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을 보유하고 핵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계속 던지는 것이 북한의 체제유지라는 현실적 이점이 되기도 하고, 김정은 개인의 자기만족이라는 심리적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핵은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이 선택 가능한 최선의 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북한에게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어떠한 협상도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김정은의 성격적 특성상 북한의 핵개발은 핵전쟁이라는 파국적 결말로는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에 하나 핵무기가 실제로 사용되면 북한 역시 파국적 결말을 피할 수 없다. 자기애적 성격을 가진 이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우월성의 터전인 북한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

나) 선택 가능한 전략

핵 포기가 아니라 현 수준에서의 동결, 제한을 조건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이상적이다. 핵개발을 동결한다면 경제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핵실험의 규모나 횟수, 시기 등을 제한하여 이를 따랐을 때 단계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는 김정은의 능력이나 통치력을 인정해 주는 외교적 수사가 효과적일 것이다.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김정은이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높이 평가해주는 수사적 표현에 만족한다면 새로운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다) 단점 및 대안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문제나 독재 등 국제사회에서의 북한에 대한 평가나 남한의 대북정책, 국민감정 등을 고려했을 때, 수사적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김정은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언사는 공식적으로 채택되기 어렵다. 대안으로, 2중 채널 외교를 생각할 수 있다. 발언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비밀 특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예상 결과

핵개발의 동결 정도가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게 된다는 부정적 평가가 예상되지만, 핵으로 인한 긴장이 더 확대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2) 비핵화 시나리오 2

예상 가능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에게 핵개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유도할 경우이다. 경제제재를 바탕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죄고 체제의 안정성을 약화시켜서 핵포기 선언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현재 실질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시나리오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과 김정은에게 있어 핵의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에 체제가 붕괴되는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제재가 효력을 나타내기까지 상당 기간 동안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가 더 잦은 빈도로 나타날 수 있다.

가) 상황 전개

최근 북한의 동향을 보면, 가혹한 처벌 및 통제로 인해 하위 계층의 탈북은 줄고 있으나 외교관 등 엘리트 계층의 탈북은 늘고 있다. 또한 김정은 정권을 떠받치는 노동당 전, 현직 간부들이 평양에서 반체제 유인물을 뿌리는 등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한국일보, 2016.9.5.). 김정은의 공포통치에 대한 불안감과 대북 제재에 따른 자금난으로 당 간부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북한 핵심층의 체제 이탈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권력층에 균열이 생긴 것은 분명한 듯하다.

그러나 아직은 이를 북한 체제 붕괴의 신호로 보기는 이르다. 태영호 공사 망명 이후 김정은은 즉시 해외 주재 외교관들을 소환하고 내각의 장관들을 숙청하는 등 강력한 내부 단속을 펼치고 있다. 김씨일가 3대를 거치며 정형화된 북한 권력층의 기득권 유지 동기 및 집단사고의 과정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가속화시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남한의 사드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북한의 붕괴가 얼마나 실현가능한지는 미지수다. 경제 제재에서 가장 큰 축을 맡아주어야 할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북한체제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권력유지에 필수적인 당과 정부 요인들의 수를 채우지 못한 정도로 엘리트 집단의 탈북이 대규모로 일어나거나 체제의 불안을 참지 못한 특정인 혹은 특정 집단의 체제 전복시도가 성공하기 전까지는 북한 체제의 붕괴를 낙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선택가능한 전략

북한이 현재 나타나는 부정적 징후들(경제제재, 엘리트 탈북 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거친 욕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제제재의 당사국들을 위협하거나 ‘그래봤자 북조선은 꼬떡없다’는 식의 보도, 발언이 이어진다면 북한체제나 핵 관련한 상황은 현상 유지될 것이다.

나-1) 핵개발 관련 부처 대우 관찰

한편,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핵개발 및 미사일 관련 부처, 기술자들에 대한 대우이다. 착취적 관계가 보통인 자기애성 성격장애자들과 달리 김정은은 핵개발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만은 매우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핵이 북한과 김정은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들에 대한 처우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핵개발 연구진에 대한 지원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정에서 이들의 신변 혹은 처우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나-2) 최후의 자존심(?)에 대한 반응 관찰

2016년 7월 6일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김정은을 제재 대상으로 포함하자 북한의 언론은 “미국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했다”며 “우리와의 전면 대결에서 이미 ‘붉은 선’을 넘어섰다, 무엄하기 그지없는 망동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으며, 이후 7월 9일 동해에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에 나섰다. 그러나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난 지금까지도 위협성 미사일 발사를 제외한 특별한 동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기애성 성격의 방어기제는 합리화이다. 북한이 자신들을 둘러싼 부정적 징후들에 대해 합리화를 하는 한, 북핵문제는 파국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합리화가 어려울 만큼 큰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때인데, 이때는 군사적 도발을 포함한 예측하기 힘든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판건은 북한 혹은 김정은에게 있어 합리화가 안될 만큼 큰 심리적 충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을 ‘넘어서는 안될 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대응은 아직 예측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문화적으로 자존심을 크게 손상당했을 때 타인과의 관계나 현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동기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에서 북한과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최후의 자존심’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예상 결과

경제적 압박에 못 건딘 북한이 핵포기를 선언하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한 핵포기 선언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만에 하나 급변사태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체제 붕괴의 징후들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4. 경제학/게임이론 관점

가. 경제학/게임이론적 분석의 틀

1) 경제학적 분석의 틀

북한의 핵개발은 195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북한은 1958년에 핵확산금지조약(NPT), 1974년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도 가입하면서 핵개발 의도를 숨겨왔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혹이 있었지만 북한은 IAEA의 핵사찰을 거부했다. 그러나 1989년 미국의 정찰위성에 의해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재처리 시설이 발견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사실로 들어났다.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졌고 수차례의 6자회담이 진행되었지만, 북한은 비밀리에 핵개발을 지속하였고 결국 4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핵이 없을 경우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침략으로 몰락할 것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담보로 정권을 강화, 유지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많은 북한 주민들도 수령과 당의 전략적 지도에 따른 핵개발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강국달성의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

이런 맹신 속에서 북한의 경제적 자원은 핵개발 분야에 최우선으로 배분되어 왔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선군사상이 가장 중요한 통치 이데올로기 위치를 점하면서 군수를 담당하는 제2경제와 일반 경제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특히, 군수부문 중에서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대한 자원이 배분되면서 북한경제는 침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 결과, 북한은 자연재해까지 겪으면서 1990년대 후반에는 비극적인 고난의 행군을 경험했고, 200만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6·28방침, 5·30조치 등 다양한 경제정책 변화가 시도되었지만 북한경제는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보다는 일반 주민의 생존을 위해 장마당이 허용, 확산되면서 일부 서비스업, 제조업, 광산업 등에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에서도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김정일-김정은 체제의 유지였다.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자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열악한 경제상황을 안고 있는 북한이 효율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방법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병진노선의 구축이다. 2013년 3월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핵개발 및 경제건설의 병진 노선을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 발전시켜 나라의 방위력을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 큰 힘을 넣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노선”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은은 “새로운 병진 노선의 참다운 우월성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요약하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재래식 군사비 지출을 줄인데 따른 잉여분을 경제건설과 인민들의 후생복지에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1962년 김일성이 제시한 바 있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전략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김일성의 병진 노선은 실패 하였다. 북한의 핵보유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한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를 포기할 가능성도 전무하며 핵개발 비용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핵개발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경제제재에서 벗어난다면 북한경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본 활용의 측면에서도 핵·경제발전 병진전략은 극히 비효율적이다. 병진전략의 중심축인 군수산업 중시 정책은 산업의 특성 상 자본의 한계대체율이 노동의 한계대체율을 상회하게 된다. 이 결과 비군수 부문 경제는 노동을 주요 생산요소로 사용하게 되므로 추가적인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는 한 생산성은 계속 하락하게 된다. 그러나 우수한 노동력의 대부분은 이미 군수부문에 흡수되어 있고, 국가의 식량배급과 사회안전망 제공의 실패로 인해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올바른 경제운용을 위해서는 군수산업에 할당하는 자본과 노동의 투입을 줄여야 하지만 북한을 지탱해 온 이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행되기 어렵다.

국가를 하나의 소비자라 볼 때 군사재화와 소비재화 사이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다. 국가는 어느 재화를 얼마나 생산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즉, 무기를 많이 생산할수록 생필품의 생산은 줄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가는 모든 재화의 소비를 극대화 할 수 없게 된다. 그 이유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소득)이 유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북한의 병진 노선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선군사상을 내세우면서 군사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결국 북한의 군사노선 중시 전략은 계획경제의 침체를 불러왔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계획경제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경제건설 및 핵무장의 병진노선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방법뿐이다. 배급이 중단되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실에서 국가의 성장 동력은 전무하다. 만약 북한이 선군정책을 과감히 포기하고 선경정책을 채택한다면 북한경제는 성장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근본적 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체제이행을 의미한다.

2) 게임이론의 기초

게임이론(game theory)은 현대 사회과학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분석도구로 20세기 중반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황(strategic situation)에서 의사결정주체의 의사결정을 분석하는데 많이 활용된다. 전략적 상황이란 의사결정 주체들의 의사결정이 상호연관성을 지니고 있고, 의사결정주체들이

이를 의식하며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게임은 (1) 경기자, (2) 경기의 순서, (3) 경기자가 보유한 정보, (4)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 또는 전략, (5) 경기자의 행위에 따라 결정되는 결과, (6) 결과의 실현으로 각 경기자가 받는 보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게임은 이와 같은 구성요소를 갖춘 ‘다자간 전략적 상호작용’ (strategic interaction among players)으로 정의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 게임에는 많은 국가들이 관여되어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국가는 북한과 한국이다. 북한의 핵개발은金正은 개인의 무모한 충동적 도발행위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고도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갖는다. 비록 게임이론이 수학적 방법론을 통해 전략적 사고를 분석하기 때문에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제약도 있지만, 게임이론의 목적은 각각 합리적 판단을 하는 남북한의 상호작용 틀 안에서 최선의 전략의 논리성을 연구한다. 남북한의 쌍방향 의사 결정(interactive decision) 과정을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은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즉, 한국이 북한의 핵개발을 위한 북한의 전략에 대해 최선의 반응(best response)을 발견하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정책결정에도 일조할 것이다.⁶⁶⁾ 게임의 구성요소 각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o 경기자(player) - 게임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를 받는 주체이다.
- o 전략(strategy) - 경기자가 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다.
- o 보수(payoff) - 게임의 결과로 각 경기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물을 의미한다. 게임의 보수는 효용, 금전적 손익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 o 보수행렬(payoff matrix) - 각 경기자의 선택 가능한 전략과 보수를 정리해서 제시한 표를 의미한다. <표 III-4-1>은 경기자가 2명, 각 경기자의 전략이 2개씩인 게임의 보수행렬을 나타낸 것이다. 보수행렬의 특정 셀 안의 숫자중 앞의 숫자는 경기자A에 대한 보수, 뒤의 숫자는 경기자B에 대한 보수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경기자 A가 전략 1을 선택하고 경기자 B는 전략II를 선택한 경우에 A는 150을 얻고, B는 300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수행렬은 경기자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임, 혹은 다른 경기자의 전략을 관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임을 분석하는데 적합하다. 이와 같이 보수행렬을 이용하여 나타낼 수 있는 게임을 정규형 게임이라 한다.

66) 게임이론에 대한 개론적 서술은 Roger A. McCain 저, 이규익 번역, **게임이론** (시그마프레스, 2011년), pp. 5-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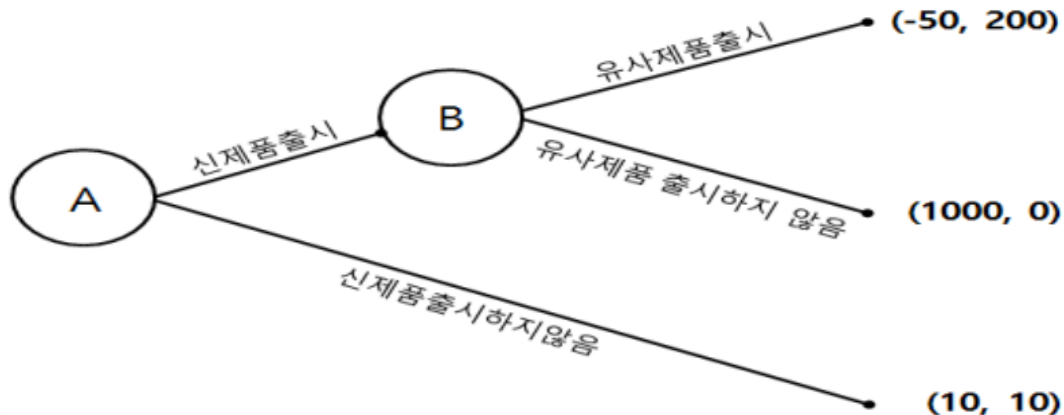
<표 III-4-1> 보수행렬 (payoff matrix)

		경기자 B	
		전략 I	전략 II
경기자 A	전략 1	(100, 200)	(150, 300)
	전략 2	(200, 100)	(300, 150)

- o 정보 - 경기자가 의사결정 시점에서 게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 게임의 구조, 규칙, 상대방의 전략, 보수행렬 등을 의미한다. 게임은 경기자들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o 순차게임 (sequential move game) - 의사결정이 경기자간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임을 지칭한다. 순차게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나무형태 (game tree)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전개형 게임이라고도 한다. 경기자들은 의사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전단계의 다른 경기자(들)의 의사결정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 순차게임에서 각 경기자는 전략을 선택할 때 다른 경기자의 행동을 예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따라서 순차게임에는 각 단계별 경기자, 경기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 경기자의 전략, 게임에서 움직임의 순서, 보수 등이 표시된다.

<순차게임의 예시>

[그림 III-4-1] 은 A사와 B사간의 신제품출시 게임을 나타낸 것이다. 선도기업인 A사가 신제품을 개발한 상황에서 이 제품을 출시하지 않으면, A, B사 모두 10억원의 이윤을 얻는다. A사가 신제품을 출시한 이후에 B사도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A사는 50억 원의 적자를 보고 B사는 200억 원 이익을 본다. A사가 신제품을 출시하고, B사는 유사제품을 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A사는 1,000억 원의 이익을 보고 B사는 이익도 손해도 없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III-4-1] 신제품 출시 순차게임

- o 동시게임 (simultaneous move game) - 경기자들의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임이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경기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이 각 경기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게임을 의미한다.
- o 협조적 게임 (cooperative game) vs 비협조적 게임 (non-cooperative game): 협조적 게임은 경기자들이 일정 정도 협력하여 보수를 극대화하고 이를 나누는 게임이다. 예를 들면 반도체신기술개발을 위한 기업간의 공동투자, 혹은 시장의 분할협약 등이 해당된다. 이때 보수의 배분은 경기자들의 힘(협상력)에 의해 결정된다. 경기자간의 협조가능성이 없는 게임이 비협조적 게임이라 한다.
- o 1회성게임(one-shot game) vs 반복게임 (repeated game): 1회성 게임은 1회의 게임실행 이후 게임이 종료되며, 반복게임은 유한한 횟수만큼 반복되거나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게임의 종료시점이 불확실한 경우도 있다.

가) 게임의 전략

게임에서 경기자들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기본적인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들 수 있다.

- o 순수전략 (pure strategy) vs 혼합전략 (mixed strategy): 경기자가 선택가능한 전략중 하나를 100%의 확률로 선택하면 이를 순수전략이라 하며, 선택가능한 전략들에 확률을 부여하여 전략들의 확률분포를 결정하는 전략을 혼합전략이라 한다. 혼합전략은 분석이 상대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게임의 분석은 통상적으로 순수전략에 집중되어 있다.

- o 우월전략 (dominant strategy):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없이 항상 가장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전략이다. <표 III-4-2>의 보수행렬로 나타낸 게임에서 경기자A는 경기자B가 전략I를 선택할 경우에는 전략1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경기자B가 전략II를 선택할 경우에도 전략1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경기자A의 입장에서는 경기자B의 전략과 관계없이 항상 전략1이 최선의 선택이다. 이와 같이 상대방의 전략과 관계없이 항상 최선인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우월전략이 존재하는 경우에 합리적 경기자는 항상 우월전략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표 III-4-2> 보수행렬

		경기자 B	
		전략 I	전략 II
경기자 A	전략 1	(100, 200)	(150, 80)
	전략 2	(-100, 70)	(10, 100)

- o 안전전략 (secure strategy): 가능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보장하는 전략이다. <표 III-4-2>로 나타낸 게임에서 경기자 B는 전략I를 선택할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경기자A가 전략2를 선택)에서 70의 보수를 받는다. 전략 II를 선택하면 “최악”의 경우(경기자A가 전략 1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보수 80을 받는다. 경기자B는 전략 II를 선택함으로써 최소한 80의 보수를 확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악의 경우중 최선의 경우를 확보하는 전략을 안전전략(secure strategy)라 한다. 경기자들이 안전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는 게임에 대해 극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우이다.
- o 내쉬전략 (Nash strategy): 상대 경기자의 전략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최적의 전략을 의미한다. <표 III-4-2>의 게임에서 경기자B가 전략II를 선택한 경우에 경기자A의 내쉬전략은 전략1이다. 또한 경기자A가 전략1을 선택한 경우에 경기자B의 내쉬전략은 전략I이다.

나) 게임의 균형 (equilibrium)

각 경기자가 전략을 선택하여 보수가 결정되며 경기자들이 전략을 변경할 인센티브가 없는 상태를 게임의 균형, 혹은 해(解, solution)이라고 한다. 경기자들이 선택하는 전략에 따라 다양한 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균형의 개념들이 자주 활용된다.

- o 우월전략균형 (dominant strategy equilibrium): 각 경기자에게 우월전략이 존재하는 경우에 각 경기자는 우월전략을 선택할 것이며 이와 같이 우월전략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균형을 우월전략균형이라 한다. 우월전략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매우 드물다.

- o 내쉬균형 (Nash equilibrium): 각 경기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할 때, 이러한 최적전략의 짝으로 이루어진 균형을 의미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균형개념이다.
- o 완전균형 (perfect equilibrium): 순차게임의 균형에서는 어느 한 경기자가 자신의 전략을 변경하여 보수를 증가시킬 수 없어야 한다는 내쉬조건(Nash condition)에 더하여 신빙성조건(credibility condition)이 충족되어야 한다. 신빙성 조건이란, 경기자가 선택하는 전략에 내포된 위협이나 약속이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내쉬조건과 신빙성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전략의 조합을 완전균형이라 하며 순차게임의 균형으로 적합한 개념이다.
- o 부분게임 완전균형 (subgame-perfect equilibrium): 순차게임에서 (1) 내쉬균형의 조건을 충족하고 (2) 게임의 각 단계에서 어느 경기자도 자신의 전략을 바꿔서 보수를 증가시킬 수 없는 조건을 충족하는 전략들의 조합을 의미한다.
- o 역진귀납 (backward induction): 게임의 마지막 단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추론하는 방식이며 순차게임의 균형을 찾을 때 활용되는 분석기법이다.

나. 경제학/게임이론 관점에서 고찰한 북핵문제

1) 북한의 경제상황과 북핵문제

국제사회는 북한이 36년 만에 개최하는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경제발전의 휘황(輝煌)한 설계도를 제시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쇠락(衰落)한 설계도였다. 당대회의 일부 보고에서는 간혹 자본주의식 표현도 사용되고 있고, 선군정치보다는 선경정치를 강조하는 표현도 등장하였지만 불변의 핵심 가치는 병진노선이었다. 병진노선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구현하기 전에는 달성이 불가능한 목표이다. 병진노선의 핵심은 어려운 일반 경제사정을 개선하고 투자 부족으로 급격히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을 대체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엄청난 핵무기 유지보수 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재래식 무기도 전략적 이유로 대폭 감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계획경제가 유지되는 한 핵개발을 통한 국방비 감축이나 경제성장을 위한 재원 확보는 불가능하다. 막대한 자원과 우수한 인재가 투입되고 있는 제2경제에서 민간경제로의 자원 이전도 어렵다.

핵개발을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과학지식도 필요하다. 김정은은 2013년 11월 제9차 전국과학기술자대회에서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언급했다.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하여 국가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하고, 궁극적으로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목표를 세웠다. 현재 북한에서는 4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2013-2017)이 시행 중이고 CNC, IT, BT, NT 등 첨단 산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 이 결과 고급 과학과 관련된 인적자본도 대부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중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미사일 발사 기술과 같은 성과를 얻기도 했다. 우수 과학자에 대해 평양 소재 아파트 제공 등 많은 특혜도 제공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극소수 분야에 최고 자원이 배분되는 기형적 현상이다. 아무리 북한이 자립성·주체성을 내세워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경제강국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하더라도 경제의 근본적인 법칙을 극복할 수는 없다. 즉, 취약한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의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생산에 필요한 투입물(input)이 부족할 경우 산출물(output)도 미약할 수밖에 없다. 북한이 내세우는 자강력 제일주의도 국제 분업의 이득을 무시하고 있어 생산의 비효율성은 증가하게 된다.

사회주의 강국 달성을 위해 과학기술·생산의 일체화와 사상·기술·문화의 3대 혁명을 동시에 전개하고, 경제성장에 첨단기술 산업이 선도적 역할하며, 전략적 가치를 지닌 원자재·에너지·설비의 국산화가 시행되고, 인민경제의 현대화·정보화 실현을 통해 지식경제를 달성할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낮은 정책이다. 김정일 시대부터 시도해 온 다년도 경제계획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가 성장의 모멘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자원배분의 왜곡은 결국 경제 침체를 불러오게 되어 다시 군수부문의 재원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김정은으로서는 최대한의 시간 내에 핵의 소형화와 적어도 미국까지는 도달할 수 있는 운반수단을 완성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비록 김정은이 시장을 허용하고 소극적인 개혁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일반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보다는 공식경제의 정상화이다. 낙후된 기술력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보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김정은식 경제개혁이 활성화되려면 상당한 자본이 우선 투입되어야 한다. 문제는 북한에서는 아직도 제 2경제를 포함한 공식경제의 비중이 시장경제를 압도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낙후된 공식경제의 혁신을 위해 투입될 자본이 절대 부족하다. 자본의 투입이 없을 경우 구조론이나 동유럽 국가와 같은 체제전환국들에서 나타난 현상처럼 대다수의 북한의 국영 기업소들은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이미 북한에서는 탈산업화가 상당부분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

현재 북한경제는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계획경제와 시장경제가 두 축으로 분리되어 공존하면서 시장이 더욱 확장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시장화의 혜택을 본 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거의 유일한 소득원인 장마당

활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장에서의 승자는 부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게 되고 반대로 국유부문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생계마저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가) 북한의 핵보유 의도에 대한 경제학적 해석

핵개발이 경제학적으로 비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며 반대로 핵개발이 북한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장단기 목표의 상충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핵무기 개발 및 보유는 많은 자원이 소요되며, 그 과정에서 국제사회 및 남한과 엄청난 갈등을 겪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핵보유를 시도하는 목적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이 핵개발에 자원을 투입하면 경제에 투입되는 자원이 줄어들고 국제적 고립이 심화된다. 북한이 이를 감수하면서 핵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북한입장에서는 핵개발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이 궁극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평가하기 이전에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왜 핵개발을 하는지, 즉 핵개발의 유인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분석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현재 북한 경제는 성장과 붕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모순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의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가용자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출용 자원이 일부 내수용으로 전환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수출용 석탄을 발전용으로 전환함으로써 전력사정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전체적으로는 대북제재로 대외교류가 감소하면서 결국 가용자원의 총량은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또한 교류품목이 제한되면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과정에도 제약이 가해지며 이러한 자원투입의 왜곡으로 자원의 효율성도 감소할 것이다.

한편 대북제재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핵개발에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자원의 전체자원대비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며, 또한 북한경제는 폐쇄경제의 성격이 강하므로 대북제재는 중기나 단기적으로는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핵개발은 북한 입장에서 평가하면 2가지 측면에서 북한에 단기적으로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1)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핵개발을 통하여 군사비지출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2) 핵개발에 의해 상대방(남한)의 선택가능 전략을 안전전략(secure strategy)에 국한시킴으로써 북한에 유리한 균형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북한의 최적화문제로 모형을 설정하여 설명하고, 또한 동 모형을 활용하여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대응, 즉 제재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단기적 자원배분 관점에서 본 북핵문제

북한의 핵개발은 북한 집권층의 할인율이 높은 데에서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미래의 장기적 안정적 성장의 현재가치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인율이 높은 북한 집권층은 경제의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보다는 현재의 정권의 안정과 소비에 더 초점을 맞추어 의사결정을 할 것이다. 따라서 핵개발이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면서도 단기적으로 군사비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북한주민의 자존감을 높여서 현재의 충성을 유도하는데 효율적인 핵개발에 치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즉, 북한 집권층에게도 장단기목표의 상충관계(trade-off)가 존재하는 것이다.

한정된 자원을 경제활동과 군사력에 투입하는 단기 북한경제모형을 설정하고 동모형을 이용하여 북한의 핵개발의도 및 대북제재의 효과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북한의 가용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핵개발에 지출하는 군사비의 효율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으로 자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의 입장에서 문제에 접근하여 핵개발이 실질적으로 자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집중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남한의 선택가능전략을 안전전략(secure strategy)으로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대해서는 (3) 게임이론 관점에서 분석한 북핵문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핵개발은 비합리적, 충동적인 정책이 아니라, 북한입장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설계된 정책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 => 가용 자원 감소 => 핵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의 감소와 북한의 대응을 분석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을 먼저 수립하고자 한다.

북핵문제를 분석하는데 활용되는 모형에 사용되는 변수의 정의 및 변수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북한의 중앙정부(혹은 핵심 집권층)가 통제하고 배분할 수 있는 가용자원의 크기를 R로 나타내기로 한다. 북한 중앙정부(핵심 집권층)는 가용자원 R을 경제활동과 군사비에 배분한다.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원의 크기를 X로 표시하고, 군사비로 지출된 자원을 Y로 표시한다. 따라서 북한 중앙정부(집권층)의 자원제약식은 다음과 같다:

$$R = X + Y.$$

현재 북한에서는 국가·민간·장마당·밀수경제 등이 혼재하며 공식경제 곳곳에 지하경제가 침투되어 있다. 또한 공식경제와는 별도로 민간부문만의 영역이 존재하며 여기에서도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모형의 분석에서는 중앙정부(핵심 집권층)이 직접적으로 통제가능한 자원의 분석에 집중하고자 하며 중앙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비공식부문 등의 자원은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 R은

북한정권이 통제가능하고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밀수 및 지하경제 등에 의해 상당한 자원이 창출되고 이들 자원이 북한주민, 하급관료 및 군인 등의 생존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창출된 자원은 북한의 중앙정부가 직접적으로 제어하고 배분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자원이 모두 R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제활동을 감안하여 중앙정부가 자원배분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장마당의 활동 등이 간접적으로 R의 크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 예를 들면 장마당을 통하여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경우에 중앙정부는 주민에 대한 배급을 줄이고 여기에서 절약된 자원을 타부문 (예: 군사비지출, 핵개발 혹은 사치품 수입 등)에 지출할 수 있을 것이다. 장마당 등의 활동은 간접적으로 R의 크기를 증가시킬 것이지만 이하의 분석에서는 일단 이러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북한 중앙정부는 군사비에 지출되는 자원 Y를 재래식전력과 핵무기개발에 나누어 투입한다고 상정한다. 재래식 전력에 투입되는 자원을 y_1 , 핵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을 y_2 로 표기한다. 따라서 군사비 지출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Y = y_1 + y_2.$$

전체 군사비대비 핵개발에 투입된 군사비의 비중은 g 로 표기한다. 따라서 $g = y_2/Y$ 로 주어지며 g 는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다.

재래식전력과 핵개발에 투입된 군사비 y_1 과 y_2 는 군사력 Z 로 전환된다고 가정한다. 군사력 전환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Z = y_1 + (y_2)r$$

군사력 전환함수에서 r 은 핵전력과 재래식전력의 효율성 격차를 나타내며 $r > 1$ 로 가정한다. $r \leq 1$ 이면 핵전력이 재래식전력보다 효율성이 높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핵개발의 인센티브가 없다. 따라서 $r > 1$ 의 가정은 타당한 가정으로 볼 수 있다.

Y 가 고정된 상태에서, 핵개발에 투입된 군사비 비중인 g 가 증가할수록 Z 가 증가한다. 군사력 전환함수는 $Z = y_1 + ry_2$ 형태와 같이 선형함수로 주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질적으로 동등한 분석결과가 유도될 수 있다.

북한정권의 단기안정성(생존가능성)을 p 로 나타내기로 한다. 즉, p 는 북한정권이 적어도 단기간 유지될 확률을 나타내며 $0 \leq p \leq 1$ 의 범위에 있다. 북한 정권의 안정성 p 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원 X 와 군사력 Z 의 함수이며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한다.

$$p = XaZb/[XaZb + A], (a > 0, b > 0, A > 0)$$

p는 X와 Z가 증가하면 1에 점근적으로 다가간다. 즉,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원이 증가하거나 군사력이 증가하면 정권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파라미터 a, b는 각각 경제활동에 투입된 자원과 군사력의 정권안정성 창출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 효율성이 높아질수록 이들 파라미터 값은 커질 것이다.

p함수식에서 A는 북한을 둘러싼 대외여건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 A가 증가하면 동일한 자원투입하에서 (즉, X와 Z가 주어진 상태에서) 북한의 안정성(생존가능성)은 감소한다. 대외여건이 북한정권의 생존에 불리해지는 현상, 예를 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강화 등은 A의 증가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단, 단기적으로는 A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가정한다.

북한정권의 (단기)목적함수는 일반적인 효용함수로서 $U = U(p, X)$ 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정권이 안정될수록, 또한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이 늘어날수록 정권의 효용은 커진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partial U/\partial p > 0$, $\partial U/\partial X > 0$ 으로 주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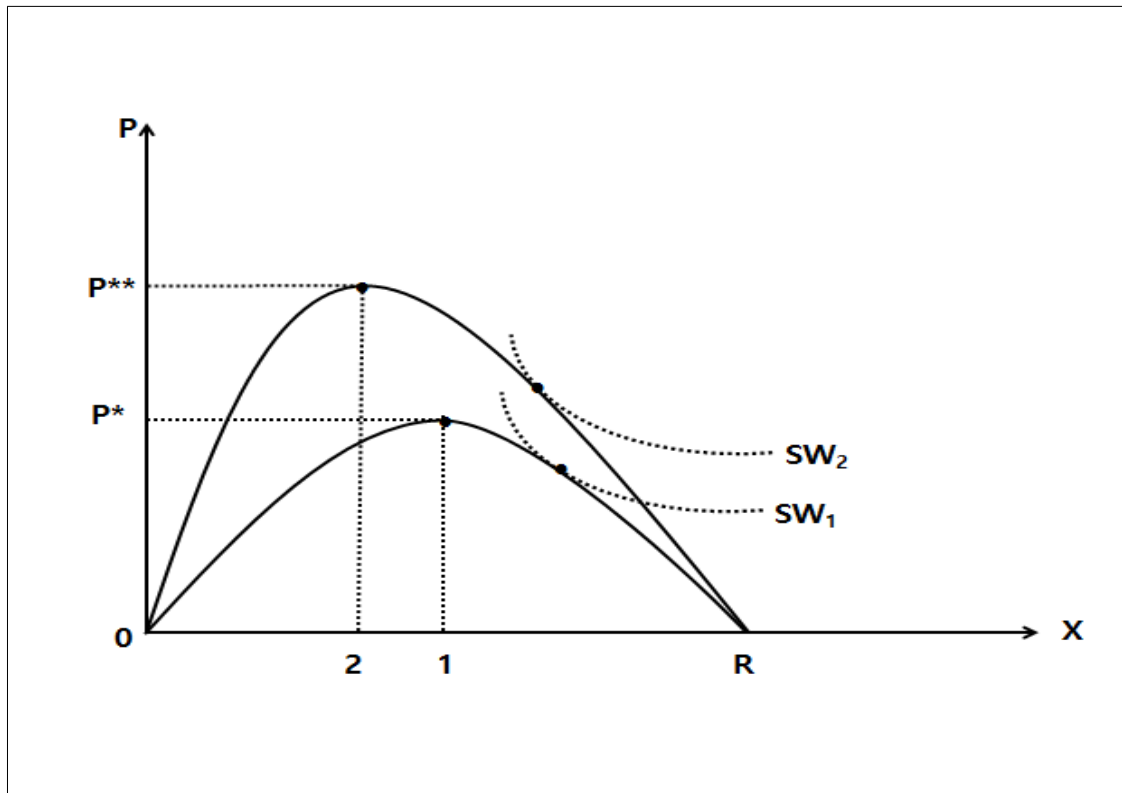
이상의 가정 하에 북한정권의 예산제약식을 그리면 포물선과 유사한 형태로 주어진다. 즉, R이 주어진 상태에서 선택 가능한 p와 X의 조합은 [그림 III-4-2]에 그려진 포물선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다. 모든 자원을 경제활동에만 투입하면 p는 0의 값을 가질 것이며 이는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이다. 반대로 모든 자원을 군사비에만 지출하는 경우에도 p는 0의 값을 가지며 이는 원점에 해당한다. 북한정권의 사회무차별곡선은 [그림 III-4-2]에서 SW1, SW2로 표시되어 있다.

[그림 III-4-2]에서 아래 포물선은 군사비 Y를 모두 재래식 전력에 투입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 경우 정권의 안정성 p는 $XaZb (= XaYb)$ 가 극대화되었을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p를 극대화하려면 Cobb-Douglas 함수 특성에 따라 X에 $a/(a+b)$ 비율의 자원을, Y에 $b/(a+b)$ 비율의 자원을 투입하면 되므로 $X = [a/(a+b)]R$ 일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그림 III-4-2]에서 1점의 가로축 좌표는 $[a/(a+b)]R$ 로 주어진다.

핵개발에 투입되는 군사비 비중이 늘어갈수록 (g가 커질수록) 예산제약식은 위쪽으로 이동한다. 단, 원점 및 가로축과 예산제약식이 만나는 R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g = 1$ 이면 예산제약식은 최대한 위쪽으로 이동한 상태이며 그림2의 위쪽 포물선은 이 경우를 나타낸 것이다.

$g = 1$ 이면 정권의 안정성 p는 (Cobb-Douglas함수의 특성에 따라) $X = [a/(a+rb)]R$ 일 때 극대화된다. 따라서 2점의 가로축 좌표는 $[a/(a+rb)]R$ 이며 $r > 1$ 이므로 1점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군사비의 일정비율은 재래전력에 투입해야 하므로 현실의 예산제약선은 [그림 III-4-2]의 두 포물선의 중간에 위치할 것이다.



[그림 III-4-2] 북한의 예산제약선 (budget line)

가) 북한의 핵개발유인

[그림 III-4-3] 에서 아래포물선은 군사력에 지출되는 자원이 모두 재래전력에 투입되는 경우에 북한이 선택가능한 점들의 집합, 즉 예산선을 나타낸다. 북한정권의 효용극대화는 예산선에 사회무차별곡선이 접하는 m점에서 이루어진다. 이때 북한은 선분O1 만큼의 자원을 경제활동에 투입하며 선분1R 만큼의 자원을 군사력에 투입한다.

북한이 정권의 안정성을 극대화하려하면 p^* 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때 북한은 $(a/(a+b))R$ 의 가용자원을 경제활동에, $[b/(a+b)]R$ 의 가용자원을 군사비로 지출하게 된다. ([그림 III-4-2] 의 1점의 좌표는 $(a/(a+b))R$). 그런데 북한은 정권의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점을 선택하지 않고 효용이 극대화되는 m점을 선택한다. 즉, 정권의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수준보다 더 많은 자원을 경제활동에, 더 적은 자원을 군사비로 지출하는 것이다.

북한이 군사비로 지출되는 자원의 일부분을 핵개발에 투입하면 예산선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주어진 자원을 모두 경제활동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 즉 예산선이 가로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R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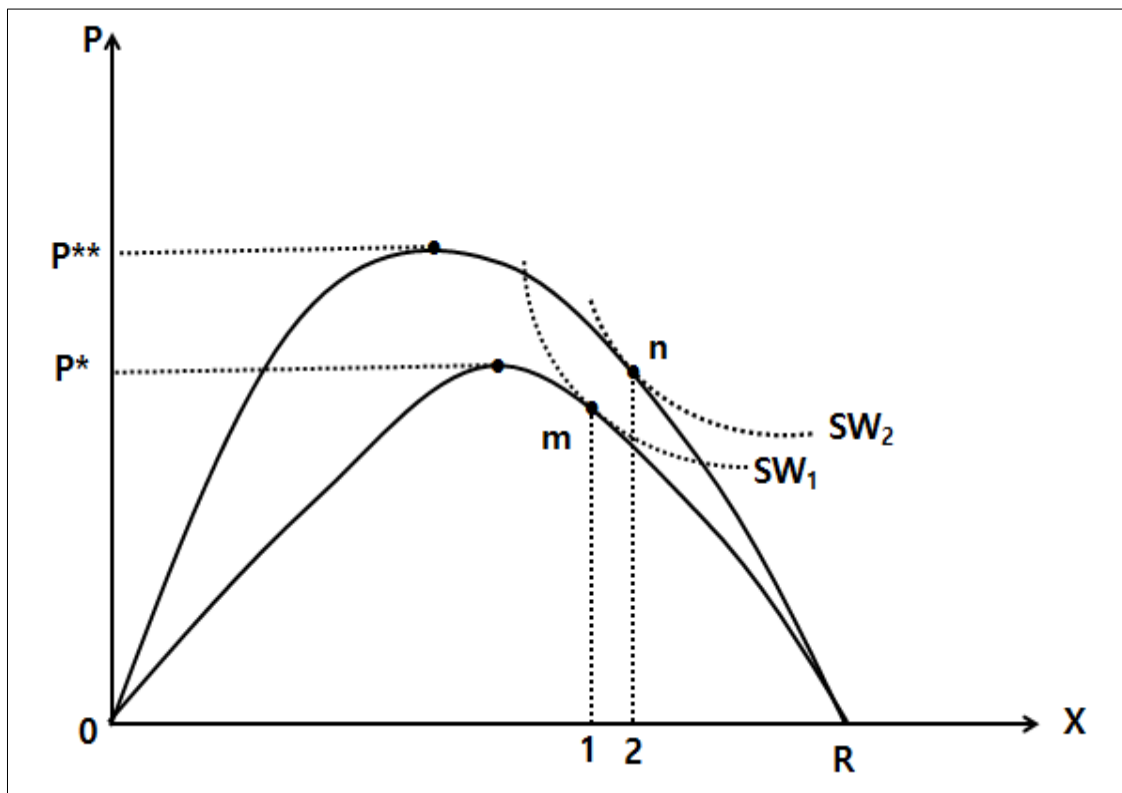
군사비에 지출하는 자원의 일부분을 핵개발에 사용하는 경우에 이는 군사비에 지출되는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예산선이 [그림 III-4-3] 의 위쪽 포물선으로 이동하게 된다.

정권의 안정성이 극대화된 점 p^{**} 의 가로축 좌표는 p^* 의 가로축 좌표보다 작은 값을 가진다. ($[a/(a+rb)]R < [a/(a+b)]R$ 이므로)

[그림 III-4-3]의 위쪽 포물선은 핵무기 개발에 최대의 자원을 투입한 경우이다. 이때 효용극대화는 n 점에서 이루어진다. 선분 $2R$ 은 이때 군사비로 지출된 자원의 크기이다.

주목할 점은 선분 $2R$ 크기가 선분 $1R$ 의 크기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은 핵개발을 통하여 군사비지출에 들어가는 자원을 줄이고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의 크기를 늘리며 동시에 정권의 안정성도 증가시킬 수 있다. => 이는 북한입장에서 핵개발유인을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병진정책이 북한입장에서는 대북제재가 시행되지 않거나, 그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단기상황에서는 충분히 합리적인 정책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초래하여 정권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p 함수의 상수 A 를 증가시킬 것이므로 장기적으로는 비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 북한정권의 할인율이 충분히 높아서 미래보다는 단기를 기준으로 자원배분을 할 경우에는 핵개발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I-4-3] 북한정권의 최적화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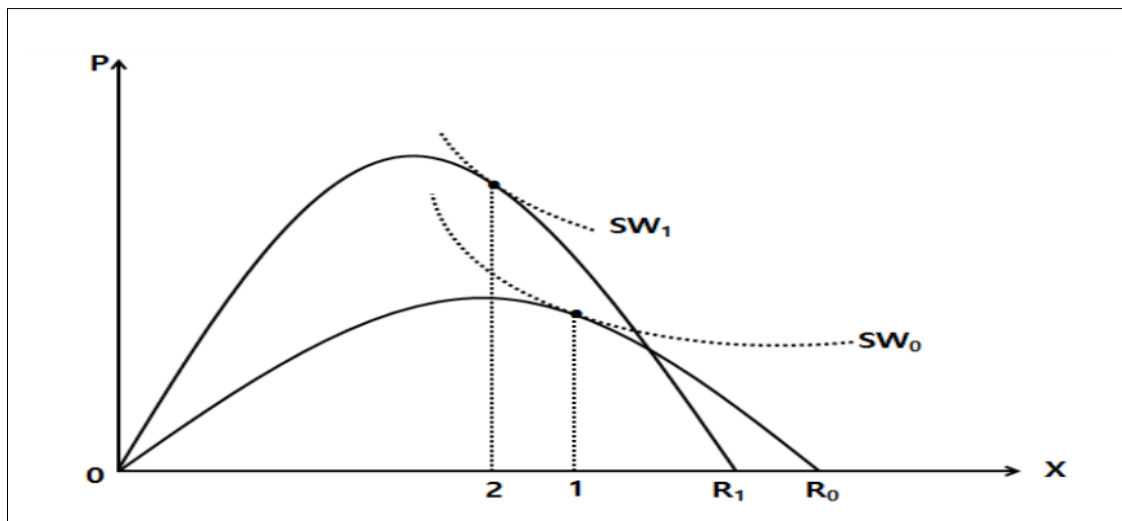
나) 대북제재의 효과

앞 절에서 개발된 모형을 활용하여 대북제재의 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대외교류를 제약하고 북한의 가용자원 R 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동시에 정권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p 함수에서 상수 A 의 크기를 단기에도 증가시키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북한은 핵개발의 인센티브가 있을지에 대해 위의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초기상태에 따라 2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그림 III-4-4] 대북제재의 효과: 제재 → 핵개발의 경우 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분석하는 그래프를 나타낸다. [그림 III-4-4] 대북제재의 효과: 제재 → 핵개발의 경우 의 아래포물선은 북한이 군사비를 모두 재래전력에 투입하는 경우이고 따라서 대북제재가 없는 경우를 나타낸다.

북한이 핵개발을 할 경우 북한의 예산선은 대북제재에 따른 자원의 감소와 핵개발의 2가지 요인에 의해 이동한다. 우선 대북제재는 북한의 가용자원 R 을 R_0 에서 R_1 으로 감소시킨다. 또한 핵개발에 따라 군사비지출의 효율이 증가하면서 예산선이 위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 단, 체제안정성을 나타내는 p 의 함수에서 A 의 증가에 따라, 제재가 없을 경우에 비해 상향이동의 정도는 작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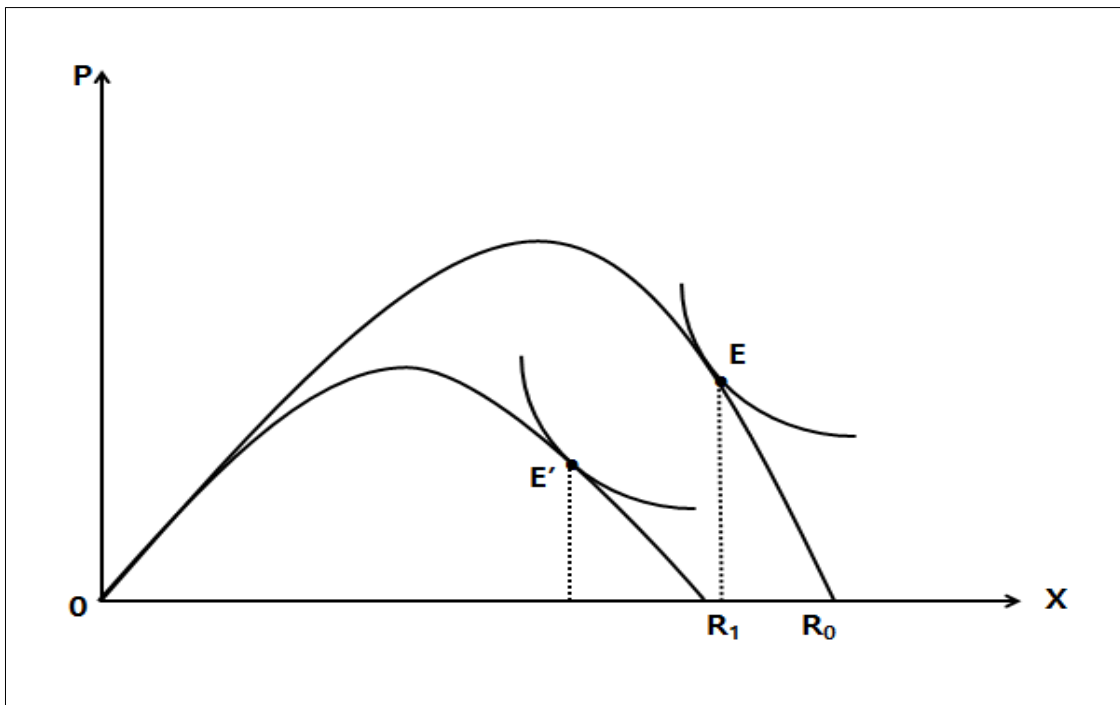
예산선의 모양과 사회무차별곡선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 [그림 III-4-4] 대북제재의 효과: 제재 → 핵개발의 경우에는 핵개발과 제재의 결과로 북한의 경제활동은 위축되었으나 체제의 안정성은 높아지고 후생도 증가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는 핵개발을 하지 않던 상태에서 제재를 받으면서 핵개발을 하는 상황을 분석한 것이다. 단, 모든 경우에 반드시 그런 결과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결과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북한과 관련된 시사점은 적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미 핵개발 중이기 때문이다. 단 제재가 오히려 북핵 개발을 촉진시킬 가능성도 있음을 보인 것이다.



[그림 III-4-4] 대북제재의 효과: 제재 → 핵개발의 경우

[그림 III-4-5] 대북제재의 효과: 핵개발에 진입한 이후 제재의 효과는 핵개발 단계에 진입한 상태에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일반적 상황을 상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상황 분석에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핵개발에 진입한 상태에서 대북제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지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핵개발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핵개발에 따른 예산선 이동의 효과는 없으며 제재에 따른 가용자원 감소의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다. [그림 III-4-5]를 보면 핵개발에 진입한 이후 제재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데, 가용자원이 R_0 에서 R_1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정권이 선택한 균형점은 E 에서 E' 로 이동하게 된다. 두 균형점을 비교하면, 핵개발에 투입되는 자원이 줄어든 가능성이 있고, 체제의 안정성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도 감소한다. 한편 군사비 지출은 감소하지만, 경우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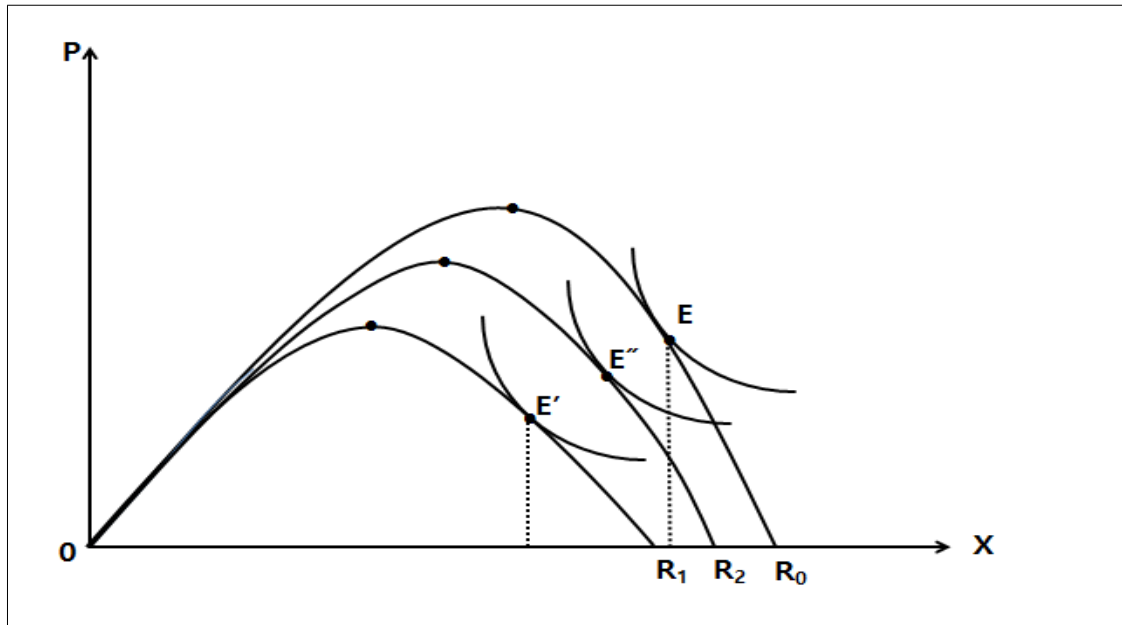


[그림 III-4-5] 대북제재의 효과: 핵개발에 진입한 이후 제재의 효과

한편 최근 북한에서는 장마당 등이 확산되면서 공식경제 이외의 영역에서 경제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비공식경제(지하경제)에서 창출되는 자원을 북한정권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정권은 지방, 군 등에 배분하는 자원을 축소시키고 재래전력이나 핵무기개발에 더 많은 자원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비공식경제의 활성화는 결국 대북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III-4-6] 은 대북제재 하에서 시장확산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핵개발이전에는 자원이 R_0 로 주어지며 이때 균형은 E 점으로 나타난다. 핵개발에 따라

제재가 부과되면서 가용자원은 R_1 으로 감소한다. 균형은 E 점에서 E' 점으로 이동한다. 시장의 확산은 가용자원을 증가시키게 되며 이에 따라 가용자원은 R_2 로 증가한다. 새로운 균형은 E'' 로 주어진다. 즉, 시장의 확산은 대북제재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단, 제재이전보다 가용자원의 크기는 작다.



[그림 III-4-6] 대북제재 하 시장확산의 효과

이상의 분석은 모두 단기적 최적화 분석이다. 실제로 북한의 집권층은 정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신뢰성이 낮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한의 할인율(discount rate)은 매우 높은 수준일 것이며 장기적 최적화보다는 단기적 최적화에 몰입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장기적으로 핵개발이 정권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핵개발이 정권의 안정성을 단기적으로는 높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핵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절의 분석은 북한의 핵개발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에게 유리할 수도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개발은 장단기목표의 상충을 초래한다. 즉 장기적으로 가용자원의 감소 => 정권의 안정성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상의 분석의 시사점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면 북한정권의 할인율을 낮추어서 북한정권이 단기적 최적화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즉, 북한정권의 시각을 단기적 최적화에서 장기적 최적화로 전환시킬 방안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3) 게임이론 관점에서 고찰한 북핵문제

북핵문제는 관련당사국들 사이에 상호 협조적으로 전개된 경우도 있었고 (예: 대북 경수로 건설 국면), 관련당사국들이 대립하는 비협조적 게임(예: 현재의 상황)이 전개되는 상황도 있었다. 이와 같이 게임이 협조적 상황에서 비협조적 상황으로 전환된 원인 등을 분석하는데 게임이론의 분석틀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개발은 북한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핵개발에 몰두하는(집착하는) 동기 등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북핵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핵문제에 게임이론을 적용할 때 특히 활용가능성이 높은 게임의 개념은 순차게임, 반복게임 등이다.

북핵문제의 경우 문제가 진전되어 온 과정에서 북한 등의 주요 경기자가 핵실험, 제재 등의 의사결정을 순차적으로 시행하였으므로 순차적 게임의 틀을 분석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순차적 게임에서 각 경기자는 전략을 선택할 때 다른 경기자의 행동을 예상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유도하는 전략을 쓰게 된다.

북핵문제의 참여 경기자로는 남북한이 가장 중요한 경기자이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변국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국제기구도 경기자 혹은 룰메이커로 게임에 참가한다.

게임이론 자체가 북핵문제에 대한 본질적 해답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북핵문제를 포괄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을 이해하고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정규형 게임으로 나타낸 북핵 관련 상황

<표 III-4-3>은 북핵관련 상황을 정규형 게임으로 나타낸 보수행렬이다. 현재 상황에서 2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균형1은 남한은 대화전략을 선택하고 북한은 핵포기 전략을 선택하는 경우이며 이때 보수는 각각에게 1,800, 180으로 주어진다. 균형2는 북한은 핵개발전략을 선택하고 남한은 대결전략을 선택하는 경우로서 보수는 남한은 1,000, 북한은 200으로 주어진다.

만일 북한이 의사결정을 먼저 할 수 있다면 선도자로 행동하며 북한은 먼저 핵개발전략을 선택하고 남한은 대결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스타켈버그 균형 (Stackelberg equilibrium)을 의미한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상황은 스타켈버그 균형이며 동시에 내쉬균형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표 III-4-3> 보수행렬 - 남북한의 보수 행렬

		북한	
		핵 포기 전략	핵개발 전략
남한	대결전략	(1,500, 50)	(1,000, 200)
	대화전략	(1,800, 180)	(500, 150)

균형이 균형2에서 균형1로 이동하면 남북한의 보수의 합계는 1,200에서 1,980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북한의 보수는 줄어들게 되므로 북한이 자발적으로 이에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균형을 (1,000, 200)에서 (1,800, 180)으로 전환시키려면 북한에게 일정한 크기의 보상을 지급해야 할 수 있으며, 남한은 이와같이 균형을 변화시킬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이 보상을 통하여 균형을 이동시키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장애요인이 많다. 우선 북한의 약속이 신뢰성을 지니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보상을 받고 다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접적 보상에 대해서는 남한내에서 반대의견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표 III-4-3>의 상태가 지속되어 북한이 핵무기와 운반체개발에 완전하게 성공하면 보수행렬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남한의 선택가능한 전략도 변화할 것이다. 북한이 유효한 핵무기 및 운반수단 보유시, 남한의 선택가능한 전략으로서 내쉬 전략은 위험성을 내포한다. 왜냐하면 내쉬전략은 상대방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한 전략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북한에게 합리적 전략이라 하더라도 핵심 의사결정권자의 전략의 실수, 혹은 예기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험기피적인 남한의 선택가능전략은 안전전략(secure strategy)으로 제한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의 보수 행렬은 <표 III-4-4>와 같이 나타날 것이다.

<표 III-4-4>의 게임에는 2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하나는 남한이 강경전략을 선택하고 북한이 유화전략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다른 균형에서는 북한이 위협전략을 선택하고 남한은 유화전략을 선택하는 균형이다. 남북한이 모두 유화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전체의 보수를 극대화하지만 이는 균형이 아니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 남한은 안전전략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강경전략 선택시 최소보수 -100보다 유화전략 선택시 최소보수 100이 크므로 남한은 유화전략을 선택하고 북한은 위협전략을 선택하는 것이다.

<표 III-4-4> 보수행렬 - 북한의 핵개발이후

		북한	
		위협전략	유화전략
남한	강경전략	(-100, -100)	(300, 100)
	유화전략	(100, 400)	(290, 300)

나) 순차게임으로 나타낸 북핵 관련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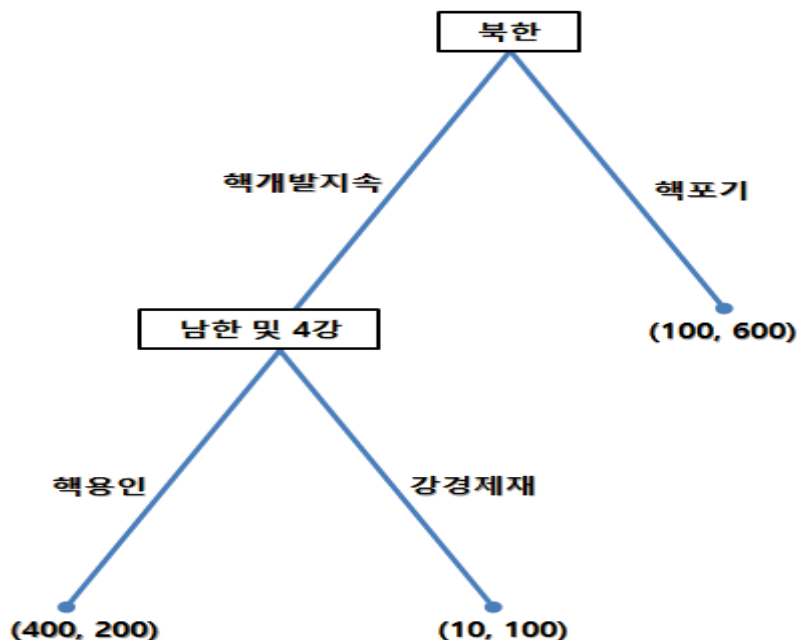
북핵관련 상황을 순차게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III-4-7]은 북핵관련 순차게임을 나타낸 것이다. 북한이 먼저 핵포기와 핵개발강행중 하나의 전략을 선택한다. 남한(및 4강)은 핵용인 혹은 강경제재의 전략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그림 III-4-7]로 나타낸 순차게임에는 2개의 내쉬균형이 존재한다. 균형1은 핵개발을 강행하면 남한 및 4강은 이를 용인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남한 및 4강이 이를 용인하는 경우이다. 균형에서 북한은 400의 보수를 받고 남한 및 4강은 200의 보수를 받는다.

균형2는 북한이 핵개발을 하면 남한 및 4강이 강경제재를 할 것이라고 북한이 믿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보수 10은 핵개발포기시 받는 보수 100보다 작다. 따라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고 보수 100을 받는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바람직한” 균형(균형2)은 남한 및 4강의 신빙성없는 위협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할 경우 남한 및 4강은 강경제재를 하는 것보다 (100의 보수), 핵을 용인하는 전략이 보수가 더 크기 때문이다 (200의 보수).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핵용인시보다 강경제재 상황에서 남한 및 4강의 보수가 더 커지게 보수가 조정되면 된다. 즉, 핵용인시 남한 및 4강의 보수가 강경제재시 보수보다 작게 조정되면 강경제재 위협의 신빙성(credibility)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는 일종의 “burning the bridge”전략이다)



[그림 III-4-7] 북핵관련 순차게임

다. 북핵문제에 대한 분석의 시사점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면 남한 및 국제사회(특히 남한)의 선택가능전략은 안전전략(secure strategy)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들더라도 핵개발을 저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남한의 전략이 안전전략(secure strategy)에 고착되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에 대한 접근법으로는 보상의 원리, 반복게임의 해 개념을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전략중 강경전략을 미리 배제하는데 따른 비용을 인식하고 가용전략에 대한 대내적 설득이 중요하다.

1) 반복게임의 특성

북핵문제는 북한의 핵개발이 진전됨에 따라 문제의 양상이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북한의 제재위반, 국제사회의 제재, 유화적 국면 등이 반복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기자들은 1회성 게임과는 다른 목적함수와 전략을 채택할 확률이 높다.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반복게임의 틀을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학자 A. Axelrod는 실험을 통하여 반복게임에서 “tit-for-tat”전략이 우수한 전략이 됨을 입증했다. 이러한 전략은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방식의 전략이다. 이 전략은 반복되는 게임에서 협조적인 전략으로 시작하여 상대방이 비협조전략을 택하면 자신도 다음 게임에서 비협조전략을 채택하여 상대방에게 보복하고, 상대방이 협조로 전략을 바꾸면 자신도 협조적 전략으로 전략을 바꾸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되 상대방에 대한 응징이 지나치지 않은 장점을 지닌 전략이다. (R. Axelrod,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1984)

Axelrod의 분석에 의하면, 게임의 경기자간에 협조관계가 발생하는 원천은 상호신뢰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durability of the relationship)이다. 국가간 갈등(게임)의 해(solution)는 복잡한 전략이 아니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전략의 조합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실험이다. Axelrod 연구의 시사점은 남북한 및 6자간의 관계에서도 관계의 지속성이 보장되면 협조관계가 성립하고 지속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관계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는 정권의 변화(민주주의국가들 - 한, 미, 일) 및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북한의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2) 보상의 원리

북한이 핵무기 및 운반체의 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면, 남한이 안전전략을 선택했을 때 북한이 얻는 보수보다 못하지 않은 보수를 북한에게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표

III-4-4> 보수행렬 참조)

보상의 원리(compensation principle)에 의하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상태로 변화할 때 생산요소인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는 상충된다. 한 생산요소가 이익을 보면 다른 생산요소는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때 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생산요소가 손해를 보는 생산요소의 피해를 보전해서 적어도 이전보다 나쁘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주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무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를 북한 핵문제에 적용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동결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통하여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했을 때의 보수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하여 북한이 핵동결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 보상방안으로는 무역기회의 확충, 사회간접자본건설 등의 개발원조, 국제기구가입을 통한 고립의 탈피 기회제공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핵개발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인 자원부족문제에 대해 꾸준한 설득이 필요하다. 대외개방을 통해 자원을 확보할 수 있음을 꾸준히 설득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북한이 핵포기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여 핵포기가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게임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보상에는 금전적 보상 뿐 아니라 정권의 자존심(체면)유지, 체제보장 등이 포함된다.

라. 대응방안

북한헌법 등에 “핵보유”를 명시한 현재의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이 지속하는 한 핵개발과 핵보유를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이 핵보유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명시화하고 이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한 시나리오의 선택의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핵문제가 진전된 과정은 일종의 반복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발사 => 국제사회의 제재 => 유화적 국면 => 핵개발, 미사일발사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진전된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개발을 포기하기 어려운 내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헌법에 핵보유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고 최고 권력자가 핵보유국가임을 언급한 상황에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중대한 상황의 변화를 설득력있게 제시할 수 있거나 분명한 명분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만일 공식적으로 완전한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단계의 해(solution)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간단계의 전략적으로 애매한 단계가 상호 최선의 전략일 가능성도 있다. 즉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다.

북핵 협상과정에서 일종의 최후통첩(ultimatum)으로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 북한의 선택가능집합을 동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제안할 때 전제조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북한의 선택폭을 높임으로써 더 나은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형식의 회담제안은 현실적으로 회담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한편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남한 내부의 대내적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전반적 상황에 대해 홍보/설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표 III-4-4>의 보수행렬에서 남한이 내부문제로 인하여 강경전략을 배제하고 핵문제에 대처하면 이는 역으로 북한이 위협전략을 선택하도록 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북핵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이견이 있는 그룹을 차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적으로 최후통첩 등의 성격을 가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제의” 등은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여 실현가능한 협상의 결과를 제약하는 효과를 지님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유연한 자세로 북한을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주제 및 목적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1) 북핵 관련 예상 시나리오

북핵문제의 가장 긍정적 시나리오는 남북한 및 관련당사국들이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협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경우이다. 북한의 핵포기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하고 체제 및 대외교류보장, 북한 정권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도록 관련당사국들의 선언 및 지원 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은 이와같은 긍정적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 특히 북한이 실제로 협조적으로 나오더라도 남한 및 미국이 북한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그간의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핵개발에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이다. 현재 북한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충고에 관계없이 독자적 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고, 심지어 완성했다고 까지 선전하면서 호전적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가 미국의 자국 침공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방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핵개발 중단 협상은 미국과만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국과의 협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문제를 단기간에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은 사실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법이 없다는 것이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해결이 어렵더라도 북한 핵에 대한 위협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북한정권이 단기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나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관점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실제로 이러한 방향으로의 유도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급변사태 시 핵폭탄이나 핵물질의 도난, 분실 등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고 특히 미국이 염려하는 점은 고의적 핵확산이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변 4강과의 협력 및 북한과의 최소한의 대화채널은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서는 대북대화의 의지가 있음을 밝히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한편 현재의 북한 핵과 관련한 경색국면에서 북한에 대한 지나친 유화적 분위기가 남한 내부에 전파되는 것은 북핵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협상결과 도출만을 위해 대북 강경전략을 배제한 채 조급하게 협상에 임할 경우 북한은 종래의 벼랑 끝 전술을 활용하고 남한 내의 갈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목표를 얻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헌법에 까지 명시된 선대 지도자들의 염원인 핵개발을 북한이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도 제네바 합의, 9·19공동선언에 따른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기대를 걸었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점이나, 중국도 수차례 북한에 대해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였지만 북한이 이를 무시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북핵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2) 단계별 대응 방안

핵보유국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구상할 필요성이 있다. 현실적 여건상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거나 핵무기보유국가 위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 “완전한” 핵보유국에 도달하기 위한 조건 및 단계, (2) 현재 북한의 단계, (3) 북한이 이들 단계 중 일정 단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조건에 대한 평가 등이 필요할 것이다.

A	1	2	3	B
---	---	---	---	---

[그림 III-4-8] 핵보유국의 단계

위의 선분에서 A는 북한이 “비핵화”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였고, 이를 주요 이해당사국이 검증가능한 상태를 나타내며, B는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핵 및 운반체 보유를 선언하고 주요국들이 이를 묵시적,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태(완전한 핵보유)를 나타낸다. A와 B 상태 사이에는 다양한 단계가 존재하며 이들 단계 중 어느 단계까지를 남한 및 주요 이해당사국들이 용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현실적 여건상 핵무기보유국가로 인정받거나 핵무기보유국가 위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핵무기 보유국가로 진전되기 위한 단계적 조건을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현실은 북한이 원하는 수준의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더라도 미국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 핵 개발과정에서 완성단계별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의 필요성 내지 유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기타 검토사항

“비핵화”의 목적과 개념이 상황에 따라 moving target처럼 바뀌고, 회담 당사자들도 바뀌면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과 6자회담 당사국들의 정권교체 등에 따른 정책의 지속성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북한의 목적함수는 일관성이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북한의 목적함수는 분명한듯하지만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든가 미국이 북한과의 수교협상을 원할 경우 협상의 패러다임은 변화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도 북한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일 것이지만 비합리성(irrationality)이 개입할 가능성도 있다.

대화채널을 유지하면서 집권층에게 지속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전파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II-4-5> 북한 지배층에 전달할 중요 메시지

1. 한국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응할 경우 한국은 정치적으로 6자회담 개최, 북미수교 협상 등도 지원할 것이다.
2.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한국주도 하에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경제지원을 할 것이다. 북한이 구상하는 경제개발구 사업을 지원하고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이다. 비축된 일반 재래식 무기를 3국으로 수출도 지원할 것이다.
3. 핵무기를 개발하는 선군정치보다는 민생경제를 돌보는 선경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은 즉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여 제2경제의 비중을 낮추는 것이다. 군수 시설을 민수품 생산시설로 전환하고 우수한 인재와 자원을 일반경제로 전환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과거 러시아가 군수산업의 민수전환 13대 프로그램(1993)을 시행한 것이나 중국이 등소평 시기 삼선(三線) 기지건설을 청산하고 군수산업 관련 조직을 통폐합한 사실에 대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국에서도 이권 감소를 염려한 군부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였다.
4.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은 한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도는 계속 높아질 것이고 북한주민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경제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병진노선을 추구한다면 북한경제는 더욱 깊은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 결국 국가 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5.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북한 핵개발 현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가. 들어가는 말

이 부분은 사회심리학 이론 중에서도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한국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을 분석하고 예측 가능성을 논의하는 논리적 기반으로 사회심리학 이론의 하나인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 내용과 주요 개념을 살펴 볼 예정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실상 인간과 인간 및 인간과 사회가 맺어 온 다양한 관계의 복잡함을 심층적으로 묘사하고 관찰하는데 유용한 관점을 제공해 온 이론이다. 지금까지 북한 핵개발 현황을 분석할 때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을 활용하여 관련 현황을 분석했던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먼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북한 핵개발 현황을 분석할 때 이론적으로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 내용과 주요 개념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은 대체로 “합리적인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한” 북한체제 특유의 비합리성이나 돌출 행위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이라는 인물의 개인적 특성에서 찾으려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을 활용함으로써 북한 핵개발이 정말 예측 불가능한 행위의 결과인지, 그 나름대로 합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 말은 곧 오늘날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제공해 온 “백두혈통,” “최고존엄,”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같은 담론이 그 사회 내부에서 어떻게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핵개발과 핵보유를 둘러싼 결정 과정을 예측할 수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김정은이라는 정치 지도자 개인의 특성에 의존하여 핵개발 원인을 설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김정은과 김정은 측근집단, 북한주민 등으로 분석 단위를 세분화해 보았다.

셋째, 앞서 서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6년 현재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 가능성 방안을 모색해 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김정은과 김정은 측근집단, 북한주민으로 구분한 분석 대상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 가능성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넷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다만 이 부분에서 제시하는 비핵화 시나리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 기반을 둔다는 점 때문에 남북관계와 국제정치의 현실에 적용할 때 현실적 한계가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나. 상징적 상호작용론 Symbolic Interactionism 내용과 적용 가능성

사회심리학 이론의 주요 갈래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학 이론의 발전 과정에서 후발주자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George Herbert Mead의 영향을 받은 Herbert Blumer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도 20세기 이후의 일이나 사회과학 이론으로서 그 역사가 오래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이 부분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서도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상황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이론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서도 Mead와 Blumer, 두 사람이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되 그 이외에 북한 핵개발 현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Pierre Bourdieu가 내놓은 몇 가지 개념과 주요 관점을 간략하게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⁶⁷⁾

1)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인간관

사회학 이론 중에서 후발주자에 속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그 특유의 인간관을 통해서 기존의 사회과학 전통과 맞서 대안을 제시해 온 관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완전히 수동적인 존재도 아니지만 또한 완전히 능동적인 존재도 아니라고 서술한다. 인간이란 시간과 공간, 사회구조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도 그 영향을 그대로 추종하는 대신 자신이 의미 부여를 하는 상징의 조작과 교환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기도 하는 존재라고 평가하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본적인 인간관이라 하겠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이란 각자 개인이 파악한 주변 사물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토대로 해당 사물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순간순간 결정하며 그 결정을 실천에 옮기는 존재라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설명할 때 주변의 사물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 의미를 토대로 각자 개인의 관점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여 행동에 옮기는 점에서 찾으려 하는 존재로 본다는 것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선발주자인 George Herbert Mead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I라고 명명한 주체아(主體我)와 Me라고 부른

67) 물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기원과 그 이후의 발전 양상을 온전히 George Herbert Mead와 Herbert Blumer, Pierre Bourdieu 등 이 글에서 소개하는 세 사람의 업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나 이 글의 목적이 사회학이나 사회심리학 이론 전반을 소개하거나 그 가운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어떤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서도 북한 핵개발 및 핵보유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고 판단이 드는 부분을 선별하여 그 대표적 내용과 주요 개념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객체아(客體我)의 결합으로 Self라고 하는 자아(自我) 개념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Mead, 1934: 135-226) 설명한다.

인간은 누구나 개인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주도해 나가는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와 동시에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면서 물리적 환경과 아울러 역사적, 문화적, 심리적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다는 것이 Mead의 주장이었다. 다시 말해서 Mead는 한 사람의 자아인 Self는 주체아(主體我)인 I와 객체아(客體我)인 Me의 독특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특유의 자발성과 능동성을 지니는 한편 자신이 속한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한다.

Mead가 제시한 인간관, 곧 인간의 Self 개념은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 현황을 설명할 때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의 핵개발 및 핵보유 관련 결정이 예측할 수 없는 비이성적 행동이라는 기존의 관념을 벗어나 분명히 돌출적 면모를 지니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예측 가능성을 드러내는 합리적 행동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할 때 유용한 이론적 분석도구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 “백두혈통” 계승자인 김정은이 “최고존엄” 자리에서 핵개발과 핵보유 노선을 결정하면 그 측근집단이나 주민들은 누구나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신으로 무장한 채 결사관철의 자세로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외부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북한사회 내부에서는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고 반드시 따라해야 하는 합리적 행동의 기준으로 대접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분석은 김정은의 측근집단이나 북한주민의 행위를 설명할 때에도 왜 그 나름의 기준에서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닌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도구로 유용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2) 일반화된 타자 generalized other

일반화된 타자 개념은 특정집단의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집합의식을 말한다.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낸 사람은 누구나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이 자신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기준을 내면화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구성원 각자의 내면에 자리를 잡은 기준을 가리켜 해당 집단의 일반화된 타자로 명명한다.

일반화된 타자는 개별 구성원의 내면에서 그 사람이 특정 방향의 행동을 하도록 장려하거나 규제하는 기준으로 작동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적인 속성을 지닌다.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내면화한 일반화된 타자의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것도 사실 개인적인 속성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일반화된 타자를 높은 수준으로 내면화한 개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민감하게 의식하고 그들의 시선에 따라 외부로 나타나는 자신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경향을 드러낸다. 반면 일반화된 타자를 낮은 수준으로 내면화한 개인은 집단 내 다른

구성원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반화된 타자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그 기준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곧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그 집단이 공유하는 일반화된 타자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거나 아예 불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개인에 따라 일반화된 타자의 내면화 수준이 낮거나 높은 차이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완전히 독립된 상태로 존재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화된 타자는 결국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 특정집단에 속한 구성원 전체의 행위를 규제하는 힘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일반화된 타자는 개인의 내면화 차원을 넘어 특정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빠짐없이 공유하는 집합의식이나 집합적인 사고 양식, 행위 기준 같은 형태로 발현되어 나타나게 된다.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화된 타자 개념은 비교적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 일반화된 타자 개념을 적용하여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설명하려 할 때 그 양상이 훨씬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점이 문제라 하겠다. 우선 한 사람이 내면화한 일반화된 타자의 양상은 그 내면화 수준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이와 아울러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이 몇 개나 되는지, 각 집단의 위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속에서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하는 점에 따라 일반화된 타자의 내면화 양상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복잡한 속성에 따른 개별적 차이점을 세밀하게 드러내 준다면 일반화된 타자 개념 역시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를 둘러싼 김정은 개인의 행태는 물론이고 그 주변의 측근집단과 일반주민의 행위를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적 차이점을 세밀하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걸리고 과정도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를 둘러싼 행태를 짧은 시간에 쉽고 빠르게 파악하려 한다면 일반화된 타자 개념은 유용한 분석도구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3) 의미 있는 타자 significant other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제시하는 의미 있는 타자 개념은 수많은 일반화된 타자들 중에서 개인의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타자를 의미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사람이 내면화한 일반화된 타자가 딱 하나만 존재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저런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 또한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양한 유형의 일반화된 타자를 내면화한 상태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일반화된 타자 중에서

어떤 유형은 그 사람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유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이렇게 다른 유형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반화된 타자를 구분하여 의미 있는 타자나 중요한 타자라는 용어로 개념화한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형제자매, 교사, 가까운 또래친구는 가장 영향력이 강력한 의미 있는 타자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핵개발과 핵보유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과 그 측근 집단, 일반주민의 행태를 예측하고 서술하고자 한다면 의미 있는 타자 개념은 일반화된 타자와 함께 매우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 있는 타자 개념을 동원하면 김정은과 그 측근 집단이 국제적인 체제가 낳아 강해지는 상황에서 왜 핵에 집착하면서 핵개발과 핵보유를 공개적으로 과시하는지 설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외부인의 시각에서 볼 때 마치 미친 짓처럼 보이지만 김정은과 그 측근 집단의 관점에서는 의미 있는 타자의 기준을 논리적으로 충족하는 행위라고 판단할 여지가 남는다는 것이다.

4) 아비투스 habitus

Pierre Bourdieu가 설명하는 아비투스 개념은 개인의 행위에서 이른바 취향이나 성향, 습관이라고 표현하는 행동 유형이 나타나는 현상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오랫동안 지극히 개인적 특성으로 생각해 온 문화적인 취향이나 소비재를 선택하는 성향이 사실상 그 사람이 속한 가족이나 소규모 집단의 사회적 지위와 계급적 위치, 경제적 여건, 교육환경 등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얻어진 속성이라는 것이 Bourdieu의 주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Bourdieu는 아비투스 개념을 계급적 취향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아비투스 개념은 생물학적 존재로 출생한 인간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존재로 성장해 가는지 설명할 때 유용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출생하는 순간부터 가족과 학교,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특유의 아비투스를 체득해 가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비투스는 분명히 개인의 천성도 아니고 타고난 기질과 다르다. 그러나 한 사람의 행위 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의 하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개인의 천성이나 기질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요인이라고 하겠다.

오늘날 북한사회에서 핵개발과 핵보유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개인의 아비투스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분류해야 할 것이다. 김정은의 출생과 성장 과정은 물론이고 이복형 김정남과 동복의 형 김정철을 제치고 아버지의 권력을 물려받은 현실 등 개인적 상황에 따른 특유의 아비투스는 핵개발과 핵보유를 결정하는 과정을 분석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라 하겠다. 사실상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을 이어 3대 세습 후계자로 북한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청년대장” 특유의 아비투스를 드러내고 있었다고 한다(젠지, 2010).

그렇지만 북한주민의 관점에서 볼 때 핵개발과 핵보유 관련 현안에 대처하는 김정은의 아비투스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은의 아비투스는 늘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북한주민 중에서 김정은의 아비투스를 파악하는 일을 피하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라도 핵개발과 핵보유 관련 현안에 대처하는 김정은의 아비투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신도 그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종한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핵개발과 핵보유 문제와 관련한 김정은의 아비투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은 북한주민 누구에게나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본질적으로 김정은은 핵개발과 핵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선대수령”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수시로 강조해 왔다. 그런데 핵개발과 핵보유 문제와 관련하여 이른바 “선대수령” 김일성과 김정일이 남겨 놓은 유훈 자체가 모순을 지니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속성을 드러내는 측면이 강하다. 우선 김일성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국과 평화적인 핵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곧 돌변하여 미국을 고립시키는 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고 역설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김일성은 1980년 10월 10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내용을 통해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한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나라로 되어야 하며 평화애호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통일된 조선은 주변나라들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침략위협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국제적인 그 어떤 침략행위에도 가담하거나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방국가는 우리나라 영토에 다른 나라 군대의 주둔과 다른 나라 군사기지의 설치를 허용하지 말며 핵무기의 생산과 반입, 그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조선반도를 영원한 평화지대로, 비핵지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년 뒤인 1982년 7월 30일 “재서독교포 윤이상과 한 담화: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다”내용을 살펴보면 “남조선에서 미국놈들을 고립시키기 위한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다가 다시 말을 바꾸어 북한은 “핵무기가 없으며 그것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다. 김일성이 1994년 4월 17일, “미국 시애틀텔레비존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일부를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지금 미국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에게 대한 압력소동을 벌이고 있으나 그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비핵, 평화애호 국가입니다. 우리에게서 핵무기가 없으며 그것을 만들 의사도 능력도 없습니다. 핵무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없지만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조선반도를 비핵화하기 위하여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정세는 핵문제로 하여 매우 긴장합니다. 조선반도의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는 우리와 미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압력이나 위협은 결코 문제해결의 방도로 될 수 없으며 그것은 정세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조미사이의 회담을 통해서만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려는 것은 우리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란다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압력소동을 그만두고 우리와의 대화에 성실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편 김정일은 “미제의 핵공갈정책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으며 인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제국주의자와 투쟁을 그만두자고” 하는 행위는 수정주의자의 주장이라고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김정일, 1962)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덤벼들 때에는 맞받아 나가 끝까지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김정일, 1968) 촉구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는 것이 김정일의 주장이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김정일은 자신의 아버지 김일성의 발언을 인용하여 (김정일, 1968) “적들이 전면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도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하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김정일의 발언 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면 아래와 같다.

수정주의자들이 핵무기가 출현한 조건에서 모든 전쟁은 열핵전쟁으로 발전하며 열핵전쟁은 억만장자도 파멸시키기때문에 제국주의자들도 《리성》적으로 사고하고 《분별》있게 행동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것은 궤변이다. 열핵전쟁의 파괴력이 제국주의의 침략적본성을 변화시킬수는 없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열핵전쟁의 파괴력에 겁을 먹고 《리성》적으로 나오고 있는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인민들을 위협하며 우롱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은 미제의 핵공갈정책에 겁을 먹고 무릎을 꿇으며 인민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그만두자는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김정일, 1962년 1월 15일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먹으려고 덤벼들 때에는 맞받아 나가 끝까지 싸울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 하는것은 수정주의입니다. 지금 수정주의자들은 전쟁이 일어 나면 모든것이 다 파괴되고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면서 전쟁공포증과 염전사상을 퍼뜨리고 있으며 제국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미국놈들앞에 굽신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공포증과 염전사상을 철저히 배격하며 수정주의적사상요소가 우리 내부에 침습하지 못하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야 합니다.....수령님께서서는 만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저들의 잘못을 사죄할 대신 당치 않은 구실을 내걸고 우리를 《보복》한다면 우리도 보복할 것이며 적들이 전면전쟁을 일으킨다면 우리도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당조직들과 인민군대안의 정치기관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인민군군인들에게 조성된 정세에 대해서와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적 입장에 대하여 똑똑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혁명적 전쟁관점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철천지원수 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적개심을 높여 주어 놈들이 덤벼 들 때에는 원쑤와의 싸움에 모두가 결연히 떨쳐 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김정일, 1968년 2월 2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김정은이 따르고자 하는 “선대수령” 김정일은 물론이고 김일성의 발언도 분석해 보면 평화를 내세우면서도 “원쑤와의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서도록” 각오를 다질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결과적으로 핵개발과 핵보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정은의 아비투스(가치관)는 “선대수령” 두 사람의 발언을 명분으로 평화를 내세운 채 전투동원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 성향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판단할 수 있겠다. 상황이 이러하니 김정은 본인을 제외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김정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아비투스의 형성 과정을 순간순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대로 추종한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한사회에서 평온하게 살아가려면 김정은의 아비투스를 파악하여 그대로 추종하거나 적어도 추종하는 걸모습이라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운명이다. 그러다 보니 북한 내 일반주민은 물론이고 김정은과 가까운 측근집단의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들의 아비투스는 핵개발과 핵보유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영향력을 강하게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체제의 특성상 김정은을 제외한 북한주민은 아무리 그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도자가 결정한 핵개발 및 핵보유 노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지도자 김정은이 결정한 노선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지닌 경우라고 해도 적어도 외면상 무조건 추종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북한주민의 일상생활이 완벽하게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핵개발과 핵보유와 같이 김정은이 직접 중요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매사 관심을 기울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다른 의견을 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 개인을 제외한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이나 북한의 일반주민이 지니는 아비투스는 핵개발 및 핵보유 과정을 분석할 때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문화 자본 cultural capital

Pierre Bourdieu는 아비투스가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그것이 개인의 일상생활에서 문화 자본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문화 자본 개념은 사회의 지배계층 내부에서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후손에게 전수하고 싶어 하는 언어적-문화적 능력이며 저급문화와 고급문화를 구별하고 고급문화를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취향과 태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Bourdieu가 주장하는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문화 자본을 획득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지배계층의 문화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체로 그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나마 문화 자본을 획득하는 방법을 계량화하기도 어렵고 그 과정도 지배계층 내부의 구성원 사이에서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통해 전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과정을 생각해 보면 지배계층에 속하지 않는 개인이 그 내부에서 통용이 되는 문화 자본을 획득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지배계층의 고급문화를 아무나 쉽게 획득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이야말로 그 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과도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따라 하고 싶은 열망을 품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열망은 지배계층이 고급문화의 기준을 제시하면 아무런 비판 의식이 없이 무조건 그대로 따라가는 대중문화를 만들어 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의미에서 지배계층의 아비투스가 곧 사회 전반에 걸쳐 고급문화의 기준으로 인정하는 문화 자본으로 자리를 잡은 구조에서 그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은 상징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Bourdieu는 주장한다.

Bourdieu의 문화 자본 개념은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 추진 과정에서 김정은이 선택한 노선이 왜 그 측근집단의 범주를 넘어 북한의 일반주민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설명하는데 유용한 분석도구로 보인다. 오늘날 북한사회는 지도자 김정은의 선택이 곧 고급문화를 대표하는 문화 자본으로 통용이 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석향, 2012).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자 하는 핵개발 및 핵보유 분야에서 지도자와 다른 노선을 선택하겠다는 것은 곧 고급문화/ 저급문화 구분 차원을 넘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현실에서 핵개발 및 핵보유 관련 현황을 분석할 때 김정은을 제외한 사람의 행위를 문화 자본 개념을 동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일로 보인다. 반면 김정은 개인의 행위를 분석할 때 문화 자본 개념은 강력한 의미를 지니는 분석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6) 구별짓기 distinction

Bourdieu의 주장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문화적 취향이나 성향의 측면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서 차별화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 간 취향과 성향 사이에 위계질서를 부여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문화 자본을 사회 전체가 마땅히 따라야 할 모범적인 생활방식으로 내세워 권위를 부여하려는 경향을 끊임없이 시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인류 역사상 사회적-문화적 의미를 지닌 구별짓기 작업이 끊임없이 등장해 왔다는 것이 Bourdieu의 주장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구별짓기 작업을 하는 영향력이 한 사회의 구성원 사이에서도 불균등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향력이 강한 집단이 구별짓기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집단의 구성원은 물론이고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한층 더 열정적으로 추종하는 과도한 사회화 oversocialization 현상도 자주 발생한다. 반면 영향력이 아주 미약한 집단의 구성원은 타인과 자신을 구분하는 구별짓기 기준을 주동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거니와 비록 이들이 어떤 기준을 만들어 제시한다고 해도 사회 내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귀착될 따름이다.

Bourdieu가 제시한 구별짓기 개념도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 현황에서 나타나는 김정은 개인의 행태를 설명하려 할 때 분석도구로 매우 뛰어난 유용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비투스나 문화 자본의 사례처럼 구별짓기 개념도 김정은을 제외한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이나 북한 내 일반주민의 행태를 설명할 때 그다지 큰 설명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7) 북한 핵개발 현황에 적용 가능성 탐색

이 부분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내용을 적용하여 북한 핵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비핵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본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주요 내용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인간과 사회의 관계 등 늘 유동성을 지닌 채 변화하는 과정으로서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매우 유용한 이론적 도구로 쓰인다. 반면 비교적 정적인 구조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려 할 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론적 도구로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다시 말해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유동적이고 타협적이고 비결정적인 사회 현상을 분석할 때 유용하지만 그 반면에 고정적이면서 비타협적이고 결정적인 사회 현상 분석에는 취약하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 말은 곧 북한 핵개발 현황이 고정적-비타협적-결정적 속성을 지닌 현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동원하여 분석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라 하겠다. 반면 북한 핵개발 현황이 유동적-타협적-비결정적 속성을 지닌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론적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분석과 다른 창의적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이켜 보면 지금까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활용하여 북한 핵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이론적 결과를 도출해 내려는 시도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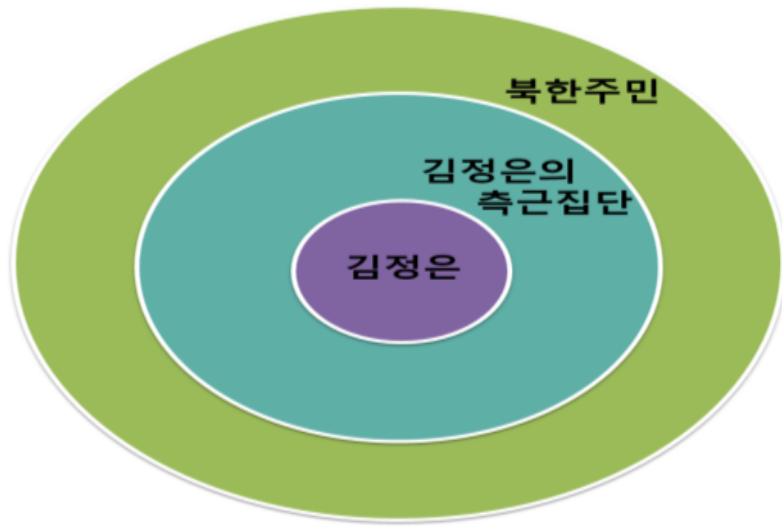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론적 도구로 활용하여 북한 핵개발 현황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비핵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론적 작업에 불과하다 하겠다. 말하자면 시론적 작업인 만큼 논리적 완성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분석 대상인 북한 핵개발 현황이 고정적-비타협적-결정적 속성을 지닌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추진 과정을 세분하여 지도자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을 일반적인 북한 주민과 구분한 상태에서 이들의 자아 개념과 일반화된 타자, 의미 있는 타자, 아비투스, 문화 자본, 구별짓기 같이 동원 가능한 이론적 도구를 적용하여 분석 작업을 시도해 보는 것은 바로 그 시론적 작업이라는 측면에서 가치를 지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다.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 분석

지금까지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을 분석할 때 지도자인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정치적 의도를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을 분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정치적 의도가 곧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해도 좋은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정치적 의도 이외에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으로 지목할만한 요인을 다른 곳에서 찾아봐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일까? 만약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정치적 의도 이외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또 그 요인은 어떤 이론적 도구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서는 시론적 차원에서나마 앞서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 핵개발과 핵보유라는 행위가 표면화되어 등장할 때까지 원동력으로 작동했던 집단을 김정은 자신과 그 측근집단, 일반적인 북한주민 등으로 구분한 뒤 3단계 동심원 차원으로 배치해서 [그림 III-5-1]을 그려 보았다. 우선 북한 핵개발 및 핵보유라는 행위 유형을 결정할 때 가장 영향력이 강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김정은은 안쪽 중심원에 그 자리를 배치해 놓았다. 그리고 김정은의 측근집단은 중간 원에 그 위치를 정해 두었다.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북한주민은 바깥 원에 그 자리를 배치해 보았다.



[그림 III-5-1]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 분석

1)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김정은 개인 요인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을 분석할 때 김정은 개인의 정치적 판단력이나 국제정세 인식의 성향, 생물학적 연령, 심리적 특성 등은 다른 요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기존 연구에서 북한 핵개발 현황을 분석할 때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정치 지도자의 개인적 요소에 집중해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다만 3대까지 이어지는 정치 지도자의 어떤 측면을, 어떤 근거에서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또 한 가지 의문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가 지닌 속성 중에서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부분은 한 번 정해지고 나면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하는 점도 분석과정에서 반드시 검토해 봐야 할 일이다. 만약 어떤 경우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면 관련 사안에 대해 한 번 분석을 끝내면 더 이상 후속 작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의 속성 자체가 유동성을 지니고 있어 일단 정해지고 난 뒤에도 지속적인 변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면 1차 분석을 끝낸 뒤에도 2차, 3차로 이어지는 후속 분석을 계속 시도해야 마땅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이 부분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이론적 도구인 자아 개념과 일반화된 타자, 의미 있는 타자, 아비투스, 사회적 자본, 구별짓기 등을 활용하여 북한 핵개발 과정에서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이 어떻게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분석하는 작업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개인적 특성이 변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함께 논의함으로써 향후 북한 핵개발 현황과 관련하여 이 요인을 두고 후속 분석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III-5-1>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김정은 개인의 속성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론적 도구)	김정은 개인의 속성
자아 개념	자발성과 충동성 경향의 주체아 (I) 측면이 사회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객체아 (Me) 측면보다 강한 자아 개념의 소유자. 개인의 자아 개념 중에서 주체아 (I) 측면이 강하다는 것은 곧 그 인물의 행위 유형에서 충동적 면모가 많이 나타난다는 의미임
	승부욕과 자기 과시의 욕구가 매우 강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음. 김정은은 승부욕을 충족하고 자기 과시를 위해 무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보임.
	3대 세습 지도자로서 단순히 선대로부터 권좌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남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랐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하는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는 인물
일반화된 타자	북한 핵개발 및 핵보유와 관련하여 김정은 내면에 자리를 잡은 일반화된 타자로는 “제국주의의 고립-압살 책동에 맞서려면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실제로 북한당국은 1950년대 후반 이래 “김일성의 위대성” 선전의 근거로 “20세기 들어 두 개의 제국주의를 타도한 ⁶⁸⁾ 지도자”라는 논리를 내세워 왔음.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과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은 몇 십 년 동안 줄곧 북한당국의 차원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제국주의에 맞서는 자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워 왔고 그 흐름에서 핵개발 및 핵보유 노력을 지속해 온 것이었음.
	김일성-김정일에 이어 3대 세습 지도자 지위에 오른 김정은 역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핵개발과 핵보유를 포기할 수 없다는 지침을 일반화된 타자로 내면화한 상태일 것으로 판단됨
의미 있는 타자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이른바 “선대 수령들 유훈을 받들어” 북한 핵개발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김정은 내면에서 의미 있는 타자로 작동할 가능성 높음
아비투스	이른바 “선대 수령” 김정일의 뒤를 이어 지도자 위치에 오른 김정은은 핵개발 및 핵보유로 제국주의의 고립·압살 책동에 맞서 북한사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향을 체득했을 가능성 높음
문화 자본	북한 지도자 위치에 오른 김정은에게는 핵개발과 핵보유라는 목표를 달성하고 제국주의의 고립·압살 책동에 맞서 싸우는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문화 자본으로 내세워 사회적 위력을 행사할 가능성 높음
구별짓기	김정은은 “선대 수령” 김정일과 달리 핵개발과 핵보유에 성공한 지도자로 구별짓기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핵이 있어도 주민 생활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유악한” 무리와 달리 자신은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구별짓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임.

2)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김정은의 측근집단 요인

북한이 핵개발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층에 해당하는 김정은의 측근집단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체제의 특성상 이들의 영향력이 김정은 수준으로 강력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독재국가의 특성상 아무리 최고위층 인사라고 해도 지도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로 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근집단의 구성원이 전반적으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혼자 힘으로 북한 핵개발을 결정하고 추진했다고 보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일이다. 비록 내면에서는 반대 의견을 품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겉으로는 이런 속마음을 전혀 표출하지 않은 채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서 지도자의 의견에 찬성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체제 내부에서 측근집단의 구성원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생활 방식이다. 그런 점을 감안한 상태에서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을 분석할 때 김정은 측근에서 각자 자신에게 맡겨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이들의 행위가 지닌 의미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김정은 측근에 머무른다고 해서 이들이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북한 핵개발에 찬성하고 있을까? 이들은 핵개발 및 핵보유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헌신해 왔을까? 내심 핵개발에 반대하면서도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선호위장을 선택해서 실천했던 사람은 없었을까? 비록 처음에 핵개발에 찬성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뀐 사람도 있었을까?

이런 의문점을 감안하여 다음 <표 III-5-2> 내용을 작성해 보았다. 김정은 측근집단의 자아 개념은 강력한 객체아(Me) 측면과 억눌려 있는 주체아(I)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지도자 김정은과 달리 자신의 내면을 움직이는 충동적 성향의 주체아(I) 측면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면에서 이들은 적어도 외면적으로는 늘 북한체제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 할 따름이다. 다만 이들이 내면적으로도 모두 김정은과 동일한 노선을

68) 북한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김일성은 20세기 들어 세상을 지배했던 일본제국주의와 미국제국주의 등 “두 개의 제국주의를 타승(打勝)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위대성을 지닌 인물이라는 것이다.

지지하는지 의문이 남는다.

아래 <표 III-5-2>에서는 김정은 측근 중에서도 내면적으로 핵개발에 찬성하는 하위집단과 핵개발에 반대하는 하위집단이라는 양극단으로 구분해 보았을 때 두 개 집단의 구성원이 각각 일반화된 타자와 의미 있는 타자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차이를 지니게 될 것인지 제시해 보았다. 지도자의 절대권력을 추구하는 북한 내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어떤 정책에 찬성하는 집단과 반대하는 집단의 존재를 구분한다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라는 의견도 많다. 그러나 김정은의 측근집단 내부에서도 핵개발에 찬성하는 하위집단과 핵개발에 반대하는 하위집단이 양극단에 위치해 있고 그 사이에 조금씩 의견을 달리하는 하위집단이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적어도 이론적인 차원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문제는 김정은 측근 중에서도 내면적으로 핵개발에 찬성하는 하위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숨김없이 마음껏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핵개발에 반대하는 하위집단 구성원은 자신의 의견을 감추기 위해서 선호위장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면 살아남기도 어려운 것이 오늘날 북한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 북한 사회 내부에서는 김정은의 핵개발에 찬성하는 의견만 드러나고 핵개발에 반대하는 의견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준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날 북한사회 내부에서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으로 지내면서 지도자의 노선을 그대로 따르는 대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잘 드러내는 아비투스나 문화 자본, 구별짓기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은 곧 자신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를 멸문지화의 길로 몰아넣은 일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김정은 측근에 있는 사람은 내면적으로 핵개발에 찬성하는 경우에는 두 말할 나위도 없지만 설사 내심 반대하는 의견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면적으로는 지도자의 아비투스나 문화 자본, 구별짓기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자신의 생존방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표 III-5-2>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김정은 측근집단의 속성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론적 도구)	북한 핵개발 과정에 나타나는 김정은 측근집단의 영향력	
자아 개념	<p>사회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객체아 (Me) 측면이 자발성과 충동성 경향의 주체아 (I) 측면을 강하게 통제하는 자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 높음.</p> <p>이들의 객체아 (Me) 측면은 북한체제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사회적 기준을 내면화한 상태로 개인이 타고 난 주체아 (I) 측면을 최대한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p>	
일반화된 타자	핵개발에 찬성하는 하위집단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작동하는 기준을 내면화함으로써 제국주의에 맞서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을 일반화된 타자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 높음.

	핵개발에 반대하는 하위집단	북한이 핵개발 및 핵보유를 할 필요가 없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주변 사람과 같은 기준을 일반화된 타자로 내면화한 것처럼 외부로 표현하는 선호위장 상태로 일상생활을 할 가능성 높음
의미 있는 타자	핵개발에 찬성하는 하위집단	가정과 학교 교육 및 또래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함으로써 핵개발 및 핵보유에 찬성하는 논리를 추종할 가능성 높음
	핵개발에 반대하는 하위집단	보다 강력한 수준의 선호위장을 통해서 외면상 핵개발 및 핵보유의 정당성을 더 강력하게 주장할 가능성 높음
아비투스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와 관련하여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이 특유의 아비투스를 드러내며 이를 문화 자본으로 삼아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기 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함.	
문화 자본		
구별짓기		
		이들은 오히려 지도자 김정은의 아비투스와 문화 자본, 구별짓기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생존할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태로 나타남.

3)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북한주민

북한이 핵개발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주민은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인가? 일반주민의 영향력은 지도자인 김정은이나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과 비교해 볼 때 아주 미미한 수준에 머무를 것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북한당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핵개발 정책의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일반주민의 영향력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 지도자일수록 자신이 휘두르는 힘의 원천을 일반주민의 폭넓은 지지에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내부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아무리 미미한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세함의 정도를 감안해서 관련 현상을 세밀하게 분석해 볼 가치는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아래 <표 III-5-3>에서는 북한 내에서 일반주민이 자아 개념을 만들어 나가고 일반화된 타자와 의미 있는 타자를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서술해 보았다.

<표 III-5-3> 상징적 상호작용론 관점에서 본 북한주민의 속성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론적 도구)	북한 핵개발 과정에 나타나는 일반주민의 영향력
자아 개념	북한 내 일반주민도 사회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객체아 (Me) 측면이 자발성과 충동성 경향의 주체아 (I) 측면을 강하게 통제하는 자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김정은 측근집단의 행태와 다를 바 없음. 그러나 김정은 측근집단의 행태와 비교할 때 북한 내 일반주민의 경우에는 각자 내면화한 객체아 (Me) 측면이 본성을 드러내는 주체아 (I) 측면을 억제하는 정도가 훨씬 더 철저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함. 김정은 측근집단은 지도자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일반주민은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지휘-감독을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 상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왜 본성을 드러내는 주체아 (I) 측면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할 수 있음.
일반화된 타자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제국주의에 맞서려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화된 타자로 작동하고 있음.
의미 있는 타자	가정과 학교 교육 및 또래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함으로써 핵개발 및 핵보유에 찬성하는 논리를 추종할 가능성 높음
아비투스	북한의 핵개발 및 핵보유와 관련하여 일반주민이 특유의 아비투스를 드러내며 이를 문화자본으로 삼아 타인과 자신을 구별짓기 하는 습성을 배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함.
문화 자본	
구별짓기	이들은 사실상 공식 언론매체와 교육자료를 통해 전해지는 지도자 김정은의 아비투스와 문화 자본, 구별짓기 행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하고 있음.

4) 북한 핵개발 과정의 영향력 변화 가능성

이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분석틀을 적용하여 북한 핵개발의 원동력을 설명해 보았다.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북한당국이 핵개발을 추진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여타의 다른 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작동했었는지 그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 보면 김정은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 일반주민 순서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 근거하여 북한 내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작동하는 순위가 고정된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인정하지 않는 관점을 취한다. 오히려 관련 분야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작동하는 순위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이 말은 곧 북한 핵개발에 미친 영향력의 순서를 재조정할 수 있다면 도무지 변화를 용납하지 않을 듯 견고해 보이는 현재 상황도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근거를 두고 김정은과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 일반주민의 영향력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방법을 찾는다면 핵개발과 핵보유 노선으로 치달아가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 변화를 일으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에서 이 부분의 논의를 작성해 보려 한다. 물론 폐쇄성이 강한 북한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핵개발 및 핵보유와 관련한 사회적 영향력의 순서를 한국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한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이론적 도구를 활용하여 북한 내 현실을 분석해 본다면 핵개발 및 핵보유 관련 정책 추진을 둘러싸고 김정은과 측근집단의 구성원, 일반주민이 각각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순위를 재조정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려면 어떤 논리를 개발하여 어떤 방식으로 전파해야 하는지, 관련 작업을 논의하는 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궁극적으로 이런 변화의 촉발 요인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 하겠다. 다음 부분에서 북한당국이 이미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한 현재 시점에서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라.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 방안

2016년 10월 현재, 북한당국은 이미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실질적으로 핵보유국가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선포해 놓은 상태이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지만 북한당국은 제6차 핵실험 징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당국이 비핵화 방침을 충실하게 지키면서 관련 사항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당국이 비핵화 방침에 관심이 없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사회 내부에서는 지도자로부터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핵개발이 곧 체제생존의 관건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북한의 현실이야말로 (김덕홍, 2105: 223-242)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가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면서 강력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라고 하겠다. 다시 말해서 “백두혈통의 후계자이며 최고존엄인” 김정은이 핵개발과 핵보유 노선을 내세우면 북한 내 모든 주민이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정신으로 움직여 나가야 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북한당국이 왜 비핵화 노선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지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오늘날 북한주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국의 핵개발 및 핵보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성향의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를 내면화한 채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행동을 철저하게 조율하는 능력을 지닌 채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상황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장 생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무리 엄혹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사회 내부에 “일부 비정상적인”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 역시 남들과 비슷하게 행동하지도 않고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 내에서 나름대로 생존의 방법을 찾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이런 사람들 역시 적어도 외견상 북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에 부합하는 방향에 맞추어 자신의 행동을 완벽하게 조율해서 표현해야 한다는 부담을 떨쳐 버릴 수 없다는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사회 내부에서는 누구도 감히 “백두혈통의 후계자이며 최고존엄인” 김정은의 결정에 맞서서 핵개발 및 핵보유에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사람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 정부가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비핵화 방안은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 북한주민을 구분하여 이들이 스스로 북한 핵개발 및 핵보유 논리에 부여해 온 상징적 의미에 의문을 품고 관련 상황을 재해석하면서 새로운 의미구조를 만들어 내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북한사회 내부에서 누구나 인정하는 기존의 생활방식이 어느 정도 굳어진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존의 사고방식과 다른 새로운 의미구조를 생각해 내는 계기를 제공하는 일이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민의 관점에서는 이런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존망이 달린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 한국 정부는 과연 무엇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먼저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 북한주민이 각각 지금까지 핵개발 및 핵보유 관련하여 내면화해 온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과제라 하겠다.

기본적으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분석 대상인 현상을 치밀하게 관찰하고 그 속성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과학 이론을 적용하거나 이론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방식의 접근을 거부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사회과학 이론의 역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뒤 그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이론을 도출해 내는 귀납적 방식의 접근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 북한주민이 각각 지금까지 내면화해 온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밀하게 파악한 뒤 그 자료를 토대로 이들이 스스로 각자의 관점에서 핵개발 및

핵보유의 상징적 의미를 해체하고 새롭게 재해석을 이끌어내는 계기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백두혈통,” “최고존엄,”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같은 담론의 의미와 북한 내 작동방식을 면밀하게 분석한 뒤⁶⁹⁾ 그 내용을 토대로 김정은과 측근집단, 주민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음 부분에서 북한 비핵화 시나리오로 정리해 보았다.

마. 북한의 비핵화 시나리오

북한당국은 이미 제5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제6차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는 한편 실질적인 핵보유 국가의 지위도 획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비핵화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단기간에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할 확률을 높이는 일이라 하겠다. 실제로 북한당국이 핵실험을 거듭할 때마다 한국 정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얻어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일을 반복해 왔지만 북한당국은 오히려 제6차 핵실험과 ICBM의 발사 가능성을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가 과연 실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등장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난감하다 해도 핵실험을 거듭하는 북한당국의 행태를 보면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비록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여도 끊임없이 현실을 분석하고 집요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찾아서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적 목표로 하되 그 추진 과정의 시나리오를 단기·중기·장기 단계로 구분해 놓고 각 단계별로 한국 정부가 실행에 옮겨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서술해 볼 예정이다. 이 부분에서 각 단계별 시나리오가 추구하는 목표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Stage 1 단계인 단기 시나리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내 핵개발 및 핵보유 관련 담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촘촘하게 분석해야 한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인력과 비용이 많이 소요해야 하는 작업이지만 북한 내 담론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김정은 측근집단을 포함한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설득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북한 내 핵개발 및 핵보유 관련 담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69) 북한사회가 그 나름의 방식에 따라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발견해 내려면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자료조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른바 “10대원칙”을 기준으로 북한주민 누구나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조직생활의 실체를 파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 내용을 상세하게 논의하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Stage 2 단계인 중기 시나리오에서는 앞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북한 내부에서 핵개발 및 핵보유로 인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각종 분석자료를 토대로 김정은이 정치 지도자의 관점에서 자신이 핵개발 및 핵보유 선언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또 무엇을 잃었는지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면 그 효과는 예상 외로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정은 측근집단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파헤쳐 스스로 자신을 돌아볼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 내 일반주민들 역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고 민생을 돌보지 않고 핵개발에 집착하는 김정일의 노선을 추종하느라 온갖 희생을 감내할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tage 3 단계인 장기 시나리오에서 한국 정부는 김정은 측근집단을 포함한 북한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북한주민은 대부분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이야기를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해서 (김석향, 2012a; 김석향, 2012b; 김석향, 2015) 들을 수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포자기 상태에서 행동하는 것과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할 수 있는 대안이 존재할 때 행동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마련이다.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도 그렇고 북한주민도 역시 이런 현상에서 예외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었을 때 김정은 측근집단을 포함한 북한주민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 만큼 이들을 위해 맞춤형 대안을 제공해 주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 Stage 1: 단기 시나리오: 자료 분석하기

한국 정부는 오늘날 북한당국이 그 사회의 내부에서 핵개발 및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내고 또 배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Stage 1 단계인 단기 시나리오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당국이 관련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작업부터 먼저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뜻이다. 이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북한사회 내부에서 핵개발 및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가 결단코 변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현재 상황에 작은 균열이라도 만들어 내려면 먼저 그 논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파악하는 작업부터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은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 일반주민 등으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핵개발 및 핵보유의 논리를 주장하는 집단을 세분화한 뒤 각 집단별 자아개념과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의 형성 과정 및 작동 방식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한다.

이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려면 각 집단별 범주에 따라 이들의 자아개념과 일반화된

타자 및 의미 있는 타자의 형성 과정 및 작동 방식을 구분하여 분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요건이라 하겠다. 따라서 Stage 1 단계인 단기 시나리오에서 일차적으로 김정은, 그 측근집단의 구성원, 일반주민 등 각 집단의 구성원이 핵개발 및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논리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유포해 나가는지 최대한 세밀하게 자료를 확보한 뒤 관련 내용을 촘촘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추진할 작업 내용을 각각의 분석 대상으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Stage 1-①: 단기 시나리오 - 김정은의 핵개발 및 핵보유 발언 분석

2016년 들어 핵실험을 연속 시행하면서 이른바 핵보유국의 지도자로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정은이 현재의 조건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면 북한 비핵화에 동의하고 실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현재 상황에서 김정은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어 비핵화 방향으로 변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보다는 김정은의 심리적·정서적 현황을 세밀하고 분석한 뒤 그 내용을 반영하여 낮은 강도로 꾸준히 자극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핵개발 및 핵보유와 관련한 김정은의 자아개념과 아울러 그 자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일반화된 타자와 의미 있는 타자의 내용을 파악하는 작업부터 시행해야 할 것이다. 물론 김정은을 상대로 직접 면담하거나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상태에서는 북한당국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김정은의 발언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을 별도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촘촘하게 분석하는 작업부터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Stage 1-②: 단기 시나리오 - 김정은 측근집단의 핵개발 및 핵보유 발언 분석

북한당국이 발표한 공식자료를 통해서 핵개발과 핵보유 관련 담론을 분석하면서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생각이나 발언 내용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은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 되겠다. 뿐만 아니라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이들의 생각을 추론하는 작업은 언제나 객관성과 신뢰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어진 여건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북한당국의 공식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발언을 분석함으로써 내면의 생각을 추론하는 방법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Stage 1-③: 단기 시나리오 - 북한이탈주민의 핵개발 및 핵보유 발언 분석

그나마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의 발언은 북한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부족한 수준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 반면 상대적으로 일반주민이 내면화한

생각을 측정해 낼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시행해서 관련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다.

■ Stage 2: 중기 시나리오: 김정은과 북한주민에게 의문을 품게 하기

생각해 보면 오늘날 전쟁을 제외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북한 비핵화의 유일한 방법은 북한주민 스스로 당국의 핵개발 및 핵보유 논리에 동조하지 않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물론 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길고 지루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북한주민 스스로 당국이 제공하는 핵개발 및 핵보유 논리에 스스로 의문을 갖게 된다면, 그 의문을 표현할 용기를 지닌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북한 비핵화의 방도가 될 수 있겠다. Stage 2 중기 시나리오에서는 바로 이 점을 구상해 보았다.

Stage 2-①: 중기 시나리오 - 김정은의 변화 가능성 낮은 강도로 자극하기

앞서 Stage 1-① 단계에서 분석한 토대로 분단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시대별로 비교하면서 김일성-김정은-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백두혈통”세습 후계자가 북한주민의 “최고존엄”으로 군림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정말 “이민위천(以民爲千)” 정신을 실천해 왔는지 김정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시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작업을 통해서 단기간에 효과를 얻고 김정은의 변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사실상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김정은 스스로 주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백두혈통” 후계자로서 “최고존엄”모양새를 유지하려는 욕구를 지니고 있는 한 이렇게 낮은 수준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 앞으로 시간을 두고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Stage 2-②: 중기 시나리오 - 김정은 측근집단 구성원의 내면적 자부심 흔들기

김정은과 달리 그 측근집단 구성원의 경우에는 2016년 현재 핵개발 능력을 강조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선언하는 북한당국의 행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양가감정(兩價感情, ambivalence) 보유의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한편으로 김정은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자신과 가족이 어느 정도 안온한 생활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에 묶여 있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북한주민의 생활이 얼마나 피폐한지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서 내면의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집단이기도 하다.

사실상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이라면 북한 내 상류층 생활을 유지하면서 아무런 갈등이 없이 김정은을 무조건 추종하거나 그 반면에 내심 심각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외면상 김정은을 추종하는 모양새라도 취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일반주민을 상대로 지도자 김정은의 뜻을 전달하고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기도 하다. 바로 이와 같은 양면적 특성 때문에 이들은 늘 김정은의 일거수일투족의 의미를 민감하게 파악해야 하고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바깥세상” 동향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북한사회의 기준에 적합한 설명을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김정은 역시 북한체제를 이끌고 나가려면 측근집단의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달리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 자신의 내면을 어느 정도 드러내면서 의견을 공유하는 기회를 마련하기도 한다. 또한 이들이 “바깥세상” 동향을 파악할 기회를 허락하는 것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용하는 교육지책이라 하겠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이 어떻게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또 일반화된 타자와 의미 있는 타자의 내용을 내면화하는지 파악한 뒤 이들의 자부심을 흔드는 전략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논리의 출발점은 철저하게 북한의 방송과 신문이 공개하는 북한당국의 공식담론을 토대로 정교하게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말하자면 북한당국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공개하는 내용 중에서도 측근집단의 구성원에게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을 토대로 김정은을 “최고존엄” 자리에 두고 “백두혈통” 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 길이 과연 역사 앞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되짚어 생각할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측근집단의 구성원은 누구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등 3대세습이 이어지는 동안 북한 지도자가 실제로 “이민위천(以民爲千)”원칙을 실천했는지, 주민의 고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백두혈통” 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옳은지, 김정은을 “최고존엄” 자리에 두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머물러 왔다. 실제로 황장엽(1999: 5) 발언을 보면 자신이 “허위와 기만의 도구로” 이용된다는 자각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⁷⁰⁾ 이 부분을 인용해 보면 북한 내부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혜택을 누리는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이 오히려 심리적 부담을 지고 있을 가능성이 드러난다.

나는 오랫동안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살아왔다. 처음에 나는 그 허위와 기만이 근로인민대중의 해방을 위하여, 즉 착취계급과의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후에 그것이 독재자의 이기주의와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독재자의 이기주의는 수령의 개인숭배 사상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북한은

70) 황장엽은 저서를 발간하면서 저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계급주의와 수령의 개인숭배가 가장 심한 나라이다. 나는 북한통치체제의 중추부에서 독재자에게 아첨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허위선전에 동원되지 않을 수 없었다. 허위와 기만은 진리를 탐구하는 학자의 양심, 학자의 양식과는 양립될 수 없다. 북한체제에 복무하면서 나를 가장 괴롭힌 것은 바로 허위와 기만의 도구로 내가 이용되고 있다는 자각이었다.(황장엽, 1999: 5)

2016년 들어서 북한당국이 주민의 고통 속에서도 핵실험에 집착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동안 김정은 측근에서 북한체제를 지키는 일에 혼신을 다하면서 자부심을 지녔던 사람일수록 자신의 행적을 돌아보는 계기가 주어지면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 정부가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을 향해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지 돌이켜 생각해 볼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일이라 하겠다.

Stage 2-③: 중기 시나리오 - 북한주민에게 당국의 논리에 의문을 품게 만들기

핵개발 및 핵보유와 관련하여 북한주민이 내면화하고 있는 일반화된 타자와 의미 있는 타자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북한의 방송과 신문이 공개하는 북한당국의 논리를 일차적인 분석 자료로 삼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여 부차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북한주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자료조사를 시행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당국이 공개하는 신문과 방송 내용을 통해서 지도자 김정은과 그 측근집단이 제시하는 핵개발 및 핵보유의 정당성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아비투스(習性)를 어떻게 내면화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당국이 일반화된 타자나 의미 있는 타자로 제시하는 행위의 기준은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수밖에 없겠다. 이와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의견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해서 보완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을 상대로 김정은이 추진하는 핵개발 및 핵보유 주장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품게 하려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유인하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 하겠다. 그런데 외부인 관점에서 북한주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비논리적으로 보이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북한주민의 행위가 나타날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 이들로 하여금 김정은이 추진하는 핵개발 및 핵보유 주장이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을 품도록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주민의 행위를 구성하는 논리의 실체를 파악하는 작업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당국은 주민들을 향해 핵개발에 성공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면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담론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김정일 시대에는 이른바 “총대철학” 논리를 바탕으로 “평화가 아무리 귀중해도 절대로 구걸은 하지 않겠다”하는 정신으로 북한주민 누구나 무장을 갖출 것을 촉구하였다. 권현익과

정병호는 (2013: 126-134) 북한당국이 이른바 “총대철학” 논리를 반영하여 “우리의 총창 우에 평화가 있다” 하는 제목으로 노래도 발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실이 맥락에서 총대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는 하지만 “자랑스러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주민들이 마땅히 바쳐야 하는 의무를 뜻하기도 한다는 것이 두 사람의 지적이었다. 주민들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내할수록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의향은 줄어들고 자연히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비록 상황이 그렇게 어려워진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총대정신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북한당국에서 끊임없이 제공해 온 논리의 핵심이었다고 권헌익과 정병호는 (2013: 129) 주장한다.

이제 한국 정부는 북한주민을 향해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희생을 감내하며 핵무기 개발에 힘을 쏟아 온 자신의 인생이 과연 가치 있는 선택이었는지 의문을 품어보도록 촉구할 때가 되었다. 누구를 위해서 왜 그런 희생을 감당하면서 힘겹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할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최고존엄” 담론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의 계승자만 “최고존엄” 지위를 누려야 하는지, 이들은 과연 일반주민을 위해 “이민위천(以民爲千)”정신을 실천해 왔는지, 실제로 이들이 주민의 생활을 보살피느라 “쪽잠에 췌기밥”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했었는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다시 그 아들로 권력을 넘겨주는 이들의 존재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희생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Stage 3: 장기 시나리오: 대안 제시하기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측근집단을 포함한 일반주민을 향해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희망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들이 자신의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국 정부가 제시하는 대안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역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북한주민이 스스로 핵개발 및 핵보유 선언으로 국제사회의 제재가 나날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희생은 아무런 가치를 지니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내면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해 주어야 한다. 북한당국이 지금처럼 계속 핵개발 및 핵보유 노선을 고수할 경우, 주민들이 아무리 큰 희생을 감내해도 결국 강성대국은 고사하고 오히려 파국을 맞게 될 뿐이라는 상황을 내면화하는 단계에 이르면 김정은의 통치체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록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김정은 측근집단을 포함한 북한주민을 향해 장기적 관점의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Stage 3-①: 장기 시나리오 - 김정은 흔들기

2016년 현재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 역시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둔 미숙한 가장이라는 점에서는 또래의 청년과 다를 바 없다. 김정은도 자신의 미래를 걱정하며 자녀의 앞날을 염려하면서 가족의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평범한 사실에 기반을 두고 한국 정부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지금과 같이 핵개발과 핵보유를 고집한다면 그 결과가 어디로 귀착하게 될 것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촉구하는 전략을 다각적인 방면으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으로 믿는다.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정은이 이런 논리를 쉽게 받아들여서 단기간에 핵개발과 핵보유를 포기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되겠다. 그러나 김정은의 신체 나이를 고려하고 또 젊은 아버지와 남편이라는 특성을 감안한 논리를 개발하여 스스로 생각할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은 유용한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Stage 3-②: 장기 시나리오 - 측근집단 구성원을 위한 맞춤형 미래계획 제안하기

김정은 집권 이후 측근집단의 구성원은 누구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설득력을 지닌다. 장성택을 비롯한 이른바 운구 7인방이 사실상 몰락하고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이들은 당연히 자신의 운명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이들을 향해 한국 정부가 맞춤형 미래계획을 만들어 제안하는 작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들도 다른 사람과 같이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고 가족의 안위를 생각하며 보다 나은 생활을 준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 경력을 쌓아 온 엘리트라는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 미래계획을 준비하여 제안한다면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인지 모를 일이라 하겠다.

물론 이런 작업이 과연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누구도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김정은 측근집단의 구성원이 한국 정부가 제안하는 맞춤형 미래계획을 실제로 받아들여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들의 일상적 행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은 단언할 수 있겠다.

Stage 3-③: 장기 시나리오 - 북한주민에게 “주체형” 삶의 경로 제안하기

2016년 북한주민은 분명히 2000년 전후 막 고난의 행군기를 벗어난 북한주민과 다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외부소식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듣고 있으며 장마당을 통해 스스로 살아나갈 길을 찾아서 생존해 온 저력을 지닌 집단이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향해 진정한 의미의 “주체형” 삶을 선택하도록 촉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런 노력이 단기간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주민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한 상태에서 이들이 쉽게 받아들일만한 논리로 “주체형” 삶의 경로를 제안해 보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내 한류열풍을 토대로 이들이 스스로 “주체형” 삶을 만들어 보도록 촉구하는 정책을 실천해 볼 필요도 있다.

6.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본 북한/핵문제의 진단과 해법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학 시각에서 북한/핵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한 첫 시도이자 발걸음이다.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북한/핵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그만큼 신선한 접근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도를 해본다는 탐색적 한계가 있다. 이에 근본적인 ‘진단과 해법’을 제공한다기보다 다학제적 연구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시도해보지 않은 제3의 관점에서 북한/핵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연구는 이 문제에 조금 더 입체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북한/핵 문제에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이론적 틀을 쉽게 발견하지 못함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연구 이론이 애초에 북한/핵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연구는 북한/핵과 관련될만한 이론적 논거들을 찾아보고 이를 소개한 뒤 북한/핵 문제의 궁극적 지향점인 ‘통일’까지 확대해 커뮤니케이션학이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에 관련 논의를 전개해 보았다.

통일 문제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기여도는 그 잠재적인 능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⁷¹⁾ 북한/핵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결국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통일 전략과 방향이 설정되면 그 다음 문제는 결국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deliver)하고 ‘소통’(communicate)하느냐가 되기 때문이다. 이는 상대방에게 선물할 때 어떤 것을 줄지 결정했다면 그 다음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해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思考) 모두를 가리킨다.

흥미로운 것은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종종 선물을 어떻게 포장했는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일본(日本)의 예쁜 선물 포장 문화가 대표적이다. 선물 안에 들어가 있는 손수 쓴 감사의 카드는 선물만큼이나 감동을 준다.

커뮤니케이션이 북한/핵/통일 등의 문제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어쩌면 위의 선물의 예에서처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부차적인 (포장) 문제가 아니라 특히 실행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만큼 통일 메시지를 ‘어떻게’(how)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는 ‘무엇’(what)을 전달할 것인지 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처럼 다학제적 연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접근법은 문제에 대한 대안적 사고를 제시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한국 주요 신문들은 인터넷에 중문판으로 북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중국어로 번역된 한국 언론사의 기사에서 북한의 실상과 폭정 현실을 본 뒤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다는 중국인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는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혈맹’ 프레임에서 ‘폭정’ 혹은 ‘핵무기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71) 본 글은 커뮤니케이션이 북한/핵 문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살펴본 글입니다. 대외용으로 쓰여지지 않았으며, 그럴 경우 저자와 미리 상의해 주십시오.

미쳤다. 커뮤니케이션학의 프레이밍 이론 (framing theory)을 적용해보면 이러한 분석/해설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한국에서는 고고도 미사일방어 (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논쟁이 한창이다.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배치하면 중국이 어떤 보복을 할까 등 한국 언론들은 경쟁적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이 사안을 부각하고 있다. 정책관계자 입장에서는 한국 언론이 ‘사드’문제를 강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것이다. 언론이 사드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어젠다’(agenda)로 만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또한 사드 문제를 중국에 설득시켜야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이를 ‘중국을 겨냥’(aiming at China)한 무기체제가 아닌 북한의 도발로부터 ‘한국을 보호’(protecting South Korea)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보기를 희망할 것이다.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은 것이고, ‘사드 배치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지 중국이 아니다’ (THAAD is about North Korea, not China) 라는 스토리텔링의 내러티브를 전달 및 확산하고 싶은 것이다. 사람들이 사드 문제에 관심을 갖게 유도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학에선 ‘어젠다 세팅’ (agenda setting)이라 하고, 사드 문제의 본질이 ‘중국’이 아닌 ‘북한’이라고 보여주는 것을 ‘프레이밍’ (framing)이라고 말한다.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 특정 부위가 부각되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주위에 벌어지는 굵직한 사안들은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 새롭다. 그것과 관련한 이론들을 발견할 수 있고, 연구를 하다 보면 나름의 대안적 아이디어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커뮤니케이션학이 북핵문제 연구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북한/핵/통일 문제에 있어서 기존의 정치공학/국제관계 시각이 아닌 다른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기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결론이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제안을 하려 한다. 이를 먼저 언급하는 것은 차후 다뤄질 이론적 내용들을 살펴볼 때 이러한 제안들을 염두에 두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결론 부분에서는 이 외에도 빅데이터 사용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전이 커뮤니케이션학 관점에서 어떻게 북한/핵/통일 문제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다.

첫째, 북핵문제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대폭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북핵과 통일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다분히 정치학적 혹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가 20여년이 지났어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접근법 또는 정치공학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협공’ 분야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둘째, 한국이 원하는 목표와 어젠다를 너무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in your face) 접근법을 지양하고 조금 모퉁이 길로 돌아가는 ‘투 스텝’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한국은 북핵/통일문제에 있어서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엔 중국의 협조 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중국 정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인들의 대북 인식을 바꾸는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학의 ‘사용과 만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에 의하면 사람들은 어떤 어젠다가 강제적으로 주입될 때보다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그 어젠다를 선택할 때, 관련 아이টে 더 욱 호감을 갖고 애착을 느낀다. 상대방 손에 직접 쥐어주는 것보다 상대방의 손에 닿을 만한 곳에 놓아 그들이 이를 직접 ‘선택’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다.⁷²⁾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에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며 많은 중국인들을 ‘지한파’로 만드는데 기여한 이유는 공공외교가 교육적이고 계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락’적인 니즈(needs)를 파악한 접근법을 택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부처가 북한/핵/통일 문제를 위해 주변국에 공공외교를 펼칠 때 민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 혹은 지역 전문가들 (communication specialists & area experts)들을 내세우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미국 백악관이 공공외교 담당으로 외교관이 아니라 구글(Google) 등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할 인재들을 채용하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뒤에서 리드’ (to lead from behind)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 전략을 계획, 조율하고 실무는 현장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이 협상을 할 경우, ‘전략가’ (strategists)와 ‘협상가’ (negotiators)를 분리해 운영할 수 있다. 협상가는 상대방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다. 이때 정부 전략가는 협상의 지침을 내리고 중국의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숙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실제 협상에 들어간다. 혹은 협상가가 현장에 배치해 ‘쪽지’등으로 전략가를 코치할 수 있다. 이것은 현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다국적 기업들이 전략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72) 필자는 중국에서 미국 학자가 중국대학생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지켜볼 경우가 있었다. 중국 대학생들은 미국학자가 “당신은 중국 공산당에 세뇌를 당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강한 반발감을 표출했다. 그 중국 학생은 “나는 세뇌당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해보고 중국에는 서구식 민주주의보다는 사회주의가 더 맞다는 판단을 내리고 선택한 것이라”라고 강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 중국 학생은 어려서부터 중국식 사회주의 교육을 받으며 그 공산당 사상을 내재화하는 과정을 겪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신이 공산당이념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혹은 그렇게 믿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 선택의 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더욱 강한 신뢰와 집착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한다.

가. 서론

‘커뮤니케이션’은 인간을 규정하는 본질적 특징 중 하나다. 그래서 인간을 커뮤니케이션의 존재, 즉 ‘호모 커뮤니쿠스 (Homo Communicus)’라 부른다. 북한 문제의 상당 부분도 결국은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는가와 관련된다. 통일 문제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그 잠재적인 능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 통일 전략과 그 방향이 설정되면 그 다음의 문제는 북한을 비롯해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유관당사자들, 즉 오디언스 (audience)에게 그 메시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 (deliver)하고 ‘소통’ (communicate)하느냐다.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하면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얘기해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가? (Who says what to whom with what effect?)’의 과정이 된다.

비유하자면 이는 상대방에게 선물할 때 어떤 것을 줄지 결정했다면 그 다음엔 그것을 어떻게 ‘포장’해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사고(思考) 전부를 가리킨다. 때로는 선물 자체보다 정성들인 포장이나 선물 속 카드에 손수 쓴 몇 글자가 더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 이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언론학자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그 유명한 명제 ‘미디어는 메시지다’ (Medium is the message)가 등장했고 그가 던진 화두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할 때마다 되새김질되고 있다.

196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토론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TV토론이었다. 이 토론을 라디오로 들은 사람들은 닉슨 (Richard Nixon)이 훌륭한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했지만 TV를 통해서 같은 토론을 본 사람들은 리처드 닉슨보다 훨씬 젊고 미남인 존 F. 케네디 (John F. Kennedy)가 훨씬 더 훌륭한 지도자감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가가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라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결국 케네디가 당선되었다.) 같은 인포메이션을 청각이 아닌 시각으로 전달한 것이 미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바꿀 정도로 지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다. ‘어떻게 (how)’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지가 ‘무엇’ (what)을 전달하는 가에 비해 지엽적이지 않으며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본질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1980년대 컬러 TV가 등장해 보급되자마자 가수들은 옷과 화장에 훨씬 신경 쓰기 시작했다. 흑백 TV에서는 노래만 잘하면 됐지만 컬러TV는 옷의 색깔, 심지어 피부 색조마저도 시청자들에게 회자되게 하며 가수의 인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대중 가수의 본질은 노래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얻는 것이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청각적 --> 시각적)은 사안을 바라보는 본질적 성격의 변화를 가져온다.

나.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 개념

다음은 본 연구와 관련한 커뮤니케이션학의 주요 개념이다.⁷³⁾

- 강효과 모델 (powerful effects model): 군중의 마음속에 마치 총을 쏘거나 수용자의 몸속에 직접적으로 주사하는 것처럼 미디어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으로 이를 피하주사와 비교하는 매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모델.
-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 피드백 그리고 통제에 관한 연구.
- 기만 (deception): 수신자에게 잘못된 신념이나 결론을 주입하기 위해 송신자가 의도적으로 전달한 메시지.
- 기호학 (semiotics): 기호에 대한 연구와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틀 짓기 (framing): 의제 설정 이론에 따르면 특정한 대상을 논할 때 의제를 포섭하기 위해 주제별로 제한된 수의 관련 속성들을 선택하는 것. 이는 상이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다른 것은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반면 실재에 관한 일부 측면에만 집중을 요하게 함.
- 내용 분석 (text analysis): 어떤 텍스트의 특징을 기술하고 해석하는 연구방법.
- 누설 (leakage): 내적 상황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내는 비언어적 단서.
- 다의성 (equivocality): 정보와 관련한 애매모호함의 정도로 충분한 정보라기보다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함.
- 담론 형성 (discursive formation): 문화연구에 따라 어떤 가치나 규범 체계가 문제없이 자연스럽게 이데올로기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 담론 (discourse): 푸코에 따르면 언어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틀 지으며, 역사적 순간에 특정한 주제에 관한 지식을 재현하는 일련의 진술문 꾸러미.

73) 이러한 개념과 이론에 대한 정의는 커뮤니케이션학 교재에 기본적으로 소개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뒤에 소개된 '참고 문헌'에서 그대로 볼 수 있다. 우리의 이해를 돕는 흥미롭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소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옮겼다.

- 담론적 폐쇄 (discursive closure): 커뮤니케이션 비판 이론에 따르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잠재적인 불만을 억누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왜곡한 커뮤니케이션.
- 대칭적 커뮤니케이션 (symmetrical communication): 동등한 권력에 기반한 상호 교환.
- 독립 자아 (independent self): 체면 협상 이론에 따르면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스러운 존재라고 지각하는 개인.
- 동의 (consent): 피고용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이익 목표에 능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과정.
- 부메랑 효과 (boomerang effect): 사회적 판단 이론에 따르면 설득의 과정에서 설득자가 원하는 효과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영향력.
- 사회적 구성주의 (social constructionism): 대화 속에 놓인 사람들이 그들이 사회적 실재를 함께 구성한다는 신념.
- 선별적 노출 (selective exposure):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격차가 있는 정보로부터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기 때문에 기존에 믿고 있는 아이디어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원칙.
- 수면자 효과 (sleeper effect): 종종 수용자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메시지는 기억하지만 그 메시지의 정보원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경향성.
- 이용과 충족 (uses and gratification): 텔레비전 시청자가 그들의 정보, 개인적 정체성, 사회적 상호작용, 혹은 오락과 같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미디어 효과에 대한 접근 방식.
- 인지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어떤 대상에 대한 두 가지 신념 혹은 신념과 행동 사이의 불일치때문에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기제로 특정 신념을 변화시키는 동기.

다. 북한/핵문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적용

이용과 충족 이론(uses and gratification theory):

매스미디어가 사람들의 내재된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이론이다. 이전에 북한에 들어가는 선전물 ('빠라')은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정보추구욕구'에 집중했지만 최근엔 USB에 한국의 드라마 등을 담으며 그들의 '오락추구욕구'를 충족시키고 있다. 이는 그들에게 남한의 실상을 알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를 동경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 문제'가 더 이상 따분한 주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법론으로 흥미롭고 창의적으로 접근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북한 주민들이 한국드라마가 담긴 USB를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져오거나 몰래 시청한다는 것은 이 욕구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미디어 이용이 수용자의 만족, 욕구, 기대, 동기 등에 의존한다는 아이디어는 매체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제기됐을 만큼 오래됐다. 이 중 전형적인 것이 정보, 오락, 교제, 기분전환 혹은 현실도피 욕구다. 특정 미디어나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용자는 종종 광범위한 동기유형에 따라 분류된다. 여기서 제기되는 가장 주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사람들은 '왜'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갖고 미디어를 이용하는 가다. 1940년대 미국에서 시행된 초기 연구는 시간을 때우기 위한 피상적이고 분별없는 이야기로 치부됐던 낮 시간 라디오 연속극이 여성 청취자들에게 때때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했다. 라디오 연속극은 청취자들에게 조언과 격려의 원천이 됐고, 주부와 어머니의 역할모델을 제시했으며, 눈물과 웃음을 통해 감정을 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용과 충족 이론은 한국에서 많이 적용된 매스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하나다. TV, 웹블로그, 인터넷, 휴대폰 그리고 일반 전화의 이용 동기 등을 분석하는 데 이 이론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드러냈다. 박성희와 최준호 (2004)는 한국과 미국의 네티즌들이 어떤 인터넷 이용 동기와 행태를 갖고 있는가를 비교분석했다. 한국 응답자 440명, 미국 응답자 502명을 온라인 서베이를 통해 조사한 결과, 한국 네티즌들은 주요 동기로 '친교' (companionship)를 꼽은 반면, 미국 네티즌들은 '정보추구'를 택했다. 한국 네티즌들의 친교 동기는 종교사이트 이용, 음악 및 비디오 다운로드 등 폭넓은 범주에서 적용되고 있었다. 저자들은 한국의 인터넷 문화가 강한 커뮤니티 문화를 반영한다고 결론지었다.

이것은 북한주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를 '소비'하는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한체제에 대한 염증인지, 정보부족 해소 욕구인지, 아니면 삶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탈북하기 전에 남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학습용인지 말이다. 탈북자들을 통한 관련 연구는 풍선 열기구 등을 이용해 대북빠라/선전물을 투하할 때 어떤 것을 그 안에 넣을 지부터 USB에 어떤 영화를 담을 지까지를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프레이밍 이론 (Framing theory):

사회학자 고프만(Goffman, 1974)에 의해 제시된 프레이밍 이론 ('틀짓기 이론')은 사물을 바라보거나 해석할 때 사용하는 준거틀이 다르다는 점에서 착안됐다. 이론은 수용자의 가치와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이용될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한국 주요 신문들은 인터넷에 영문 및 중문판으로 북한 기사를 내보기 시작했다. 이는 '혈맹' 관계 프레임으로 북한을 바라봤던 중국인들의 이미지를 바꾸는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중국어로 번역된 뉴스에 비춰진 북한의 실상과 폭정 현실을 보고 많은 중국인들은 북한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다. 놀랍게도 이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중국 학자들도 이에 공감했다. 중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혈맹' 프레임에서 '폭정' 혹은 '핵도발' 프레임으로 전환된 것이다.

프레이밍(틀짓기) 이론은 아주 매력적인 개념으로 많이 연구되고 적용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 중 하나다. 틀짓기 이론은 언론에서 제공하는 틀에 따라 수용자가 뉴스를 학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수용자는 언론에서 제공하는 틀 자체를 배우게 된다고 가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틀짓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분명하지 않다.

틀짓기 연구의 기초는 엔트만 (Entman, 1993)이 제공했는데, 많은 연구자들은 틀짓기 과정에 대한 하나의 일반적 패러다임을 만들려고 했던 그의 시도를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단젤로 (D'Angelo, 2002)는 지금까지의 연구경향을 볼 때 최소한 세 가지의 다른 틀짓기 연구 패러다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인지적' 접근으로 저널리스트의 설명이 담긴 텍스트가 수용자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두 번째는 '구성주의' 접근으로 저널리스트가 뉴스 제공자 입장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비판적 접근으로 뉴스들을 뉴스 수집 과정의 기계적 절차와 엘리트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 뉴스의 헤게모니적 영향력이 틀짓기의 결과라 보기도 한다.

비록 복잡한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는 뉴스들이 수용자에 특정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아이엔가 (Iyengar, 1991)는 사회문제를 다룬 뉴스 틀에 따라 수용자(오디언스)가 사건의 가해자가 아닌 희생자를 오히려 비난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1991년 걸프전쟁 관련 보도의 틀짓기가 수용자들이 외교적 해법보다 군사적 조치를 인정하도록 만들었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이는 틀짓기 이론을 효과적으로 적용했을 때 정치가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지어 전쟁의 정당화도 가능하게 한다.

북한에 이를 적용한다면, 이 이론의 과정을 역추적해 북한이 남한에 대해 도발/전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 (guiding communication)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이 연례행사로 거행하는 군사훈련이 '북한 침공 준비 행사'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프레이밍 이론은 종종 뒤에 거론될 어젠다세팅 이론과 함께 언급된다.

사이버네틱스 이론:

사이버네틱스 (cybernetics)라는 용어는 MIT의 학자 노버트 위너 (Norbert Wiener)가 인공지능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을 정보 처리 과정으로 파악하려는 이러한 생각은 벨 전화회사 소속의 연구 과학자인 클로드 섀넌 (Claude Shannon)에 의해서 발전됐다. 섀넌은 화자의 메시지를 원음과 똑같은 소리로 청자에게 전송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론의 궁극적 목적은 정보의 양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의 양은 얼마나 많은 잡음(noise)을 이겨내는가에 의해 측정된다. 특이사항은 궁극적 목표가 메시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메시지를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메시지에 확신을 불어넣음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인 사이에서 의례적 전화통화로 매일 똑같이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말을 당신한테 어제 했는데 왜 오늘 또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은 연애를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만다. 커뮤니케이션도 마찬가지다. 화자가 아닌 청자(수용자)의 입장에서 봐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사이버네틱스 이론은 메시지의 전달자보다는 수용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즉 수용자에게 편향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도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의 ‘일관성’에 주의해야 한다. 진보,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북한에 대한 자세와 전략, 통일 전략이 바뀌는 것은 메시지 불신의 근원이 된다. 이럴 경우 나중에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도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메시지의 일관성은 이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의제설정 이론:

의제설정 (agenda-setting)이란 말은 정치영역에서도 자주 쓰이는데 선거 캠페인을 배경으로 오랫동안 관심사가 됐던 현상을 기술하기 위해 맥콕스와 쇼 (McCombs and Shaw, 1972; 1993)가 만들어냈다. 이 이론은 버나드 코헨 (Bernard Cohen, 1963)의 주장, 즉 언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전달하는 데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지만 무엇에 관해 생각해야 할지를 전달하는 데는 대단히 성공적이라는 주장에 기반한다. 일상적으로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어떤 뉴스는 머릿속에 남아있는가 하면 그런 게 있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뉴스도 많다. 즉, 의제설정이론은 미디어가 공중에게 어떻게 생각하도록 설득할 수는 없지만 대신 무엇에 대해 생각하도록 할 수는 있다는 이론이다. 매스미디어가 반복된 뉴스 보도를 통해 공중의 마음에 이슈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즉, 미디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더 주목하고 많이 다루면, 실제 그렇지 않더라도 공중은 그 이슈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런 면에서 의제설정 (agenda-setting)은 프레이밍 이론보다 더 실행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관심만 끌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⁷⁴⁾ 관심을 끈 후에 그것을 오디언스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하는, 즉 프레이밍을 바꾸거나 조정하는 것은 훨씬 더 도전적인 일이 된다.

맥콕과 쇼는 1968년 대통령 선거 당시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지역에서 아직 누구에게 투표를 할 것인지 결정하지 않은 유권자 100명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내용분석의 대상은 5개 신문, 2개 뉴스 잡지, 2개 TV 뉴스 프로그램이었으며, 아이템은 선거 관련 뉴스내용이었다. 그들은 이를 15개 범주로 코딩한 뒤 주요 뉴스와 주변 뉴스를 구분했다. 그 결과 주요 뉴스 항목에서 미디어에서 강조한 이슈와 그 이슈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유권자의 인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corelation)가 강하게 나타났다. 언론 매체에 의해 자주 노출된 주제를 대중은 ‘중요’하다고 느꼈다. 독자들은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자주 거론되는 토픽은 중요한 토픽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것은 ‘의제 설정’의 성공을 의미한다.

맥콕과 쇼는 채플힐 연구에서 미디어 의제와 공중 의제의 상관관계를 밝힌 이후 1977년에는 양 변인 간의 인과관계(causality)를 밝히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로트 지역에서 더 큰 표본을 대상으로 여러 시점에 걸쳐 패널 디자인을 실시했다. 샬로트 지방의 신문과 2개 TV 저녁 뉴스를 내용분석해서 얻은 시차상관관계를 통해 둘은 미디어 의제가 공중 의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뉴스미디어가 공중에게 하루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공중은 이에 따라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 의제설정과 관련한 핵심적인 아이디어다. 이와 관련해 트레나만과 맥퀘일 (Trenaman and McQuail, 1961)은 ‘사람들은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들은 것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보면 미디어가 중요하게 다룬 이슈의 순서와 정치인들 그리고 공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의 순서는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디어링과 로저스 (Dearing and Rogers, 1996)는 의제설정 과정을 이슈를 제시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전문가, 공중 그리고 정치적 엘리트들로부터 주목받기 위해 벌이는 경쟁이라고 정의했다.

라자스펠드 (Lazarsfeld et al., 1944)는 의제설정을 ‘이슈를 구조화하는 힘’으로 묘사했다. 정치가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유권자에게 납득시키려 한다. 이는 정치에서 특정한 입장을 취하고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연구와 토론을 통해 미디어의 의제설정이 생각보다 그리 간단하지 않고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다는 사실은 밝혀졌다. 하지만 이러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개인적 태도, 행동 변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의제설정 이론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디어는 일련

74) 이를 마케팅 종사자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노이즈 마케팅’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다. 예를 들어 김정은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은 외부의 관심을 끌고 심지어 카툰 캐릭터로 성공하였지만 그것이 북한의 대외이미지를 개선하는 데는 기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슈의 상대적 현저성을 판단하는 데 다른 미디어와 의견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한 주력 매체의 보도를 다른 매체가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미디어의 의제는 현실세계를 알려주는 지표와 잘 맞지 않는다. 즉,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접하는 ‘뉴스’등이 꼭 현실과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에 의해 ‘어젠다 세팅’ 됐거나 어떠한 영향에 의해 ‘프레이밍’됐을 가능성이 있단 것이다. 셋째, 의제설정에서 중요한 점은 이슈의 측정가능한 절대적 중요성이 아니라 이슈를 정의하고 부각시키려는 세력이나 사람들의 상대적 힘이다. 즉, 뉴스의 중요성은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뉴스는 그 자체로 중요할 수 있지만 미디어에 의해 ‘중요한’ 뉴스로 부각될 수도 있다. 이를 뒤집어 보자면 독자들이 관심을 주느냐 마느냐에 의해, 즉 독자들의 관심도에 의해 뉴스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한국의 상품을 중국에 많이 팔기 위해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파워 블로거(网红)’를 한국에 초청한 뒤 한국 화장품 등을 홍보하는 것과 같다. 제품 자체는 바뀌지 않았지만 오디언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대표적인 오디언스 (a representative audience)를 이용해 그 제품에 대한 인지도와 질의 공신력을 높이려는 시도다. 이는 유명인의 ‘인지도’를 빌려 상품의 인지도를 동반 상승시키려는 전략이다. 화장품 광고에 유명 여배우가 등장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그 여배우가 그 화장품을 쓰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다. 넷째, 미디어 의제 중 특정 이슈가 차지하는 위치는 공중의제 안에서 그 이슈의 현저성을 결정한다. 뉴스는 많은 뉴스들 사이에서 서로 경쟁한다. 뉴스끼리도 서로 경쟁한다는 말이 사뭇 생소할 수 있지만 뉴스가 몇 번째에 몇 분의 길이로 배치되느냐에 따라 뉴스의 중요도는 오디언스에게 각인된다.

미디어가 현실세계를 알려주는 지표가 아니며 실은 특정한 사람들 (예를 들어 정부, 정치집단, 상업성을 노린 미디어 집단 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manufactured) 것이라는 개념은 언론학자들 간에 있어서는 매우 보편적인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듯하다. 북핵문제에 있어서의 미국 언론 보도도 마찬가지다. 미국 주요 매체들은 북한/핵 문제를 중요 어젠다로 크게 보도한다. 그래서 한국 시청자들은 미국 정부가 북한/핵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핵 문제에 정책적으로 신경 쓸 여유가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는 없다는 것은 대부분 관찰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미국은 북한/핵 문제를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이를 ‘전략적 인내’ (strategic patience)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정책커뮤니티에 퍼뜨렸다. 실상 이는 북한/핵 문제에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자원을 투자하지 않고 방관하는 ‘無 행동 요법’ (a recipe for doing nothing)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이 마치 전략적 차원의 큰 뜻이 숨어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북한/핵 문제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정책적 책임 유기였던 것이다.

이같은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북한/핵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기대했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에 공조를 맞추다보니 다른 전략을 사용할 정책적 기회가 없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미국 언론’이 북한/핵 문제를 부각시킴에 따라

북한/핵 문제가 ‘미국 정부’의 중요한 의제라고 믿고 있는 한국인들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다. ‘언론 노출’이 꼭 ‘정책적 관심’과 일치하지 않음에도 말이다.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이렇게 사람들의 믿음과 시각에 큰 효과를 낸다. 미국 언론들이 북한/핵 뉴스를 자주 다루는 것은 그것이 미국 정치에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과 북한 지도자의 발언과 행태 (예를 들어 김정은의 헤어 스타일 혹은 놀이터를 방문하는 모습)가 정치적 코미디 (political satire)로서 오락적 효과가 있고 이를 즐기고 소비하는 일정한 독자층이 있기 때문이다.

의제설정이론은 ‘언론 의제’(media agenda)와 ‘공중 의제’(public agenda)라는 두 가지 변인을 중심으로 수용자 서베이와 언론 내용 분석이 병행돼야하는 이론이다. 언론 의제 혹은 미디어 의제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뉴스 주제를 의미한다. 대개 한국 신문들은 하루에 200여개의 기사를 취급하고 있다. 방송사의 종합 뉴스는 하루에 대략 25~30개의 뉴스를 다룬다. 그중에서도 신문 1면 뉴스들이나 방송의 첫 10분 뉴스 등은 중요한 미디어 의제들로서 차후 언급될 공중 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의제에 속하다고 할 수 있다. 미디어 의제 측정은 이처럼 중요도가 높은 지면이나 시간대 보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진행된다.

미디어 의제 뒤를 잇는 단계는 ‘공중의제’를 측정하는 것이다. 공중의제란 수용자의제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다. 월터 리프만 (Walter Lippman)은 이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 (the pictures in our heads)라고 불렀다. 의제설정연구의 세 번째 단계는 독립변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디어의제와 공중의제 중 어느 것이 원인이고 효과인지 알아보는 것이다. 대개 두 의제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즉 미디어의제가 공중의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공중의제가 미디어의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제설정 연구의 마지막 단계는 의제설정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이다. 흔히 이 단계는 생략되거나 간과될 수 있는데, 의제설정이론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미디어는 공중이 생각하는 의제의 중요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디어의 영향력이 매우 막강할 수 있음을 각각의 영역에서 의미 추적하는 것이다. 코헨 (Cohen, 1973)은 정책결정자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것보다 미디어 의제를 보는 것이 공중의제를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신문들이 1990년대 이전까지 대부분 석간이었으나 현재 거의 대부분 조간으로 바뀐 이유도 신문의 의제설정 기능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policy makers)은 대개 조간신문의 뉴스 아이템을 읽은 뒤 이를 그날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한다. 때문에 신문 뉴스 아이템의 의제설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석간신문들이 조간신문으로 대거 전환한 것이다. 의제설정 기능이 강화된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신문을 본다는 의미다. 열독률이 높으면 그만큼 광고 효과와 광고수입증대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핵과 관련해 로동신문의 6면은 주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정당성을 비롯한 대외전략을

표방하고 남한을 비판하며 미국을 악마화 (demonization)하는 데에 활용된다. 남한의 국내정치를 비꼬거나 남한 보도에 반박하는 평론을 내보내기도 한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 정부와 커뮤니케이션 전략가들은 ‘로동신문 6면에 대한 반박’(Daily Rebuttal against the Rodong Sinmun Page 6)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장 보유 주장과 논리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논리를 그 다음날 내보내는 것이다. 로동신문이 일주일 동안 발행되니 그에 맞춰 매번 그 다음날 로동신문의 논리에 반박하는 글을 올릴 수 있다. 이것은 정부부처에서 하기 보다는 북한뉴스 전문 사이트에 한 섹션을 마련해 꾸준히 게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신문이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의 사실을 공동으로 게재하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뉴스지만 그 소비가 북한에서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해야 함이다. 즉 주요 독자/시청자가 북한인 (북한 주민)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Radio Free Asia'나 'Voice of America' 가 엄연히 미국 방송이지만 한국어로 제작되며 북한에서 쓰이는 표현이 보이는 이유다. 이러한 방송은 주요 시청자를 북한 주민으로 겨냥하고 만든 것이다.

수용자 이론: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수용자’를 중심으로 한 이론과 연구는 풍부하다. 이러한 접근의 연장선에서 ‘북한’을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로 볼 수 있다. ‘수용자’라는 개념은 미디어 연구의 개척자들이 매스 커뮤니케이션 과정 모델에서 제시한 ‘수신자’를 지칭하는 집합적 용어다. 이 모델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은 ‘정보원 -> 채널 -> 메시지 -> 수신자 -> 효과’로 구성된다. 그럼에도 ‘수용자’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학문적으로 논쟁적인 이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개인이 아닌 ‘집단’을 수용자로서 볼 수 있는 가도 논란이 되는 문제다. 미디어 이용을 설명하는 접근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용자 입장에서 개인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묻는 접근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미디어 입장에서 수용자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지속시키는 콘텐츠 요인과 콘텐츠 제시방식 및 상황이 무엇인가를 묻는 접근방법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접근방법이 엄격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적 동기는 미디어 생산물이나 콘텐츠를 언급하지 않고는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침묵의 나선’ 이론:

‘침묵의 나선’ (spiral of silence)는 노엘레노이만 (Noelle-Neuman)이 수년에 걸쳐 검증하고 발전시킨 여론과정에 대한 이론에서 제시하는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그가 쓴 같은 제목의 책이 번역되기도 했다. 침묵의 나선 이론은 매스미디어, 대인커뮤니케이션 및 사회적 관계, 개인의 의견표현, 여론 분위기에 대한 지각을 다룬다. 이 이론의 주요

가정은 다음과 같다.

- ▲ 사회는 일탈자에게 고립의 위협을 느끼게 한다.
- ▲ 개인은 고립의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
- ▲ 개인은 고립되지 않기 위해 사회의 여론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살핀다.
- ▲ 여론분위기에 대한 개인의 지각은 공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특히 특정의견에 대한 공개적 표현과 침묵에 영향을 미친다.

침묵의 나선이론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고립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우세한 의견인가 혹은 열세한 의견인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다수에 속한다고 느끼면 적극적으로 공개적 의견표명을 하려 한다. 그 결과 우세하다고 지각되는 의견은 더 많은 지지를 얻고 그렇지 못한 의견은 더욱 쇠퇴한다. 침묵의 나선 효과는 소수가 된 의견이 나선형을 그리면서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스미디어가 여론분위기를 평가하는 데 접근하기 가장 쉬운 정보원이며 미디어에서 지배적인 관점이 개인적 의견 형성과 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이론은 여론조사와 선거 결과 예측자료가 일치하지 않은 독일의 정치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식화됐다. 특히 학자 노엘레노이만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이 합의된 여론을 미디어가 잘못 전달한 데 있다고 보았다. 독일의 경우 미디어는 침묵하는 다수의견에 반해 좌파적 경향이 우세한 여론분위기를 전달했던 것을 지적했다.

로젠그린 (Rosengren)은 스웨덴 언론의 중동문제 보도를 배경으로 한 연구에서 침묵의 나선이론에서 주장하는 강력한 매스미디어 효과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론의 주창자인 노엘레노이만은 핵 에너지 문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증가한 점을 발견했다. 시간이 지나며 핵에너지에 대한 공중의 지지는 현저하게 감소했는데, 그는 시점을 놓고 볼 때 이러한 여론 변화에서 나선형의 패턴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사실 침묵의 나선이론은 대중사회이론(mass society theory)과 유사한 점이 있으며, 사회적 관계의 질적 수준을 다루는 데 비관적인 입장이다. 침묵의 나선이론 타당성은 대안적 준거집단이 사회 안에 존재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준거집단이 활성화될수록 침묵의 나선이 작동하는 범위는 더욱 줄어들는데, 이는 소수 의견과 일탈적 의견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시화되고 미디어를 대신해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모스코비치 (Moscovici)는 여론형성 과정에서 조용한 다수보다는 의견을 변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는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침묵의 나선이론은 미디어 효과뿐만 아니라 여론현상과 관련한 많은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인들을 고려하면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가 미약하며 이론의 주장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 글린과 동료들 (Glynn et al., 1997)은 미국과 서구의 연구결과를 분석한 결과, 언론에 대한 지각이 공개적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그렇다하더라도 미디어보도가 시사적 이슈와 관련한 공중정서가 무엇인지 사람들의 지각을 형성한다는 근거는 있다.

한편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논쟁적 이슈에 대한 공개적 의견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이와 동료 연구자들 (Moy et al., 2001)은 미국 워싱턴 주에서 발의된 고용과 교육분야 특정계층 차별 지원을 중지하기 위한 법안에서 침묵의 나선이론을 검증했다. 연구결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이 소수로 지각된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데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는 여론에 대한 지각보다는 주위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에 대한 지각이 한 개인의 공개적 의견표명을 결정하는 데 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고했다.

전쟁이나 위급상황에서 주류미디어가 정부의 편을 서는 경향은 종종 발견된다. 이와 관련해 베넷 (Bennett, 1990)은 저널리스트들에게 주류 정치의 목소리와 관점을 반영해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경향으로 소수의 목소리나 비판적 목소리는 주변화되고 미디어는 정부가 주도하는 합의된 관점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 내부에도 핵보유와 비핵화를 주장하는 서로 다른 엘리트구성원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입장이 공개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북한 특성상 그런 자료가 없다면 중국이나 소련의 북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거기에 북한과 관련한 핵무기 보유의 부정적인 시각을 들추어내고, 조명하고, 반복적으로 내보내 북한의 핵무기보유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조성할 수 있다. 이것이 비핵화협상을 대체할만한 정치적 접근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분위기 형성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이슈와 관련한 공중정서에 사람들의 지각을 형성하는 것이다.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도 ‘명분’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고, 핵보유를 부정적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논리’와 역사적 근거, 북한과 우방적 관계를 맺는 국가들의 핵무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정리해 소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견 형성이 북한을 두둔하는 중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CNN 효과:

미디어는 수직적, 수평적 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동시에 제공한 영향력은 주로 위에서 아래로 행사되지만, 정치인들은 종종 국가 전반의 분위기를 살피기 위해 미디어에 의존한다. 미디어가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의 경우, 미디어는 중요 행위자와 상호작용하고 그 사건을 또한 대중적이고 집합적 역사적 중요성을 갖는다. 주로 국제적 위기상황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걸프전쟁과

구유고슬라비아의 위기, 제3세계 국가지원 등에서의 미디어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CNN 효과’라는 용어는 이론은 아니지만 국제적 개입과 관련해 미디어가 외교정책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다. 부수적인 효과가 외국에 대한 원조 이슈에서도 발견된다. 이같은 현상은 오래 전에도 전쟁참전을 결정하는 데 언론이 담당했던 역할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길보아 (Gilboa, 2002)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봤다.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대체하고, 서로의 행동을 제약하며, 미디어 개입을 활성화시키고,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이 국제적 분쟁개입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점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글로벌미디어가 국제적 분쟁을 직접적으로 야기했다는 결정적 근거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국제뉴스는 관리되기보다는 발생하는 사건 중심으로 보도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디어는 속해 있는 자국의 정부 안에서 논의되는 사안을 반영해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기 보다는 의견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미디어는 특정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방식은 다양하다. 2000년 박빙의 승부를 펼친 부시와 고어의 미국 대통령선거의 경우 미디어가 캠페인 과정에서 펼쳐진 논쟁의 틀을 공화당의 부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하면서 부시에 불리한 이슈에 대한 탐사보도에 소홀했던 것이 선거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북한에 있어서 한국은 국내 매체뿐만 아니라 외신을 어떻게 비핵화에 대한 당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수 있는 아군으로 삼을 수 있을지에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 관련 정보는 영문/중문으로 더 많이 제공될 필요가 있고 ‘브레이킹 뉴스’를 중시하는 언론 매체의 특성상 이러한 보도는 적시에 제공돼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게 인용되거나 참고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심층보도와 돌발뉴스 사이에서 매체는 돌발뉴스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파간다 선전과 국가간 갈등 조젯과 오도넬 (Jowett and O'Donnell, 1999)은 선전을 ‘사람들의 지각을 형성하고 인지를 조정하며 기획자의 의향에 따른 행동을 이끌기 위한 의도적이고 체계적 시도’라고 정의한다. 선전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주로 ‘우리편’은 자료, 근거, 주장을 제공하는 반면, ‘적’들은 선전을 만들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와 같다. 일반적으로 선전과 관련해 떠오르는 상황은 국가간 대립이나 최근의 ‘테러와의 전쟁’과 같다. 그러나 이 용어는 특정한 영향력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모든 유형의 커뮤니케이션에 적용될 수 있다. 선전은 단순한 설득 시도와 몇 가지 점에서 다르다. 선전은 사용하는 방법에서 위압적이고 공격적이다. 또한 전적으로 거짓이 아니어도 객관적이지 않으며 진실과의 관련성도 적다. 선전은 목표로 하는 수용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선전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수행된다. 정보가 독점된 조건이나

인종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형성하거나 사람들을 폭력적 행동에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 미디어에 통제가 가해진다.

매스미디어는 전시에 성공적 선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여겨진다. 매스미디어는 개방사회에서 전체 공중에 접근 가능한 유일한 채널이고, 공중들로부터 신뢰받는다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그 자체로 뉴스가치가 있고 현재 진행되는 행위라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에 미디어가 주목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널리스트들은 선전의 목적으로 자신들이 이용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조해야 한다. 또한 성공적인 선전은 목표로 하는 수용자에게 의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데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확실한 선전수단일 수 있다. 미국정부의 실패한 선전사례로 평가된 베트남전쟁 이후, 서구의 영향권 아래에서 행해진 모든 군사행동은 효과적 선전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이라크전쟁 때에는 언론사 통신원들의 취재를 통해 미국에 유리한 보도가 일방적으로 절단되기도 했다.

선전의 성공을 위해서는 언론을 말 잘듣도록 유도하는 것, 군사적 행동으로 생긴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것, 검열을 공중이 지지하도록 만드는 것, 반대 정보나 사건에 대한 대안적 해석을 접할 수 없도록 물리적으로 분쟁지역과 자국간의 거리를 두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지적돼왔다. 즉 성공적 선전을 위해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정보와 이미지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전폭적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 상황에서, 대부분 선전사례를 볼 때, 과거에는 ‘적’으로 분류된 자들의 선전이 우리나라에 도달하는 것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북한의 신문과 방송을 한국에서 접속하는 것은 제한돼있다. 하지만 인터넷과 새로운 양식의 대안적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등장함에 따라 국제적 언론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라크전쟁의 경우, 전쟁이 진행되면서 정보흐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졌고 미국의 승리 이후 제기된 문제에 대한 점검요구에 선전효과가 감소됐다. 참전한 국가들의 내부여론이 전쟁초기와는 달리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 변화한 것을 볼 때 선전은 전쟁 후반부에는 성공적이지 못했다.

1999년 코소보분쟁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조건적 요소가 개인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유고슬라비아 시민들을 겨냥한 폭격의 도덕적, 법적 문제로 여론이 나뉘는 가운데 나토회원국에겐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 선전이 필요했다. 미디어는 세르비아에 대한 공격에 반대하는 집단의 선전에 이용되기도 했다. 매스미디어를 통해 선전하려 한 서구사회의 어두운 측면이 밝혀졌다.

모든 것이 상황적 조건에 의존하기 때문에 선전을 위한 유일무이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선전의 역사에서 얻을 수 있다. 독재국가의 통제 속에서 미디어가 기획된 선전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역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분명한 점은 선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용이 수용자에게 도달돼 수용돼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북한에도 적용된다. 대안적인 객관적 정보의 부재, 정보의 그럴듯함, 또한 당시 감정적·이데올로기적 분위기 등이 수용자가 선전을 받아들이는 데 개인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선전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해야 하지만,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 차원에서 적용되는 일반적 원칙들이 선전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북한같이 폐쇄적 사회에서 정보 입수나 전파 활동이 가족과 같이 친밀한 관계가 형성된 주변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질 경우, 수용자의 방어 기제가 약해지면서 이들이 입수한 외부정보를 가지고 적극적인 정보추구 활동을 펼치는 활동적 공중 (a member of the public that actively shares information)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 맺는말을 대신하여: 인터넷 시대의 북한

이상에서 커뮤니케이션 시각과 이론이 북한/핵 문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의 연계를 시도해 보았다. 북핵 문제는 북한 문제지만 한국에 있어서는 남북한 통일 문제로 귀결된다.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이 된다면 북한 문제는 물론이고 북핵 문제 또한 사라진다. 이러한 인과관계성 고찰에서 다학제적으로 바라본 북핵 문제 해법도 ‘북핵’프레임에서 확장돼 ‘통일’프레임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즉 ‘북핵’ 문제를 ‘북핵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통일 프레임’으로 하여 통일을 이루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북핵문제를 그속에 유기적으로 아울러 접근하는 방법이다.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이 우선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북한을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로 보고 접근하는 연구에 있어 북한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외부 정보가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위에서 검토한 모든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실제 현실상황에 더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구글(Google)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점에서 북한/핵/통일 문제를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구글 프로젝트 구상은 무선인터넷 Wi-Fi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위성을 하늘에 많이 쏘아 올려 개발도상국과 독재국가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북한 주민은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에도 인터넷이 확대 보급돼 개인미디어 소통구조의 실시간성(real time)이 확대되고 공론장(public sphere)이 형성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여기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음은 분명하다. 소셜미디어로 실시간 블로깅(realtime blogging)을 하는 북한 젊은이들을 상상해 본다. 그것은 북한 변화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 북한은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Internet)이 아닌 북한 내부에서만 통하는 ‘인트라넷’(Intranet)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은 ‘정보’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외부 정보가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허가받은 특정 소수를 제외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커뮤니케이션할 수 없다. 이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취약점이 어디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 내에 더 많은 ‘외부 소식’이 들어가는 것이, 북한 주민이 외부와 소통하는 것이, 북한에 외부 미디어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외부로부터 폐쇄된 통제 사회고, 이를 지탱하는 것은 정보 통제다. 외부 정보를 접하면 체제의 허구성을 알게 되고, 이는 개인의 경우 탈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탈북자 92%가 한국의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 확대 방안을 담은 ‘대북정보유입보고서’를 최근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자유아시아방송, 2016. 09. 13). 미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정보유입을 위해서 탈북자 단체 등 민간 기관을 지원해오긴 했지만, 직접 정부 차원에서 대북 정보유입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첫 대북제재강화법에 따른 것으로 “제한 없고 검열 받지 않으며 값싼 대량 전자통신수단”을 북한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구체적인 방안의 일환이다. 이를 위한 대량 전자통신수단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라디오나 핸드폰, 태블릿, DVD, MP3, 이동식저장장치인 USB 등이 포함된다. 탈북민 대상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외부정보유입은 북한주민들의 대남인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미디어는 21세기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일거에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우리는 국경과 언어장벽을 허물어 인류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를 더욱 가속화하고 포스트모더니즘 등 새로운 사상과 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인터넷이 발달한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의 변화도 궁극적으로 바깥의 정보가 얼마만큼 북한으로 유입되는지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관련 국가들이 얼마나 북한, 특별히 북핵문제에 있어서 정책적이고 전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역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대북방송’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미국은 ‘미국의 소리 방송(VOA)’과 ‘자유아시아방송(RFA)’뿐만 아니라 민간 대북방송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대 전후로 중국의 저가 비디오플레이어와 DVD등이 북한에 유입되며 외부 동영상에 대한 접근이 일반인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제 북한도 더 이상 커뮤니케이션 혁명의 예외 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북한도 글로벌 시대라는 시대적 변화에 가담하는 일부가 되는 것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노동신문은 기사에 “정보화 시대”라는 표현을 썼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 소식, 새 자료가 라디오(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온 세계에 거침없이 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빛의 속도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통해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북한에 대한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한국의 드라마를 비롯한 소식들이 속속들이 북한 내부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외부 세계 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보며 신속히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영화 ‘부산행’ (2016)이 왜 흥행했는지를 분석한 북한 뉴스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빅데이터와 북한

인터넷의 발전과 북한과 관련해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빅데이터’ 수집이다. 2013년 저자가 미국 스탠포드대 연구원으로 있을 때 한 소셜미디어 콘퍼런스가 열렸다. 그 때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은 한 명의 연사가 있었다. 'foursquare.com'이란 회사의 텐후이 마이클 리 박사였다. 이 회사는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남기는 빅데이터(big data)를 분석한다. 당시 리 박사는 컴퓨터공학·통계학·수학을 활용해서 이 회사의 앱을 쓰는 2000만 명의 사용자가 남긴 25억 회의 방문지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뉴욕 지역을 대상으로 시연했다. 매 시간마다 사람들의 동선이 화면에 ‘점(dot)’으로 표시됐는데 그 점들은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점심시간이 되면 식당가로 몰려갔고, 밤에는 유흥가에 군집했다. 밤이 깊어지면 점들은 도시를 떠나 외곽으로 흩어졌다. 이는 심지어 주말에 사람들이 언제, 어느 지역의 어떤 식당에 자주 가는지도 알려줬고, 무더운 날에 많이 찾는 아이스크림 가게도 표시해줬다. 군중이 만들어내는 소위 ‘행동 지도’였다. 많은 기업이 이런 빅데이터에 큰 관심을 쏟는 이유는 ‘고객의 속내’를 읽어내기 위해서다. 빅데이터를 상업적 용도 외에 사회과학이나 다른 학문 영역에서 응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북한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도 마찬가지로 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미국 애플(Apple)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진이 언론에 공개됐다. 그가 거의 실시간으로 해외 뉴스를 본다는 전언도 있다. 스위스에서 유학했던 김정은은 스마트폰도 사용한다. 그러나 사실 북한에서 내부 인트라넷이 아니라 외부 세계와 연결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중에서도 애플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실로 극소수일 것이다. 북한의 컴퓨터에는 각각 고유한 하드웨어 식별번호가 있는데, 이에 착안해서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디지털 핑거프린트(digital fingerprint)’를 역추적하다 보면 김정은의 컴퓨터 관련 데이터를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고립된 북한에서 인터넷은 김정은이 바깥세상을 ‘훑쳐보는’ 통로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의 ‘디지털 핑거프린트’를 관찰하면 그가 어느 시간대에 로그인을 하고, 어느 웹사이트를 많이 방문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그의 생활패턴과 관심사, 개인적 취향 등에 대한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른다. 리 박사에게 “인터넷에 접속하는 독재자를 모니터링 하는 데 이런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런 용도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세상은 이만큼 급속히 바뀌고 있다.

서론에 제기했듯이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스토리텔링’이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설득력과 교감을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일관성이다. 정책 차원에서 마셜 맥루한이 주창한 ‘미디어는 그 자체가 메시지다’ (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논리에 따르면 ‘북한 핵무장은 그 자체가 정권수호의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다.’ (For North Korea, nuclearization is the message). 메시지의 일관성은 정권의 대내외적 프로파간다의 기초인바,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을 개발하며

그 원인을 미국의 침략 위협 탓으로 돌릴 것이다. 북한이 제시하는 이 ‘스토리텔링’ 논리를 붕괴시켜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개발 내러티브’의 가장 주된 관련국인 미국이 리비아 핵포기 사례에서처럼 북한에게 ‘메시지의 일관성’을 주는 데 실패했으므로 이는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다. 정책적으로 볼 때 한국은 우선 북한을 (A) ‘붕괴해야 할 대상’ (a country to destroy)인지 아니면 (B) ‘변화를 유도할 대상’ (a country to transform)인지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내러티브(domestic narrative)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 선택 (A), (B)가 갈릴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판단은 (A), (B) 중 확실하게 어느 한 쪽에 있지 않았다. 역대 한국 정권은 (A)와 (B)를 절충하는 전략을 택해왔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보면 ‘메시지의 일관성’은 신뢰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충적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A)와 (B) 둘 중에서 어느 조치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확보한 뒤 미국과 공조해 일관적이고, 확실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consistent, clear, and credible) 대북커뮤니케이션 접근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7. 북핵문제의 다학제적 분석 결론 및 시사점

가. 분야별 분석 개요

1) 공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① 북한 핵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1차 핵실험에서는 핵폭발에는 성공하였지만 예상된 폭발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2차 핵실험에서는 1차 실험에서 예고된 폭발규모가 달성되었고, 3차 핵실험에서는 설계를 보완하여 2차보다 큰 규모의 폭발에 성공하였다. 4차 핵실험은 규모보다는 탄두 경량화 등 다른 부분을 개량 실험하는 단계였고,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보다 2배 규모로 추정된다.

② 2016년 4차 핵실험은 수소폭탄이라기에는 미흡하다. 그 근거로서 폭발력이 미약했고 핵융합이 성공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 수소폭탄 제조에 필요한 삼중수소의 생산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에서는 생산 불가능한 점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③ 지하 핵실험의 규모는 핵실험 시 발생하는 인공지진파의 크기를 통해 추정한다. 그러나 정확한 측정은 폭발로 형성된 지하 공동을 굴착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방사화학적 분석해서 폭발규모를 추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북한만이 가지고 있어, 현재의 지진파 측정에 의한 폭발규모는 모두 근사치 추정값이다. 그리고 북한이 2013년까지 영변 원자로를 사용해서 생산, 추출한 플루토늄 양은 최대 40 ± 5 kg정도로 추정한다. 고농축우라늄(HEU) 보유량은 영변 시설 운영만으로도 300kg정도가 가능할 것이고 총 640kg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④ 핵무기를 보유할 경우의 이득은 안보상의 불안정 해결, 핵보유를 통한 국가와 국민의 자긍심 고취 및 내부 결속력 강화, 단기적으로는 군사비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핵보유를 통해 강대국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서는 핵보유수 증가, 핵운반 시설 확보, 핵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보복 능력 확보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보유 비용이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초기 Manhattan Project의 개발비용은 4년간 약 216억 달러가 소요되었지만 핵무기 고도화와 운반체계 확보, 유지비용은 거의 5,5조 달러가 소요되었다.

⑤ 비록 북한이 지역적 군사력 우세를 위해 소규모의 핵전력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해 제한된 수준의 핵전력만 갖추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인도의 경우처럼 오랜 기간 동안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를 받으며 핵개발을

강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할 때마다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핵무기 보수, 유지비용도 상당한 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⑥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기조건의 차이가 크지만 이란의 비핵화 과정의 교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 이란은 협상으로 핵문제를 해결하였다. 미국과 이란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 승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 적절한 수준의 명분을 살리면서 협상에 성공했다. 미국과 북한 또는 남북한 간의 협상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명분을 살리는 타협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⑦ 현재 북한은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인공위성의 지구궤도 진입 성공,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에 성공하였으며, SLBM 발사실험에도 성공하여 상당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핵무기 운반체계에 대한 능력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능력 변화로 인해 미국은 추구해 오던 CVID 원칙을 어느 정도 희생하더라도, 북한의 핵능력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동결할 필요성을 심각하게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정권과 비핵화 협상을 하려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⑧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의 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더 이상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북한 핵을 방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 북한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보유중인 핵무기를 해체하고, 핵무기용 핵물질을 국외로 반출하고, 추가적인 핵무기 제조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감시체제가 마련된다면, 북한 전역에 대한 검증과 CVID가 달성되지 않더라도,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인 목표는 대부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끈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필연적으로 북한의 체제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체제변화 이후에는 북한 스스로의 필요에 의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2) 심리학적 시각에서 예상하는 비핵화 시나리오

① 북핵문제는 북한이 경제, 국내정치, 외교 등 여러 가지 변수들 가운데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개인을 분석단위로 하는 심리학의 접근은 북핵문제를 지나치게 협소한 관점에서 이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사회적 역동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인 독재로 김정은 개인에게 국가의 모든 권력이 집중된 체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구성원들의 심리적 배경 및 집단 역동과 북한의

전권을 가진 김정은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도 비핵화 정책 수립에 일조할 것이다.

② 북한은 3대 세습 왕조국가로서 유교와 가부장 문화를 활용하여 통치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의 의식 기저에는 무속신앙이 일부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는 가부장 제도와 신분제가 당연한 보수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모에 복종하는 유교적 대가족 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김정은은 북한주민들에게 김씨 일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면서 통치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씨 일가의 이상화를 위해 탄생신화를 창조하고 신적인 영험함과 현세의 복과 신적인 능력(핵무기)을 제공하는 장군신과 같은 무속신앙을 활용하고 있다. 통치자에 대한 신적 지위 부여는 체제유지의 필요성과 당위성 모두를 내포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③ 주민들에게는 사상교육, 강력한 통제와 감시체계를 적용해 김씨 일가의 신격화를 내면화시키고 있다. 정보와 교류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러한 문화적 내면화는 예상외로 잘 작동하고 있다.

④ 북한의 엘리트층은 권위에 대한 복종과 함께 동조압력을 강요받고 있다. 특정한 조건이 형성되면 인간의 행위는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평소와 다르게 반응할 경우가 발생한다. 그 이유로는 북한과 같은 폐쇄사회에서는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고 당의 선전에 따라 집단적 동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엘리트 계층에게도 집단사고가 일반화될 수밖에 없으며, 집단토의를 통해 유사한 생각을 공유하면서 외부를 차단하는 과정을 통해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이 더욱 선명해지는 집단극화 현상이 팽배하게 된다. 반면 북한 엘리트 계층에서 나타나는 집단사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관습화된 행위양식일 가능성도 크다. 최근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증가 현상이 이를 설명한다.

⑤ 김정은의 개인적 성격은 여러 증언들에 비추어 자기중심적이고 승부욕이 강한 충동적이면서 급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상심리학 시각에서 보면 김정은은 자신감 있는 성격의 병리적 유형인 자기애적 성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를 가지고 있다. 자기애적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특징은 특권의식이나 우월감 등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자기의 신념에 맞는 정보만 찾게 되고 반대되는 정보는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런 유형의 인간은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데 관심이 많고, 자신의 자존감과 우월감을 높이기 위해 대인관계의 상호성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⑥ 결국 김정은의 성격은 우월감과 자만심이 높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면서 자기 가치를 확대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또한 김정은은 어려서부터 황태자의 삶을 살아왔고 현재의 성격으로 미루어 볼 때, 심리적 우월감과 실질적인

이득으로 인해 핵을 포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김정은이 핵개발에 집착하는 이유는 자신의 우월감 충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추론된다. 반면 김정은은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 상 위협에 대해서는 회피하는 태도를(risk-averse)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김정은이 핵을 선제공격이나 전쟁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⑦ 한국문화에서 자존심은 포기할 수 없는 인간(때로는 국가나 사회도 포함)의 존엄성과 유사한 면이 있다.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 받아서는 않는다는 태도를 갖게 된다. 김정은은 북한이 고립된 상황에서 핵을 국제사회의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상수단으로 인식하였지만 김정은은 이런 협상수단대신 외부의 추가 압박을 받으면서도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했다. 김정은으로서는 핵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경제학과 게임이론 관점에서의 분석

① 북한에게 핵개발과 핵보유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김정은 정권이 지속하는 한 포기될 수 없는 국가적 사명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이 핵보유국 달성이라는 목적함수를 가진 상황에서 제약식은 거의 고정화(固化) 되어 있어 북한이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 한 시나리오의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② 북한은 핵이 없을 경우 미국을 포함한 강대국의 침략으로 붕괴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서는 무조건 핵을 보유해야만 한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전략적 무기를 통한 군비경쟁은 높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핵개발을 통해 기존의 군비를 감소시켜 경제발전을 이룬다는 병진노선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핵개발을 포함한 군수산업과 민수산업이 병행하면서 발전하기는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군수부문으로의 자본 투입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대체율을 높이게 되어 북한의 상대적으로 풍부한 노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만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핵개발과 같은 선군정치가 선경정치로 변화되지 않는 한 북한의 계획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③ 제네바 합의 이후 진행된 북한 핵개발 역사를 회고해 보면 일종의 반복게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정책이 변화할 기미는 전혀 없다. 이런 북한의 태도는 핵개발과 반복적인 미사일 발사 ⇒ 국제사회의 제재 ⇒ 유화적 국면 ⇒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재시도의 형태가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④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반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면 tit-for-tat 과 같은 비협조 전략이 효과적이다. Axelrod는 게임 당사자들의 협조관계가 발생하는 원천은 상호신뢰가 아니라 관계의 지속성(durability of the relationship)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간 또는 6자 간의 관계에서 관계의 지속성이 보장될 경우 협조관계는 성립, 지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들 간에 관계의 지속성이 지속되려면 북한정권의 변화 또는 체제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또는 신념)이 필요하다.

⑤ 반면 북한 핵이 한국 국민과 주한 미군을 담보로 잡고 있다는 점 때문에 협조 전략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⁷⁵⁾ 따라서 협조 및 비협조 전략을 병행하여 시도하는 것이 비핵화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전략은 정책의 일관성과는 무관하게 진행된다.

⑥ 북한과의 협조게임이 성립되려면 한국정부의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함께 체제보장, 북한 정권의 자존심 유지를 위한 선언적 지원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남북관계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한국이나 북한핵 문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이를 쉽게 시행하기는 어렵다.

⑦ Nash 균형을 통해 분석해 보면 북한의 핵보유는 한국으로 하여금 막대한 방어 비용을 사용케 한다. Nash 균형은 상대방의 완전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이 논리에 따른다면 북한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핵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실수, 전략적 오류 등)으로 핵이 사용될 가능성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이 경우 한국은 안전위주의 전략(secure strategy)을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이 들더라도 핵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전략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하지 않는 한 달성되지 않을 것이 북한의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리적 모순을 가져 올 수 있다.

⑧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 시점에서 한국의 최상 북한 비핵화전략은 북한핵 실험 ⇒ 미사일 발사 ⇒ 핵운반 기술력 인정 ⇒ 완전한 핵무기 완성과 같은 단계별 접근을 포기하고 미국처럼 북한을 핵보유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즉, 북한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을 유지하는 것이 파레토 최적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⑨ 북핵 협상과정에서 일종의 최후통첩(ultimatum)으로 비핵화를 협상의

75) 물론 이런 견해에 대한 반대 논리로 한국에 미군을 제외하고 한국에 약 10만명에 달하는 미국인 거주하고 있고, 조선족을 포함한 약 100만 명의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북한이 핵무기를 한국에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면 북한의 선택가능집합을 동결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협상을 제안할 때 전제조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북한의 선택폭을 높임으로써 더 나은 균형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협상에서 얻고자 하는 결과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형식의 회담제안은 현실적으로 회담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동시에 북핵문제의 해결과정에서 남한 내부의 대내적 설득도 필요하다. 최후통첩의 성격을 가진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의 제의” 등은 북한의 퇴로를 차단하여 실현가능한 협상의 결과를 제약하는 효과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유연한 자세로 북한을 협상에 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협상의 주제 및 목적 등도 사전적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북한이의 선택의 폭을 넓혀 최대한 유연하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4)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분석

① 북한 핵개발의 비합리성이나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행태 등을 인간과 인간 또는 인간과 사회가 맺어 온 다양한 관계의 복잡함을 분석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통해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학문적 시도이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인간은 시간과 공간, 사회구조의 영향을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미 부여를 하는 상지의 조작과 교환을 통해 주변의 환경을 바꾸어 나가는 존재로 묘사한다. 예를 들어 북한사회에서 통용되는 최고 존엄,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담론이 북한 내부에서 어떤 가치판단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개발도 김정은과, 주변 집단, 북한주민들의 단위별 분석과 상호작용을 통해 분석한다.

② 인간은 어떤 사안을 결정할 경우 내면적으로 결정한 사물의 의미와 자신에 대한 행동보다는 자신에게 지니는 의미를 중요시한다. 개인은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거울자아(looking-glass self)를 형성하고 이에 준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어떤 집단에서 성장했는가에 따라 행동패턴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그 준거집단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Mead), 특정집단의 구성원 자체가 공유하는 집합의식인 일반화된 他者 (generalizes other) 차원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개발과 핵보유와 관련해서 김정은 내면에는 “미제국주의의 압살 책동에 맞설려면 반드시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인식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도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받들어 핵개발을 완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내면에서 일반화된 타자 내지는 의미있는 타자로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한편 개인에게서 나타나는 성향, 취미, 습관 등은 반복적 습관에 의해 굳어져 하나의 행동유형인 아비투스(habitus)로 나타나게 된다. 아비투스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조건에 의해 정해지지만 계속하여 자신의 이익에 유리한 방식을 부과하면서

계승하게 된다(Bourdieu). 김정은이 핵개발과 핵보유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현실에서 김정은의 출생, 성장, 권력승계 과정에서 형성된 아비투스(habitus)는 매우 주요한 분석요인을 제공한다. 김정일의 요리사로 활동하면서 김정은과 친했던 후지모토 겐지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김정일이 김정은을 청년대장으로 부르면서 후계자로 정한 이유도 김정은이 후계자로서의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④ 핵개발과 관련해서도 김정은의 핵개발 야심은 선대로부터 내려오는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두려움의 결과가 만들어낸 아비투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김정은 측근의 인물들도 김정은의 아비투스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것에 추종하는 태도를 지니지 않는 한 자리보전이 쉽지 않게 된다. 비록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가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수반하고 국제사회와 맞서는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주변 인물의 아비투스는 이를 반대하기 어려운 구도로 만들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는 주변 인물들이라도 다른 주변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일반화 된 타자로 내면화 된 것처럼 위장한 상태로 삶을 영위하게 된다. 최근에 나타나는 김정은 주변 인물들의 탈북 내지 정치적 망명은 결국 위장된 아비투스를 보여 주기에는 한계가 있고, 주변 인물들의 수가 적고 감시, 견제가 약한 외국에서 발생하게 된다.

⑤ 일반 주민들의 핵개발 의사결정에 대한 영향력은 미약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다. 우선 일반주민의 아비투스는 핵개발과 핵보유에 대해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는 습성을 배양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즉, 대다수 주민은 철저한 감시에 놓여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김정은 교시나 학습자료 등에 나오는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주민들이 김정은의 지도 감독 외에도 주변 간부들의 이중적 감시와 통제를 받기 때문에 본심을 표현하기는 불가능하다.

⑥ 이런 북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은 김정은의 주변 인물과 일반 주민을 분리해서 이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형성해 온 북한의 핵보유 당위성 논리에 부여해 온 상징적 의미에 의문을 품는 계기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북한의 구성원들이 핵개발과 관련해 내면화 해 온 일반화된 타자와 의미있는 타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언급한 최고존엄, 백두혈통,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와 같은 담론의 의미와 작동방식을 분석한 후 그 틈을 파고들어 사회 구성원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5)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분석

통일 문제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기여도는 그 잠재적인 능력에 비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북한·핵 문제의 상당 부분은 결국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지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통일 전략과 방향이 설정되면 그 다음 문제는 결국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 메시지를 북한에게 '전달'(deliver)하고 '소통'(communicate)하느냐의 문제다. 이는 상대방에게 선물할 때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종종 선물을 어떻게 포장했는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다. 일본(日本)의 선물 포장 문화가 대표적이다.

커뮤니케이션이 북한핵·통일 등의 문제에 있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어쩌면 위의 선물의 예에서처럼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부차적인 (포장) 문제가 아니라 특히 실행 과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만큼 통일 메시지를 '어떻게'(how)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는 '무엇'(what)을 전달할 것인지 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북핵문제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영역의 중요성에 대한 대폭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북핵과 통일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다분히 정치학적 혹은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다뤄져 왔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북핵 문제가 20여년이 지났어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면 이제는 다른 접근법 또는 정치공학과 함께 사용될 수 있는 '협공' 분야가 필요하다. 커뮤니케이션은 이러한 점에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유용한 분야다.

한국은 원하는 목표와 어젠다를 너무 직접적으로 '들이대는'(in your face) 접근법을 지양하고 조금 모퉁이 길로 돌아가는 '투 스텝'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은 북핵·통일문제에 있어서 주변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특히 중국의 협조 여부가 부각되고 있다. 이럴 때,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 외교'를 펼칠 수도 있겠지만, 중국 사회와 현실을 이해한다면 중국인들의 대북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공공외교의 성과는 바로 드러나는 가시적이지 않고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정책가는 숙지하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공외교를 꾸준히 펼쳐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성공의 기본은 커뮤니케이션이 우선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북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북한을 커뮤니케이션의 '수용자'로 보고 접근하는 연구에 있어 북한에 우선적으로 더 많은 외부 정보가 흘러들어가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구글(Google)은 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이러한 점에서 북한·핵·통일 문제를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접근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연구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구글은 무선인터넷 Wi-Fi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위성을 하늘에 많이 쏘아 올려 개발도상국과 독재국가에서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구글 프로젝트 구상은 북한 주민은 이 계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은 결국 '스토리텔링'이다. 그 스토리텔링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가 설득력과 교감을 가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일관성이다. 정책 차원에서 마셜 맥루한이 주창한 '미디어는 그 자체가 메시지다'(The medium is the message)라는 논리에 따르면 '북한 핵무장은 그 자체가 정권수호의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다.' (For

North Korea, nuclearization is the message). 북한의 ‘스토리텔링’ 논리를 붕괴시켜야 한다.

정책적으로 볼 때 한국은 우선 북한이 (A)‘붕괴해야 할 대상’ (a country to destroy)인지 아니면 (B)‘변화를 유도할 대상’ (a country to transform)인지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내러티브(domestic narrative)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전략적 선택 (A), (B)가 갈릴 것이다. 지금껏 북한에 대한 판단은 (A), (B) 중 확실하게 어느 한 쪽에 있지 않았다. 역대 한국 정권은 (A)와 (B)를 절충하는 전략을 택해왔다.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보면 ‘메시지의 일관성’은 신뢰 구축에 있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충적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A)와 (B) 둘 중에서 어느 조치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확보한 뒤 일관적이고, 확실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consistent, clear, and credible) 대북커뮤니케이션 접근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김정은 시대 들어 노동신문은 기사에 “정보화 시대”라는 표현을 썼다. “끊임없이 생겨나는 새 소식, 새 자료가 라디오(라디오) 및 텔레비존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하여 온 세계에 거침없이 퍼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역시 빛의 속도라고 불리는 인터넷을 통해 국제 사회의 움직임과 북한에 대한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더 높아졌다. 한국의 드라마를 비롯한 소식들이 속속들이 북한 내부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외부 세계 매체들의 보도 태도를 보며 신속히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최근 한국 영화 ‘부산행’ (2016)이 왜 흥행했는지를 분석한 북한 뉴스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사례다. 한국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맞춰 새로운 대북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Ⅳ. 비핵화 관철을 위한 구체적 매트릭스(시나리오)

1. 북한의 향후 핵문제 전략과 선택지

본 글은 김정은 시대의 북한 핵문제 전략(핵전략)과 그 선택지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핵전략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전략주체(지도자) 차원과 환경구조(정치기회구조)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고, 양 차원의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어떠한 핵전략을 산출해 냈는지 분석할 것이다.⁷⁶⁾

구체적으로, 전략주체 차원의 요소들은 지도자의 ‘사상’과 ‘정체성’, ‘이익’을 들 수 있고, 환경구조 차원의 요소들은 국내 환경구조 차원의 요소로서 ‘수령제 사회주의’, 대외 환경구조 차원의 요소로서 북한과 미국·일본·중국·한국과의 ‘적대관계’와 이 나라들에 대한 북한지도자의 ‘위협인식’을 들 수 있다. 양 차원의 요소들이 ‘행위자-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한 핵전략은 북한이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주장하는 ‘경제·핵 병진노선’이다. 이 병진노선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병진노선에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 전망해 보기로 한다.

가. 정책주체(지도자) 차원의 요소

1) 사상과 사상사업의 방식

북한의 핵전략을 결정하는 데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지도자 김정은의 사상은 무엇인가?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의 사상론”이 신봉되고 있는데(조선중앙통신, 2014. 2. 6.), 사상 의식은 “사람들의 활동목적과 방향을 규정하고 활동과정을 조절통제하며,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을 위한 투쟁에 동원한다”고 가르치고 있다(조선중앙통신, 2012. 10. 10.).

정치 지도자에 있어서도 ‘사상’이 핵심적인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사상은 “정치가의 철학적 신조이고 투쟁원칙이며 령도의 라침판”일뿐만 아니라, 정치이념에 의하여 “정치의 성격과 목적, 방식과 위력이 결정”되며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이다(로동신문, 2013. 10. 27.). 김정은 자신도 “정치사상 진지는 사회주의 수호전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보루”라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4. 1. 17.).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자신이 구현하는 사상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강조하고

76) 본 글의 주장과 인용은 백학순(2016, 출판예정)과 백학순(2015: 14-32)에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것이고, 어떤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있다. 그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내세우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하여 모든 인민군대와 당 일군, 그리고 주민 모두가 김일성-김정일의 전사로서 정체성을 획득하고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로동신문, 2012. 4. 12; 김정은, 2012. 4. 19; 김정일, 1994: 8-18). 또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외에 강조되는 ‘김정일애국주의’는 “애국주의 일반이 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실천적 모범으로 보여주셨고 장군님의 존함과 함께 빛나는 애국주의”로서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의 심화발전이며 최절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가 추구하는 ‘근본 목적’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건설이다(조선중앙통신, 2012. 6. 21.; 김정은, 2012. 8. 3.; 조선중앙통신, 2014. 2. 20.).

주목할 것은 북한에서 사상 사업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김정은은 “혁명적인 사상공세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야” 한다고 했다(로동신문, 2014. 3. 28.; 로동신문, 2014. 4. 24.). 사상사업을 선전선동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상사업을 기동적으로, 집중적으로 벌인다는 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온 나라 인민들 속에 신속 정확히 전달 침투시키며 모든 선전선동 역량과 수단, 사상사업의 모든 형식과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사상전의 집중포화를 들이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로동신문, 2014. 4. 28.).

김정은은 당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야하는데, 이를 위해 당의 사상진지는 “방어형이 아니라 공격형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했다(로동신문, 2014. 4. 28.). 김정은은 성공적인 사상사업 사례로 마식령스키장 건설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2013년에 마식령스키장 건설에서 “10년을 1년으로”라는 구호의 ‘속도전’을 통해 스키장을 준공했는데, “사상사업을 립체적으로, 공세적으로 벌였다”는 것이다(김정은, 2014. 2. 26.).

북한이 2016년 1월 제4차 핵실험을 한 이후, 김정은이 유엔안보리의 제재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결의로 알려진 2270호 등 유엔안보리 제재와 미국, 일본, 한국 등 개별국가들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미래과학자 거리’를 완공하고, 또 2016년에는 ‘여명거리’를 건설하면서, 70일 전투, 200일 전투, 그리고 1958년의 천리마운동의 10배의 속도를 의미하는 ‘만리마 속도창조운동’을 시작했다. 이는 매우 공세적이고 공격적인 사상사업이라고 할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김정은이 사상사업에서 하는 위와 같은 방식을 특히 안보부문에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 권좌에 오른 후 세 차례의 핵실험(두 번째는 ‘수소탄 실험’으로 주장), 세 차례의 인공위성 로켓(장거리 미사일) 발사,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 사출시험, 발사 등을 통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서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식으로 ‘공세적’이고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

2) 정체성, 이익

정체성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정된, 역할 관련 이해와 기대’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세 가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즉, 정체성은 ‘당신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해’ 준다(Hopf, 1998: 175; 최종건, 2008: 347 각주 4). 한편, ‘이익’은 ‘정체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다. 어떤 특정 정체성을 구성하는 인간의 행위와 구조가 있다면, 그 행위와 구조는 바로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익을 산출해낸다(Hopf, 1998: 176-177; Wendt, 1992: 398; Jepperson et al., 1996: 52-65).

김정은의 정체성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현하는, 김일성-김정일의 백두혈통과 지위를 계승하는 수령의 정체성이다. 김정은은 수령의 아들, 수령의 손자, 수령 후계자, 수령이 된 과정을 거치면서 성장한 인물이다. 그런데 김정은은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년기 3년 반(13~16세)을 스위스에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지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분위기와 서양문물과 문화에 대한 이해, 평범한 10대 소년들이 친구들과 함께하는 오락, 여가 행위 등이 그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에게 있어서 ‘수령’의 정체성은 압도적이다.

가) 수령의 아들, 수령 후계자, 수령

김정은은 수령의 유일영도체제인 수령제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절대적인 권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수령의 백두혈통 가계에서 북한의 창건자인 김일성의 손자, 그 아들인 김정일의 아들로 태어나서 특별한 분위기와 교육 속에서 성장했다. 그리고 수령의 후계자를 거쳐 수령이 됐다.

김정은은 우선 수령의 가계에서 태어나 ‘왕자’의 대접을 받고 자랐다. 김정은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물론 파워엘리트와도 따로 떨어진 채 성장했다(이상근, 2015; 김형구, 2016). 결국 김정은은 성장과정을 볼 때, 큰 걱정거리 없이 자유분방하면서도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것을 몹시 싫어했으며, 자신이 수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일이 김정은을 그렇게 대접했던 것이다. 김정은은 얼굴도 김정일을 쏙 빼닮았으며, 체형도 흡사했는데, 김정일은 김정은을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 김정일은 김정철은 ‘여자아이’ 같아서 후계자감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김정은의 아홉 살 생일 때 연회장에서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연주됐다. 김정일이 아들 김정은에게 보낸 선물이었다. 여러 면에서 김정은은 대담하고, 과격하고, 대장 기질을 갖고 있었으며, 통이 큰 성격이었다(후지모토, 2003: 136; 후지모토, 2010: 122-134;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결론적으로, 김정은이 수령의 아들, 수령 후계자, 수령의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된

‘수령’의 정체성은 그것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익을 반영하여 안보 분야에서 결코 지기를 싫어하는 승부욕을 드러내는 식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의 리더십을 연구한 이상근(2015)은 김정은이 ‘무인(武人)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김정은은 강대국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나) 스위스 유학 경험

김정은의 성장과정을 보면 수령의 집안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가장 감수성이 예민할 때인 13세부터 16세까지 3년 반 동안 스위스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Berne)의 쾨니츠(Köniz) 지역의 리베펠트(Liebefeld)에 있는 슈타인홀츨리(Steinhölzli; the Steinhölz Schule) 공립학교에서 유학하였다(Freeman and Sherwell, 26 September 2010;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김정은이 다닌 공립학교는 전교생 가운데 무려 45%가 외국인 자녀들이었다. 김정은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했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었으며 취미는 농구였다고 한다. 김정은은 컴퓨터 게임, 유명 브랜드 운동화, 액션영화 등을 좋아했다. 김정은은 보통의 정상적인(normal) 소년이었고, 운동을 잘했고(competitive), 누구나처럼 경기에서 지기를 싫어했다(Freeman and Sherwell, 26 September 2010; 북한 3대 권력세습 김정은, 2010. 10. 3;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결국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를 서양세계를 포함시켜서 형성한 셈이다(백학순, 2016. 3. 10.). 그러나 김정은은 스위스 유학 중에도 북한의 경축일, 특히 김정일의 생일, 김일성의 생일, 건국기념일, 조선로동당 창당일에는 반드시 귀국했다. 그리고 2개월 가까이 북한에 체류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후지모토, 2010: 39). 그가 스위스에서 유학하던 당시 그의 친구들의 증언한 내용을 보더라도, 자유분방한 민주주의 사회인 스위스에 살면서도 그는 자신이 ‘수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김정은은 항상 북한 국가, 북한 음악을 많이 들었고, 특히 북한 애국가를 많이 들어서 친구가 기억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김정일이라고 말하고 며칠 후 김정일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준 적도 있었다. 또 그가 유학 당시 김정은에게는 집에 요리사가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다. 그리고 김정은은 결코 밤에 외출하지 않았고, 파티에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Freeman and Sherwell, 26 September 2010; 북한 3대 권력세습 김정은, 2010. 10. 3; Yan & Shubert, 19 December 2011).

나. 환경구조(정치기회구조) 차원의 요소

김정은의 핵전략도 국내외 환경구조에 영향을 받고, 또 그 환경구조를 이용하여 핵전략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이 원하는 핵전략에 대해 유리한 국내외

환경구조가 형성되면,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핵전략을 더 용이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정반대로 불리한 환경구조가 형성되면, 정반대의 상황이 생겨날 것이다.

김정은의 핵전략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국내 환경구조적 요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이고, 대외 환경구조적 요인으로는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 등 외부세계와의 관계와 그것에 바탕을 둔 김정은의 외부세계의 ‘위협인식’을 들 수 있다.

1) 국내 환경구조: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

국내 환경구조적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를 들 수 있다. 수령제 사회주의는 유일사상체제를 헌법적·제도적으로 확립한 ‘수령 중심의 사회주의 당-국가체제’로서 수령의 ‘절대적인 권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담보하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이다. 수령제 사회주의에서 절대적 통치자의 권위와 역할을 보장받는 유일영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김정은이 수령으로서 당·정·군의 최고 직위들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수령제 사회주의 하에서 김정은은 안보분야에서도 유일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보장받고 있는 셈이어서 그의 핵전략은 수령으로서의 그의 절대적인 권위와 결정적인 역할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고 또 나타난다고 할 것이다.

북한과 같은 수령제 사회주의 하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가계에 속하지 않는 이상, 장성택을 포함한 그 누구도 수령이 될 수 있는 범주에 포함될 수는 없다. 김정은은 군부의 대부격이었던 리영호 총참모장은 말할 것도 없고, 김일성의 사위이고 김정일의 매제이며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마저도 숙청했다. 장성택은 김일성 가계의 인척이라 하더라도 백두혈통에는 속하지 못한 인물이었다. 결국 장성택은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김정일 사망 후 현직 수령의 자리에 오른 김정은에게 조금이라도 정치적 부담이 된다면 제거될 수밖에 없었다. 리영호나 장성택에 비해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제거는 비교적 간단한 일이었을 것이다.

장성택은 2013년 12월 3일 모든 직위에서 배제되고 출당 조치를 당했다. 그리고 2013년 12월 8일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로 낙인찍힌 후, 12월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에 넘겨져 12월 13일 군대를 동원한 군사정변 시도 등의 이유로 “반당적, 반국가적, 반인민적인 죄악”을 저질렀다는 판결을 받고, 바로 당일 처형됐다.

판결문은 “세월은 흐르고 세대가 열백 번 바뀌어도 바뀔 수도 없는 것이 백두의 혈통”이라면서 “우리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은 오직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동지 밖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고 했다. 또 “이 하늘아래서 감히 김정은동지의 유일적 령도를 거부하고 원수님의 절대적 권위에 도전하며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로 용서치 않고 그가 누구이든, 그 어디에 숨어있든 모조리 끌어모아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 위에 올려 세우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했다(로동신문, 2013. 12. 13.; 조선중앙통신, 2013. 12. 13.; 백학순, 2015: 121).

2) 대외 환경구조: 대외 위협의식

현재 국제 환경구조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과의 적대관계와 그것에 기반을 둔 김정은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오는 위협인식이다. 그러나 이 나라들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 때문에 이 나라들에 대해 이중적, 다중적 혹은 복합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들에 대한 적대의식과 위협인식이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가) 미국에 대한 김정은의 이중적·복합적 인식

미국은 두 가지 차원에서 북한의 생존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북한의 적국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적대하면서 살 수만은 없는 나라이다. 김정은도 이를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미국과 일본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김정은에게 있어서 미국은 6.25전쟁에서 싸운 적국이며 아직도 6.25전쟁이 끝나지 않아 정전체제 하에서 치열한 대결을 하고 있는 ‘숙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6.25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이 그 동안 대북 적대시정책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한반도 전역에서 비핵화를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자신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2013년 여름까지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왔는데도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고로, 김정은은 2016년 5월 초에 예전에 김정일의 요리사로 일했던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를 평양에 초청했다. 김정은이 “미국과 교섭을 시작하면, (미국은) 바로 무리난제(無理難題)를 들이민다. 미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험악하지만 전쟁을 할 마음은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중앙일보, 2016. 5. 9.), 그가 미국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강대국인 미국과 전쟁으로까지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반대하여 유엔안보리에서만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북한에 대해 각종 제재를 주도하는 나라이다. 또한 레온 파네타 전 미국방장관의 회고록 『값진 전투들』(Worthy Fights: A Memoir of Leadership in War and Peace)에서 드러났듯이, 미국은 최소한 2010년부터 ‘북한의 공격이 있을 때, 필요하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나라이다(Paneta & Newton, 2014). 파네타의 회고록의 내용이 알려지자, 북한은 크게 반발했다. 북한은 “미국의 전쟁 우두머리가 제 입으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이번처럼 로골적으로, 뻔뻔스럽게 핵공격 기도를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비난하고, 한미합동군사훈련들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 계획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조선중앙통신, 2014. 10. 16; 조선중앙통신, 2014. 10. 17).

김정은과 북한 리더십에게 있어서 미국은 특히, 2013년 3~4월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을 한 이래 최근으로 올수록 점점 더 강력한 대결의 모습을 보이면서 대북 ‘핵 선제공격 위협’을 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리고 최근 남한 땅에 사드(THAAD) 배치 결정에서 보듯이,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자신의 미사일방어(MD)체계를 완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나라이다.

둘째, 북한은 국제관계에서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고려할 때, 미국은 영원히 관계를 끊고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북한이 미국, 한국, 일본과는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 붕괴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북한은 지전략적(地戰略的) 차원에서 중국에 대항하는 강대국이 필요했고, 그러한 맥락에서 미국을 끌어들여 미중양국 간에 균형전략(balancing strategy)을 취함으로써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것이 1990년 초 소련이 멸망한 이후 북한이 일관성있게 추구해온 가장 높은 수준에서의 전략적 디자인이다(Paik, 5 June 2011).

북한은 실제 핵협상을 고리로 1994년 제네바 북미기본합의,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8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북한은 비록 핵을 포기하지만 핵이 없더라도 ‘포괄적 일괄타결’을 통해 ‘21세기 생존과 발전’이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 내고, 미국과 적대관계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을 이룩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구애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주권과 독립의 공간을 유지하고 확대하려고 생각했던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양 차원을 가지고 있는 북중관계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미국에 대해서 깊은 적대감과 함께 전략적 화해의 필요성을 동시에 느끼는 ‘이중적’이고 ‘복합적’인 인식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김정은의 핵전략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일본에 대한 김정은의 이중적 인식

한편, 김정은은 일본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갖고 있을까? 북한은 지금 일본과 더할 나위 없이 악화된 적대관계에 처해 있다. 특히, 아베 신조 내각이 들어선 이래,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과 공조를 하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온갖 대북 제재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에 대항하는 미국 주도의 MD체계 완성에 이미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일본은 항상 미국과 한편에 서서 북한을 처벌하려고 드는 적대국가으로 인식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일본과 적대하기만 해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할 수 없으며, 과거사 청산과 식민지배 배상문제, 관계정상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⁷⁷⁾ 북한은 고이즈미 정부 시기인 2002년 ‘조일(朝·日)평양선언’에 합의한 적도 있고, 2014년 5월 하순에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일양국 간에 ‘5월 29일자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5월 29일자 합의문’을 보자. 양측은 “(2002년)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진지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일본은 북한에게 “1945년을 전후하여 공화국령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의 유골 및 묘지, 잔류일본인, 일본인 배우자, 랍치피해자 및 행불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고, 북한은 일본에게 “일본 측이 지난 시기 랍치문제와 관련하여 기울여온 공화국의 노력을 인정한데 대해 평가하면서 종래의 립장은 있지만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이며 전면적으로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일본이 “최종적으로 현재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하고 있는 대조선(제재)조치를 해제할 (유엔안보리결의와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는다.)의사를 표명”했다. 그리고 양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실행에 옮기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한 ‘쌍방이 취할 행동조치들’로서는 양국이 각각 ‘일곱 가지’씩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했다(조선중앙통신, 2014. 5. 30.)

일본으로서도 만일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면, 결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엄중한 현실이다. 따라서 비록 유엔안보리, 국제사회와 공조를 하면서도, 북일관계의 특수한 역사적 특수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 ‘5월 29일 합의’와 같은 ‘정부 간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에 와서 대북정책에서 미국과 틈새 없는 정책 공조를 해왔기 때문에 김정은은 일본은 미국정부로부터 독자성과 자율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 해서 미래에도 그러라는 법은 없다. 결국 북일관계도 ‘이중적’인 속성을 갖고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만일 대내외적으로 정치기회구조가 유리해지면 상호 간에 ‘전략적 선택’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다) 중국에 대한 김정은의 다중적 인식

역사적으로 북한지도자들은 바로 접경하고 있는 강대국 중국으로부터 오는 영향력으로부터 독립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다. 결국 김정은의 중국에 대한 인식과 관점도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북중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77) 2016년 5월 초에 김정은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했던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의하면, 김정은이 자신에게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지?”라고 물었다고 한다.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조선로동당대회를 마친 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하고 싶은 것”, “양국 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납치문제와 식민지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했다(중앙일보, 2016. 5. 9.).

첫째, 냉전시절에 특히 두드러졌던 것으로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대항력으로 소련을 끌고 들어와 이용하면서 중소양국 간에 균형전략을 썼으며, 이를 통해 양 사회주의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과 자율성을 유지하려고 했다(Paik, 2015).

둘째, 위에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미 언급한 것이지만, 북한은 소련 붕괴 이후에는 그 동안 과도하게 커진 중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며 중국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를 해왔다. 북한지도자들의 그러한 전략적 의도와 계산은 핵협상을 통해 드러났으며, 1994년 제네바 북기미본합의, 2000년 북미공동코뮈니케, 2005년 9.19공동성명 등의 합의에 반영됐다. 북한은 마치 냉전시대에 중소양국에 대한 균형정책을 통해 중소양국으로부터 경쟁적인 구애를 받았던 것처럼, 미중양국 간의 균형정책을 통해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공간과 자율성을 유지하고 강화코자 한 것이다.

셋째, 현재 중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규칙을 만들고 양국이 공동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국제질서를 구축코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그러한 지위와 역할로부터 생겨나는 전략적 이익 때문에 미국과 대결도 하지만 또한 협력하는 관계에 있다. 미중양국 간의 합의한 ‘신형대국관계’가 대표적인 것이다. 그러나 남중국해 영토문제로 미중양국이 부딪히고, 남한에 사드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동아시아에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항하는 한·미·일 3국간 군사협력이 강화되면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도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넷째, 중국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대북 유엔안보리 제재에 동참하고 있지만, 식량, 생활필수품 등에 대한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중국산 식량과 생필품은 북한에 그대로 수출되고 있으며, 원유도 수출도 지속되고 있다. 북중국경지방에는 양국 간의 무역과 공동협력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중국과의 관계는 중국으로부터 오는 ‘우호’와 ‘위협’이 동시에 존재하는 관계이다. 김정은으로서는 인접 강대국 중국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고, 미국과의 적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의 북중관계에 대한 이러한 다중적, 복합적인 인식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라) 남한에 대한 김정은의 이중적 인식

그렇다면, 김정은이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남한과 남한지도자에 대한 인식은 어떠할까? 김정은의 집권 4년 9개월의 기간은 이명박정부의 마지막 1년과 박근혜정부의 지난 3년 반 여의 기간과 겹친다. 김정은의 집권기간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고,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이 커짐에 따라 북한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 갔다. 따라서 남한은 남북대화보다는 한미공조 강화와 유엔안보리 제재

강화, 북한 체제전환을 통한 통일정책 추진 등 대북 차별정책을 강화해왔다.

흥미로운 점은 불신의 악화가 남북 간에 상호적이었다는 점이다.金正은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남한지도자들에 대해 점점 더 크게 불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보인다.金正은은 첫째, 남한정부들이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시도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둘째, 남한정부들이 남북 간의 대화보다는 한미공조, 유엔과의 협력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며, 셋째, 2013년 봄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에 남한이 미군의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위협 훈련’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金正은의 남한 리더십에 대한 불신은 결국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인신 공격 차원에서부터 핵무기 선제사용, 청와대 공격 등의 위협으로 나타났다.

金正은이 비록 남한정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그들과 적대만 해서는 한반도에서 주요 현안을 해결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때로는 대화를 제의하고 실제 대화를 하기도 했다. 남북 간에는 이명박정부 시 2009년 9~10월, 2010년 10~11월, 그리고 박근혜정부 시 2014년 2월, 2015년 10월에 각각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졌으며,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폭발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은 ‘무박 4일 회담’을 통해 8.25합의를 이룩해 내기도 했다. 목함지뢰사건은 특별히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울지프리덤가디언(UFG) 진행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고 위중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미중양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남북한에게 대화를 강권한 면이 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양측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다.

결국金正은의 남한에 대한 인식도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과 일본에 대한 것처럼 불신과 적대가 주를 이뤄왔지만, 남한과의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金正은이 남한과의 대화와 협상이 부재한 틈을 타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계획적이고 공세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해 온 것을 보면,金正은의 남북관계와 남한지도자들에 대한 불신과 대결이 핵전략을 선택하는 데서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고, 앞으로도 양측 지도자들 간에 불신이 지속되는 한 그러할 것으로 보인다.

다. 정책주체와 환경구조의 상호작용: ‘경제·핵 병진노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핵전략의 선택을 예측하기 위해 핵전략을 결정하는 요소들을 전략주체(지도자) 차원과 환경구조(정치기회구조) 차원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지도자 차원의 요소들로서 사상과 사상사업의 방식, 지도자의 정체성과 이익을 검토했고, 환경구조(정치기회구조) 차원의 요소로서는 국내적으로는 수령제 사회주의, 대외적으로는 미국, 일본, 중국, 한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金正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양 차원의 요소들이 어떠한 핵전략을 산출해 냈는가? 북한에서 이 양차원의

요소들이 ‘행위자-구조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산출해낸 구체적인 핵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행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제·핵 병진노선’이었다.

북한은 2012년 4월 헌법을 개정하여 헌법전문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였으며,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적으로 발전시키는 ‘병진노선’을 결정했다. 다음 날인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보유를 법제화했다. 북한은 병진노선은 핵보유로 인해 핵억제력이 생겨나 군사안보가 확보된 만큼 더 많은 자원을 경제건설에 배분하여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병진노선은 경제발전에 중점이 놓여있는 전략적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로동신문, 2013. 4. 2a; 로동신문, 2013. 4. 2b). 그러나 이는 결국 핵억제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상은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이고, 그것들의 근본 목적은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의 건설이다. 즉 경제력과 군사력(핵무력)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데서 가장 기본적인 사상사업의 방식은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식으로서 사상사업이 기동적, 집중적, 공세적, 공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사업은 군사안보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공세적, 공격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의 확대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김정은의 정체성과 이익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갖고 있는 정체성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체현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의 백두혈통과 지위를 계승하고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려는 ‘수령’의 정체성이다. 김정은은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소년기 3년 반을 스위스에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기도 했지만, 수령의 아들, 수령의 손자, 수령 후계자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수령이 된 인물이다. 따라서 그러한 수령의 정체성을 가진 김정은으로서는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이익, 즉 수령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이익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북한의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는 수령의 유일영도체제로서 대내적으로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큰 반대나 장애물 없이 해내는 데서 매우 유리한 환경구조(정치기회구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 북한의 미국, 일본, 중국, 한국과의 관계는 적대와 협력의 이중적인 관계이지만, 최근에 들어 적대적 요소가 압도적이며, 김정은은 이 나라들로부터 오는 심각한 위협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6.25전쟁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고 미국, 한국, 일본과 적대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이 나라들로부터 오는 위협에 대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을 무조건 무시하기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요약하면, 전략주체로서의 김정은 차원에서의 여러 요소들과 그가 처한 국내외 환경구조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산출해낸 것이 바로 ‘김정은 시대의 전략적 노선’으로 나온 경제·핵 병진노선이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김정은의 기본적인 핵전략이며, 김정은이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재확인하는 것을 보면, 향후에도 병진노선이 북한의 핵전략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라. ‘경제·핵 병진노선’의 전망

그렇다면, 김정은이 자신의 시대의 전략적 노선으로 선택한 ‘경제·핵 병진노선’은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에 대한 예측을 위해서 위에서 북한의 기존의 핵전략을 분석하는 데서 사용했던 ‘행위자-구조와의 관계’의 분석틀을 그대로 이용해 보기로 하자. 만일 행위자(정책주체, 지도자) 차원 혹은 구조(환경구조, 정치기회구조) 차원에서 혹은 양 차원 모두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긴다면 결국 전략노선은 변할 수 있는 것이고, 김정은 시대의 전략노선인 병진노선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희소식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향후 북한 지도자 차원에서 김정은의 사상, 사상방식, 정체성, 이익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 그리고 김정은이 처한 국내외 환경구조, 즉 북한의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 북한의 미국, 일본,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생겨나서 이 나라들에 대한 김정은의 협력과 적대 의식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까? 만일 지도자 차원과 구조 차원에서의 여러 요소들에서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겨난다면,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여러 요소들에서 변화가 생겨날 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자. 우선,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와 김정일애국주의에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지는 않다.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 즉 경제력과 군사력(핵무력)을 갖춘 사회주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목표에서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사상사업의 방식인 ‘집중포화, 연속포화, 명중포화’ 방식, 기동적, 집중적, 공세적, 공격적인 방법에서도 조그마한 변화는 올 수 있겠지만, 북한체제의 성격 상 당장 어떤 큰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김정은의 수령의 정체성과 그것을 확고히 유지·강화하려는 이익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대외관계, 특히, 미국, 일본, 한국과의 관계가 개선된다면, 김정은이 10대 소년 때 스위스에서 보내면서 겪은 서양세계의 경험이 김정은의 정책에 좀 더 반영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대내외 환경구조에서 어떤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대내 환경구조인 수령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령의 유일영도를 가능케 해주는 수령제 사회주의는 김정은이 선대 수령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고, 수령제 사회주의 덕분에 그만큼 ‘쉬운’ 정치를 할 수 있으므로, 김정은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체제를 고수하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외 환경구조에서의 변화는 가능할까? 북한과 미국과 일본, 중국, 한국과의 관계에서 적대적 요소와 협력적 요소 중에서 지금까지는 적대적 요소가 압도적이었지만, 향후 협력적 요소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를 증진하며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바뀐다면, 김정은이 이 나라들에 대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위협인식에도 당연히 변화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 환경구조에서도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단기적으로는 변화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들인 미중양국이 상호 협력보다는 대결하는 상황 속에서 북핵문제가 자리 잡고 있고,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명백히 나아가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즉 선택포기하지 않는다면, 결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외교가 실패했고, 군사적 수단은 사용할 수가 없으며, 그렇다고 전쟁을 할 수는 없는 처지에서 대북 처벌수단인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물론 문제해결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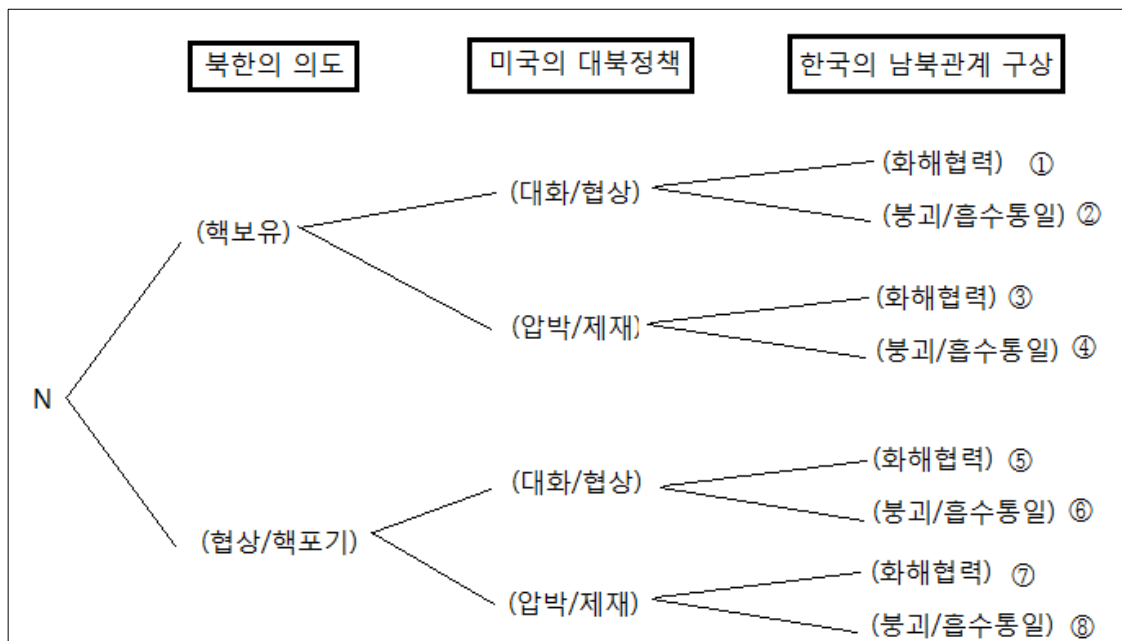
이 모든 것은 결국 김정은 시대의 북한의 전략적 노선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당장 어떤 변화가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고, 이는 북한의 비핵화 전망이 그만큼 어둡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가 스스로 협력적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북한 지도자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볼 때, 우리가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데서 압력과 제재보다는 설득, 유인, 협력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만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미국의 문제해결적 한반도정책,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한 협력,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관련국들의 정치적·정책적 리더십 확립,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하나의 문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합의와 로드맵의 마련 등이 이뤄진다면(백학순, 2016: 103-114),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향후 핵전략에서 변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게 되면, 북한을 비핵화 시킬 수 있는 전망도 더 밝아질 것이다.

2. 한국과 미국의 선택지

북한 비핵화를 결정하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 첫째, 북한의 전략적 의도이다. 즉, 핵보유국 지위 쟁취 vs. 협상 통한 핵포기/거래 사사이에서 북한의 다양한 전략이 나온다고 가정한다. 둘째,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화/협상 vs. 압박/제재 사이의 선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국의 남북관계 구상으로서, 화해협력 vs. 붕괴/흡수통일의 선택 문제이다. 이 세 가지 차원의 결합으로 다양한 북핵 관련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상정한 핵심 행위자 세 나라의 선택지로 시나리오 분기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여러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IV-2-1] 게임트리로 본 한국, 미국, 북한의 선택지

가. 미국의 대북전략

북핵 문제 시작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협상과 배신’의 역사라는 기본 인식에 입각하고 있다. 1차 북핵 위기 이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과의 핵문제 해결에 타협했으나 결국 2차 북핵 위기 까지 북한에 기만당했다는 인식이 미국 조야의 공통된 시각이다.

버락 오바마는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소위 ‘리셋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북한 지도자도 기꺼이 만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2008.7월). 하지만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시설 원상복구로 대꾸했고(2009.4월), 2차 핵실험(2009.5월)과 뒤이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채택(2009.6월)으로 북미관계는 정체국면으로 들어섰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미국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접근법 변화를 초래했고,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OPCON transfer) 연기를 합의(2010.6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각각 두 차례에 걸친 남북, 북미 간 비핵화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조와 영양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윤달 합의(Leap Day Deal)'를 이루었지만, 2012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합의 이행은 무산되었다.

이러한 저간의 정황을 감안해 보면, 미북간 신뢰의 결여는 북한의 행태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미국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신뢰 가능한 대화를 지속 추진할 것이란 방침을 갖고 있지만, △북한 핵보유국 인정 불가, △나쁜 행동을 하지 않거나 대화에 복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보상 불가, △북한의 이웃국가들에 대한 도발 용납 불가, △남북관계 및 북한 내 인권상황 개선 없이는 미북 관계의 근본적 개선 불가라는 원칙적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대해 '심각한 문제(serious problem)'이긴 하지만 '시급한 문제(urgent problem)'는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해왔다. 미국 내 전문가 일부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단·지연 징후는 없으며, 현재 상태가 유지되면 북한은 2020년까지 50기~100기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동 무기들은 플루토늄(Pu)이 아닌 농축 우라늄(HEU)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북한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이 다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미국의 주된 관심은 북한의 핵능력보다는 미사일 능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북한이 미국에 위협이 될 만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미 국내적으로 '전략적 인내'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며,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강경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미국 비확산 정책 부서에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면 그것은 곧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만 한 심각한 사태로 보고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2016년 1월 4차 핵실험 이후 의회가 입안하고 오바마 행정부가 승인한 대북 제재법(HR.757) 속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나 개인도 제재대상에 포함하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이 포함되었고, 만일 미국 정부가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경우 북한은 과거 BDA 제재보다 더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강경해지는 미 의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초당파적 대북 강경책이 차기 정부에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바, 미 의회 쪽에서는 대북, 대중국 부정적 시각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북한 인권문제 제기 등 북한에 대한 다방면의 압박 수단을 총동원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2016년 미 대선 국면에서 후보자들의 선명성 경쟁 차원에서 대북 강경론이 주된 기조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미국의 선택은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협상 의지를 가시적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현재의 압박/제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비핵화 협상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협상을 통한 비핵화를 입증할 최소한의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미국의 비핵화 전략은 대화/협상보다는 제재/압박 쪽에 더 무게가 주어진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의 전격적인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더욱 센 압박/제재 후 대화 제의로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한국의 남북관계 구상

북한의 핵보유는 대외적으로 자국의 무력 수단을 과시하고 동시에 핵 보유의 당위성을 알리는 일종의 광고적 의미를 가진다. 미국의 핵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을 개발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같은 민족인 한국과의 관계개선이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은 병진노선을 내세워 경제발전과 핵개발을 동시에 이루려하지만 이는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선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달성이 쉽지 않은 정책 목표이다. 현재 북한 계획경제의 부족분을 시장이 보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지만 시장의 지속적인 확산은 장기적으로 국가권력을 분산시키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북한경제의 미약한 경제성장은 내부의 성장 동력보다는 자원의 수출, 불법행위로 인한 수입, 외부 지원 등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김정은의 관심도 주민을 위한 일반 경제의 회복보다는 자신과 측근들의 권력을 유지시키고 있는 궁정경제와 군수를 담당하는 제2경제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북한으로서는 군수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일반 경제를 희생시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은 유고연방과 이라크가 자위적 국방력을 지니지 못해 제국주의 국가들의 희생물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권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은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국방비를 감소하고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는 정책적 변환을 설득하여야 한다.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은 자명하다. 북한은 금강산 관광객 피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개성공단 임시 폐쇄, 목함 지뢰 사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을 자극했고 도발해 왔으며, 5차 핵실험으로 정점에 달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국은 인내와 기대를 갖고 대처해왔다. 핵실험과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경협은 거의 중단되었고 관련된 위탁가공 업체들이 생산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면서 경협의 규모는 더욱 축소되었다. 북한이 야심차게 공표한 21개 경제개발구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높은 불확실성과 경제외적 부담을 안고 투자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연계시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정책변화를 시행될 때 남북이 상호 발전하는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전 방위적인 경제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고 대화로 나설 가능성은 대비하여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진정성에 따라 당연히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를 재개하겠지만, 북한이 대화를 표방하면서 내부적으로는 핵실험 준비를 한다면 남북관계는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계속되고 북한은 계속 핵개발에 몰두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심지어 국지전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경제제재를 통해 경제사정이 악화된다면 북한 내부에서도 불만이 계속 고조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탈북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앞에서도 분석했듯이 북한의 핵개발 고수 시나리오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향후 남북관계 개선은 험난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단이 많지 않은 현실이다. 한미군사합동훈련 강화, 북한에 대한 외교적 공세 강화, 군비경쟁 등 압박 정책이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남북관계를 완전히 방치할 수도 없고, 문제의 제공자인 북한에게 직접 요구사항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간 한국의 대화를 통한 신뢰회복 노력을 북한이 수도 없이 악용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화 추진은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은 한국의 경제적 지원을 얻는 것에 관심이 높고,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비롯한 정책적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는 남북한의 선호도나 기대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개발을 고수하는 한 남북관계는 경색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도 북한과의 대화, 협상이나 인도적 지원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북한보다 유연한 다양한 정책적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북 협상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북지원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는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 지원의 폭과 수준을 결정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수시로 북한의 핵 포기 대가는 기대 이상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점을 설득하고, 반대의 경우 한국의 정책 선택의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에 주지시켜야 한다. 향후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데 따른 정치적 손실보다는 국제규범을 갖춘 국가로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편입될 때 발생할 경제적 편익이 크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과 정책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 역대정부의 대북 정책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표Ⅳ-2-1> 참조).

한국의 역대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지원도 하였지만, 북한은 필요한 지원을 수용한 이후에는 다시 도발을 감행하면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중단하는 패턴을 보여 왔다. 이런 북한의 행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제사회로 유도하는 주요한 정책이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강한 압박도 필요하다. 즉, 복잡적이고 다원적인 대북 정책은 한국의 정책 적용 범위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정책의 일관성 문제는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한 기대하기 어렵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다원성을 감안할 때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남북한 협력과 갈등의 정책 개발과 모델화가 필요하다.

<표 IV-2-1>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

정부	최우선 목표	구체적 정책	주요 성과	부정적 측면	정책 영향 요인
노태우	한반도 전쟁 방지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북방정책에 치중	비무장지대 무장병력 침투
김영삼	한반도 전쟁 방지	상호주의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의 결합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발표	정책의 일관성 결여	북한의 NPT 탈퇴
김대중	화해와 협력 관계 확립	포용정책	남북정상회담 개최 3대 경협사업 추진	정책의 투명성 결여	서해교전 북핵 위기
노무현	북한 핵의 평화적 해결	포용정책 계승	2·13합의 도출	남남갈등 확산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
이명박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	대북정책의 원칙 강조	대북정책 일관성 유지	대북정책의 유연성 결여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박근혜	원칙을 중시한 남북관계 수립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8·25 합의 개성공단 철수	협소한 대북정책 스펙트럼	북한 핵실험 목함지뢰사건

3. 시나리오 매트릭스 - 북핵 고착 vs. 협상 재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에 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대북 전략이란 이름으로 수많은 접근법들이 시도되었으나, 북한의 비핵화 유도에 유의미한 진전을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북핵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일로를 거듭한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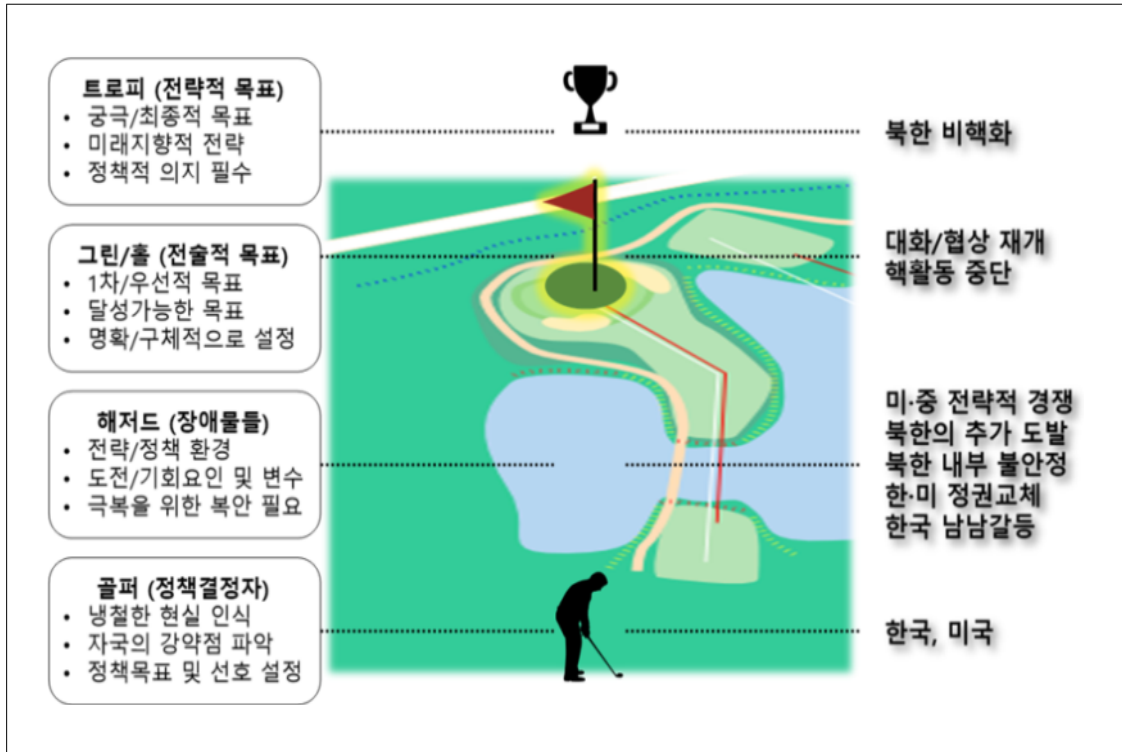
기존 대북전략은 북한의 과거 행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 행태를 추정하는 ‘정세전망’ 방식에 크게 의존해왔다. 그러나 북핵문제가 점점 더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방식은 불확실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로운 북한 비핵화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키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시나리오 기법은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향후 북핵문제의 흐름을 예측하고, 이 문제를 둘러싼 각종 변수들의 돌출 또는 소멸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구사할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가려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목적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하나의 방법론이 아니라 여러 방법론의 활용을 통해 성공 가능성 높은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가. 시나리오 구상 개념

그렇다면, 본 연구가 북한 비핵화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 어떻게 시나리오 기법을 활용하려 하는지에 대한 기본 구상 개념을 설명해두고자 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연구의 시나리오가 상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골프’에 비유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시나리오 구상에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strategic goal)’가 있다는 점이다. 이 목표는 궁극적이며 최종적인(ultimate & final) 목표가 된다. 이는 골프 경기에서 ‘트로피’를 차지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는데, 홀을 하나하나 정복해서 마침내 우승을 하는 경우와 같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골프 선수가 코스 전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략이 필요하며, 기필코 우승하겠다는 결의와도 같은 강력한 ‘정책적(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림 IV-3-1] 골프에 비유한 비핵화 시나리오 구상 개념

둘째,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전술적 목표(tactical objectives)’가 있다. 이는 골프로 치자면 홀 내지 그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전술적 목표는 1차적이고 우선적 목표가 된다. 프로 골프선수들이 “일단 해당 홀을 무사히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흔히 언급하는 것처럼, 이러한 전술적 목표를 단계적으로 극복해야만 전략적 목표 달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전술적 목표는 무엇보다도 ‘달성가능한(feasible)’ 목표라야만 한다. 만약 짧은(PAR 3) 코스라면 ‘홀인원(hole-in-one)’까지 노려봄직 하겠지만, 코스가 길면 길수록 그런 행운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따라서 골프선수들 대부분 어떻게 그린에 공을 안착시킬까부터 생각한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전술적 목표로는 상정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의 핵활동을 중단 내지 동결시킨 다음 대화와 협상의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되게끔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전술적 목표는 매우 명확하고(clear) 구체적으로(specific) 설정해놓을 필요가 있다. 골프선수가 홀컵의 깃대를 조준점으로 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나의 전술적 목표는 2차, 3차 목표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셋째, 전술적 목표 앞에 놓여진 ‘장애물(obstacles)’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있다. 골프로는 벙커, 연못, 나무, 수풀 등 갖가지 ‘해저드(hazards)’가 이에 해당된다. 넓은 의미로는 전략·정책 환경 전반이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소 좁은 의미로는 어떤 정책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직면하게 되는 도전 또는 기회요인⁷⁸⁾과 각종 변수들이 있다. 본 연구에 부합하는 예를 들자면, 미·중의 전략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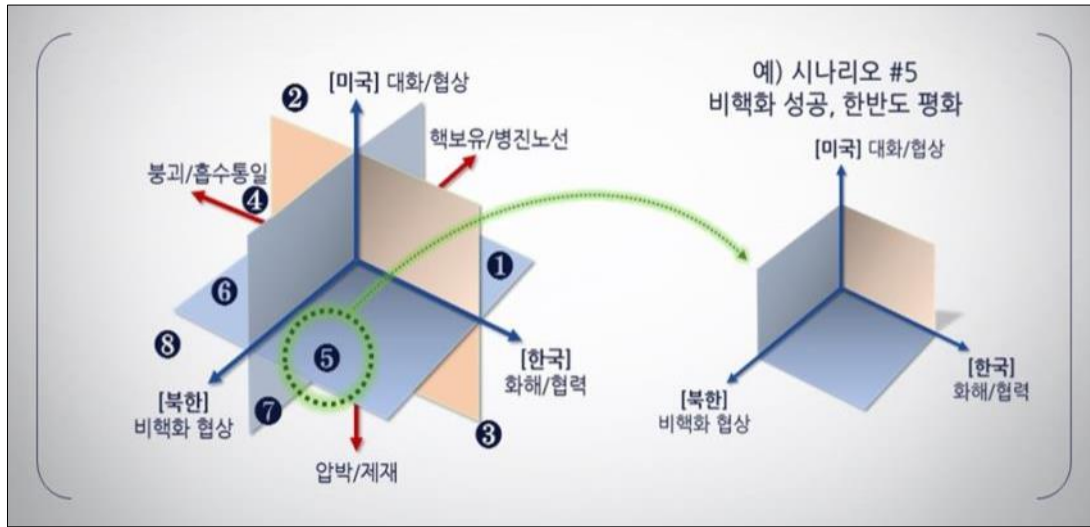
경쟁과 대립이라는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을 비롯해, 북한의 추가도발 등 돌발적 변수, 북한(정권) 내부의 동요와 불안정과 같은 잠재적 변수로서의 불확실성, 한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 등 정치·정책 환경의 변화, 한국 내 여·야 경쟁이나 남남갈등 같은 국내정치적 문제들이 모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한 계획이나 복안을 신중하게 마련하는 것이다. 골프선수는 해저드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골프클럽을 고르고 풍향·풍속을 계산하는 등 나름의 치밀한 계획을 세운다. 이처럼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하거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대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정책결정자(policymaker)’라는 행위자 요소가 있다. 비유하자면, 골프선수는 개인(individual)이지만, 정책결정자는 개인이거나 조직(organization) 내지 국가 전체(state actor)가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러한 정책결정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지적하자면,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과 판단, ▲자신(자국)의 강약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파악 노력, ▲구체적 정책목표·선호 결정 및 적절한 우선순위 설정·부여 등을 꼽을 수 있다. 골프선수가 언제나 차분하고 냉정한 심리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신의 신체조건, 비거리 등을 포함한 ‘핸디캡’을 아는 것, 코스를 공략하기 위해 과감한 모험을 감수할지 아니면 안전한 접근을 택할지 생각해서 표적을 정하는 것 등은 정책결정자가 신중하게 고민하는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고 하겠다.

나. 북핵 시나리오 매트릭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여부를 좌우할 변수로 크게 세 가지 차원을 우선 검토하였다. 가장 먼저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핵보유국 지위 쟁취 또는 ▲협상을 통한 핵포기 가운데 어느 쪽인가에 따라 비핵화 유도가 성공할 수 있는지가 결정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북정책이란 차원으로서, ▲대화와 협상 또는 ▲제재와 압박 가운데 어느 쪽에 정책적 선호를 보이고 있으며 또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할지가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한국의 남북관계 구상도 이와 비슷하게 ▲화해협력 정책이나 아니면 ▲붕괴·흡수통일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 남북/한·미/미·북 관계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을 조합해보면 총 8개 경우의 수가 나오는 다양하고 입체적인 북핵 시나리오를 구성해볼 수 있다.

78) 장애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기회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림 IV-3-2] 북한·미국·한국의 전략적 선택에 따른 시나리오 입체 매트릭스

위의 시나리오 매트릭스가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차원은 각각 별개로 분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차원 간에 상호작용과 피드백(feedback)이 발생하는 유기적인 연동의 관계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 의도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응 여하에 따라 최적의 정책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민하고 유연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차원 간 상호작용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그간 북한을 상대해서 지속적인 비핵화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인바, 북한 비핵화 전략을 일회성 상호작용이 아니라 ‘반복적인 게임(repeated game)’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전략적 접근법을 개발·시도하는데 필히 유념해야 할 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체(3D) 시나리오를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한다면, 북한과 미국의 선택인 X축과 Y축을 그대로 2차원 도표에 넣은 다음 각 칸(cell)에서 한국의 선택을 화해협력(각 칸의 좌상귀) 혹은 붕괴/흡수통일(각 칸의 우하귀)로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다.

<표 IV-3-1> 북핵문제 시나리오 2차원 매트릭스

		미국의 대북정책	
		대화·협상	제재·압박
북한의 핵구상	핵보유국 지위 쟁취	①	③
		②	④
	협상을 통한 핵포기	⑤	⑦
		⑥	⑧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변수-북한의 전략적 의도, 미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남북관계구상-에 따라 각 시나리오의 전개 양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보유/병진 노선을 유지하고자 할 때, 미국은 대북정책으로서 대화와 협상 혹은 압박과 제재를 하고자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남북관계 구상이 화해협력, 붕괴/흡수통일을 목표로 한다면, 예상가능한 시나리오는 북핵고착의 상황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아래 <표>와 같이, 북한의 핵보유/ 병진노선과 미국의 대북압박/제재, 그리고 한국이 붕괴/흡수통일의 남북관계를 구상한다면, 상황은 가장 극단의 시나리오로 치달아 한반도의 불안과 위기상황이 고조될 것이다.

한편, 북한과 협상의 테이블에서 핵포기를 논할 수 있다면, 우리는 비핵화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대화와 협상의 자세, 한국의 화해협력구상이 조화를 이룬다면, 한반도는 통일과 평화의 준비선상에 놓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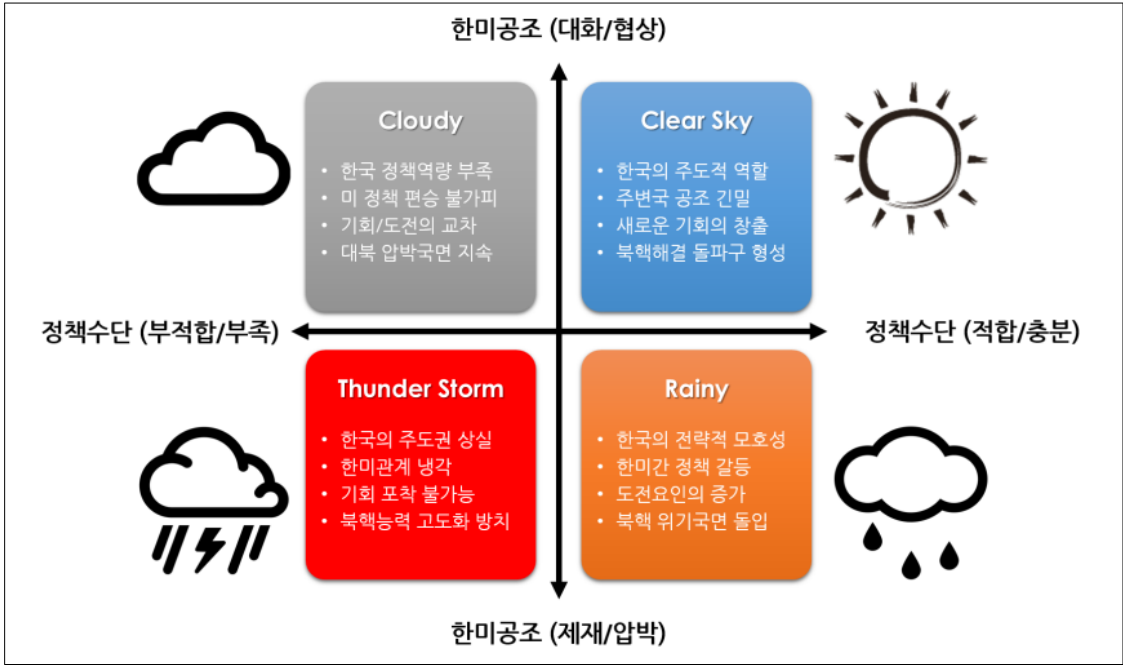
<표 IV-3-2> 각국 정책별 시나리오 전개 양상 1

북한의 의도	미국의 대북정책	한국의 남북관계구상	시나리오				
핵보유/ 병진노선	대화/협상	화해협력	①	북핵고착			
		제재/압박	②	북핵고착			
	제재/압박	화해협력	③	북핵고착			
		제재/압박	④	북핵고착, 한반도불안/위기			
협상/핵포기	대화/협상	화해협력	⑤	비핵화성공, 한반도평화			
		제재/압박	⑥	비핵화성공, 한반도통일(준비)			
	제재/압박	화해협력	⑦	비핵화성공			
		제재/압박	⑧	비핵화성공			
북핵고착			비핵화성공				
협상재개							
④	③	②	①	⑧	⑦	⑥	⑤
← 상황 악화				→ 상황 개선			

한국의 관점에서 보자면, 시나리오 ⑤~⑧의 경우가 긍정적이며, 특히 ⑤번 시나리오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①~④의 경우는 비관적인 시나리오 흐름을 보이게 된다. 현재의 상태는 유감스럽게도 시나리오 ④에 가깝게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3-3> 한·미를 중심으로 본 북핵 시나리오 매트릭스

		한국			
			화해정책	현상유지	강경정책
미국		시나리오	남북회담 제의 인도협력 추진	제재기조 유지	추가제재 강화 대북봉쇄 추진
	포용정책	평화체제 수용			
	현상유지	국제제재 유지			
	강경정책	전면제재 적용 정밀타격 준비			



[그림 IV-3-3] 한미공조와 정책수단에 따른 북핵 시나리오 매트릭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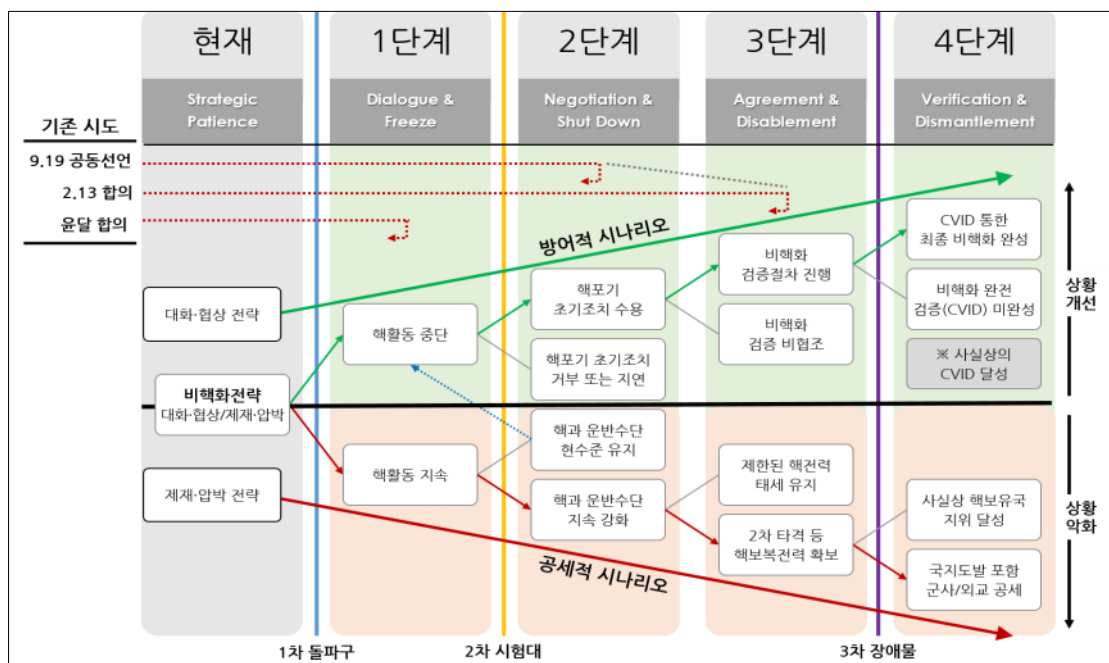
한편, 한미공조와 정책수단에 따라 북핵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보면 앞의 <그림 IV-3-3>과 같다. 한미공조는 대화와 협상, 혹은 제재와 압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수단은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경우, 혹은 적합하거나 충분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제재와 압박을 기반으로 한미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수단이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경우(Thunder Storm)의 시나리오를 보면, 한국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한미관계가 냉각되며, 기회에 대한 포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북핵능력에 대한 고도화를 방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수단이 적합하고, 충분한 경우(Rainy)도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증가하고, 정책갈등이 심화되며, 도전요인이 증가하여, 북핵 위기국면에 돌입하게 될 수 있다.

또한, 대화와 협상을 기반으로 한 한미공조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정책수단이 부적합하거나 부족한 경우(Cloudy)를 보면, 한국의 정책역량이 부족하여 미 정책에 대한 편승이 불가피하고, 기회와 도전이 교차하며, 대북압박국면이 지속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정책수단이 충분하고, 적합하면(Clear Sky), 한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주변국과의 공조를 긴밀히 하고, 새로운 기회의 창출을 통하여 북핵문제해결의 돌파구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 북한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전략

북한의 핵위협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비핵화로 가는 길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3-4] 북한비핵화 관철을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

먼저 현재 단계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의 상황이라 볼 수 있다. 비핵화전략은 대화와 협상, 혹은 제재와 압박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는데, 이 중 ‘방어적 시나리오’로 가는 출발점에 대화와 협상이 있으며, ‘공세적’ 시나리오로 가는 출발점에 제재와 압박에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취하는 전략에 따라 1차 돌파구를 넘어서고 나면, 제1단계 ‘대화 및 동결(Dialogue & Freeze)’에 들어선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현 상황에서 취한 전략에 따라 핵활동을 중단하거나, 핵활동을 지속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이 중 핵활동을 중단하는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보면, 제2단계 ‘협상 및 가동중단(Negotiation & Shut Down)’에서 북한은 핵포기를 위한 초기조치를 수용하거나, 거부 혹은 지연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핵포기 초기조치를 수용한다고 보았을 때, 제3단계 ‘합의 및 불능화(Agreement & Disablement)’로 진입한다. 이 단계에서 북한이 검증·사찰에 응한다면, 바꿔 말해 그간의 비협조적 태도나 강력한 거부 의사가 없다면, 비핵화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그 다음 마지막 제4단계로 ‘검증 및 핵폐기(Verification & Dismantlement)’ 단계에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CVID)’를 통한 최종비핵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 비록 제4단계에서 CVID 원칙에 입각한 핵폐기가 미완성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CVID 달성에 도달한 것이므로, 상황개선에 상당히 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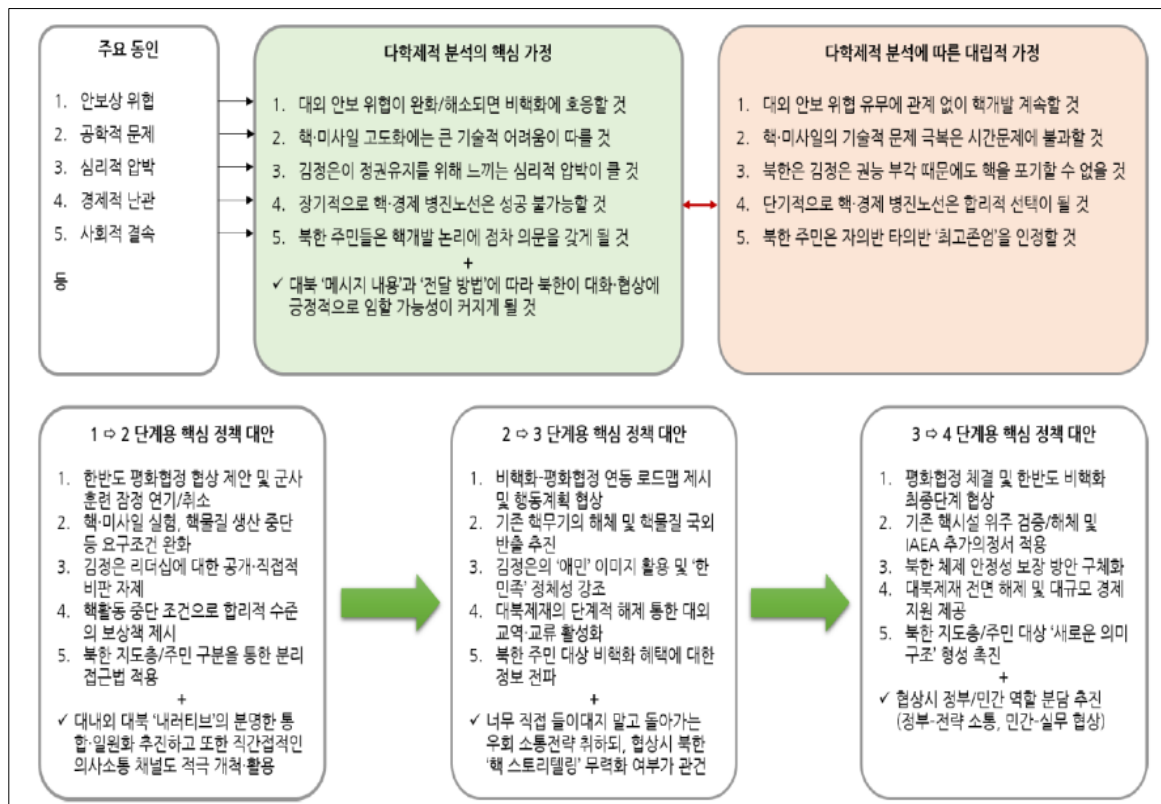
반면,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 전략으로 인해 제1단계에서 북한의 핵활동이 지속되는 것이 ‘공세적 시나리오’로 향하는 첫 번째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핵활동으로 인해 제2단계에 들어서 북한이 핵과 운반수단을 현 수준보다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다만, 핵과 운반수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핵활동을 중단하도록 회유책을 쓸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하여 본다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운반수단의 강화는, 제3단계에 들어서 제한된 핵전력 태세를 유지하거나, 2차 타격 등 핵보복전력을 확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제4단계에 들어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달성하는 것이며, 국지도발을 포함한 군사·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현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 다학제적 분석에 따른 정책대안

본 연구는 기존까지 북핵문제에 대해 다룬 수많은 연구와 달리, 국제정치학·공학·심리학·경제학·사회학·커뮤니케이션학 등 다학제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각 학제적 분석을 통해 도출한 핵심적 가정과 이에 반대되는 대립적 가정, 그리고 이를 통한 정책대안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정치의 상황에서 보면, 안보상의 위협이라는 동인은 ‘대외 안보 위협이 완화 혹은 해소되면 비핵화에 호응할 것’이라고 전제한다. 또한, 공학적 관점에서는 ‘핵·미사일 고도화에는 큰 기술적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전제하고,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김정은이 정권유지를 위해 느끼는 심리적 압박이 클 것’이라 전제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장기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은 성공이 불가능할 것’이라 전제하고,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핵개발 논리에 점차 의문을 갖게 될 것’이라 전제한다. 여기에 더하여 커뮤니케이션학에서는 ‘대북 메시지 내용과 전달방법에 따라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긍정적으로 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본다. 물론, 각 접근에 대한 대립적 가정 또한 존재한다. 먼저 안보상의 위협을 동인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대외 안보위협 유무에 관계없이 핵개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 존재한다. 또한, 공학적 관점이 갖는 가정과 반대로 ‘핵·미사일의 기술적 문제 극복은 시간문제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한, 심리적 관점이 갖는 가정에 반하여, ‘북한은 김정은의 심리적 압박 문제보다는 오히려 권능 부각 때문에도 핵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 본다. 또한, 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대립가정에서는, ‘북한에게 단기적으로 핵·경제 병진노선은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학적 관점이 갖는 가정에 대한 대립시각에서는, ‘북한 주민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최고 존엄을 인정할 것’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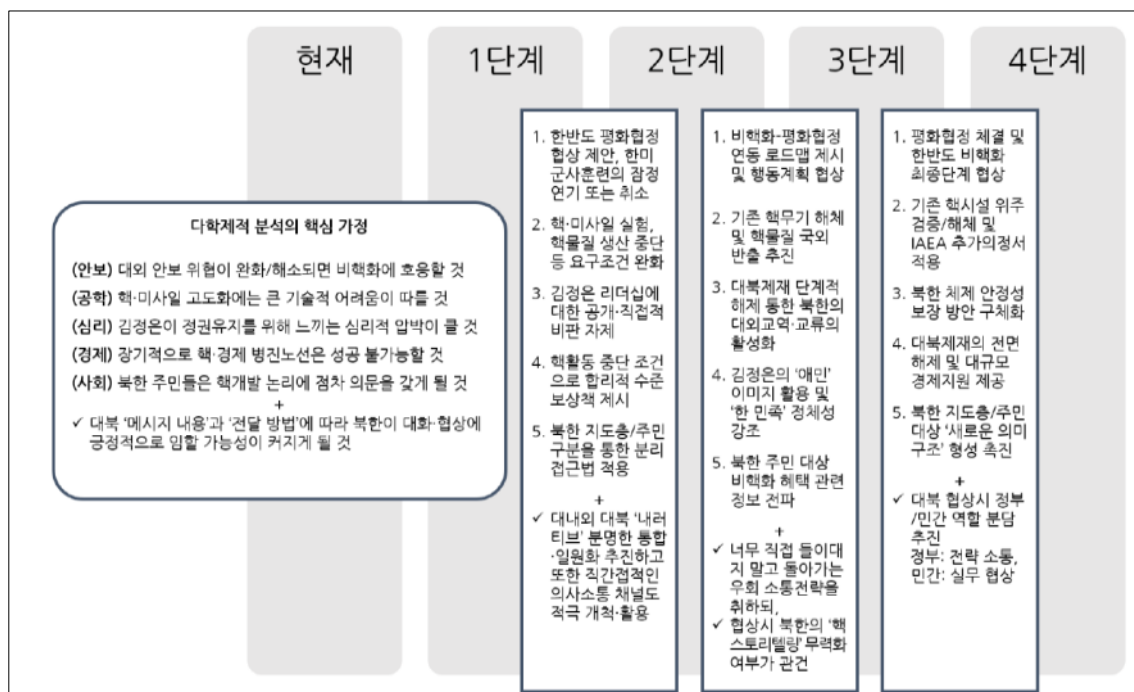
[그림 IV-3-5] 다학제적 분석의 핵심 가정 및 정책대안

이상의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볼 때, 상기 언급한 제1단계에서 제4단계까지의 비핵화 관철을 위한 각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핵심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단계에서 제2단계로 가는 정책 대안은 첫째,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제안 및 군사훈련

잠정연기 혹은 취소, 둘째, 핵·미사일 실험, 핵물질 생산 중단 등 요구조건 완화, 셋째, 김정은 리더십에 대한 공개적·직접적 비판 자제, 넷째, 핵활동 중단 조건으로 합리적 수준의 보상책 제시, 다섯째, 북한 지도층/주민 구분을 통한 분리접근법 적용, 여섯째, 대내외 대북 '내러티브'의 분명한 통합·일원화 추진 및 직간접적인 의사소통 채널 적극 개척 및 활용 등이다.

다음으로 제2단계에서 3단계로 가는 핵심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평화협정 등 연동 로드맵 제시 및 행동계획 협상, 둘째, 기존 핵무기의 해체 및 핵물질 국외 반출 추진, 셋째, 김정은의 '애민' 이미지 활용 및 '한민족' 정체성 강조, 넷째, 대북제재의 단계적 해제를 통한 대외교역 및 교류 활성화, 다섯째, 북한 주민 대상의 비핵화 혜택에 대한 정보전파, 여섯째,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다소 돌아가는 우회 소통전략 선택 및 협상시 북한 '핵 스토리텔링' 무력화 등이다.

다음으로, 제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핵심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협정 체결 및 한반도 비핵화 최종단계 협상, 둘째, 기존 핵시설 위주 검증/해체 및 IAEA 추가의정서 적용, 셋째, 북한 체제 안정성 보장 방안 구체화, 넷째, 대북제재 전면 해제 및 대규모 경제 지원 제공, 다섯째, 북한 지도층/주민 대상의 '새로운 의미 구조'의 형성 및 촉진, 여섯째, 협상 시, 정부는 전략소통, 민간은 실무협상 등 정부 차원과 정부와 민간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림 IV-3-6] 비핵화 관철을 위한 추진단계 및 핵심정책대안

V. 실현가능한 정책수단

1. 긍정적 상황 대비 전략 및 정책수단

2016년 9월 현재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농축 방식의 핵 물질 생산을 지속하고 있고 연속적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있으며 잠수함발사미사일(SLBM)까지 실전배치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체제 붕괴를 맞게될 것이고 그렇다면 북핵문제도 해결될 것이 아니냐는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듯 북한과의 협상보다는 대북 제재와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를 통한 압박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⁷⁹⁾ 계속되는 숙청과 인사 이동으로 김정은의 권력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설사 내부로부터의 체제 전환이 발생한다해도 이것이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김정은이 교체되더라도 그 이유가 핵 개발 등에 대한 김정은의 정책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잔혹한 숙청 등 폭정 때문일 가능성이 크므로 군부 원로 및 보수세력들이 득세하여 핵 개발 정책은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⁸⁰⁾

따라서 본 절에서는 대북 제재는 계속 부과해나가면서도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를 회복시키는 전략과 방안, 그리고 정책수단을 강구해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핵 개발 및 보유는 한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 아니라 분단비용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며 평화통일도 방해하므로 한국 정부는 반드시 이를 해결한다는 의지와 열정을 견지하고 합리적인 전략적 사고와 인내심,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 모든 차원의 국가 역량을 모으고 노력을 최고도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2008년 12월 이후 북핵문제를 국제 협력을 통해 해결해보자는 6자회담이 한번도 개최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나라와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6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북핵문제 해결방법이라고 동의하고 있으므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략과 정책 수단들을 살펴본 뒤, 6자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획득하는 전략과 정책 수단을 검토해 제시하고자 한다.

79) 국내총생산량으로 북한 경제를 한국은행 통계에 따라 살펴볼 때, 김정일 집권 마지막 해인 2011년 북한 경제는 0.8% 성장했고 김정은이 집권한 2012년 1.3%를 기록한 뒤 이후 2013년 1.1%, 2014년 1.0% 성장했다. Bo Ram Kwon, "The Conditions for Sanctions Success: A Comparison of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Cas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8-1 (March 2016), p. 149.

80) Denny Roy, "Preparing for a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Survival*, 58-3 (June-July 2016), p. 134.

가. 6자회담 재개전략과 정책수단

1) 6자회담 재개전략

가) 북핵문제의 지정학적·국제정치적 성격 이해 및 다자적 해결

먼저 북한 핵의 강제 탈취나 제재를 통한 굴복 강요가 가능하다면 이를 시도해볼 수도 있으나 지정학적 여건상 거의 불가능하다. 특히 대북 경제 압박은 중국의 민생차원의 대북 교역 지속으로 큰 효과는 없음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북 제재를 지속하면서도 협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북핵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를 사활적인 국익으로 여기는 미국과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낀다는 북한 사이의 문제로서 결국 북·미 및 남북 대화 병행이나 남·북·미 3자 이상의 다자적 대화·협상을 통해 풀어내는 것이 합리적이다.

물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남북간 각종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 방법만으로 북핵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남북관계 정상화 및 남북 대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6자회담 등 적어도 미국과 중국도 참여하는 다자 회담에서 핵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감정적·이념적 접근보다 이성적·합리적 태도 견지

흔히 남북관계가 파행과 대립 상황에 처하거나 북핵문제가 합의를 보더라도 잘 이행되지 못하고 깨진 것이 100% 북한 때문이라는 견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과 태도는 결국 북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압박과 일방적인 요구로 이어지게 된다. 북한 정권이 독재 세습정권이고 경제 운영에서 무능하며 반인륜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수긍한다. 그러나 핵이라는 최고도의 상위정치 문제를 감정적이거나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결국 평화적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면 대립하면서 위기와 파국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그간 북한과의 합의가 이행과정에서 깨지는 경위를 냉정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과 상대방 간의 불신을 배경이 되어 비록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쌍방의 책임으로 인해 합의와 파행이 반복해서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단지 책임의 경중이 다를 뿐이다. 따라서 균형된 시각에서 이성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해결 방안을 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게 협상을 통해 일정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고 핵 포기를 얻는 것이 최상책이 아니고 국민정서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방치해 북한이 핵 실전능력을 보유할 경우 우리가 처할 전략적 열세와

안보 위기는 후술하듯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감정보다는 이성과 합리성에 입각하여 비록 차선책일 수 있지만 어떻게든 북한을 협상으로 인도하여 평화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획득해야만 한다.

다) 북핵문제 해결을 국가정책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함

전술한 것처럼 북한의 실전 핵능력 보유시 우리는 사활적이고 막대한 전략적 손실을 입게된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핵 보유 저지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이해해야한다.

먼저 우리는 정면 대결을 통한 무력적인 방식으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지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은 이라크나 리비아처럼 외부 군사공격에 취약한 지리·지형적 여건이 아니다. 대부분 산악지형이 인데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및 러시아 같은 강력한 우방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앞서 예로 든 이라크, 리비아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는 군사적으로 굴복시키기가 극히 어렵다. 둘째, 한국의 국민과 산업 및 국부의 거의 절반 이상이 북한 장거리 포의 사정권에 위치해 있다. 이 때문에 남북간 정면 군사 충돌이 있을 경우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감당하기 힘들 만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희생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를 고려할 때, 북핵문제를 비평화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상정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성실한 정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는 대화·협상을 통한 북핵 포기 유도를 계속 시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지 않으면 사고를 치는 정권이다. 이명박 정부나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전략적 인내’ 기조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방치함으로써 북한의 핵 능력 증대를 초래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를 낳았다. 또한 2016년 북한의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강력한 대북제재를 위한 국제공조를 가동하면서 대화를 제쳐두고 압박과 제재로 북한의 태도변화를 강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있다. 북한이 WMD 개발을 지속한다면 결국 국제제재로 인해 정권 붕괴내지는 체제 변화의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하에 대북 강압 정책을 펼쳐 핵 개발 중단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 유엔안보리 제재는 민생 목적의 교역에 예외를 두고 있고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은 미국 등의 대북 일방적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있으며 제재로 인해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⁸¹⁾

특히 북한이 사실상 핵 실전능력을 보유하면 우리는 다방면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군사 균형이 깨져 일거에 북한에게 안보 열세에 처하고 상시적으로 북한의 생존을 위협받게 되며 핵 억지력에 의거해 북한은 더욱 쉽게 자주 국지도발을 감행해 올 것일 뿐 아니라 국방비 급증으로 여타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고

81) Denny Roy, pp. 141-144 참조.

국가신인도가 하락하며 경제나 금융시장도 타격을 받을 것이다. 또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방식의 핵 개발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핵 물질을 양산할 위험성이 있고, 미국이 만약 북한과의 협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과거 1994년 당시처럼 또 다시 대북 군사 행동을 검토한다면 한반도 상황은 전면적인 군사적 충돌 위기 수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끝으로 북한의 핵 기술이나 관리 능력이 국제안전 기준에 미달하므로 연변 등 핵 시설에서 1986년 체르노빌 사건이나 2011년 후쿠야마 원전 사고 등과 같은 대형 핵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단지 북한 내 사고 인근 지역 피해를 넘어 한반도 전역 및 동북아 일대에 걸친 대규모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인 국가 정책목표로 삼아 가용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이를 달성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려면 6개국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극복하기 어려운 쟁점과 장애물을 해결하고 넘어서야 하므로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이자 북한의 핵 보유시 가장 큰 전략적 피해를 볼 것이 확실한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사실상 무력에 의한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므로 비록 북한 정권이 불성실하더라도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인식하에 북한의 다목적 핵 개발 동기를 감안해서 일정한 수준의 대가를 지불할 의향을 가져야만 비로소 해결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합리적인 사고로 접근해야 비로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이 보일 것이다.

라) 미국의 북핵 묵인 방지

북한의 핵 실전능력 보유를 막는 것이 시급한 것은 물론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이 북·미대화를 통해 이를 묵인한다면 이 역시 큰 낭패이므로 이를 예방하는 외교적 노력도 세심하게 기울여야 한다.

남북간 정면 대립 상황이 지속되어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권을 방기한다면 미국이 이를 북·미 대화 재개 및 타협의 빌미로 사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북한의 핵 능력 보유를 막겠다는 의지보다는 MD 체제 구축과 확산방지의 중요성을 주로 강조하였다. 더구나 국제 언론도 북한과 이란간 그리고 북한과 시리아간 WMD 연결관계(connection)를 강조하고 있어 미국의 관심이 비확산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북·미간 협상을 통해 미국은 북한에게 비확산에 대한 다짐을 받고 핵 포기가 아니라 현재 수준의 핵 동결 정도로 타협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으로부터의 공격을 억지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다른 나라들에게 공격 위협을 주기에는 부족한 핵 능력 보유를 인정한다는 것이다.⁸²⁾ 문제는 북한의 핵 능력이

82) Denny Roy, p. 138 참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하더라도 남북 군사균형은 압도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하게 되고 한국은 사활적인 안보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게되므로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북·미간 타협을 막으려면 결국 우리 정부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북 정책과 북핵 문제 해결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복합적이고 전방위적이며 보다 강화된 압박-대화의 강은 양면책과 창의적인 외교를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구사해 북핵 해결 과정을 주도해야한다.

마) 중국의 협력 유도

1980년대말-1990년대초 동구권 국가들이 의지하고 있던 소련이 쇠퇴 과정에 처했던 것과 판판으로 현재 북한이 주로 의존하고 있는 중국은 초강대국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므로 대북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에 대한 중국의 협력 유도가 그만큼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한미동맹을 한국의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되 자칫 반중(anti-China) 동맹화로 여겨지지 않도록 각별하고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적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즉,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붕괴(중국이 극도로 우려하는 상황)를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 상생과 공영(중국이 선호하는 상황)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비록 단기적으로 큰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남북간 각종 대화를 추진하는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까지 미국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의 현명한 사후 대처와 관리가 요구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문제도 이에 준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인다.

바) 한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접근 필요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미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문제 해결 의지가 매우 약해 보인다. 먼저 2009년 오바마의 프라하에서의 “핵없는 세상” 연설 직전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50일 뒤 2차 핵실험, 2·29합의 위약 등 북한의 기만적인 행태로 대북 신뢰가 추락한 상태이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이란처럼 핵 개발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네 차례의 핵실험으로 핵무기를 개발·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갖고있는 핵무기를 폐기시키려면 더 큰 비용이 요구된다는 면에서 볼 때,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된다.⁸³⁾ 더구나 현 상황에서 미국에게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 구축이 가장 선차적인 정책목표이고 북한의 핵 개발이 이의 명분이 되므로 굳이 지금 북핵문제 해결을 서두를 이유가 약한 것이다.⁸⁴⁾ 즉 현재 미국에게는 사드 배치나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이 더 시급하지 북핵문제 해결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데 더해 사실상 우선적인 추진과제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도 북핵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데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5월 28일 4대 국정기조와 14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 북핵문제는 국정과제 123에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라는 표현으로 담고 있어 해결 의지가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⁸⁵⁾. 2016년에도 정부는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필요한 대북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계속 추종한다면 북핵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조만간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등 강력한 도발은 양자든 다자든 협상이 좌초되었을 때 나왔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특히 북한은 중국이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다자간 대화체로 간주하는 6자회담이 순항하는 동안에는 핵실험을 감행하지 못했다. 중국을 직접 모욕하는 행위를 꺼렸기 때문이다.⁸⁶⁾ 즉 북한과의 협상은 북핵문제의 추가 악화를 억제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더구나 2016년 4월 미국은 중국의 협상 재개 주장에 대해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프로그램을 신고하며 사찰단을 복귀시키면 6자회담뿐 아니라 평화협정 및 한반도 통일 협상에도 열려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박근혜 정부는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제재 강화에 집중했다. 어쨌든 그 결과는 2016년 9월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 도발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과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초강도 대북 제재를 강구하고 있는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북한의 대미협상 고위 외교관들과 미국의 전직 대북 협상 고위 외교관 및 전문가들간에 소위 Track 2 회담이 열렸다. 따라서 향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중국이 환영하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응할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고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북한이 전격적으로 중국의 협상 재개 입장에 동조하고 나설 경우 한국은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주도를 기대하기보다 우리가 보다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나서서 북핵문제 해결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⁸⁷⁾

83) 김상기,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 『한반도 포커스』, 제26호 (2013년 11·12월호), pp. 9-10.

84) 김근식, “동력 부재의 6자회담과 북핵 협상을 위한 현실적 제언,” 『한반도 포커스』, 제26호 (2013년 11·12월호), p. 18.

85) 박인휘, “북핵문제, 박근혜 정부의 시각과 전략,” 『한반도 포커스』, 제26호 (2013년 11·12월호), p. 14.

86) 송민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한국의 대응방향,” 『IFES현안진단』, No. 49 (2016.9.20) p. 2.

87) 창의적이고 과격적인 방안 중 하나로 박건영의 제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과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연기하고 중국은 한국에게 적극적 안전 보장(positive security assurance)을 제공하며 북·미, 남북, 평화협정 4자협상을 병행해 진행한다는

사) 협상 여건이 점점 더 불리해진다는 것을 인식하여 전략을 구상

현재 한·미·일은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여전히 북한의 성의있는 선행동으로서 핵프로그램 중단, IAEA사찰단 복귀와 핵 시설 감시,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 우라늄농축 프로그램 신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더니 어느새 2015년말 미국에 제안한 것을 보면 6자회담 재개보다는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재개만 추진하고 있다. 더구나 작년말 미국은 비핵화 협상과 동시 개최하면 평화협정 협상에도 나갈 용의를 표시했는데 오히려 북한이 이를 거절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의 전술은 이미 네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고 각종 미사일과 SLBM까지 상당 수준 개발했으므로 이제는 사실상의 핵 실전능력을 보유하는 데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金正은은 실제로 핵을 보유하면 미국이 전술한 것처럼 핵 비확산이 시급하므로 북한에 먼저 협상을 제안해 올 것이라는 배짱을 가진 듯하다.

과거 사례도 이러한 구상이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지하다시피 부시행정부는 북한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일방적인 핵 폐기를 요구했고, 북한이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정권을 전환시키겠다고 압박했다. 2005년 9월 16일 미 재무부가 부과한 BDA제재조치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인 2005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부시 행정부는 오히려 그 때까지 꺼려오던 북·미 양자대화를 제안했고 이것이 6자회담으로 이어져 2017년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합의’가 도출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구상과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실리주의적인 대북정책은金正은이 비록 현재는 국제제재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핵과 운반타격수단 개발에 열중하다보면 어느새 핵을 보유하게 되고 한국을 전략적으로 압박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미국이 먼저 협상을 제안해 올 것이라는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구나 북한의 핵보유 뒤에도 미국이 계속 대북 강경책을 펼친 경우 우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 속에서 부단한 북한의 위협과 도발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미래 전망까지도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핵 협상으로 이끌 방안을 마련해 제시해야 함을 보여준다. 대북 제재는 지속적으로 시행하더라도 북한을 감성적으로 무시하기보다는 합리적인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면서 일방적인 선행동 요구보다는 북한이 협상에 나오는 것이 그들에게도 이득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제안을 행해 결국 협상을 재개하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협상 개시 시점이 늦어질수록 협상은 더욱 절실해지고 북핵 포기에 대한

것이다. 가장 큰 어려움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극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창의적인 발상과 새로운 전략관이 전제가 되는 제안이다. 박건영, “한국의 안보와 사드,”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94호 (2016년 가을), pp. 47-50 참조.

보상도 그만큼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 북핵 동결이 시급하므로 2단계 접근 추구

현 상황에서는 박대통령도 계속 강조해 왔듯이 무엇보다 북한의 핵 물질 추가 생산 방지 및 핵 고도화와 무기화를 차단·억지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그간의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들을 국제공조 하에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동시에 북한과 회담을 제안·개최하여 조속히 협상을 재개하고 1차 목표로 북핵 프로그램의 정지 및 동결을 얻어낸 뒤 2단계로 최종적인 북핵 포기를 얻어내는 게 현명하다.

이런 맥락에서 2016년 9월 북한의 5차 핵 실험 도발 후 1주일만에 나온 미 외교협회의 대북특별보고서를 주목해야 한다. 마이크 멀린 전 합참의장, 월터 샤프 전주한미군사령관, 샘 넌 전상원의원 등 17명의 대북 전문가들이 초당파적인 협업을 통해 내놓은 보고서이다. 특히 이 보고서는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 협상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핵 동결협상을 북한 비핵화의 중간단계로 설정하는 등 다단계 접근을 제안했다.⁸⁸⁾

2) 6자회담 재개 수단

핵 고도화에 전념하면서 북핵 협상에 나오기를 거부하는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이제까지 시행해온 국제적 제재와 압박을 계속 부과하는 동시에 북한이 협상에 나오면 나름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제까지 북한의 행동과 태도 및 언사를 검토하여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다면 협상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협상 재개를 위해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수단들을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문제, 한·미군사연습, 북한의 7·6제안 검토, 6자회담과 평화협정 협상 병행 개최 등을 검토해 본다.

가)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한 체면 고려 및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남북관계나 남북 협상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 상황은 우리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길은 좁히고 북한의 급변사태나 북한과 한·미연합군의 정면충돌을 통한 해결의 길은 확대하는 듯하다.

200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에도 북한의 각종 도발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분격해하는 과정에서 미 행정부는 몇 차례 북한과 조심스럽게 대화를 모색하기도

88) Mike Mullen and Sam Nunn (Chairs), Adam Mount (Project Director),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 2016), pp. 32-33.

했는데, 한국 정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결국 본격적인 대화는 성사되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적어도 북한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밋고 싫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대화를 하려면 그들의 체면을 노골적으로 깎는 언행은 자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검토, 핵-경제 병진노선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언급, 북한 체제는 결국 붕괴될 것이라는 발언 등은 적절한 다른 표현으로 대체해 발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하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면 상대방의 체면을 훼손하는 것은 합목적적이지 않다. 나아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상을 재개하려면 남북관계가 정상화과정을 밟아나가고 대화를 통해 협력이 증진하는 것이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대북 영유아에 대한 영양 보조 및 의약품 지원 등은 북핵문제와 별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문제

2008년 12월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되었다. 2009년 5월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미·일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가했다. 북한은 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자고 제안하였고 미국 등 서방측은 회담 재개 선행조건을 제시해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2012년 북·미간 2·29 합의로 6자회담 재개가 이루어지는 듯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에 영양 지원을 하는 대신 비핵화 사전조치인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엄,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하는 영변 핵 활동 중단, IAEA 사찰단 복귀 등을 대가로 요구했다. 물론 그해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로 합의는 무산되었고 양측간 신뢰도 훼손됐다.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 실험을 강행하자 국제사회는 또다시 대북 제재를 가했고, 북한은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미국에게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고 요청했으나 미국과 한국 등은 사전조치를 요구했다.

2016년 1월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2월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안보리는 3월 3일 역대 최고 강도의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를 채택했다. 한 달 뒤인 4월 4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는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하고, 과거의 핵활동을 명확히 신고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해야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 국방위원회가 미국을 향해 대북 제재를 비난하면서도 ‘협상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주장한 직후 나온 것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사실상의 전제조건으로서 3대 비핵화 사전조치를 최신회해서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2015년 말 미국이 비핵화 의제만 다룰 수 있으면 자신들이 추구하던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도 받겠다는 제안마저 거절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는 미국이 전제 조건 없이도 핵문제를 논의할 의향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렇다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은 미국보다 한국의 주장일 개연성이 크다. 한국정부가 6자회담을 재개하여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할 의향이 있다면 비핵화 사전조치에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음이 드러난다.

다) 한·미 군사 연습 잠정 유예 가능성

2013년 봄 B-52 전략폭격기,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해 확장억제력 전개연습을 시행한 뒤 북한은 자신들의 핵 보유가 미국의 핵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6자회담 전제조건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중단과 미국의 ‘핵전쟁훈련’ 참가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⁸⁹⁾ 중국도 이에 가세했다. 2013년 9월 6자회담 9주년 행사에서 중국은 전제조건 없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북핵문제에 미국도 책임이 있으므로 한·미연합훈련에 B-52나 B-2 등 핵무기 탑재 전략폭격기의 참여는 중국의 안보에도 위협이 되므로 미국이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⁹⁰⁾

2015년 1월초 북한은 미국에게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한다면 북한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실험을 임시중지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도 연이어 이를 거절했다.⁹¹⁾ 이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북한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신뢰 구축과 평화 실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⁹²⁾ 2월 4일 북한의 최고권력기관 국방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선언했다.

이런 흐름을 볼 때, 만약 한·미 양국이 협의를 통해 북한과의 비핵화 회담이 재개되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양국의 연합훈련을 잠정 유예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다면 6자회담 재개 가능성이 엿보인다.

라) 북한의 7·6제안 검토

2016년 7월 6일 북한은 일반적으로 최고지도자의 뜻이 상당한 수준에서 직접 반영되어 상당한 권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정부 대변인 성명’ 형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5대 요구조건을 발표했다. 이 요구조건에는 ①한국에서의 미국 핵무기 공개, ②한국에서 모든 핵무기와 핵기지 폐쇄 및 검증, ③미국이 한반도와 주변에 핵 타격수단을 끌어들이지 않겠다는 보장, ④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핵 위협을 하거나 핵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 ⑤한국에서의 미군 철수 선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선 북한의 요구사항 가운데 ‘미군 철수 선포’를 제외한 네 가지는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 등 이미 북한과 주변국이 합의했던

89) 조성렬 (2014년 가을호), p. 90.

90) op. cit., p. 91. 2014년 4월 화춘잉 외교부대변인은 북한의 핵실험 위협 뿐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에도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op. cit. p. 92.

91) 연합뉴스, 2015년 1월 10일과 11일.

92) 연합뉴스, 2015년 1월 11일.

사항들과 상당 부분 겹쳐 있다. 또한 마지막 요구사항의 경우도 그동안 무조건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르게 먼저 철수를 ‘선포’해야 한다며 다소나마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고 평가된다.⁹³⁾ 북한도 나름대로의 융통성을 과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국과 협의하여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입장을 보일 수 있다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마) 평화체제 협상과 병행 개최

이명박 정부와 미 행정부가 공조하여 6자회담 재개의 엄격한 전제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회담이 개최되기가 어려웠다. 먼저 북핵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일 뿐 아니라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사활적인 국익으로 여기는 미국과 미국으로부터 안보 위협을 느낀다는 북한 사이의 문제인데, 이명박 정부가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북핵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남북 대화와 6자회담 재개에 모두 제동을 걸었던 것은 현실적이지 않았다. 6자회담이 다시 열리지 않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현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한다면, 적어도 6자회담 재개에는 협력해서 일단 외교적 대화의 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었다.

또한 최근 수년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이 제시해온 6자회담 개최를 위한 선행조건을 계속 거부하면서 핵 능력을 고도화해왔고 이제 핵 실전능력보유를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계속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전제조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더구나 2016년 2월 이후 중국이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도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주창하고 있고, 미국도 이를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중국의 성실한 대북 제재를 확보하고 외교적 고립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뿐 아니라 북핵문제를 해결 과정으로 현실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6자회담과 평화협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의 동시 병행 개최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한국판 평화체제론을 조속히 수립해 6자회담과 평화협정을 위한 4자회담의 병행 개최와 협상을 능동적으로 주도해야 할 것이다.⁹⁴⁾

북핵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협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두 협상의 병행 추진을 통해 북핵의 최종 폐기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완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핵문제 해결과 재래식 군사문제 해결을 포괄적으로 협상의제로 삼고, 북핵 폐기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반도 재래식 무기의 군사 균형에 입각한 평화체제의 시각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토의하며 이 분야에서 북한의 양보를 받는 조건 하에

93) 연합뉴스, 2016년 7월 7일.

94) 김재천,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국방연구』, 25-1(2016), p. 20.

한·미·중·러·일 5개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대타협 방식을 선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⁹⁵⁾ 물론 북한은 이 평화체제 협상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미 3자가 핵 폐기 이후 한반도에서의 재래식 군사력 균형에 관해 합의하는 대신 북한의 검증가능한 완전한 핵 폐기를 얻어낸다면 손실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다고 평가된다.

나.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 포기 결단 유도 방안

1) 6자회담에서 핵 포기 합의 도출전략

1단계가 성공적으로 이행되면 2단계로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폐기를 목표로 회담을 진행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협상에 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Give and Take 원칙을 적용

사실상 북한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으려는 방식으로는 북핵 해결이 어렵다. 북한의 체면도 고려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고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북한더러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라고 하면 협상 타결은 물론 대화 재개조차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합의나 약속 이행에 불성실하게 임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도 북한이 또 다시 그런 행태를 반복할 수 없게끔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또 합의를 어길 경우 북한 정권도 감당하기 힘든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란 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합의 이행의 틀을 깨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북핵문제는 북한 정권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임하는 전략적 문제이므로 한국에게는 미국과 소련이 3차 대전을 각오하고 대립을 벌였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와 유사한 점이 많다. 당시 케네디 대통령이 흐루시초프와 담판해 사태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한다. 당시 미국과 소련은 서로 불신했다. 그러나 양 강대국은 생존을 위해 상대방에 대해 바라는 바를 모두 관철시키는 것은 포기하고 양국간 정면대결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각자가 절대적으로 지키려하는 한 가지를 상호 인정해주는 식으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했다. 미국은 쿠바에 소련 미사일 기지 설치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고, 반대로 소련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군사공격은 절대로 막으려고 했다. 따라서 미국은 쿠바에 대한 군사공격 자제를 약속했고, 소련은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을 중단하고 철수하여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였다.⁹⁶⁾

95) 한용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 『통일정책연구』, 제2권 1호 (2013), p. 62 참조.

96) Hae-Wan Le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Lessons from Cuban Missile Crisis,"

북핵문제도 북한의 무조건 항복을 추구하다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기보다는 북한이 절대적으로 지키려는 한 가지(정권 유지)를 용인하고 대신에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비핵화)을 얻는 방식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상호안보와 동시행동의 원칙 적용

북핵문제 해결은 일방주의가 아니라 얼마나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방안보가 아니라 상호안보 원리를 적용해야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우선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핵 전력은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내 전략적 딜레마에 빠질 것임을 설득하는⁹⁷⁾ 동시에 북한이 핵 포기시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을 제시하여 안심하고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대중 요법’이 아니라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북한의 안보 딜레마도 고려해주는 상호안보 및 상호위협감소(MTR) 원칙 그리고 협력위협감소(CTR) 프로그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아가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보상을 제공하여 핵 포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병인요법’에 해당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의존하다가 자칫 ‘통미봉남’의 굴레에 빠지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유연한 사고와 전략관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 예를 들면 미 행정부와 상의하면서 우리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대북 경제 지원뿐 아니라 상호안보 또는 상호위협감소 원칙에 의거하여 주한미군을 포함한 남북간 재래식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 군축을 시행할 용의가 있다”고 북한에게 진지하게 제안하여 북핵문제의 최종적인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주도해야한다.⁹⁸⁾

동시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선택포기’가 아니라 단계적 동시행동을 취할 것임을 약속해야 한다. 9·19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북핵문제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룬 뒤에 논의하기로 했는데, 향후 협상 판을 새로 짤 때는 평화체제 문제를 구체적으로 3~4단계로 나누고, 비핵화 과정 3~4단계, 경제 지원 3~4단계, 북·미 및 북·일 수교 3~4단계가 상호간에 맞물려 돌아가게끔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도 국제원자력기구의 정상적인 회원으로 복귀하고 그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KPI(Korea Peace Institute) Column, March 24, 2009 참조.

97) 북한이 핵을 보유하더라도 소규모 핵전력에 불과하므로 겪게 되는 전략적 딜레마에 대해서는 함 형필, “북한의 핵전략 구상과 전략적 딜레마 고찰,” 『국방정책연구』, 제25권 제2호(2009년 여름) pp. 102-118 참조.

98)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해서는 줄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세종정책연구』, 제5권 제1호(세종연구소, 2009년 2월 28일), pp. 191-226 참조.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의 역사에 대해서는 임수호,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적 경험과 쟁점,” 『한국정치연구』, 제18집 제2호 (2009), pp. 53-93 그리고 Yong-Pyo Hong, "Why Have Attempts to Settle Inter-Korean Conflict Failed?,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48-5 (2008), pp. 133-152 참조.

다) 신뢰 구축이 관건

북핵 문제의 중점이 검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우라늄 농축으로 바뀐 것도 결국 북핵 포기의 핵심은 신뢰의 문제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즉 이제는 상호간에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 검증을 해도 계속 의심이 남게되므로 신뢰 구축이 핵심 관건이다. 양측간 신뢰가 구축되어, 북한 지도자 자신이 ‘핵무기가 부담만 될 뿐이므로 필요가 없다’면서 스스로 내려놓아야 궁극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위협 대상인 미국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이 북한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어 신뢰를 형성하면서 북·미간 신뢰를 중재하여 남북·미간 타협을 이루고 중국을 참여시킨다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⁹⁹⁾

여섯째, 북핵문제와 비안보적 현안의 분리접근이 필요하다.¹⁰⁰⁾ 대북 인도적 지원과 경제 교류·협력은 북핵문제와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대상항목을 제외한 모든 경제 협력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2) 6자회담에서 핵 포기 합의 도출을 위한 합리적인 제안 내용

가) 한·미·중 3국의 ‘포괄적인 패키지’ 제안

막강한 핵전력을 갖고 있던 소련이 외부 위협이 아닌 ‘내부 모순’ 때문에 붕괴했듯이 북한 정권 역시 핵을 가져도 정권 붕괴 방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점에 착안해서 북한과 ‘포괄적인 패키지 협상’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다. 한국, 미국, 중국 3국이 공동의 조율된 제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이 5자회담 수용 불가 입장에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론에 관한 논의라면 3자든 5자든 만나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했으므로 정부는 우선 병행론을 매개로 한·미·중 대표간 대화를 시작해볼 필요가 있다.¹⁰¹⁾

전술한 한·미·중 3국 제안은 철저하게 상호위협감소나 상호안보의 논리에 입각해 작성되고 동시행동의 원칙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혜와 노력을 기울여 핵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이 긴요한 중국, 생존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북한 등 세 행위자의 요구를 담아내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¹⁰²⁾

99) 정성임·강성철·노태훈·박뿌리·한정현, “핵협상 조건과 북핵협상의 재검토: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과의 비교,” 『국가전략』, 22-1 (2016), pp. 60-61 참조.

100) 조성렬, pp. 151-152 참조.

101) 김재천, p. 20.

102) 송민순, p. 2.

나) 안보-경제지원의 교환에서 안보-안보·경제 교환으로 전환

북한 정권이 핵 포기를 결심하도록 하려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대가로 주어지는 반대급부의 규모가 북핵 유지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경제지원을 통한 북한 경제의 발전이 오히려 체제 안정을 위협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므로 북한지도부는 차라리 현상유지를 더 바랄 수도 있을 것이다.¹⁰³⁾

따라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보상은 경제 지원보다는 안보 제공에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 동기는 체제 유지에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폐기한 이후 적어도 외부 요인으로서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5개국이 신뢰성있게 약속해 주고 이를 상당기간 신뢰성있게 이행해 가는 것이 체제 와해 위기에 처한 북한 정권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이행하도록 하는데 최선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보다 5자 특히 미국과 한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보인다. 즉 김정은은 핵 포기 이후 재래식 군사력만으로도 군사안보 및 체제 유지를 해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대외신뢰를 갖기 전에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¹⁰⁴⁾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 목적이 체제 유지에 있으므로 5개국이 북한의 핵 포기 결단을 얻으려면 무엇보다 체제 안전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북핵 포기에 대해 경제지원과 함께 포괄적인 안전보장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¹⁰⁵⁾ 즉 경제적 이득을 주고 안보 위협을 줄여주는 것이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협상 수단이다.¹⁰⁶⁾

다) Plan A와 함께 Plan B도 제시

한·미·중 3국의 공동제안에는 북한이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자동 적용되고 중국도 그 이행에 참여하는 강력한 대북 제재안인 소위 'Plan B'도 함께 제시해서 북한이 Plan A를 수용하도록 압박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우선 북한이 합의의 빈틈과 허점을 찾아내서 언제든지 일탈된 행동을 할 수도 있음을 상정해 각 단계별로 각국별 행동을 상세하고 정교하게 조율하고 이행 시한(deadline)과 불이행시에 북한이 받게 될 불이익도 명확하게 정한 Plan A와 Plan B를 가급적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완성시켜 놓아야 한다.

차후 단계로 정부는 미·중·일·러와 공조하여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고 합의 이행을 위해 성실한 태도를 보인다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등 '상생공영'의 Plan A를 가동하겠지만, 만일 5개국이 진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도

103) 김명섭,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 역사적 성찰과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72호 (2011 봄), P. 120.

104) 줄고,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전개과정과 대응방안," 『한반도포커스』, 2014 가을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14년 10월), p. 29.

105) 조성렬, 『뉴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백산서당, 2012년 6월), pp. 120-134 참조.

106) Tae-Hyung Kim,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Is Nuclear Reversal Too Late?"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1-1 (June 2016), p. 35.

불구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면 불가피하게 더 가혹한 공동의 대북 제재를 의미하는 Plan B를 동원할 수밖에 없음을 북한에 고지하여 Plan A를 수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결국 Plan A를 관철하기 위한 Plan B는 한·미연합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적극 가동, 북한 고위 인사 제재 부과, 중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공조, 탈북자 수용 확대, 탈북자의 난민지위 부여, 탈북자 정착지원금 확대 등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그 내용을 북한 당국이 숙지하도록 한다.¹⁰⁷⁾

라) 검증과 사찰 문제에 대한 현명한 처리

북한이 핵 폐기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대북 신뢰가 부족하므로 검증 방식에 대해서도 선 합의를 요구해왔다. 2008년 12월 6자회담이 이 문제에 대한 합의 도출에 실패한 뒤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한 것을 보더라도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다.

당시 2·13 합의의 2단계인 불능화 조치가 원활히 완료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북한 핵시설 방문과 검증 장비 설치, 핵 관련 문건 습득 및 사본 제작, 핵 개발 관련 과학자 및 기술자 인터뷰뿐만 아니라 영변 원자로의 샘플도 채취하려 하였다. 특히 그동안 영변 원자로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원자로의 흑연노심 샘플을 분석하려 하였는데, 북한측이 이를 거부하였다.

또한 북한측은 미국측의 플루토늄 프로그램외에도 우라늄 프로그램과 핵확산에 대해서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하였고, 불시사찰(24시간 전 예고)과 핵물질 및 시설, 물질에 대한 제한 없이 자유로운 접근, 핵 과학자들과의 면담, 그리고 시료 채취에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⁰⁸⁾ 북한 군부가 통제하고 있는 이러한 핵심 사찰 대상에 대한 만족할만한 수준의 접근과 사찰이 가능할 지는 여전히 주요한 난관으로 남아있다. 특히 북한은 2·13, 10·3 합의에는 검증 관련 규정이 없고, 7·12 합의에도 양자를 서로 연계한 것은 아니므로 ‘만장일치’로 도출되어야 하는 핵 검증체계를 수립하려면 새로운 보상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검증 대상에 대해서도 북한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 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 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로서 “남한과 그 주변에 미국의

107) Sun-won Park, "A Proposal for "Bosworth Process" with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and Beyond" (Center for Northeast Asian Policy Studies, The Brookings Institution, Oct. 2009), pp. 15-16 참조.

108) 북한 외무성의 2008년 8월 26일 성명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아무 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 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 것을 강박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들고 나와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NPT 탈퇴를 초래하였던 ‘특별사찰’이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 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연합뉴스, 2008년 8월 26일.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북한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 원칙¹⁰⁹⁾이라고 주장하여 왔으므로 향후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일단 과거 실패 사례를 검토할 때 북한의 핵 불능화로 완료되기 전에 검증과 사찰문제로 핵 폐기단계에 진입조차 못한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북한의 핵 폐기 이후에 사찰이 시작된다는 전제 하에 북한과 한·미 양측은 핵 폐기가 상당부분 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찰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여타 조치들을 성실히 이행해나감으로써 사찰 이전까지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즉 검증과 사찰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가면서 검증과 사찰에 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이상적이다.

3)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협정의 구체적 추진 일정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 포기를 결심하고 이를 성실하게 이행해 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보딜레마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동시에 남북관계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동북아시아 차원에서의 다자안보협력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맥락에서 3단계로 상호 연계된 추진 일정을 표로 제시하고자 한다.

109) Ibid.

<표 V-1-1>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남북관계-동북아 다자안보행렬(Matrix)¹¹⁰⁾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6 자 회 담 과 4 자 회 담	실현 내용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전환 위한 당사국간 협의 (6자회담 재개) 및 관련 로드맵 합의 -협의 기간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	-비핵화-평화협정 연동 로드맵 실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북한 이행 사항	-핵 동결 (핵실험 및 핵 능력 증대 중단) -인공위성 발사는 잠정적으로 6자회담 참가국 비용 부담으로 제3국에서 실시	-핵 폐쇄 -불능화 -폐기 절차 진행	-북핵 완전 폐기 *북한, 인공위성 자체 발사권리 회복
	북한 외 6자회담 참가국 이행 중요 사항	-대북 제재 전면 해제 -한·미 연합군사훈련 잠정 중단	-북·미 적대관계 해소 조치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보상 및 정상적 국제관계 회복	-북·미 외교관계 수립
남북관계		-남북 통일부장관회담 -남북 국방장관회담	-운용적 군비통제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구조적 군비통제 -남북경제공동체 출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6자대표 회담	-다자안보를 위한 6자외무·국방장관 회담	-다자안보를 위한 6자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110) 표에서 6자회담-평화협정 회담 부분은 이종석,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배경·역사·전망·대응방향』, 정책브리핑 2016-10 (세종연구소, 2016. 3), p. 21을 참조했음.

2. 비관적 상황 대비 전략 및 정책수단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은 점점 비관적인 시나리오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하더라도 북한이 결국 핵보유국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 한국은 결국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상정하고 정책수단을 도모해야 한다.

가. 대북 억지력 수단 확보 및 강화

이론적으로 보면 북한의 핵에 맞서는 최선의 방안은 한국도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해 한반도에서 ‘공포의 균형’을 달성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는 영원히 불가능해진다. 한국은 핵무장을 선택하는 대신 비확산과 비핵화를 선택했다. 핵무장 옵션을 제외한다면 한국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선택은 세 가지 뿐이다. 첫째,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둘째, 비핵 억지력(사드, 킬체인, KAMD, 조기경보 역량), 셋째, 국제제재와 공조 등이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당연하며, 북한의 무력도발을 조금이라도 억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야 한다.

나. 한미 및 한미일 연합대응태세 강화

한미 양국은 최근 1단계 북한의 핵사용 위협, 2단계 핵사용 임박, 3단계 실제 핵사용 등으로 상황을 나누고 맞춤형 억제 전략을 실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엔 미국의 핵전력과 재래식 정밀타격 전력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2단계엔 한미 정밀 유도무기로 북한의 핵전력을 선제타격하고, 3단계엔 한미 국가통수기구가 대응조치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한미 양국은 다음달 열리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에서 3단계 억제 전략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이른 바 ‘3K’ 전략을 천명했는데, 킬체인(kill chain), KAMD, 한국형 대량응징보복(KMPR: 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전략이 그것이다. 문제는 한국이 그런 전략을 감당할 역량이 충분한가 여부이다. 조만간 한반도가 핵위협 아래 놓일 것을 상정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전략자산 확보에 국가재원을 우선 배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본과는 과거에 시도했다 실패한 정보공유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ACSA)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한미일 삼국간 대북 억지력 차원의 안보협력을 구체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 확대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무력시위(show of force)’ 및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를 좀 더 빈번히 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핵도발시 응징과 보복이 한국의 확고한 대응방침이라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야 한다.

다. 경제제재와 압박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국제사회는 유엔안보리결의안 2270호를 위시해 강력한 경제제재로 맞서고 있다. 경제제재가 부과되는 조건과, 제재가 성공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는 경제제재의 성공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다자 제재의 경우 소극적인 관련국을 제재국으로 동참시키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제재의 강도가 약해지면 다자제재의 결집력도 약화되기 때문에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제재안의 설계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추가제재 및 2차 제재를 통한 엄격한 시행이 실시되어야 한다. 즉,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제재 품목들에 추가적으로 석탄과 철 같은 물품을 추가하고, 더 나아가, 해외노동 수출 및 해외금융 기관들과의 거래들을 막는 것과 같이 보다 엄격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북제재와 관련된 국가들이 이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독려를 하고, 비협조적인 자세를 지속할 경우 2차 제재를 가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별히, 미국을 설득하여 중국에 대한 2차 제재도 정책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게 우회적으로 물자를 제공하는 국가들을 막고, 이러한 물자 조달 경로 및 구멍들(loop holes)을 차단시키는 실무 작업도 필요하다.

대북 경제제재가 제재는 단기간에 효과를 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북한이 상당한 피해를 입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적용해야 한다. 여기서 관건은 역시 중국이라는 북한의 배후지를 어떻게 제재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경제제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미국의 압박이 핵심이다. 대북제재의 그물망에서 중국이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데 관련국들이 단합된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의 핵보유가 기정사실이 되고, 이는 동북아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며, 이는 중국의 이익에도 크게 반하는 결과가 될 것임을 중국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라. 한·미·중 3국 협력 강화

북·중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에서도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북중관계는 과거의 견고했던 특별한 동맹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근거로서 김정은은 중국 국민들에게 회화화된 모습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도 지나치게 호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지도자들에게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중국은 보호한다는 인식을 주면서 이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 즉, 중국은 G2의 역할이나 경제성장의 이미지 외에 북한과 공범이라는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얻게 되는 피해를 보기도 한다. 현재 중국에게 북한은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국이 북한을 아예 외면하거나 곤경에 몰리게 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정권이 붕괴할 시 일어나게 될 수 있는 북·중 접경 지역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인해 한중 관계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미래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물론 사드배치처럼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도 있지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북한 때문이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중국과 타협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은 북한보다 한국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으로서는 한중관계의 강화와 함께 동시에 한미중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을 견제하고, 특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설득에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중국에서도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이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의 핵 개발 속도가 가속화될수록 중국이 바라는 북한 비핵화는 점점 어려워지고 북한의 불확실성이 점점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일부 중국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논리와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이 실험을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압할 수 있는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또 일부 중국인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북한 내부의 사회적 통제 강화, 정치적 불안 방지, 북한이 핵 국가라 인정받음으로 김정은 정권의 권력 강화 등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한 지속적인 대중 공공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마.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핵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개발을 지속시키는 것이 정권의 생존에 위협이 될 경우 핵개발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정권의 생존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정보의 통제와 엘리트층의 지지를 무력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엘리트층의 지지가 정권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의 지속적인 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엘리트 계층을 꾸준히 설득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다.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외부정보를 유입하는 전략은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주민들이 외부정보를 통해 자유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생기고 국민의 힘이 생기게 될 경우, 북한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 정책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내부에서의 정보통제가 아직은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대대적인 외부정보 유입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Ⅵ.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 제언

1. 비핵화 시나리오의 다학제적 시사점

가. 공학적 관점에서의 비핵화 시나리오

① Stage 1: 협상을 통한 비핵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북한 핵에 대한 검증 문제이다. 과거 2·13 합의가 파기된 사실도 검증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정책이 요구되며, 북한 핵 검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의 IAEA 재가입을 적극 유도한다.

② Stage 2: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CVID) 비핵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CVID의 검증은 상당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협상으로도 해결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Iran 사례). 만일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라도 지속적으로 핵을 포기하기 위한 협상의 payoff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Stage 3: CVID가 불가능할 경우 강한 압박을 통한 비핵화 정책(Plan A)나 핵무기의 특수성에 기초한 협상전략(Plan B)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CVID고수보다는 핵무기 폐기와 핵물질 생산과 반출을 강력하게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물론 북한 비핵화 대신 비확산을 정책목표로 내세울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모순에 처하게 되지만 차선책(second best)을 모색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나.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비핵화 시나리오

① 시나리오 1: 김정은의 핵개발에 따른 심리적 이점은 체제유지와 자존심을 높일 수 있고, 한국반응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김정은의 자기애적 성격의 특성상 극단적 선택을 할 가능성은 낮지만 지속적으로 개인의 우월감을 과시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권력집단의 생존 및 기득권 유지를 우선하면서 체제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관한 반면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착취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경우 북한의 핵 포기보다는 핵 동결을 해결책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비핵화는 실패하더라도 핵으로 인한 긴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언을 것이다.

② 시나리오 2: 북한에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할 경우 김정은으로서는 개인만족과 체제유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나 과거보다 북한내부에서 시장의 활성화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조금씩 신장되고 정보의 확산속도가 증가하면서 주민들의 국가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고위층의 탈북도 증가하고 있다. 아직은 김정은의 자기애적 성격의 방어기제인 합리화가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지만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 한계점을 넘을 경우 자존심 회복을 위한 돌발사태가 벌어질 개연성도 높아질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김정은의 '최후의 자존심'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경제학과 게임이론 관점에서의 비핵화 시나리오

① Stage 1: 1 단계에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압박과 경제제재가 시행되고 있어 북한과 비핵화를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현 상태에서 한국으로서는 북한 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Stage 2: 북한의 태도변화가 감지되거나 국제적으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에 대한 협상(1차적으로는 경제적 보상)을 통한 전략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③ 2 단계에서는 북한에게 비핵화를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최소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전제조건을 최소화는 북한의 선택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와 북한의 win-set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한국이 북한에 대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를 제안하기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비핵화 대신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만 제안할 경우 북한은 실현가능한 협상의 결과 도출보다는 한국 내부나 국제사회의 분열 등 북한에 유리한 환경 조성에만 관심을 가질 전략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정책은 과거에 실패했던 반복게임의 패턴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⑤ 한국이 협상의 결과 도출만을 위해 강경전략을 배제한 채 협상에 임할 경우 북한은 벼랑 끝 전술과 같은 강경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실현가능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인지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⑥ Stage 3-1: 북한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면 한국으로서는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재가동, 대북 투자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남북 간에 신뢰가 형성된다면 비핵화도 달성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⑦ Stage 3-2: 북한이 끝까지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비핵화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단기간에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다시 과거와 같은 반복게임을 답습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 결과 남북관계는 계속 단절되고, 한미군사 훈련의 강도도 높아지고, 한반도는 다시 심각한 군사적 대치 상황에 접어들어 남북한의 군비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다. 남북이 극한대치를 하게 되면 국력이 약한 북한이 장기적으로는 불리한 게임을 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무기의 실전배치를 위한 운반 수단의 완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라.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비핵화 시나리오

① Stage 1: 현재 북한주민들은 자의반 타의반 ‘장군님의 존엄’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핵보유 행위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집단은 김정은, 측근 집단, 일반 주민의 3단계 동심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통해 김정은의 충동적 자아는 일반화된 타자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선대 수령들의 유훈을 따르는 의미있는 타자로 작동하게 된다. 김정은에게 북한체제의 존립을 위한 1차 청중은 북한주민이며 2차 청중은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 비핵화 정책이 진행되어야 한다.

② Stage 2: 김정은은 김정일과 비교해 완성된 핵무기를 가지려는 차별적 행동을 하면서 강력한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 2단계에서 북한 비핵화 전략은 김정은이 주도하는 핵개발 논리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반면 북한주민들은 핵개발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외면적으로는 핵개발에 찬성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다. 북한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개발 논리의 변화와 실태를 상세히 분석한 후 북한주민들에게 알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③ Stage 3: 북한 주민들이 북한 핵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고, 고립되어 있다는 현실에 불만을 갖게 하는 논리적 설득이 필요하다. 비록 북한주민들이 사회와 또래 집단의 사회적 압력을 내면화하여 핵 개발에 찬성한다 하더라도 북한의 현실에 불만이 많다는 점을 활용하여 북한사회를 통해 형성되었던 핵보유의 상징적 의미를 깨뜨리는 사고방식을 전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핵개발을 고수할 경우 북한은 강성대국이 아니라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는 상식이 일반화 될 경우 비핵화 의식은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즉, 북한주민들에게 ‘주체형’ 삶의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 한류의 전파도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비핵화 시나리오

① 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을 전달하는가보다 어떻게 전달하는가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 의제 설정(agenda setting)과 프레이밍 이론(framing theory)만 잘 활용해도 비핵화에 일조할 수 있다. 북한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변국, 특히 중국의 협조가 필요한데, 중국인의 대북 인식을 변화시키고 북한 핵의 위험성을 알리는 방법으로 직설적인 비핵화 방안보다는 2-3단계의 우회적인 전략적 설득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북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북한은 미국의 침략 위협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핵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무장은 그 자체가 정권수호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북한의 이런 스토리텔링을 붕괴시켜야 한다. 미국은 리비아 사태에서 보여 준 것처럼 대북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한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 정책은 변화되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③ 한국으로서는 북한을 붕괴시켜야 할 대상(Plan A), 또는 변화를 유도해야 할 대상(Plan B)으로 정한 후 A와 B의 절충안보다는 각각의 계획을 구상하고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일관성을 확보, 유지해야 한다. 그 후 미국과 공조하여 일관적이고, 확실하며, 신뢰를 쌓을 수 있는(consistent, clear, credible)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2. 정책제언

북한이 결국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 속에 가능성으로만 점쳐지던 추가 핵실험이 이뤄진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월 9일 조선중앙TV의 핵무기연구소 성명을 통해 “소형화·경량화·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석에 의하면 5차 핵실험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행해졌으며, 금년 1월의 4차 핵실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이다. 핵실험 후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유럽 지중해지진센터는 지진 규모를 5.2로 발표했고, 곧 이어 미국지질조사국과 중국지진센터도 각각 규모 5.3, 5.0의 지진이 관측됐다고 발표했다. 우리 기상청은 지진 규모를 5.0으로 발표했다. 이는 대략 10Kt 규모의 폭발력에 해당하며, 지난 4번의 핵실험에 비해 역대 최대규모라 할 수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다수의 전문가들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석이 다수였기 때문에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니다. 다만 과거와 다른 점은 북한 핵능력 개발의 속도와 템포가 과거에 비해 훨씬 빨라졌다는 점이다. 또한 북한이 5차 핵실험 직후 발표에서 핵탄두 ‘표준화’와 ‘규격화’를 언급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준화와 규격화가 이뤄졌다는 것은 핵탄두를 다량으로 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서, 이는 핵이 이제 실험용이 아니라 실전용으로 배치를 앞두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북한이 종류에 따라 다양한 탄두를 개발했을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표준화·규격화’라는 말은 일괄적으로 모든 유형의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탄두를 개발했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에 불길한 조짐을 담고 있다.

올해 초부터 북한은 1월의 4차 핵실험에 이어 고체연료 로켓엔진 연소시험, KN-08 대륙간탄도탄 재진입체(nose cone) 실험 공개, 신포급 잠수함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실험 등 일련의 핵·미사일 역량강화를 추진해왔다. 그리고 수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3일 마침내 무수단(화성 10호)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최근에는 SLBM 발사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19일 새벽 스커드와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면서는 고각발사와 함께 목표 지역의 설정된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탄두 폭발 조종 장치가 작동하는지를 점검한 실험이었다고 밝혀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여준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북한은 결국 비핵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기로 작심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9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린 국경절 68주년 경축연회에서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대외관계를 확대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10일 기사에서 “수소탄 시험(4차 핵실험을 의미)을 기점으로 하는 새 단계의 핵 무력 강화 계획을 끝장을 볼 때까지 주저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동북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한 북한 외무성 미주국 부국장 최선희는 “6자회담은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맞서 핵무기고의 양과 질을 모두 늘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녀는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북한의 붕괴를 시도하고 군사적 행동(한미 군사훈련)은 적대적 의도를 명확히 노정한다고 주장했다. 최선희는 북핵문제를 풀기 위한 해답은 명확하다며, 미국은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미국은 역사상 핵무기를 실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고, 핵무기를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선희는 과거의 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지만 미래의 핵은 논의할 수 있고, 적들이 선제공격해오지 않는 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핵 독트린’도 내놔다. 그리고 무수단 발사 성공 후 북한 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제 북한이 운반수단도 갖췄기 때문에 미국의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의 7차 당대회 당시에도 북한 당국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핵비확산·세계의 비핵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북한의 전통적 대외정책 이념인 ‘자주·평화·친선’을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핵포기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핵무기 선제 불사용 및 핵전과방지 의무를 언급하면서도 ‘세계의 비핵화’라는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건 것은 결국 북한에게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꿈이 멀어져 가는 이 시점에서 공은 다시 국제사회로 넘어 왔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를 위해서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엔 안보리는 9월 9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15개 상임·비상임이사국의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개최한 다음 언론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북한의 도발이 안보리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이뤄졌다”며 “이전 결의안에서 밝힌 대로 ‘중대한 추가 조치’를 위한 작업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또한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추가제재냐, 대화냐 라는 ‘불편한 선택’에 직면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취하자니 동아시아에 갈등이 심화할 것이고, 반대로 협상으로 돌아서자니 도발을 거듭한 북한 정권과 핵동결을 놓고 ‘거래한’ 전임 정부들의 전철을 밟는 꼴”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우방인 중국 때문에 추가 대북제재의 효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중국에는 협상으로 ‘북한의 핵 동결(freeze)’을 끌어내는 것을 최종 선택지로 제시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대북 추가제재에 반대했다. 그는 “제재로 북한에 고통을 가하면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분명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공통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는 두 가지의 추세적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보호무역주의 성향의 강화이고, 둘째는 더욱 강경해질 대북/북핵정책 이다. 북핵문제와 관련, 미국은 그간의 대화/협상 노력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감을 갖기 시작한 바,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협상 재개 가능성이 희박하다. 하지만 5차 핵실험으로 본격적 핵능력 완성 단계로 치닫한다는 인식 가운데 ‘뭔가 해야만 한다는 생각(do somethingism)’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인 것은 충분히 감지된다.

1990년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서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는 완결형이 아닌 진행형”이라며 “제재 효과를 거둘 때까지 끊임없이 제재를 반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먼 전 차관은 올해 5월에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의 한반도 관련 세미나 오찬 연설에서도 “핵심국가들이 북한의 급변사태와 쿠데타 등까지 생각하는 건 필수적”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서먼은 힐러리 선거캠프의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클린턴이 대통령이 될 경우 국무장관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클린턴 진영의 선거공약을 보더라도 대북 제재 강화, 북한 핵폐기를 위해 중국을 더 압박하고, 한·일 등과 함께 미사일방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차기 행정부는 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기조를 넘어 대북 압박을 더 강화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더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관계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북핵문제 해법 관련 정책적 조율이다. 특히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각종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그와 함께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동결 후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수순의 논의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은 반드시 실패하며, 북한을 있는 그대로 협상하자는 주장을 펴면서, 지금 협상한다면 해커 박사의 3No's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의도된 공격이 아니라 잘못된 계산에 따라 핵공격 가능성 있는데, 외교로 이런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울프스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비확산담당 선임국장은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차기 행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의 실질적인 도전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차기 미국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적어도 핵 개발을 먼저 동결시켜야 한다”며, “차기 미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하면서도 한국, 일본과 더불어 북한과도 대화와 접촉을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외에도 제임스 클래퍼(James Clapper) DNI 국장 역시 북한 비핵화는 실패한 개념이며, 이란식 핵동결 협상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후, 북한의 핵은 생존을 위한 티켓이기 때문에 그나마 바랄 수 있는 것은 북핵 능력의 제한뿐이라고 주장했다. 제인 하만(Jane Harman) 우드로윌슨센터 소장도 핵미사일 실험 동결과 IAEA 북한 복귀를 당면목표로 협상할 필요가 있으며, 비핵화는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을 단번에 CVID 방식으로

비핵화하기는 불가능해진 이상 보다 현실적으로는 핵동결을 거쳐 비핵화로 가는 장기적 노선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만일 이것이 미국의 구상이라면 한국도 현재의 제재 올린 방식과 병행해 대북 비핵화 대화를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 기회의 창이 급격히 닫혀가고 북한이 ‘핵 문턱’(nuclear threshold)에 한발 더 다가선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이미 안보리결의안 2270호에 의한 ‘역대 최강의’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제재만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그간의 평가다. 과거 유엔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저조한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만 보더라도 제재가 국제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이는 제재를 하더라도 결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결국 대화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비핵화 대화이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을 실질적으로 압박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대화 재개는 비핵화라는 소기의 목표를 이루어 내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압박외교를 더욱더 강도 높게 전개해야 한다.¹¹¹⁾ 다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정권붕괴나 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비핵화 대화 재개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이 사실상 급격히 닫히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조율을 다시 한 번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차기 미국 행정부와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제재 집중 전략에 초점을 맞추되, 중국 등 대북제재의 구멍(loophole) 차단을 위한 국제적 압박전선의 재정비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대화과 협상이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협상이 진행되는 한은 북핵문제의 악화를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핵문제를 일거에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핵동결에 두고,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인 CVID는 장기적 목표로서 북한 정상국가화라는 긴 여정 속에서 해결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인다. 북한 비핵화가 루비콘 강을 건너 멀어져가는 이 시점에서 무엇이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옵션인지 진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정책제언

1. 비핵화가 도전적인 주제라는 개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상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 찾기에 주력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면서 그 이유가 ‘미국의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대외적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있고 놀랍게도 이 내러티브는 북핵 개발 역사에서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북한 ‘핵개발 내러티브’의 근거를

111) 신범철, “북핵문제의 주요 쟁점과 제언,” 제주평화연구원 JPI PeaceNet, 2016.10.12.

약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리비아 핵포기 사례 후 미국의 행동에서 보이는 것처럼 미국은 내러티브와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주는데 실패하였으므로 오늘날 현실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이전에 비해서 더욱더 도전적이 되었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2. 한국의 내적인 북한 내러티브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적 시각에서 볼 때 한국은 우선 북한을 (A) ‘붕괴해야 할 대상’(a country to destroy)인지, 아니면 (B) ‘변화를 유도할 대상’(a country to transform)인지에 대한 한국 국내적 내러티브 (domestic narrative)를 우선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흐트러진 것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바이다. 북한에 대한 판단이 (A), (B) 중에서 확실하게 어느 한쪽에 있지 않아, 어느 한국 정권은 (A)와 (B)를 절충하는 방법의 ‘기회주의적 전략’을 취한 면이 있으나 (예를 들어, 대화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붕괴를 유도하는 시도), 커뮤니케이션 시각에서 보면 이러한 절충적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국은 (A)와 (B) 둘 중에서 어느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 커뮤니케이션(즉, 내적인 스토리텔링)의 일관성을 확보한 후 북한에 대해 미국과 공조하여 일관성 있고, 모호하지 않고, 신뢰를 배양할 수 있는 대북 메시지를 보내는 커뮤니케이션 접근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외교에서 ‘시그널외교(signal diplomacy)’와 맥이 닿아 있다.
3.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비핵화가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목표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 현실적으로 비핵화와 궁극적인 통일은 단기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목표와 어젠다를 너무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접근법을 지양하고 조금 모퉁이 길로 돌아가는 ‘투 스텝’으로 가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한국이 ‘통일’이라는 내러티브를 너무 강조할 경우 북한은 그것을 한국이 ‘레짐 체인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 목표인 통일을 위해서는 목표를 오히려 외면적으로 강조하지 않는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책의 부작용을 줄이고 통일이라는 목표를 안정적으로 도모하면서 그 과정에 있는 비핵화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북핵문제는 이미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오래된’ 문제이다. 그만큼 수많은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고, 이 문제는 당장 가까운 시일 내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도 ‘오랜 시간’을 잡고, 즉 장기적인 해결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이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면서, 한국도 핵무기를 개발하자고 한다든지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옳지 않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반도 비핵·평화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갖고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북한핵 동결 → 비핵화 협상 → 북핵 폐기 → 한반도 비핵·평화지대화’ 순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5.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대화와 협상은, 그 동안 북핵문제를 지속적으로 악화시켜온 압력과 제재와 달리, 최소한 북한에 대한 통제기제인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대화과 협상’이 ‘압력과 제재’보다 문제해결적이지 못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가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합의 이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대화과 협상’이라는 접근방법 자체가 안고 있는 흠이 아니라, 합의 당사국들의 ‘정치체제의 성격’과 그로부터 생겨나는 ‘정책운용’의 문제점들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그 동안의 경험을 볼 때, ‘압력과 제재’의 방법과 ‘대화과 협상’의 방법을 조합하되,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조합해야 북핵문제의 당사자인 북한의 협력을 획득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당장 북핵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을 것이다. 북핵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아야 나중에라도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의 창을 열 수가 있을 것이다.
6.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북한 지도자가 스스로 협력적으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북한 지도자가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데서 압력과 제재보다는 설득, 유인, 협력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이 원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북한이 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문제’를 지금까지처럼 ‘병행적’으로(*9.19공동성명에서는 평화체제 논의를 6자회담과 별개의 워킹그룹에서 별도로 논의한다는 의미에서 ‘동시 병행적’으로 표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양자를 아예 ‘하나의 문제’로 결합하여 ‘하나의 과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합의와 로드맵의 마련이 필요하다. 즉, 6자회담 어젠다 속에서 평화체제 논의를 병행 추진하는 것이다. 과거에 9.19공동성명에서는 비록 표현은 ‘동시 병행적’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쪽이 원하는 것(한반도 비핵화)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루고 다른 쪽이 원하는 것(관계당사국들이 한반도 평화포럼을 개최하여 평화체제를 수립)은 소홀히 되는 상황, 즉,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동시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핵화 문제와 평화체제 문제를 ‘하나의 결합된 과정’ 속에서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참고로, 2016년에 중국이 내어 놓은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병행적’ 협상 제안은 그것이 중국이 그동안 모색해 왔던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역시 ‘동시적’ 진전에 대한 보장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하나의 결합된 과정’ 속에서 진전시켜 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이 보다 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 협상의 상대로서 북한을 다루는 양태(modality)의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정은은 수령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체제의 요구 못지않게 성장과정에서 배태된 우월한 자기애가 두드러진 인물로 평가된다. 협상 상대방으로서 김정은의 속성과 위상을 감안, 북한 매체들이 거론하는 ‘최고존엄’을 적절한 대화상대로 우선 인정하고, 거친 언사나 상호 비방적인 레토릭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 쌍방이 상호 비방과 모욕적인 언사를 자제하고, 레토릭에서부터 협상의 의지와 진정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8.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치·경제·외교적 해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우 복잡적이고 포괄적인 시각과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나 국제사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다양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전문가들과의 협업이 매우 긴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범국가적 ‘북한 비핵화 자문단’을 구성해 다학제적 분석과 조언을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존 정부 자문단은 대체로 보수와 진보라는 단순한 차이만을 염두에 두고 구성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정치·경제·사회·문화·심리·핵공학·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을 초당파적인 입장에서 자문단을 구성하여 비핵화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
9. 미, 중, 일, 러 등 주요국 상대로 비핵화 외교 재개의 조율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히 비핵화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시급한(urgent)’ 문제라는 인식의 공유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은 그동안 북핵문제를 한국과 중국에겐 약간 큰 문제이지만 미국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였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간주하는 전략적 계산 때문에 대북제재나 압박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2016년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각종 탄두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어 북한 핵미사일이 미 본토를 직접 위협하게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기회의 창은 급속히 닫혀가는 상황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과 진보적인 대화를 공언했으나 대통령 취임 이후 본격적인 대북정책을 펴보기도 전에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악수를 위해 먼저 손을 내밀었다가 뺄맞은 꼴이 되고 말았다. 그 결과 오바마는 북핵문제를 자신의 임기 내에 해결될 가망이 없는 문제로 규정하고, 북한이 진정성 있는 협상 의지를 입증하기 전에는 북한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갈수록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북한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옳은 선택이 아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관련국들이 북핵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전제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등 핵심 국가들이 조속히 북한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지

않으면, 결국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가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동북아의 핵도미노 현상이 뒤이을 가능성이 클 것이므로, 이는 동북아 모든 국가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임을 적극 내세워야 한다.

10.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두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기존 비핵화 협상전략 중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신속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알려진 게 거의 없다. 북한 김정은은 미치광이라는 언급에서부터 햄버거 정상회담까지 정제되지 않은 몇 가지 발언들이 알려졌을 뿐이다. 미국 차기 정부는 분명히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검토한 바탕 위에 새로운 대북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 출범 초기 탐색적 대화를 모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만일 북한과 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강경선회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근간 미국 내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북핵 동결 후 비핵화 협상으로 가는 수순의 논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존 울프스탈 백악관 NSC 비확산군축담당 국장, 제임스 클래퍼 DNI 국장, 제인 하먼 우드로윌슨센터 소장 등은 북한을 단번에 완전히 비핵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목표이긴 하지만 적어도 핵개발을 먼저 동결시키는 데 협상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이 확고히 정해지기 전에 우리가 선호하는 비핵화 협상전략과 목표를 미국 정부에게 정확히 인지시키기 위해 미국 차기 행정부와 전략적 소통을 지금 즉시,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국문논문

- Roger A. McCain(2011). **게임이론**. 이규억(역). 시그마프레스.
- 강진웅(2001). 북한의 가족국가 체제의 형성: 국가와 가족, 유교문화의 정치적 변용을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36, 323-346.
-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 곽정래(2015). 행위자-연결망 이론(Actor-Network Theory)으로 본 북한사회 내 정보 이동성과 커뮤니케이션 구조 분화. **사회과학연구**, 26(3), 363-389.
- 권속도(2015 가을).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국제문제연구**, 15-3.
- 권중록(2007). PR캠페인의 공중으로서 북한주민에 관한 연구: 탈북이주민을 통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1(3), 259-181.
- 권헌익·정병호(2013).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창비.
- 김강석(2007). **미디어대충돌**. 서울: 노마드북스.
- 김근식(2013). 동력 부재의 6자회담과 북핵 협상을 위한 현실적 제언. **한반도 포커스**, 11·12월호, 제26호.
- 김덕홍(2015). **나는 자유주의자이다: 정치망명자 김덕홍의 회고록**. 서울: 집사재.
- 김명섭(2011 봄). 북핵문제와 동북아 6자회담의 지정학: 역사적 성찰과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72호.
- 김상기(2013). 오바마 2기 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한 입장과 전략. **한반도 포커스**, 11·12월호, 제26호.
- 김석향(2012a). 북한 내 공적(公的)·사적(私的) 인권담론 분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7권.
- 김석향(2012b). 1990년 이후 북한주민의 소비생활에 나타나는 추세 현상 연구: 북한 이탈주민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6권 1호.
- 김석향(2015). 북한 내 '사람값' 담론과 소수자 유형 분류 시도. **아세아연구**, 제58권 1호.
- 김성한(2007.10).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와 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김성해·강국진(2009). **국가의 품격과 저널리즘 외교**. 서울: 한국언론재단.
- 김영세(2012). **정치게임과 공공경제**. 율곡출판사. 2012.
- 김일성(1980).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 김일성(1982). “재서독교포 윤이상과 한 담화: 남조선은 미국의 완전한 식민지이다”
- 김일성(1994). “미국 시엔엔텔레비전방송회사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 김재섭(2015). 한반도 확장억제의 재조명: 핵우산의 한계와 재래식 억제의 모색. **국가전략**, 21-2.
- 김재엽(2016.6). 한반도 군사안보와 핵전략 -북한 핵무장 위협에의 대응을 중심으로

- 국방연구, 59-02.

김재천(2016) 4차 북한 핵실험과 전략적 인내의 종언: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 분석. **국방연구**, 25-1.

김정일(1962). “현대제국주의의 특징과 침략적 본성에 대하여”

김정일(1968).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군사부 일군들과 한 담화: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전투동원준비를 철저히 갖추자”

김정일(1994).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의 당면한 몇 가지

김주수, 문은석, 윤희철(2014). 김정일과 김정은의 권력승계과정 비교를 통한 남북관계 전망. **대한정치학회보**, 22(2), 47-69.

김지운 외(2011). **비판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창룡(2010). **미디어비평노트**. 서울: 한국학술정보(주).

김태곤(1981). **한국 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281-285.

김태우(2015.8.28.). 한국의 북핵 억제전략: 응징, 방어 그리고 선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 국가안보전략연구원·헤리티지 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한국프레스센터).

나은영(2010). **미디어심리학**. 서울: 한나래출판사.

류희림(2007). **우리는 뉴스에 속고 있다**. 서울: 글나래.

박건영(2013.9). **북한의 핵미사일과 적극적 억제**.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박건영(2016 가을). 한국의 안보와 사드. **한국과 국제정치**, 통권 94호.

박명서(2001). **통일시대의북한학강의**. 서울: 돌베개.

박지훈 외(2010). 국제시사프로그램의생산과정에미치는영향력에관한연구. **언론과사회**, 18(2), 2-39.

박창권(2014 여름). 북한의 핵운용전략과 한국의 대북 핵억제전략. **국방정책연구**, 제30권 제2호.

박천일(1995). 미국의 국제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 변화의 정치 경제적 함의. **한국방송학보**, (6), 143-182.

박형중(2004).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전환**. 서울: 해남.

박휘락(2013). 핵억제이론에 입각한 한국의 대북 핵억제태세 평가와 핵억제전략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53집 3호.

박휘락(2016 봄).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평화연구**, 고려대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백학순 (2016. 3. 10.). 북경주재 스위스 무관(Bernhard Jeanty)과의 대화.

백학순(2012).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09~2012**. 성남: 세종연구소.

백학순(2014). **제2기 오바마정부 시기의 북미관계 2013~2014**. 성남: 세종연구소.

백학순(2015). **김정은 시대의 북한정책 2012~2014: 사상·정체성·구조**. 성남:

백학순(2016).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전략. **한국의 국가전략 2030: 통일**.

정성장·양운철·백학순·박종철·오양열. 성남: 세종연구소.

백학순(2016, 출판예정). 김정은의 외교·안보·통일 리더십: 특징과 평가. **김정은의 리더십 특징과 평가**. 세종연구소(편). 성남: 세종연구소.

변영욱(2013). 김정은의 이미지 관리 전략. **현대북한연구**, 16(2), 213-250.

북한 3대 권력세습 김정은 (2010. 10. 3). KBS 스페셜.

서동구(2014).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 **통일정책연구**, 23-2.

세종연구소(2016.1).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중국의 입장과 인식 고찰. **정책브리핑**, 2016-5.

손병선(2012). 북한의 정치문화와 3대 세습. **한국동북아논총**, 65, 133-150.

송대성·엄상윤·문순보(2014..9). **북핵문제: 국제관계와 비핵화 방안**. 세종연구소.

송태은(2013). 소셜 미디어를 통한 다중의 외교정책 논쟁과 집합행동. **국제정치논총**, 53(1), 41- 87.

심영섭(2015). 글로벌 미디어 경쟁 환경에서 국제방송의 역할과 위상. **문화와 정치**, 2(1), 77-103.

안진수·박일진·이정현(2011). 북한핵 프로그램과 검증[KINAC/TR-008/2011]. 대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P19, 표 1-7.

양운철(2013). 북한군수산업의 민수전환 방안 연구: 체제전환국의 경험을 중심으로. **세종정책연구**, 2013-24. 세종연구소.

양운철(2014).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 **김정은 정권의 대내전략과 대외관계. 정성장 (편)**. 세종연구소.

양운철(2016.3).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정책브리핑** 2016-8. 세종연구소.

오수성, 김정호, 김해숙, 김희경, 신기숙, 이숙자, 정정화, 채숙희, 한은경, 홍창희 (2013). **정신병리학**. 서울: 학지사.

유동식(1975). **한국무교의 역사와 구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유재천외(2010).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이경행, 임경한(2015 가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실증적 위협 분석과 한국 안보에의 함의. **국제문제연구**, 15-3.

이상근(2015). 김정은 리더십 연구: 김정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2015 신진연구논문집**. 통일부(편). 서울: 통일부.

이상근(2016). **김정은 리더십 연구: 김정일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통일부보고서.

이성훈(2015). 대북 억제전략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신억제전략의 3요소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21-3.

이수훈(2016 봄). 제재정책의 딜레마와 6자회담의 앞날. **한반도포커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승현(2012.1).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국회입법조사처.

이용범(2000). 한국 무속의 신관에 대한 연구-서울 지역 재수굿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이종석(2016.3).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 배경·역사·전망·대응방향. **정책브리핑**, 2016-10. 세종연구소.
- 이종혁(2010). **PR을 알면 세상이 열린다**.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이헌경(2001). 북한사회의 유교문화. **세계지역연구논총**, 16, 249-277.
- 이흥균(2010). 사회 압력으로서 일반화된 타자들의 사회 기대. **사회와 이론**, 제16집, 47-78.
- 전봉근(2008.2).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적 접근.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박기덕·이상현 (공편). 세종연구소.
- 전봉근(2016.4.25). 북핵 동향 분석과 비핵화 전략의 재검토.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 한반도포럼 창립 5주년 기념 학술대회.
- 전성훈(2007.6).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 **국제평화**.
- 전성훈(2009.10). 북한 핵개발의 안보적 함의와 동북아·글로벌 차원의 영향. **북핵문제와 북한 체제 변화**. 세종연구소.
- 전성훈(2009.12). 북한의 WMD 위협 평가와 우리의 대응.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전성훈(2012.10). 미국의 대한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KINU 연구총서**, 12-01. 통일연구원.
- 정성임·강성철(2016 봄). 핵협상 조건과 북핵협상의 재검토. **국가전략**. 세종연구소.
- 정영태·홍우택·김태우·박휘락·이상민·이호령·조영기(2014.12).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KINU 연구총서**, 14-11. 통일연구원.
- 정재홍·이성현(2016.3). 중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입장과 인식 고찰. **정책브리핑**, 2016-11.
- 정현수(1995).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의 유교적 특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1, 187-225.
- 조민·전성훈·정영태·허문영(2009.12).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통일연구원.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2016.1.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2016.9.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성명(2014.12.20.).
조선일보사.
- 조성렬(20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통일연구원.
- 조성렬(2014 가을). 북핵문제 외교적 해법의 실패원인과 시사점. **국제관계연구**, 19권 2호.
- 조성렬(2015.12).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배경과 의도. **한반도 군비통제**. 국방부.
- 조성렬(2016.9).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 핵, 우주, 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서강대학교 출판부.
- 조수영(2015). 북한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기능. 한국언론학회 심포지움 및 세미나, 27-41.

- 조수진, 이창현(2016). 남한의 대북방송 전문가들이 갖는 통일과정에서 방송의 역할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61-91.
- 주미영(2015). 글로벌 신뢰국가 이미지 형성을 위한 한국의 공공외교 연구. **정치정보연구**, 18(2), p, 31-58.
- 주성하(2010). **북한바로보기**. 서울: 경천
- 주준희(1996). 북한 정치의 종교성. **한국정치학회보**, 29(4), 393-420.
- 최종건(2008). 신현실주의 이론의 '무정부 신화'에 대한 구성주의적 비판.
- 하영선·전재성(2016.2). **북핵 위기의 새로운 해법**. EAI..
- 한국정치학회보**, 42(2).
- 한민, 서신화, 이수현, 한성열(2013). 한국인의 자존심 개념과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2), 203-234.
-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1.20).
- 한용섭(2013).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안보와 북핵문제 해결 방안. **통일정책연구**, 22권 1호.
- 홍현익(2003). 북핵문제의 본질과 평화적 해결방안. 세종연구소.
- 홍현익(2004.2). New Russo-American Strategic Partnership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Second Korean Nuclear Crisis and Korean National Strategy
- 홍현익(2005.12). **6자회담: 과정·문제점 및 대응전략**. 세종연구소.
- 홍현익(2005.4). Prospect of North Korea-US Relationship: How to Solve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Harvard Univ.
- 홍현익(2006.12).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와 북한의 대응전망. **한국군사**.
- 홍현익(2007.11). 북한의 WMD 개발 대응방안 연구. 세종연구소.
- 홍현익(2007.5). 북·미관계 정상화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연구소.
- 홍현익(2008 봄). 북핵문제와 6자회담: 전개과정, 평가 및 과제. 세종연구소.
- 홍현익(2008.9). 북핵문제 최종 해결과정의 쟁점과 해결방안. 세종연구소.
- 홍현익(2009.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동맹. 세종연구소.
- 홍현익(2012.6).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대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한울.
- 홍현익(2015.10). 9·19 공동성명 10주년과 코리안 포물리. **정세와 정책**. 세종연구소.
- 홍현익(2015.9). 9·19공동성명 10주년과 북핵문제 해결방안. **세종정책브리핑**, 2015-3. 세종연구소.
- 홍현익(2016.4..1). 대북제재,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해 능동적 외교를 펼치자. **국회보**.. 2016-04. 국회.
- 홍현익(2016.5). 한·미·일·중 정상회담과 대북제재. **북한**.
- 홍현익(2016.6). 북핵 해법, 주변 4강 속셈은..., **Peace Road**, 2016-07. 세계평화터널 재단.
- 황장엽(1999). **나는 역사의 진리를 보았다**. 서울: 한울.

황지환(2016 봄).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32권 1호.

황필호(2002). **한국 무교의 특성과 문제점**. 서울: 집문당. 107쪽, 111-115쪽.

후지모토 겐지(2010).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서울: 맥스미디어.

후지모토 겐지(藤本健二)(2003). **김정일의 요리사**. (신현호 옮김). 서울:

영어 논문

- Allport, G. W. (1937). *Personality: A psychological interpretation*.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Asch, S. E. (1955). Opinions and social pressure. *Scientific American*, 19, 31-35.
- Baran, S.J and Dennis K, Davis (2003). *Mass Communication Theory*. (3rd Ed). Toronto: Wadsworth/Thomson.
- Baum M, Potter P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mass media, public opinion, and foreign policy: 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1(1): 39-65.
- Bellah, Robert N. et. al. 1985.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Harper & Low, Publishers
- Bennett W L (1990). Toward a theory of press-state relatio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ommunication*, 40(2): 103-125.
- Bennett W L (2001). *News: The Politics of Illusion* (4th edition), US: Addison Wesley Longman, Inc.
- Borah P (2011). Conceptual Issues in Framing Theory: A Systematic Examination of a Decade's Literature. *Journal of Communication*, 61: 246-263.
- Bourdieu, Pierre. translated by Richard Nice.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ssachusetts
- Boyd-Barrett O (2003). Globalizing the national news agency. *Journalism Studies*, 4(3): 371-385.
- Brewer P R (2006). National interest frames and public opinion about world affair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1(4): 89-102.
- Burns N (1996). Talking to the world about American foreign policy.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4): 10-14.
- Burnstein, E., & Vinokur, A. (1977). Persuasive argumentation and social comparison as determinants of attitude polariz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315-332.
- Camaj L (2010). Media framing through stages of a political discourse: International news agencies' coverage of Kosovo's status negotiation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2: 635.
- Cappella J N, Jamieson K H (1996). News frames, political cynicism, and media cynicism.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46: 71-84.
- Chomsky N, Herman E (2002). *Manufacturing Consent: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 mass media*. New York: Pantheon.
- Cohen B C. (1963). *The press and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Davis, Paul K. Peter Wilson, Jeongeun Kim. March 2016. "Deterrence and Stability for the Korean Peninsul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8-1.
- Dimitrova D V, et al (2005). War on the web: The immediate news framing of Gulf War II. *The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10(1): 22-44.
- Donsbach W (2004). Psychology of news decisions: Factors behind journalists' professional behavior. *Journalism*, 5(2): 131-57.
- Geertz, Clifford.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Selected Essays by Clifford Geertz*, Basic Books: A Division of Harper Collins Publishers
- Gilboa E. (2000). Mass communication and diplomacy: A theoretical framework. *Communication Theory*, 10(3): 275-309.
- Gilboa E. (2002). Global communication and foreign policy. *Journal of Communication*, 52: 731-748.
- Hayes, Peter. Fall 2015. "Overcoming U.S.-DPRK Hostility: The Missing Link Between a Northeast Asian Comprehensive Security Settlement and Ending the Korean War," *North Korean Review*.
- Hopf, Ted.(1998). The Promise of Constructiv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ternational Security*, 23 (Summer).
- Hyun, In-Taek. June 2016. "An Enduring Dilemma on the Korean Peninsula: The North Korean Nuclear Conundrum and South Korea's Strategic Choic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8-2.
- Janis, I. L. (1982). *Groupthink: Psychological studies of policy decisions and fiascoes*. (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Jepperson et al.(1996). Norms. Identity. and Culture in National Security. In Katzenstein, Peter J. (ed.),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 Kernberg, O. F. (1975). *Borderline conditions and Pathological narcissism*. New York Jason Aronson.
- Kim, Tae-Hyung. June 2016. "North Korea's Nuclear Ambition: Is Nuclear Reversal Too Late?"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1-1.
- Kohut, H. (1968). The psychoanalytic treatment of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3, 86-113.
- Kwon, Bo Ram. March 2016. "The Conditions for Sanctions Success: A Comparison of the Iranian and North Korean Case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8-1.

- McCombs M E. (2004). *Setting the Agenda: The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Cambridge: Polity Press.
- Mead, George Herbert.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Charles W. Morris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 Milgram, S. (1963). Behavioral study of obedienc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371-378.
- Millier, K (2005). *Communication Theories: Perspectives, Processes and Contexts*, (2nd ed.). McGraw-Hill.
- Morf, C. C., & Rhodewalt, F. (2001). Unraveling the paradoxes of Narcissism: A dynamic self-regulatory processing model. *Psychological Inquiry*, 12, 177-196.
- Mullen, Mike and Sam Nunn (Chairs), Adam Mount (Project Director), *A Sharper Choice on North Korea: Engaging China for a Stable Northeast Asia*, Independent Task Force Report No. 74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ept. 2016).
- Paik, Haksoon(2007). North Korea's choices for survival and prosperity since 1990s: interplay between politics and economics. *Sejong Policy Studies*, 3(2).
- Paik, Haksoon(2013). Changes and continuities in inter-Korean relations. In Park, Kyung-Ae & Snyder Scott.(eds.), *North Korea in transition*. Lanham, MD: Rowman and Littlefield Publishers, Inc.
- Paik, Haksoon(2013, December 10). Kim Jong Un's "Unitary Leadership": Future Policies and Our Choices. 38 North.
- Paik, Hak-soon(2015). Die Aussenpolitik Nordkoreas: Autonomie oder Annäherung. In Lee, Eun-Jeung & Mosler, Hannes B.(Hrsg.), *Länderbericht Korea*. Bonn, Germany: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 Paneta, Leon & Newton, Jim(2014). *Worthy fights: a memoir of leadership in war and peace*. New York: Penguin Press.
- Paneta, Leon & Newton, Jim(2014). *Worthy fights: a memoir of leadership in war and peace*. New York: Penguin Press.
- Pervin, L. A., & John, O. P. (1997).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Wiley.
- R. Axelrod, *Evolution of Cooperation*, Basic Books, 1984
- Reese S D. (2007). The framing project: A bridging model for media research revised. *Journal of Communication*, 57(1): 148-154.
- Remarks by President Obama and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after meeting(2013, April 11). Oval Offic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The

- White House.
- Roberts, Brad. March 2016. "Tailored Options to Deter North Korea and WMD Threats,"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8-1.
- Roehrig, Terence. June 2016. "North Korea, Nuclear Weapons, and the Stability-Instability Paradox,"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28-2.
- Rowland, Ashley(2013, March 19). *B-52s flying during Joint US-South Korea Exercises*. Stars and Stripes.
- Roy. Denny, June-July 2016. "Preparing for a North Korean Nuclear Missile," *Survival*, 58-3.
- Scheufele D A, Tewksbury D. (2007). Framing, Agenda Setting, and Priming: The Evolution of Three Media Effects Models. *Journal of Communication*, 57:9-20.
- Seo, H (2011). Media and foreign policy: A comparative study of journalists' perceptions of press --government relations during the six-party talks. *Journalism*, 12: 467.
- Sigal, Leon V.(2001, June 23). Reversing US Missteps toward North Korea. *The Boston Globe*.
- Smith, P., & Bond., M. (1998). *Social psychology across culture*. (2nd Eds.) Boston: Allyn and Bacon.
- Sparks C. (1998). *Communism, Capitalism andthe Mass Media*. London: Sage.
- Sparre K. (2001). Megaphone diplomacy in the Northern Irish Peace Process: Squaring the circle by talking to terrorists through journalists. *Harvard International Journal of Press/Politics*, 6(1): 88-104.
- T. Schelling, *The Strategy of Conflict*, Harvard University Press, 1980.
- Wendt, Alexander(1992). Anarchy is what states make of it: the social construction of power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6(2) (Spring).
- Wink, P. (1991). Two factors of narciss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590-597.

언론기사

- 국민일보 (2016. 5. 28). 北김정은 이모 “공부하라고 꾸지람하면 단식으로 반항”.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655536&code=611111111&cp=du>에서 2016. 9. 6 인출.
- 뉴스1 (2016. 1. 18). 北 김정은, 기타치고 이발소 방문... '인간미' 부각. <http://news1.kr/articles/?2548274>에서 2016. 9. 6 인출.
- 뉴스1 (2016. 4. 13) 北 7차 당대회 임박하자 새 훈장 제정... 무더기 포상.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13_0014019518&cID=10301&pID=10300에서 2016. 9. 6 인출.
- 뉴스1 (2016.8.26). '공포통치' 北 김정은 SLBM 실무자들과 '맞담배' 눈길.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26_0014348902&cID=10301&pID=10300에서 2016. 9. 6 인출.
- 데일리 NK (2013. 10. 22). “김정은 과욕에 득보다 실 많은 오락시설에 집착“ .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Id=nk00700&num=101443>에서 2016. 9. 6 인출.
- 서울신문 (2013. 4. 11). 김정은, 어린이 안고 '어색 사진' 찍은 이유. <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412500006&spage=89>에서 2016. 9. 6 인출.
- 세계일보 (2016. 1. 7). 필체로 본 김정은 성격...트럼프와 닮았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1/07/20160107003386.html?OutUrl=daum>에서 2016. 9. 6 인출.
- 서울경제(2016. 5. 28). 김정은 이모 고용숙, “김정은, 8살에 장군복 입고 군장성들 무릎 꿇려 충성 맹세 받았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KWHO16UIM>에서 2016. 9. 6 인출.
- 아주경제 (2015. 6. 1). 북한 어린이날에도 김정은 '어린이 사랑' 부각...“어린이 천국인 조선에 와라“. <http://www.ajunews.com/view/20150601112933745>에서 2016. 9. 6 인출.
- 연합뉴스 (2015. 11. 23). 대북 소식통 “김정은 집권 이후 숙청 간부 100여명“.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23/0200000000AKR20151123183100014.HTML?input=1179m>에서 2016. 9. 6 인출.
- 연합뉴스 (2016. 6. 17). “북한에 4D영화관 최소 12개...김정은 오락시설에 관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7/0200000000AKR20160617023900014.HTML?input=1179m>에서 2016. 9. 6 인출.
- 연합뉴스 (2016. 8. 16). 美HRNK “고위층 숙청 강화·여성 억압, 김정은 집권후 두드러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16/0200000000AKR2016081617500071.HTML?input=1179m>에서 2016. 9. 6 인출.
- 연합뉴스 (2016. 8. 23). [단독] 김정은, 장성택 흔적지우기 집착...“트라우마에 시달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2/0200000000AKR20160822125>

400014.HTML?input=1179m에서 2016. 9. 6 인출.

이데일리(2016. 7. 27). “北 김정은, 스위스 유학시절 이웃과 눈도 안 맞춰. 끊임없이 ‘농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31&newsid=03473526612718784&CD=A00603&OutLnkChk=Y>에서 2016. 9. 6 인출.

자유아시아방송 (2016. 09. 13). 미, 대북정보유입보고서 의회 제출. http://www.rfa.org/korean/weekly_program/hr_rights_first/fe-mj-09132016112159.html에서 2016.09. 18 인출.

조감제닷컴 (2016. 2. 14). 北 주민들, 김정은 개인 비판 많아져.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65484&C_CC=AZ에서 2016. 9. 6 인출.

중앙일보 (2015. 10. 25). 北 김정은 위원장, 모란봉악단 등에 무더기 포상·특진. <http://news.joins.com/article/18929661>에서 2016. 9. 6 인출.

중앙일보 (2016. 8. 30). [단독] 줄았다고 장관 처형..공포에 떠는 북한 엘리트층.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830023203908&RIGHT_HOT=R1에서 2016. 9. 6 인출.

채널 A (2015. 5. 12). CNN “北 김정은, 작년 5월 김경희 독살 지시“.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50512/71193911/1>에서 2016. 9. 6 인출.

채널A (2016. 1. 22). “김정은, 아이와 의사놀이” 시시콜콜 선전.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0122/76074115/2>에서 2016. 9. 6 인출.

채널A (2016. 2. 15). 김정은 “더 많이 싸라”...미사일 축하 파티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0215/76462261/2>에서 2016. 9. 6 인출.

채널A (2016. 8. 24). 김정은, ‘빨치산 영웅’ 일가 숙청. <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0824/79955538/1>에서 2016. 9. 6 인출.

한국일보(2011. 12. 24). 김정은은 늘 열등생... 스위스 유학 시절 덩정은이라 불려. <http://media.daum.net/foreign/others/newsview?newsid=20111224023506311>에서 2016. 9. 6 인출.

한국일보 (2016. 9. 5). 평양 한복판서 간부가 ‘빠라’ 살포.. 北 핵심층 체제 이탈 징후 뚜렷.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60905044249189>에서 2016. 9. 6 인출.

JTBC (2013. 12. 13). 김정은, 웃으며 시찰...대대적 포상잔치로 민심 잡기.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395606에서 2016. 9. 6 인출.

권은경(2013.4.11).朴대통령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어”...北에 대화 제의. 뉴스1.

김정은(2016.5.6).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로동신문.

동아일보(2013.3.16). 北 동해에 단거리미사일 2기 발사 ‘무력시위’.

로동신문(2013.4.2a).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전원회의 보고.

로동신문(2013.4.2b).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전원회의 결론.

로동신문(2016.7.7). 미국과 남조선당국의 《북비핵화》 궤변은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도를 더욱 험난하게 만들뿐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변인 성명.

연합뉴스(2013.4.5). 北, 동해안 이동 무수단미사일 은닉…기습발사 가능성(종합).

오마이뉴스(2013.4.10). 꼬일대로 꼬인 한반도정세, 12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전현석(2013.3.19). ‘오늘 한반도서 ‘B-52 전략폭격기’ 비행 훈련’, 이례적 1급 공개 비밀에 ‘깜짝’. 조선일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기연구소 성명(2016.9.10).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2013.1.25). 조평통 유엔 ‘결의’ 조작에 날뛴 남조선당국 비난.

조선중앙통신(2013.3.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조선정전협정을 완전히 백지화.

조선중앙통신(2013.3.7a). 조선외무성 핵선제타격권리 행사하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2013.3.7b). 김정은 최고사령관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 또 다시 시찰.

조선중앙통신(2013.3.8). 조평통 북남사이의 불가침합의 전면 폐기한다.

조선중앙통신(2013.3.9). 조선외무성 반공화국 ‘제재결의’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2013.3.11). 지금 이 시각부터 초래될 모든 파국적 후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괴뢰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조평통 대변인성명).

조선중앙통신(2013.3.12). 우리의 최고사령부는 최전방에 있다.

조선중앙통신(2013.3.21).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조선식의 군사적 대응으로 짓부셔 버릴 것.

조선중앙통신(2013.3.26). 최고사령부 명령 1호전투 근무태세에 진입.

조선중앙통신(2013.3.27). 군사회담 북측 북남군통신의 단절을 통고.

조선중앙통신(2013.3.30a). 조선정부, 정당, 단체 선군조선의 본때 맛보게 될 것 강조.

조선중앙통신(2013.3.30b).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남조선의 책동 계속된다면 공업지구 폐쇄.

조선중앙통신(2013.4.2). 조선원자력총국 현존 핵시설들의 용도 조절변경 언급.

조선중앙통신(2013.4.8). 개성공업지구사태와 관련한 중대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조선중앙통신(2013.4.16). 조선외무성, 미국의 대화타령 비난.

조선중앙통신(2013.6.16). 국방위 조미당국사이에 고위급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

조선중앙통신(2013.10.23). 조선외무성, 핵위협 가중되는 한 핵억제력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2014.3.14). 조선 국방위, 미국은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전면철회 해야 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2014.3.30). 조선외무성, 정당한 로켓트 훈련 걸고든 유엔안보리의 도발행위 배격.

조선중앙통신(2014.4.29). 조선외무성, 오바마의 아시아 행각은 위험천만한 행보.

조선중앙통신(2014.11.19). 조선대표 반공화국 유엔 인권 ‘결의안’ 전면배격.

조선중앙통신(2014.11.20).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미국은 ‘인권결의’ 채택의 후과 책임질 것 강조.

조선중앙통신(2015.1.10).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통일부(2013.4.11). 통일부장관 성명. 한면택·홍장기(2013. 3. 19.). ‘핵우산’ B-52 폭격기 오늘 한반도 비행. 내일신문.

김정은(2012. 4. 19).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로동신문.

김정은(2012. 8. 3.).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2년 7월 26일). 로동신문.

김정은(2014. 2. 26.).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자.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에서 한 연설). 로동신문.

김형구(2016). 핵실험 강행 김정은 리더십의 실체(實體): ‘금수저 물고 태어난 김정은, 굴복 싫어해 핵 포기 안 할 것’. 월간중앙, 4월호.

로동신문(2012. 4. 12). 조선로동당규약 서문.

로동신문(2013. 4. 2a.).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전원회의 보고.

로동신문(2013. 4. 2b.). 조선로동당 중앙위 3월전원회의 결론.

로동신문(2013. 10. 27.). 선군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치리념. (론평).

로동신문(2013. 12. 13.). 천하의 만고역적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진행.

로동신문(2014. 3. 28.). 사상사업에서의 집중포화.

로동신문(2014. 4. 24.). 사상사업에서의 연속포화.

로동신문(2014. 4. 28). 사상전의 집중포화로 온 나라가 끓게 하자. (사설).

조선중앙통신(2012. 6. 21.). 위대한 김정일애국주의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조선중앙통신(2012. 10. 10.). 인류의 미래를 향도하는 위대한 사상.

조선중앙통신(2013. 12. 13.). 공화국형법 제60조 따라 장성택 사형-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조선중앙통신(2014. 1. 17.). 정치사상진지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승패 좌우하는 결정적 보루.

조선중앙통신(2014. 2. 6.). 사상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해나가자.

조선중앙통신(2014. 2. 20.).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강령이 선포된 역사적인 대회.

조선중앙통신(2014. 5. 30.). 조일정부간회담합의 내용.

조선중앙통신(2014. 10. 16.). 조선평화옹호위 미국의 핵무기 사용 기도 규탄.

조선중앙통신(2014. 10. 17).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 핵공격 기도 드러낸 미국 규탄.

중앙일보(2016. 5. 9.). [단독] 김정은 하룻밤 와인 10병 마셨다 말해…김여정 미혼.

Change, David(2013, March 28). U.S. flies stealth bombers over South Korea in warning to North. Reuters.

Choe, Sang-hun(2013, April 18). North Korea sets conditions for return to talks. The New York Times.

Department of Defense to deploy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to Guam(2013, April 3). MilitaryInfo.com (American Military News).

Donath, Mirjam(2014, November 19). U.N. panel calls for N. Korea referral to international court. Reuters.

Entous, Adam & Barnes, Julian E.(2013, April 3). U.S. dials back on Korean show of force. Wall Street Journal.

Gertz, Bill(2013, March 19). U.S. B-52 bombers simulated raids over North Korea during military exercises. The Washington Times.

Hagel: North Korea presents 'real and clear danger' to U.S and allies(2013, April 3). The Washington Post (Video).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hagel-north-korea-presents-real-and-clear-danger-to-us-and-allies/2013/04/03/0a379c40-9c89-11e2-9bda-edd1a7fb557d_video.html).

Kerry, John(2013, April 12). Secretary of State. Remarks with Republic of Korea foreign minister Yun Byung-se after their meeting. Foreign Ministry, Seoul, South Korea.

Kessler, Glenn(2008, September 26). Far-reaching U.S. plan impaired North Korea deal. The Washington Post. ("Verification Measures Discussion Paper")

Kwon, Tae-ho (2011, May 13). Interview with Donald P. Gregg, Former Chairman of the Board of The Korea Society,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IA Korea Chapter Director. The Hangyoreh.

MacAskill, Ewen(2013, March 29). US warns North Korea of increased isolation if threats escalate further. The Guardian. (Retrieved, April 3, 2013.).

Starr, Barbara(2013, April 4). "U.S. scripts North Korea 'playbook'. CNN. (<http://security.blogs.cnn.com/2013/04/04/u-s-scripts-north-korea-playbook/>).

Washington Free Beacon Staff(2013, April 4). Bolton: North Korean rhetoric 'Beyond their normal playbook'. The Washington Free Beacon. (<http://freebeacon.com/national-security/bolton-north-korean-rhetoric-beyond-their-normal-playbook/>).

Yiu, Garson(2014, February 14). North Korea sent Kenneth Bae to labor camp to protest B-52 flights. ABC NEWS.

인터넷

Atomic Audit: Introduction. The U.S. Nuclear Weapons Cost Study Project was completed in August 1998 and resulted in the book *Atomic Audit: The Costs and Consequences of U.S. Nuclear Weapons Since 1940* edited by Stephen I. Schwartz. These project pages should be considered historical. Retrieved from <http://www.brookings.edu/about/projects/archive/nucweapons/introduction>

Freeman, Colin and Sherwell, Philip.(2010, September 26). North Korea leadership: 'My happy days at school with North Korea's future leader'. *The Telegraph*.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asia/northkorea/8025015/North-Korea-leadership-My-happy-days-at-school-with-North-Koreas-future-leader.html>).

Galrahn(2013, April 4, Posted). From the PACOM playbook to PACOM's plan B(MD). Information Dissemination. (<http://www.informationdissemination.net/2013/04/from-pacom-playbook-to-pacoms-plan-bmd.html>).

Garamone, Jim(2013, April 3). Hagel: U.S. makes measured responses to North Korean threats.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http://www.defense.gov/news/newsparticle.aspx?id=119688>).

Garamone, Jim(2013, March 18). Bombers show U.S. resolve to defend South Korea, spokesman says.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http://www.defense.gov/news/newsparticle.aspx?id=119555>).

Hagel hosts Korean foreign minister at Pentagon(2013, April 3).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http://www.defense.gov/news/newsparticle.aspx?id=119683>).

New Navy Sub May Cost \$ 1 Billion more, CBO Says. Retrieved from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0-05-25/nuclear-submarine-may-cost-1-billion-more-than-navy-s-estimate-cbo-says>.

Nuclear Weapon Testing.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Nuclear_weapons_testing.

Paik, Haksoon.(2011, June 5). Kim Jong Il's Visit to China: Implications for East Asia and the United States. *38 North*. (<http://38north.org/2011/06/paik060511/>).

Pellerin, Cheryl(2013, March 18). Carter reaffirms U.S. commitment to South Korea.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http://www.defense.gov/news/newsparticle.aspx?id=19556>).

Report launch of CFR-sponsored independent task force on U.S. policy toward North Korea(2016, September 16). (<http://www.cfr.org/north-korea/report-launch-cfr-sponsored-independent-task-force-us-policy-toward-north-korea/p38266>).

The Costs of the Manhattan Project. Retrieved from <http://www.brookings.edu/about/projects/archive/nucweapons/manhatta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 Redirected from Sweden nuclear program. Retrieved from https://en.wikipedia.org/wiki/Swedish_nuclear_weapons_program.

Yan, Holly & Shubert, Atika.(2011, December 19). Kim Jong Un: The 'great successor' remains an enigma. *CNN*. (<http://edition.cnn.com/2011/12/19/world/asia/kim-jong-un-profile/index.html>).